





남북 방송통신 산업 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이 보고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남북 방송 통신 산업 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학회

책 임 연 구 원 : 진용옥(경희대학교 전파공학과 명예교수)

공 동 연 구 원 : 김만기(방송광고문화연구소 연구소장)

박종수(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 구 원: 김준원(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구재일(한국전파진흥협회 과장)

진성오(CJ헬로비전 연구원)

목 차

요약

I	М	론
---	---	---

1. 연구 방법론 ······	4
1) 연구 설계	4
2) 영역별 연구 관계도	 5
3) 남북관계 발전단계에 따른 연구진행도	·· 6
4) 급변사태단계의 남북 방송교류	10
2. 비핵개방 3000과 남북방송통신 교류와 협력	11
1) 상생공영으로 정리된 대북정책	15
2) 단계적 남북경협	16
3) 비핵개방과 방송 통신 연계의 전제	17
3. 북한 방송통신 환경	20
1) 대내 환경변화	20
2) 대외 환경변화	21
4. 교류의 몇 가지 전제들	23
II 남북한 방송통신 산업환경 분석 및 과제	
1. 남북한 방송산업 현황	26
1) 라디오 방송	27
2) TV방송	31
3) FM방송 ······	38

4) 해외(국제)방송	40
5) 유선방송	42
6) 위성방송과 방송권역	54
7) 남북한 TV방송의 기술	55
8) 북한의 방송규제 기관 및 관련 법규	61
2. 북한의 통신산업 현황	62
1) 통신부문	62
2) 북한의 정보통신 관리체계	74
3) 교육 및 연구기관	76
4) 기타 산업분야	77
5) 인터넷과 인트라넷	81
6) 북한의 인터넷 개방을 위한 로드맵	90
III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실태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95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95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95 99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95 99 06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95 99 06 1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1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95 99 06 1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1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1	95 99 06 1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1 2) 인터넷부문 1	95 99 06 1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1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1	95 99 06 1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1 2) 인터넷부문 1	95 99 06 13 14 2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1 2) 인터넷부문 1	95 99 06 13 14 23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8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1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1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1 2) 인터넷부문 1 1.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동향 1	95 99 06 13 14 23

4. 남북한 정보격차 현황138
5. 북한의 정보화 전략139
6. 북한의 정보화 교육 현황142
7. 북한 정보화교육의 주요내용144
8. 북한의 정보기술교육 현황
1) 조기영재 교육
2) 일반학생 대상교육148
3) 대학에서의 정보기술 교육
4) 일반인 대상의 정보화 교육151
9. 정보화 교육 지원체계152
1) 정보기술 교육인력의 양성 152
2) 컴퓨터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152
3) 정보기술 경연대회 153
10.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1) 통일비용 감소와 남북협력 촉진
2)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현황 155
11. 정보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국내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과의 유기적 연동
2) 부처간 공조 및 정부/민간연합의 효율적 체제 구축 163
12.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과제164
1) 남북정보격차해소위원회 구성 및 중장기협력 추진
2) 교재 및 S/W 개발 지원 ······ 165
3) IT 기자재 지원 ······ 166
4) 요약 166
V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과제와 해결 방안
1. 방송 교류협력의 과제167

-	1)	소재 및 취재영역의 제한성	167
2	2)	인적교류체계 미흡	168
3	3)	쌍방향 교류문제	168
2	1)	고비용 문제	169
Ę	5)	예측가능성 문제	170
6	3)	시청률 지상주의 문제	170
2.	남	북한 방송교류의 원칙	177
3.	남	북 방송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178
-	1)	프로그램측면의 교류 확대	178
2	2)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공동제작	179
3	3)	남북한 방송 제작협력 사례	181
2	1)	방송제작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189
Ę	5)	남북방송 제작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193
6	3)	케이블방송을 통한 활성화 방안	203
7	7)	남북 방송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	208
4.	북	한의 방송망 정비및 보강 방안	234
-	1)	방송방 정비의 필용성	234
2	2)	북한 해외단파 방송시설의 정비	245
3	3)	북한 FM 방송망의 정비	246
5.	정	보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50
_	1)	남북통신망의 직접 연결	250
2	2)	남북통신망 구축 확대	251
3	3)	남북통신협정의 체결	252
6.	남	북 인터넷 교류협력 과제	254
1	1)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및 법적 규율 현황	254
2	2)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 관련 쟁점	254
3	3)	인터넷 접촉 사전 승인제 폐지시 파급효과	255
		현행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의 한계	

-, = .	259
7. 인터넷 교류·협력 및 개방 전망 ······	260
8.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방안	261
1) 인터넷 접촉 승인제 관련 문제	261
2)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	262
3) 분야별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 방안	265
4) 인터넷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266
5) 정책적 고려사항	267
6) 인터넷 교류협력 합의서 도출방안	268
7) 대남 심리전 수단 활용에 대한 대처방안	269
8) 접촉 승인제 폐지에 따른 대국민 설득논리	270
VI 기 타	
VI -	
1. 돌발 사태를 대비한 방송 운영	271
1. 돌발 사태를 대비한 방송 운영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272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272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3. 돌발 급변사태의 방통시스템	272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272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3. 돌발 급변사태의 방통시스템	272 274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3. 돌발 급변사태의 방통시스템 ₩II 분단국 방송통신 교류 실태	272 274 278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272274278282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272274278282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272 274 278 282 286

표 목 차

<⊞	1> 중파방송 시설 현황	30
<⊞	2> 구국의 소리 방송 시설	31
<⊞	3> 한국의 TV방송 현황	32
<⊞	4> 남북한의 라디오 및 수상기 보급현황 비교('91년도기준)	37
<⊞	5> 한국의 FM방송망 내역	38
<⊞	6> 북한의 방송 국제등록 현황	39
<⊞	7> 제3방송 시간	47
<⊞	8> 동경 110도에 할당된 위성방송 채널과 국가	55
<⊞	9> NTSC와 PAL 방식 비교	56
<⊞	10> 한국의 출력 100kw 이상 중파방송 시설 내역(ITU등록)	57
<⊞	11> 북한의 출력 100kw이상 중파방송 시설 내역(ITU등록)	58
<⊞	12> 남북한 국제 방송 현황 대비	59
<⊞	13> FM 방송시설 현황	60
<⊞	14> 남북한의 가입자회선 비교	62
	15> 남북한의 공중전화 시설 수 비교	
<⊞	16> BSS down-link 제원 (AP 30)	69
<⊞	17> BSS feeder-link 제원 (AP 30A) ·····	69
<⊞	18> 소프트웨어부문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72
<⊞	19> 기타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73
<⊞	20> 북한의 "광명"인트라넷의 기술적 특성	88
<⊞	21> 북한의 인터넷개방 로드맵	92
<⊞	22>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상호제의	98
<⊞	23> 북한 영상물 및 관련 취재 프로그램 방영 현황 1	00
<⊞	24>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제작 목록 1	05
<⊞	25> 남북 간 통신망 연결 현황 1	16

<⊞	26>	남북간 연결 전화 현황	118
<⊞	27>	남북간 판문점 경유 통신망 연결 추진 일지	119
<⊞	28>	남북한 주요 부문별 정보격차 현황	138
<⊞	29>	교육실적	156
<⊞	30>	협력과제의 유형 및 단계별 추진전략	163
<⊞	31>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편성표	180
<⊞	32>	KBS의 2000년 이후 남북방송 교류 현황	190
<⊞	33>	MBC의 2000년 이후 남북방송 교류 현황	191
<⊞	34>	SBS의 2000년 이후 남북방송 교류 현황	193
<⊞	35>	남·북한 TV송·중계 시설수 비교	237
<⊞	36>	북한 TV시설대체시 방식별 소요예산 비교	240
<⊞	37>	대북한 TV송신소 시설방안	241
<⊞	38>	통일후 폐소 대상인 북한의 중파송신소 시설	244
<⊞	39>	북한지역 FM송신시설 후보지	248
<⊞	40>	분단국 언론교류 기본정책 및 교류 형태 비교	285
<₩	41>	동서독간 주요 통신협정과 합의내용 및 결과	293

그 림 목 차

<그림 1> 북한의 방송체계 44
<그림 2> 북한지역의 공중전화 이용광경 63
<그림 3> 북한 컴퓨터 교육 실습 현황 78
<그림 4> 한국의 KS 5715(위)와 공동연구안(아래) 자판구성 ······ 8
<그림 5> 실리은행을 통한 북한 8:
<그림 6> 북한컴퓨터망 체계도 81
<그림 7> 한국 - KEDO 통신망 구성도12
<그림 8> 인터넷망을 통한 자료전송 12년
<그림 9> 통신 인프라 구축 및 대상지역(안) 129
<그림 10> SNG, M/W, O/F를 통한 중계 개념도 13
<그림 11> 부산지역 시간대별 시청률 17
<그림 12> 금요일 저녁 7~8시 연령별 시청자 구성17
<그림 13> 쇼 TV 유랑극단의 연령별 시청자 구성 ······ 174
<그림 14> 동서독간 전화회선 (1969~1990) 29
<그림 15> 동서독간 통화량 증가 추이 (1965~1989) 29-

요 약 문

방송부분은 프로그램과 기술의 상호교류와 격차해소, 그리고 돌발 사태를 대비한 방송통신 결합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평상시 방송기술의 상호교류 부문에서는 격차해소와 방통융합의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이 필요하다.

- 1) 디지털방식 전환과 남북의 동일 표준채택
- 2) 접전지역의 남북 주파수 배치와 혼신 재거에 대한 상호 협력
- 3) 영상상봉을 위한 광케이블망 구성과 ST 방송 중계선 활용
- 4) 북녘위성 괘도의 남북 공동 사용
- 5)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위성 영상을 이용한 전계강도 관측 등) 등이다.
- 5) 한반도 관통 국제 광케이블망 구성 협력
- 6) 인터넷 개방 지원(건의사항 참조)
- 7) 체신과 방정통 관련 인력 대량 양성과 재훈련 (신천 체신대학과 김책공업 종합대학 등에 5년간 5만명 인력 양성)
- 8) 방정통 관련 분야의 정례적 학술교류

하지만 돌발 사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 1) 대류권 산란파를 이용한 방송망 구축 방안
- 2) 위성DMB 의 북녘지역 방송 이용
- 3) 성층권 수직 전파통신 시스템
- 4) 디지탈 수신 단말기와 수시기와 수상기 보급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평상시나 돌발사태시 상호교류를 막론하고 모두 우리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북녘은 유선방송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실크로드 구성(2000년 진용옥)에서 방송의 종요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실크로드는 북

녘의 정보통신 토대기반(인프라)의 구축을 도우는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정보 인프라의 다양한 구성에서 경제적 실리와 회선의 안전성과 생존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 좋으며, 북녘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적 필요성에 대한 배려에서 고려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북공용위성방식은 북한의 괘도 자원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서 그리고주민 전체보다는 개방지역의 제한된 기업통신용으로 먼저 제공할 수 있는이점 때문에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볼 영순위 작업일 것이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분석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실태 파악이 어려워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5~6일 사이 중국 연길에서 열린 남북 3개국 지역식별자 회의에는 북한은 인터넷 국제개방에 있어 중대한 제안을 하여왔다. 문자 언어 부호체계에서 북한 국규(완성형 코드)가 반영되지 않아 인터넷 국제개방에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m/s나 인터넷 포탈 사업자네이버 등에서 지원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2008년 12월7일 남북중 지역식별자모임 합의서) 우리대표단은 적극 찬동하며 현실을 파악한 후 구체적 상황을 중국을 통하여 1월 15일 까지 통지해 주기로 하였다.

이 이외 인터넷 개방관련 감청관찰 모니터 장비, 방화벽, 지역서버, 광케이블 망구축, 단말기 250만대(전 인구의 10%)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해 왔다. 우리는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 (본 연구서1장 2절 참조)가 성안 중인데 이 중에서 인터넷이나 방송통신 관련 비용이 포함되도록 건의할예정이며 북한의 인터넷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체재 붕괴를 우려한다는 분석과는 정반대의 견해 표명에 다소 당황했으나. 그들의 열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의 열망을 우리가 화답하고 성사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를개선함은 물론 새로운 투자처를 개척함으로써 침체 국면을 돌파할 새로운계기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회담이나 총리회담 의제로격상시키기 위한 심층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인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음은 남북관계의 발전적 모습을 구 축해야 한다는 당위적 물음을 지니고 있다.

실로 답답한 오늘의 남북관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전지구적 통합의 분위기가 남과북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남 북교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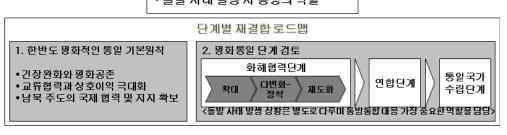
남북간의 교류, 특히 방송교류 부문은 남북간의 그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민족임을, 즉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고 통신부문은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빈번한 교류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남북방송통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작업은 더없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남북방송통신교류 방안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 이다.

1. 연구 방법론

1) 연구 설계

- 목 표 1. 단계별 방송통신교류 정책 수립 2. 방송통신망 통합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 3. 남북 사회 . 문화 통합과 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통방교류의 역할 제고 • 세부 통방교류협력방안검토 • 단계별 통방교류협력 지원정책 수립 • 돌발 사태 발생 시 통방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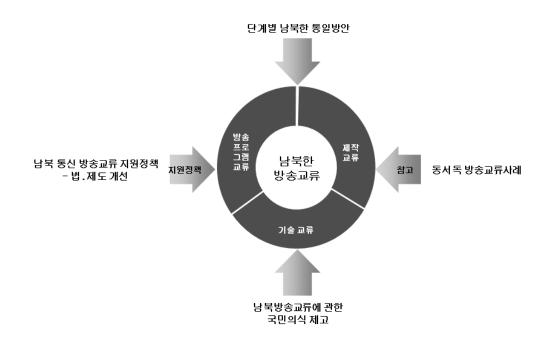


- ① 한반도 통일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 균형,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른 점 진적 과정을 거쳐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정치발전을 고려해 남북 방 송교류와 통신 서비스 제공의 중장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② 통일정책을 반영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화해협력 단계, 남북 연합단계, 통합국가 수립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③ 통일 3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송 통신의 교류 협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④ 남북 방통교류는 방송프로그램 교류, 방송제작 교류, 방송기술 교류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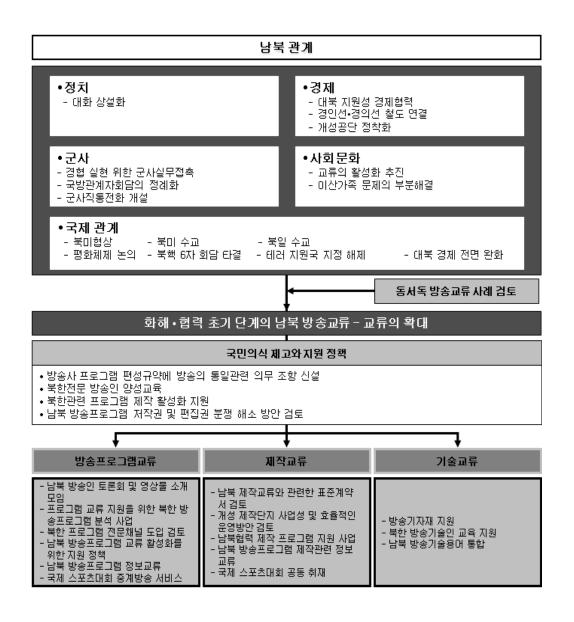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방송교류의 최종단계는 방송통합이며, 이 단계는 통일국가수립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⑤ 남북 방송교류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사회문화적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 방송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⑥ 동서독 방송교류사례와 방송현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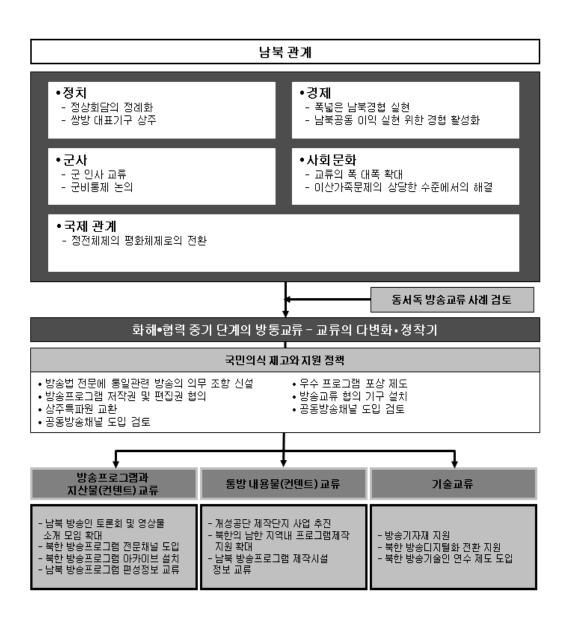
2) 영역별 연구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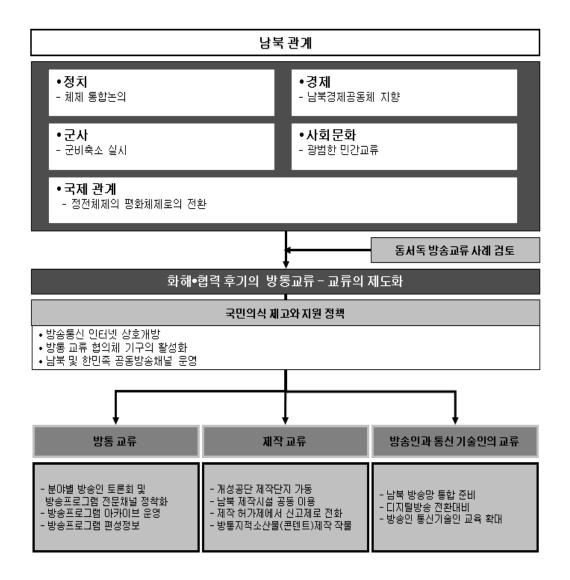
- 3) 남북관계 발전단계에 따른 연구진행도
- ① 초기 화해·협력시대의 남북 방송교류(남북 방송교류 확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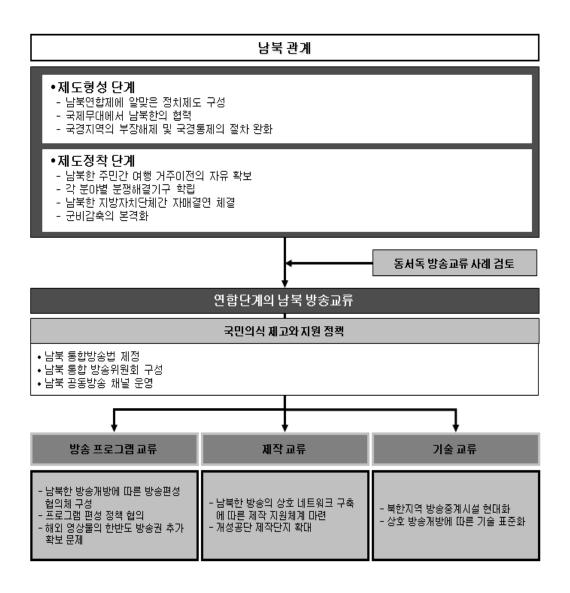
② 중기 화해·협력시대의 남북 방송교류 (남북 방송교류 다변화·정착기)



③ 후기 화해 · 협력시대의 남북 방송교류 (남북 방송교류 제도화)



④ 연합 단계의 남북 방통 교류



⑤ 통합 단계의 남북 방통 교류

남북 관계

- 통일헌법 제정 및 공포
- •행정체계의 개편
- •남북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합의 어려움을 최소화
- 북한지역의 민주화 및 남북한 정치문화 통합
- 북한주민들이 다원주의적 사회에 대한 적응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치사회 통합의 후유증 최소화 제도 형성 단계

동서독 방송교류 사례 검토

통합국가단계의 통합방통정책

- 남북 통합 방통망 구축
- 남북 통합 방통위원회 운영
- 북한 방송인 재교육과 통신 기술인 프로그램 운영
- 사회 안정을 위한 방통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4) 급변사태단계의 남북 방송교류

남북 정치 관계

-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권력층 내의 무력적 분열, 주민들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 등 여러 유형을 상정할 수 있는 바, 급변사태가 통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유형별, 상황별 로 다를 것임
-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가 권력엘리트의 교체로 인한 내적 무력혼란의 양상을 띠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내부 혼란이 외세개입을 초래할 경우, 남한의 직접개입과 UN 평화유지군의 개입 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함

2. 비핵개방 3000과 남북방송통신 교류와 협력

통일부는 2008년 10월10일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각종 대북 사업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간 핵검증 협상이 타결되면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맞춰 각 분야 사업들이 검토되고 우리가 천명한 입장에 맞춰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1)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연 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만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비핵화 단계별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검증을 통해 그것이 확인되면 남북 경협의 활성화, 투자. 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간 고위급회의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는 점도 향후 남북 교류관련 전망을 다소 밝게 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아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정책을 수행할 입지가 넓어진 것이지만 북한에게는 오히려 대남 압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때문에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하튼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남북 경협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이란 게 그 근거다. 더 나아가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핵신고와 핵시설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 즉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의 본질이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기에 테러지원국 해제 후 북한의 핵불능화가 정상적으로 마무

¹⁾ 조선일보, 2008.10.11.

리될 경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에 적극성을 띨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핵 문제 진전을 명분 삼아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대북 식량 지원, 개성공단 숙소 건설, 대북 통신 자재·장비 제공 등을 보다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신방송교류와 협력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남북 관계개선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최근에 있었던 몇가지 에피소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될뿐아니라 향후 남북관계개선에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피소드 1: 지난해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정연주 KBS 사장(당시 방송협회장)은 정상회담 사회단체·언론분야 간담회에서 '월 1회 개성과 서울에서 남북공동으로 뉴스 생방송을 진행'하고 '개성에 방송·영화·기술 분야 교류를 위한 문화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정 사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 북측은 "그런 얘기하지 말라. 남측 언론이 우리를 비방·중상모략하고 민족공조는커녕 외세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방송교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판을 한다. 이 같은 북측의 남측 언론에 대한 불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마지막 날 환송오찬장에서 자신을 당뇨병이라고 보도한 남측언론을 두고 "기자인지 작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남측의 언론 보도는 편파적이며 반북 기사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에피소드 2: 2008년 9월 말 삼박사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 등지를 다녀온 이광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겸임교수는 지난 2005년과 작년의 방북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간의 남북관계가 너무나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기고한바 있다. 다음은 그가 기고문에서 밝힌 오늘의 남북관계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2)

첫째, 어느 틈에 북한에는 남한이 아니라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양의 가장 큰 호텔인 양강도 호텔 객실 안의 TV채널에는 중국방송이절반 이상이고, 유명한 관광지마다 중국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다. 식당에서도 우리보다 중국인들의 숫자가 많았고 그렇게 느껴서인지 접대원들이 우리보다 중국인들에게 훨씬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보였다." 남북이 최근에 와서 멀어지고 있는 동안 중국인들이 몰려와 북을 점령해 버린 것이다.

둘째, 북한의 건축과 이동통신을 모조리 이집트가 도맡아 버린 일이다. "평양의 명물 105층 건물 유경호텔, 골조만 세워놓고 십수 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유경호텔을 이제 와서 건축하는 회사가 이집트 회사라고 한다. 더 놀랄 일은 휴대전화가 없는 북쪽에 이 이집트회사(오라스콤 텔레콤)가 이동통신 운영권을 확보하여 올 연말이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소식이다. 이 회사가 평양거리의 도로건설도 맡아서 한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얼 했는가?"

2008년 10월11일자로 북한은 테러지원국 멍에를 벗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중국·미국·일본·유럽 등의 대자본, 대기업들이 일제히 북녘에 진출하려고 준비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북녘은 경제개발과 산업의 대상으로는 신천지이다.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테러지원국이라는 멍에를 벗고나면 외국의 대기업과 자본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에피소드 3: 북한은 2008년 11월24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12월1일 부로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고강도' 통행 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예고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 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08년 12월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²⁾ 경남도민일보, 2008년 10월 16일, 발언대: 이광희, "전면적인 남북협력과 교류 나서야"

북측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다음 달 1일부터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다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 된 물자와 운반자에 대해서는 건당 엄격히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0 북측은 또 개성관광과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북측은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측에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북측은 또 통지서에서 "이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측에 있다"면서 "우리는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 정책의 희생양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1차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을 향해 조치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4)

³⁾ 중앙일보, 2008년 11월25일

⁴⁾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4일

이상의 것들이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일 것이다. 실로 답답한 오늘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남북간의 방송통신교류에 대한 희망이다. 방송부분은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민족임을, 즉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이고 통신부문은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방송통신교류의 활성화는 오늘 현재 아무리 남북이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1) 상생공영으로 정리된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전략은 남북 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비핵개방 3000은 그 실천단계인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하위수단으로 격하시켰다. 요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라가 되도록 보장해 준다는 상호주의 교류협력 형태이다.5)

이런 수치가 나온 배경은 "남한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내다보는 2018년쯤 북한도 3000달라는 돼야 통일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대등관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상생공영과 과거 대북정책과의 관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구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의 이중성 이라는 전제조건 들을 감안함으로서 실용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포용정책 즉 "원칙 있는 포용정 책"(Principled engagement policy) 의 성격을 띠고 있다.6)

요약하면 비핵개방 3000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선결돼 추진되는 상대적 인 정책이다. 그렇다고 선 핵 폐기론 이나 조건 론은 결코 아니다. 오로지 핵 진전에 따라 단계적인 경협을 추진한다는 신축성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⁵⁾ 서재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방향 」통일교육협의회 발제안 2008 7.15

⁶⁾ 권영경 「개성공단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2008 internationl conference;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a Future of Unification) 2008 10. 22일 p.192.

전 정부의 10.4정신과 비핵. 개방 3000과는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상호주가 요구 된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에서 공식적으로 해제시킨 것이나 대북 직접 대북 행보에 적극성을 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는 북한 핵 비핵개방 3000에 참여정부의 10.4 선언에 포함 시키는 진전까지 가져왔다. 아무튼 좀 더 넓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성명-노무현 정부의 10.4기본정신 계승을 존중하며 서로 상생공영 단계로 나간다는 것이다.7)

2) 단계적 남북경협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에 의존하는데 토 대를 두고 있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체제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엄연히 체제경쟁의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상생공영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구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포용정책의 기도가 유지된다. 그럼에도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의 이중성 이라는 전제조건들을 감안하면 실용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포용정책 즉 "원칙 있는 포용정책"(Principled engagement policy) 의 성격을 띠고 있다.8)

원칙의 강조에 따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하에서 남북경협은 비핵개방 3000 구상으로 상징되고 있다. 물론 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원칙과 더불어 유연한 접근도 강조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닌 단계별 연계관계로 규정짓고 있다⁹⁾ 이는 곧 이전 정부의 교조주의적 병행접근에 대비된 포괄적 병행접근을 취한 것이다.10) 아무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⁷⁾ 김하중 동일부장관 이화여대 초정특강 내용 중 20008.10.30

⁸⁾ 권영경 「개성공단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a Future of Unification) 2008 10. 22일 p.192.

⁹⁾ 통일 교육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렇습니다.」 대북정책 설명자료 2008.8pp.26-27

시장화와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적 수단이며 차후 보상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기능인식은 남북경협이 비핵화와 연관해서 단기적으로는 소극적인 경제적 관여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남북통일에 큰 기초가 된다.11)

그러나 현재 비핵개방 3000의 구상은 북한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정책의 실 현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북한의 반응은 매우 거칠다 '참을 수 없 는 모독에 핵 포기와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황당무계한 반통일적 발상'이라고 몰아 부치고 있다. 지금 북한은 20년간 핵을 방패삼아 미국과 숨 가쁜 승부를 펴면서 비방의 티켓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바꾸는 통 미봉남(通美封南) 노선을 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 대하게 될지 실로 불안하기만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시점 이라고 하겠다.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실천 로드맵이 나와도 당장 실천이 어 렵고 핵 포기의 본격화와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핵 폐기합의 까지는 최소한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해 보 아야만 한다. 이제 제3의 대안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3) 비핵개방과 방송 통신 연계의 전제

① 기능접근을 통한 분단통합

분단통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류사업 가운데서 방송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50년이 넘는 남북분단의 장기화로 피차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먼저 접근할 분야는 정치성이 배제된 비정치적

¹⁰⁾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2008 추계호)p.10

¹¹⁾ 오코노기 마사오"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그 주변-일본으로 부터의 전망"「통일 평화 그리고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비전」서울대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08. 5.20일).p70 적극적 관여 가능성을 열어둔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인 기능접근 이다. 기능접근은 다른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비해 이데올로기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접촉과정에서 부터 부담이 적다.

뿐만 아니라 여타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시켜주는 수단적인 역할을 하기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진정한 의미의 민족적 대통합을 위해 필수적 정책 수단이 된다. 이것은 남북한과 비슷한 분단국이었던 예전 동. 서독 통일과정에서 방송 통신의 역할이 증명해 준다.

남북한과 동서독은 2차 대전의 산물이 낳은 분단국이다. 물론 분단배경은 다르나 민족, 언어, 종교, 관습 등 분단통합의 요소는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 러나 분단의 장기화는 분단통합 요인들이 날로 이질화 돼 분단이전의 원천국 가 상태가 소멸돼 가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남북한이 그렇다. 아직도 극심한 이념적 대치현상은 그대로이고 통합요인인 민족 언어 관습 생활방식 등이 모두 극심한 이질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질화 극복 대안으로 방송 통신 부분이 가장 먼저 제시된다. 동서독에서 방송 통신의 분단통합 역할이 하나의 정설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있다.

동서독은 1972년 12월부터 3년간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행정기본 조약을 체결 했다. 그 일환으로 우편, 통행, 통신, 방송·언론, 환경, 경제, 과학 기술 등 각 부문별로 다각적인 협정을 맺었다. 특히 방송 통신교류 합의 내용 중에는 전신 텔렉스회선 개통과 이의 회선중설 기기의 점진적 자동화 칼라 TV용 지향성 방송망 구축을 비롯하여 서독-베를린 간 디지털식 지향성 방송 망 구축, 광섬유 통신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12)

이로 인해 우편 전화 통신은 물론 서로 간에 방송 프로그램 교환이 부분적으로 가능했고 이러한 부분적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는 결국 상대방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후 동서독은 1985년 문화협정을 통해 프로그램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결국 방송 전파의 완전 개방단계 까지 왔다. 또한 동·서독은활발한 교류 이전에 정치적 의지도 크게 기여했음을 간과해 선 안 된다. 바로

¹²⁾ 김영윤 "동서독 교류협력과 대 동독 대가지급"「통일정책연구 제10권 2호」2001년 p.275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이란 큰 틀의 구상이 뒤 따른 것이다.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전에 서독은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의해 동독이 서독에 병합되는 합병통일을 추구했으며, '힘의 우위정책'에 기초한 통일정책 을 추진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통일이라는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심화 됐다. 특히 우리가 동서독의 방송을 주의 깊게 보아야할 점은 바로 방송과 통신의 동시교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② 북한의 방송 통신에 대한 견해

그렇다면 남북교류 추진에 앞서 북한에선 어떻게 방송 통신을 정의하고 있는가. 우선 특이한 점은 체신의 범주에 통신과 방송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체신'의 뜻은 우편 전신 전화 등 을 접수 전달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¹³⁾ 그 중요성에서도 "사회생활 영역에서 이뤄지는 연계를 신속 정확히 이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는 나라의 신경"으로 간주 하고 있는 것이다¹⁴⁾

따라서 통신이나 방송 모두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제때에 전달 침투시키는 역할로서의 정치 사회화(政治 社會化)의 도구로 본다. 혁명건설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로 사회주의 정책공약 혁명 전통교양 계급교양 강조가 방송의 주 기능이다. 15) 여기서 선전 선동은 인민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노동당 정책을 교양하는 것을 뜻하며 선전은 담화나 연설문, 책자, 삐라, 격문, 라디오, 영화를 통해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이다.

¹³⁾ 김상택. 공정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통신통합"남북정상회담개최기념 심포지엄(2000.6.23 발표논 문 2000.6) p.4

¹⁴⁾ 김일성 "체신은 나라의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2권』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9)p,139

¹⁵⁾ 김일성 저작선집 10권 조선노동당 출판사 p.97.

체신사업을 사업 별로 구분하면 크게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등으로 구분한다. 1) 전기통신에는 유선무선에 의한 전신 전화통신이 있고. 2) 우편통신은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정기 간행물들을 배포하고 소포 송금 등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고. 3) 방송에는 유무선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이 있다.

남북한 체신의 성격 차이를 종합해 보면. 남한의 체신은 공익성과 국민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성격은 철저한 사회주의 체신관(遞信觀)에 바탕을 둔다. 본래 통신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 도구로 보고 유물사관(唯物史觀)에 따른 사회주의 체신개념에 기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이나 인력관리도 철저한 이중적 통제구조에 역할 권한의 중복된 행정원리에서 운영된다. 통신망 활용도 당과 국가경제기관들이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와 지휘를 원만히 보장해 주고 경제부문들 간이나 공장 기업소 상호간,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16) 거기다 북한식 통치이념인 "주체"를 포함한 "주체체신"을 구현하는 점이 특이한데 이런 기조 하에서 과학기술과 체제유지를 병행시키는 것이 독특한 북한식 과학이념이다.

주체체신은 통신 언론 방송을 통해 정치교화 기능의 전개를 정당화 하고 있다. 바로 주체와 방송 통신을 연결 사상보급을 하는데 그 단적인 사례로 전 국의 우편소가 주관하는 유선방송의 기능을 꼽을 수 있다.

3. 북한 방송통신 환경

1) 대내 환경변화

북한은 빈곤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그 돌파구를 IT분야에서 찾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연두사설에서도 "2012년 김일성 주석 100주기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연다."는 장기목표 아래 금년을 '교육에서의 실리주

^{16) 『}경제사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p.350

의'라는 핵심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IT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과학기술 교육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체제 개편,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제고, 특히 과학기술과 컴퓨터 부문에서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 집중 육성의 장기교육 구축이다.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서 찾고 있다.

이미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때부터 과학기술을 강화 하면서 특히 정보 통신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선 내각을 개편, 기존의 체신성(省), 과학원 부처 외에 전자공업성(省)을 새로 신설했다, 또한 이 분야의 교육 강화를 위해 규제도 과감히 풀고 있다.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에선 최근 남한에서 보내준 정보기술자료 3만권을 학교도서관에 비치해 일반학생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첨단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 새로운 교육방법에 의한 전문가양성과 수재교육 체제 정비에 주력해 왔다.17) 특히 20대 컴퓨터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에게는 군 복무를 면제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졸업 후 이들은 조건컴퓨터 센터 ,평양정보센터 과학원등 북한 최고의 IT연구기관에 배치된다. 특히 대학에서 IT수재교육을 위해 취한 조치로는 새로운 학과 및 학부 단과대학의 출현과 교과과정의 개편 교과목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서 나타나는 특성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학과와 관련한 교과목들이 주를 이룬다.

2) 대외 환경변화

역시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발전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 문제로 각종 규제에 묶여 고립을 면치 못해 왔다. 그러나 관련해 2008년 10월 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해제 한 것은 북한 IT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 해제는 결국 1988년 1

¹⁷⁾ 김정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 한때 대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 돌에 즈음하여 학교 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1996년 10월 1일」 『과학교육 사업을 발전시킬 때 대하여 』(조선노동당 출판사,1999),p.266.

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20년 만에 족쇄를 풀게 된 것이다. 이로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밝힌 '2.13 합의'가 일단락 됐다.

앞으로 불능화가 완료되고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 의정서가 6자회담을 통해 확정되면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수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 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지원법, 대외원조 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결국 테러지원국 이라는 오명을 벗은 것과 동시에 컴퓨터는 군수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기술수출 및 수입이 사실상 가능해 진다. 여기서 이중용도 제품으로 분류된 컴퓨터 IT산업 각종 반도체 수입이 대폭완화될 전망이다.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수출관리법과 수출 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규정됐던 각종 전자산업 관련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입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기술교류와 개발도 가능해 진다. 특히 기초산업의 걸림돌 이었던 각종 첨단 부품 수입이 가능해져 정보 통신 전자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이 가능해 졌다.

핵심은 정보통신분야다. 김정일 체제 출범 후 IT산업에서 '단번도약'을 이루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양성해 왔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약했던 이유는 IT산업 특히 하드웨어 반 출입 제한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국가도메인(kp)을 승인 밭은 이후 인터넷 개방에 대한 전망이 어두 얻던 것도 각종 장비도입의 제한 때문이었다. 때문이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는 김정일 21세기 생존전략을 정보통신분야 육성에 두고 펴는 정책에 '청신호'의 불을 켜주고 있다.

4. 교류의 몇 가지 전제들

남북 방송 통신교류 사업은 다음의 몇 가지 걸림돌이 예상된다. 첫째,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이 시장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기초실력은 탄탄하나 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응용력으로의 전환이 미흡하다. 결국 '우리식 사회주의'란 독특한 정치문화가 낳은 소산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데서 나온 것인 만큼 교류협력을 통해 보완 해소를 해야 한다.

둘째, 북한 IT분야의 중국에 종속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활성화는 시급하다. 지금 추세로는 북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상품성이 한국보다오히려 중국과 일본시장에서 더 높다고 평가 됐다.¹⁸⁾

한 예로 소프트웨어를 북한에서 만든 사례도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미·일과 경제제재봉쇄 해제 등 더딘 진행 속에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자의반 타의반 중국을 선택 하고 여기서 교육을 밭는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뒤 질세라 향후 동북아 질서변동 과정에서 미국 일본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친 중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 사례가 2000년 초부터 북-중간 '대북투자 촉진 및 보호협정'과 뒤이어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협정'을 체결했다. 그 후속책으로 중국 측에서 통신 인 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문제를 추진 중이고 IT전반에 걸쳐 북한시장을 주도하는 전략 하에 협력 사업은 결국 우리가 도전을 밭게 된다. 이런 현실 극복은 결국 남북 공생공존의 공동체 발전전략으로 수용해야 한다.

셋째, 방송교류의 전제로 북한의 개방속도 관련 문제가 남아있다. 남북현실에서 방송은 통신처럼 간편한 사안이 아니다. 방송개방은 곧 북한의 사회문화의 속성을 노출 시킨다는 위험성이 따른다. 때문에 북한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2002년 남북 방송 교류합의서에 입각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이나 제작 나아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 측의 현행 방송법에 통일지향의 방송법규가 없다. 가칭 통일 방송법 제정도 시급하다 손

¹⁸⁾ 유완영. '남북IT교육 고급화로 실마리 찾는다.' 통일뉴스기획대담, 2008.7.8

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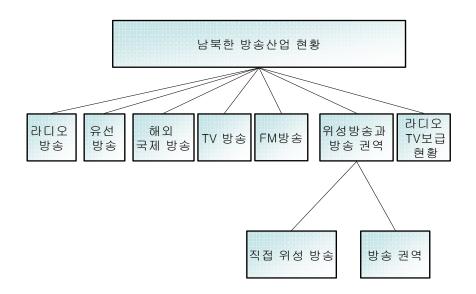
넷째, 미국의 핵 지원국 공식 해제로 일단 지금까지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바세나르 협약 EAR(Export ministration Regulation) 등의 국제규제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의 국내규제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테러 지원국 해제는 북미간의 핵 협상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합의 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미국이 '선물'을 준다는 개념이다.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핵 불능화 2단계 조치가 완전히 이행 되더러도향후 3단계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남북한의 IT협력 등과 같은 사안들도 향후 북미간의 갈등 발생 여부나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 따라 얼마든지 악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경색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당국자 간 남북관계는 경색 일변도이고 간간히 민간단체의 교류만 있다. 설상가상 요즘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주장하고 있다. 거기다 미국의 오바마 새 대통령 당선으로 통미봉남 전략의 심화가 예고되고 이를 입증이라도하듯 와병으로 80일째 은둔하던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축구경기장 관람사진으로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핵 문제 의사결정을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사진 통치"로 표시했다. 이런 상황이 구체화 된다면 남북방송 통신 교류에 장해가 될 수도 있다.

끝으로 북한은 국가 목표를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의 실천에 두는 병영국가다. 거기다 방송통신을 사회적 간접자본 또는 그 하부구조로 보는 자본주의 시각이 아닌 국가의 전유물로 보는 사회주의 체신관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 정보통신 도 군수(軍需)와 민수(民需)가 맞물려 돌아가는 병영체제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자본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인터넷 부분 개방까지 막고 있다. 결국 인터넷 시대에 대문빗장을 걸어놓고 IT강국을 외쳐대는 격이다. 이런 2중적 제약조 건은 북한 IT발전 과정에서 '우리식 발전'과 '불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특 성을 만드는 토양을 제공해 왔다. 비핵개방 3000의 실천은 이 같은 남북방송 통신 통합의 제약조건들의 개선방안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Ⅱ. 남북한 방송통신 산업환경 분석 및 과제



방송이란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것을 전파에 실어 나르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방송전파는 이에 맞는 수신기만 가지고 있으면 신문이나 잡지등과 다르게 어떤 내용을 즉시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방송이 타 매체에 비교하여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전파의 즉시성과 광역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프로그램 내용 의 퍼짐이 반대로 전파의 특성에 의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일반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과 같이 중파, 단파 주파수를 FM방송에 VHF대 주파수와 같은 방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TV방송에 있어서 주파수대는 한국과 같은 VHF와 UHF대이지만 방송방식은 다르게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의 체제를 위하여 어떻게 방송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남북 방송 교류시에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정리한다.

1. 남북한 방송산업 현황

한반도에 방송이 도입된 것은 일제 식민통치하인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이란 이름으로 출력 1KW, 파장 435M(주파수 690KHz), 호출부호 JODK로 첫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일제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현재의 남한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익산, 대구, 광주, 목포, 강릉, 마산, 대전, 춘천, 청주 등 11개 지역에 방송국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북한지역에는 1936년 10월 15일에 건설된 평양 방송국을 위시하여 함흥, 원산, 신의주, 해주, 성진, 청진 등 7개 지역에 방송국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청진 방송국은 해방직전인 1945년 8월 13일에 소련군의 진주 소식을 들은 일본군이 폭파하여 해방당시에는 6개의 방송국만이가동되고 있었다.

이후 8.15 광복과 더불어 민족은 분단되고 그 후 남과 북은 각각 자기 체제의 수립과 유지를 위해 기존의 방송설비를 이용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1945년 9월 9일 주한미군의 서울 입성을 계기로 잠시동안 혼란속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방송이 미군정하의 방송으로 되면서 미국식 제도와편성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47년 9월 3일에는 국제전파통신위원회(현 ITU전신)에서 'HL'이라는 호출부호를 할당 받게 되었고,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하여 방송은 국영화 되었다.그 후 1952년1월 31일에는국제전기 통신연합(ITU)에 가입하여 국제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 1월 1일에는 ABU의 창설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로부터 넘겨받은 방송시설은 6.25동란으로 거의 파괴되었으나 그 후 수복과 더불어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방송시설들이 설치되고 방송출력도 점점 증강 되어 갔다. 1972년 국영이던 KBS가 공영화되면서 방송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새로운 매체인 FM방송은 1962년 5월 25일에 민영방송인 '서울FM'으로 1961년 12월 31일에는 본격적인 KBS의 TV방송이 시작되었다.

북한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조선중앙방송'이란이름으로 김일성의 귀국환 영식을 중계방송하면서 김일성의 소위 '조국개선연설'이라는 것을 중계했다. 이것이 바로 해방 후 북한 최초의 방송이며 이날을 북한방송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1954년 11월 29일에 공산권 중심의 국제방송기구인 '국제 라디오 및 TV방송기구(OIRT)'에 가입 하여 공산권 국가와의 국제 활동을 시작하였다.

UN산하 전문기관인 국제전기 통신연맹(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는 1975년 9월 23일에야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방송연맹(ABU: Asia & Pacific Broadcasting Union)'에는 1991년 9월 1일에 가입했다.

북한은 6.25 전쟁으로 방송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1955년 4월 9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출력을 150KW로 대폭 증강했으며 그 후에 다시 300KW로 증강시켜 대남방송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내부 방송용으로도 유선방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도 TV방송이 도입되면서 조선 중앙 TV방송국이 전국 방송망을 구성하여 매일 방송을 실시하고 평양에만은 주말에 한하여 문화 예술을 전담 방송하는 만수대 TV방송국이 있으며 개성에는 대남전용 방송인 개성 TV방송이 남한과 동일한 방송방식으로 방송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북한도 전국에 걸쳐 FM방송을 시작했다.

1) 라디오 방송

8.15해방 당시 한반도에는 지방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중계하기 위한 소규모 단파 시설을 포함한 중파 방송 시설만이 있었다. 이들 방송시설도 6.25동란으로 인해 남북의 거의 전시설이 파괴된 연후에 전후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남 북이 다같이 방송시설의 강화와 확장에 노력을 경주했다.

라디오방송(중파방송)에 있어서 한국은 국내 청취율 향상을 위해 중, 소출력의 송신소를 위주로 전국에 고루 위치시켰다. 방송내용도 전국민에게 다양한 방송을 청취케 하기 위해 KBS 제1 라디오, 제2 라디오, 사회 교육방송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민영방송으로 MBC, CBS, SBS 및 극동방송 등 여러계열로 형성되어 프로그램은 여러 계층을 다양하게 포용하고 있으며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방송의 가청율은 인구대비 KBS제 1라디오가 97.8%,

제 2라디오는 74%,그리고 MBC라디오의 가청율은 86%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대내 방송은 통제위주의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방송체제인 유선방송이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다. 중파방송은 네트워크분류가 조선중앙방송은 대내용, 평양방송은 대외용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방송내용은 주로 대출력국을 이용한 대남방송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1의 총 출력 참조)

덴마크에서 발행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방송관련통계자료인 2001년판 World Radio tv Handbook(WRTH)에 의하면 남한은 인구 44,502,000명에 라디오 수신기 보유대수41,958,516 대로서 전체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남한의 모든 차량에 라디오 수신기가 부착되어 있고 휴대용 소형 라디오의 보급까지 감안하면 라디오는 보급률과 활용면에서 거의 무제한에 이르고 있다.

1989년판 WRTH에 의하면 북한은 인구 21,498,345명에 라디오 보유대수는 3,697,153대로서 한 가구를 5인으로 볼 때 가구당 1대씩의 보급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더욱이 1991년판 WRTH에 의하면 인구는 23,6619,000 명으로 증가한 반면 라디오 보급대수는 375만대에 머물고 있어 보급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88년 8월 포고령에 의해 라디오 수신기는 모두 수거되고 극히 제한된 노동당 간부 등 특수 계층만 수신기를 보유하고 일반 국민은 모두 유선방송 엠프에 의존하고 있다.

① 조선중앙방송

북한에서 모든 라디오 방송은 국영이다. 라디오 방송국은 전국방송인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중심의 평양방송이 있으며 그밖에 원산, 개성, 남포, 사리원등 11개소의 지방방송국이 존재한다.

조선중앙방송은 산하의 지역라디오 방송국을 연결해 AM과 단파방송으로 전국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1일 평균 22시간 방송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에 서 방송되는 내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내 방송으로 주로 당정책해설, 체제 우월성 선전, 노력 동원 등 주민사상 교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¹⁹⁾.

¹⁹⁾ http://www.kbs.co.kr/tongil/

지역 라디오국에서는 뉴스를 중심으로 지역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다. 개성시내에서는 FM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이 전국에 유선방송망을 이용해 조선중앙 제3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시청자는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로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종선중앙방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용과 외국청취자를 위한 대외용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1945년 10월 14일 개국한 평양방송국을 전신으로 하고있으며, 평양방송(1946. 5), 북조선 중앙방송(1948.2) 등의 이름을 거쳐 1948년 11월 현재의 명칭으로 확정됐다. 개국일이 10월 14일인 까닭은 김일성이 이날평양 귀환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개국초기에는 하루에 3시간씩 방송했으나 현재는 중파 3채널, 단파 4채널로 하루 22시간씩 방송하고 있다.

대외방송으로는 하루에 조선말방송 8시간, 중국어방송 6시간, 러시아어방송 4시간, 영어방송 16시간, 프랑스어방송 12시간, 일본어방송 10시간, 스페인어 방송 6시간, 아랍어방송 6시간 등 총 90시간을 방송하고 있다.

방송시간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이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대략 교양 60%, 보도 25%, 오락 15%로 나뉘어져 있다. 교양프로그램은 주로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수령의 영도력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오락프로그램은 혁명적인 시, 소설, 음악 및 스포츠, 소식 등으로 꾸며져 있다. 뉴스 프로그램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 인쇄매체의 보도와 사설, 논평기사 등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고, 뉴스의 첫머리에는 거의 100% 수령(김일성, 김정일)의 동정이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계층별로 유치원 시간·소년단 시간·초병시간 및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방송도 따로진행하고 있다.

② 평양방송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되어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용)으로 출발했다가 1972년 11월에 현재의 평양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평양방송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의 보도와 사설, 논평, 논설

등을 대부분 인용보도하고 있다²⁰⁾. 1일 23시간 30분을 방송하며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을 대상으로 AM과 단파로 내보내고 평양시내와 개성시내에서는 FM으로 도 방송하고 있다. 한편 1962년 이후, 평양방송을 통해 방송을 실시해왔던 '김일 성 방송대학'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인터넷으로 전환해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평양FM방송은 1989년 1월부터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1일 평균 16시간, 공휴일은 23시 30분 방송하며 스테레오로 전국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대남 및 대외 전문방송으로 당 대남사업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1955년 중앙 방송에서 독립, 조선중앙 제2방송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 10일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중파 5채널, 단파 3채널로 하루 23시간 30분씩 방송하고 있다. 방송시간은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30분까지이며 방송내용은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한국사회에 대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송의 기본포맷은 중앙방송과 비슷하지만, '방송통신대학 강좌' 등 사상교육용 고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 '남조선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방송' 등 특수한 내용의 프로그램도 고정 편성돼 있다.

<표 1> 중파방송 시설 현황

운영주체	운용국수	채널수	총출력규모	가청율(인구)	수신기 보급대수	참고사항
한국KBS1 KBS2 사회교육 민방,기타	66 8 5 45	47 8 5 37	1749 KW 900 KW 3250 KW 787 KW	97.8% 76.0% - -	4200만대 (차량탑재 분제외)	MBC AFKN 종교방송
북한	68	67	11601 KW		375만대추정	유선방송 망전국화

²⁰⁾ http://www.kbs.co.kr/tongil/

③ 구국의 소리

대남전선방송인 개성 방송은 세계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방송 행태로서 남북방송교류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전파의 기본질서에도 벗어난 사례이다. 북한은 대남 흑색선전을 전달하는 '구국의 소리'방송(구 통일 혁명당방송)을 별도로운영<표 11> 참조)하면서 이는 북한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내의 지하 운동권에서 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TU에 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21)

<표 2> 구국의 소리 방송 시설

구분	주파수(KHz)	출력(KW)	송신위치	방송시간
중파	1053	1500	해주	1일 16시간
단파	3480	50	원산	"
"	4450	100	평양	"
· ·	4557	50	해주	"
"	4120	100	평양	1일 7시간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사회주의 이념 우위의 체제 승리를 위하여 모든 사고가 존재하며 이에 지향된다. 북한방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의 이용이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방송의 전파 특성을 이용한 대 전력 전파의 대남침투를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북한 내의 라디오 수신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유선방송의 전국화등 국가차원의 철저한 계획방송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TV방송

① 남한TV방송

남한에서 TV방송이 시작된 것은 1956년5월 12일에 국내의 미국 RCA대리

²¹⁾ WRTH(1990년 판)에서도 이 '구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송신점은 해주라고 명시하고 있다.

점 황태영이 미국 RCA사와 합작으로 미국 RCA사의 수상기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업 TV방송국인 HLKZ-TV가 개국되면서 이다. 동 방송국은 1959년 2월 2일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1957년 9월 15일에 방송을 개시한 주한 미군방송인 AFKN-TV가 개국 운영중이였으므로 미군방송의 협조를 받아매일 밤 30분씩 시간을 할애받아 우리 프로그램을 유지하다가 방송 운영상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KBS-TV개국 준비가 한창이던 1961년 10월 15일에 폐국 되었다.

1961년 12월 31일에는 KBS-TV가 영상출력 2KW, 음성출력 1KW, 채널 9, 주사선 525방식으로 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1964년 12월 12일에는 민간 상업 방송인 동양TV 방송국(현재 KBS 2TV)이 개국되고 1969년 8월 8일에는 또하나의 상업방송국인 MBC-TV가 개국되었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TV방송망이 확장 되어가는 과정에 1981년 2월 1일부터는 전국에 걸쳐 교육방송도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4계통의 TV방송망은 계속 확장되었으며 현재에는 TV방송의 송신 시설수가 기간국 121개 시설과 중계국823개 시설을 합하여 944개시설로서 전국어디에서나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양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1년 12월부터는 '서울방송'이 수도권을 시청권으로 하는 TV방송을 채널 6으로 추가 방영하게 되어 TV방송은 더욱 다양화 되었다. <표 3> 참조

<표 3> 한국의 TV방송 현황

네트워크 명	가시청률 (인구대비%)	기간국 수	중계국 수	계
KBS-1 TV KBS-2 TV EBS-TV MBC-TV SBS-TV	97 95 93.4 약 40	32 31 26 31 1	313 166 204 140	345 197 230 171 1
합계		121	823	944

② 북한TV방송

북한의 지상파 방송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6년 8월, 구소련의 기술협력 하에 "평양TV방송국"의 설비를 구축
- 북한의 모든 TV 제작 시설은 구소련과 동독에 의해 구축됨
- TV중계 설비가 원산과 자강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됨.
-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어 정규 컬러 TV 방송 개시

북한의 TV방송은 1963년 3월 3일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에서의 TV방송이 개시되었다. 1984년 북한에서 발행된 과학백서의 기록에 의하면 1966년 8월 이후 소련으로부터 7개년계획에 대한 원조가 재개된 후 방송국건설도 활발해져 1967년 4월 평양 TV방송국이 개국했다.

이어서 같은 해 황해 TV중계소를 설치하는 한편 1969년 4월에는 개성 TV 방송국을 개국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TV방식과는 다른 컬러 방식인 PAL_M 방식이다

북한은 그 후 1971년 4월 15일에 북한 내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만 시청되는 주사선이 525개인 표준방식 M, 컬러 방식 NTSC방식으로 된대남 전용 방송을 위한 전파를 개성으로부터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은 1971년 전국의 TV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식령, 황해, 원산, 자강도 일대에 TV중계소 시설을 추진하여 당 5차대회 이후 1년내에 TV수신 가능지역이 전국적으로 주민세대의 75%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은 평양TV방송국과 대남선전 전용인 개성 TV방송국으로 2원화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컬러 TV수상기의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았음에도 컬러TV방송을 한국보다 앞선 1974년 4월 15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했다. 컬러 방송방식으로 북한 대내방송인 조선중앙TV방송은 표준방식 D, 컬러 방식 PAL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남전용 방송인 개성 TV방송국은 한국에서만 시청되는 표준방식M컬러 방식 NTSC로 방송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지역 방송채널은 WRTH(*)에 의하면 함흥 3, 평양 5, 신의주 6, 강계 8, 평양 9, 혜산 9, 창방9, 평양 12(만수대 TV채널로 추정), 삼고12,청진 12로 되어 있다. 또한 1983년 12월 4일에는 북한에도 문화 예술 전용 채널인 만수대 TV방송국이 평양에 신설되었고 방송방식은 북한 대내 방송인 조선중아 TV방송과 같은 방식인 PAL/D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는 전국망으로 구성된 사상계몽방송인 조선중앙TV 방송과 역시 대내용인 문화예술 전담방송인 만수대TV 방송, 그리고 대남전용방송으로 북한 내의 방송과 방송방식이 틀린 개성TV 방송 등 3계통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TV방송에서의 변화는 북한이 ITU의 IFRB에 1989년 3월에 등록한 자료에 의하면 상원에 530MHz(ch20), 평양에 538MHz(cH24)와 562MHz(ch24)의 UHF-TV 채널이 1989년 3월 1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VHF-TV 채널은 모두 사용되어 포화상태가 되었고 1989년에 개최된 평양축전을 기해 TV 가시청권을 더욱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TV채널이 등장하지 않았나 추측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ITU의 IFRB에 등록된 북한의 TV방송 송신시설 총 수는 UHF채널 3개소를 포함 모두 489개소로 나타나 있다. 이는 평양에 한해 만수대 TV방송이 있을뿐 여타 지역은 조선 중앙 TV방송국 한 계통만 있음에도 그 수가 많은 것은 북한은 남한보다 산악 지역이 많은 관계로 소출력 중계시설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조선중앙TV방송

1963년 3월 3일 평양 TV방송국으로 개국한 북한의 대표적인 TV방송이다. 1970년 4월 15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62회생일을 기해 컬러방송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편성은 보도, 정치선전, 경제선전, 교육, 문화, 체육문예물, 영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양, 사리원, 해주, 원산, 함흥 등 14개소에 설치된 송신소를 통해 북한 전역에 방영되고 있다.

모란봉에 있는 평양송신소의 탑은 높이가 1m, 송신출력은 25kW이다. 송출 방식은 PAL방식이며, 보도는 '텔레비젼 시보', '영화보도', '녹화보도' 등의 형 식으로 내보내고 있다. 정치선전에서는 수령과 당의 위대성 부각에 중점을 두 고 있고, 경제선전에는 당의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추동하는 현지보도, 현지 방송, 축하무대 등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

교육방송으로는 대체로 과학교육영화를 방영하는 '고등중학생 교육방송시 간'과 '텔레비젼 방송대학'(1982년 9월1일 개시)이 있으며, 이밖에 '유치원시 간', '소년단 시간' 등도 편성되어 있다. 또, '사회문화시간', '위생과 건강', '알 아맞추기 경연', '가요경연', '국제체육소식', '문예작품 감상', 'TV소설', '텔레비 젼 음악서사시' 등의 프로그램도 수시로 편성되고 있다. 사옥은 평양시 모란 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평양에는 이 중앙TV 외에도 토, 일요일에만 방영되는 만수대 TV방송이 있다. 1983년 12월 1일 개국했으며, 평양시민 및 외국인 대상으로 예술공연과 영화를 주로 방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전문방송이다. 방송시간은 아침 9시~오후 1시, 오후4시~저녁 10시까지 10시간이다. 중앙TV와 만수대TV에서는 옛 소련영화와 중국의 TV연속극 등 매년 평균 약 200여편의 외화가 방영되고 있다. 편성비율은 영화 47%, 스포츠 34%, 뉴스 15%, 음악 4% 정도이다.

참고로, 지방 TV인 개성 TV는 지난 1971년 4월 15일 개국했고, 북한의 다른 TV와는 달리 남한과 같은 NTSC방식으로 전파를 송출, 대남선전을 위한 TV방송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두차례 방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편성은 계몽 및 선전용 영화가 35.6%, 스포츠 21.1%, 단막극 13%, 보도 10%, 음악 9%의 비율로 짜여 있으며 국가 행사의 방영에 따라 편성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상업광고는 전혀 방송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사이마다 음악이나 구호를 내보내고 있다²²⁾.

²²⁾ 두산백과사전에서 정리.

나. 조선교육문화TV

조선교육문화TV는 평양과 개성 주변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다. 1997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 신설된 방송국으로 주요방송내용은 교육, 과학지식과 일반상식, 사회문화생활, 국내외 체육경기, 예술공연, 영화 등 정서함양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3시간씩 방송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각 10시간 방송하고 있다.

다. 만수대TV

만수대TV는 다른 국영방송국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직할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영기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NHK, 2008). 만수대TV는 평양시내를 중심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토요일 3시간, 일요일 9시간 방송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반향이나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조선중앙TV, 교육문화TV, 만 수대TV 상관없이 모든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다.

라. TV국제방송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태국의 Thaicom 3 위성을 이용해 아시아, 오스트 레일리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1일 5.5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12.5시간 방송하고 있다. 조선중앙TV의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한편 2003년 4월에 주파수를 변경했고 그 후 라디오국제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마. 남북한 TV 수상기 보급협황

남한의 TV수상기 보급현황은 1991년도 KBS연지에 의하면 컬러 수상기 등록가구가 7,438,423대이고 1991년 판 WRTH에 의하면 870만대로 되어 있으나

미등록 수상기와 면제대상 그리고 등록대상이 아닌 흑백 수상기 및 가구당복수 소유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보급된 수상기는 약 1200만대 내지 1300만대로 추산된다. 90년말 현재 가구수를 약 1100만으로 볼 때 1가구당 1대 이상의 수상기가 보급되어 있는 셈이다.

바. 북한의 TV 수상기 보급현황

북한의TV수상기 보급현황과 보급상황은 1991년 판 WRTH에 의하면 1990년판에서와 같이 125만대이고 1988년 판 '세계의 라디오와 텔레비전'(NHK판)에 의하면 1984년12월 현재 105만대로 기록 돼있다. 또 1986년도 판 유럽 연감에 의하면 1985년 말 기준 컬러 10만대, 흑백 95만대로 모두 105만대로 나타나 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북한의 일본 간의 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까지도 매년 일본에서 컬러 수상기를 연간 수 만대씩 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완제품화 하여 제 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도 있다. 북한에서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단일방송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널의 변경이 필요 없다.

<표 4> 남북한의 라디오 및 수상기 보급현황 비교('91년도기준)

구 분	라디오 보급대수	수상기 보급대수	비고
한 국	약 4200만대	약 1200만대	미등록 포함
북 한	약 400만대	약 200만대	컬러 약 30만대 포함

북한의 전자공장들이 상당 부분 수상기 조립과 수리를 위주로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북한에는 TV방송초기부터 지금까지 컬러 수상기가 약 30만대, 흑백 수상기가 150만대 모두 180만대 정도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991년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BU총회에 처음 참가한 북한의 방송위원회 차성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에는 약 200만대의 TV수상

기가 보급되어 있다고 처음으로 수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3) FM방송

FM방송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5년 6월 25일 서울 FM(89.1MHz 현 KBS 제 2 FM방송)이다. 그 후 FM방송이 계속 등장하였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중파방송이 외래전파에 의한 혼신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방해전파로 말미암아 국내 가청권은 축소되고 음질은 저하되어갔다.

국내 중파방송시설을 대폭확장 강화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결과가 기대되지 않았으며 외래 전파의 혼신이나 잡음이 적은FM방송을 급속이 확산시켜 중파방송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다양하고 음질이 좋은 방송을 하게 되었다.이는 또한 국내 라디오 생산품이 모두AM/FM 겸용으로 대량생산체제에 돌입한시점과도 맞아 떨어져 국내 방송 효과를 십이분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FM에 의한 방송망은 6개 계열 방송사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 중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FM망이 5개나 되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FM송신시설은 150개국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FM방송이 다극화, 다양화된 FM방송 청취율은 AM방송을 앞지르고 있다.(표 2참조)

<표 5> 한국의 FM방송망 내역

(1991년 현재)

방송국명	방송망명	가청률 (인구대비) (%)	기간국	간이중계국	계
KBS	표준방송보완FM 교육FM 음악FM1 음악FM2 군FM	91.2 97.5 94.8 수도권 약 93	11 21 24 1 3	10 35 1 - 3	21 56 25 1 6
MBC	표준방송보완FM 음악FM	78.7 93.9	8 20	2 4	10 24
기타	단일 FM방송국 (평화,불교, 교통, 대전,극동, 청주,기독교)		5	-	5

북한은 1989년에 개최한 제 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1989년 1월 1일을 기하여 새로운 방송매체인 FM방송을 개시하였다. 최근 ITU의 IFRB Circular Letter에 의하면 ITU의 IFRB에 등록된 북한의 FM방송망은 표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의 전국 주요도시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FM방송밴드는 한국과 같은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 FM방송은 1989년 1월 개국한 음악 위주의 대남 청소년 심리전 방송이다. 방송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8시간, 공휴일은 24시간이다.

프로그램의 비율은 대개 혁명가곡 40%, 고전명곡 40%, 민요 및 가곡 10% 정도로 구성돼있다. 혁명가곡은 북한의 혁명가곡이 약 55%, 독일곡이 15%, 러시아곡 10%이고, 고전 명곡으로는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모차르트, 멘델스존의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 외 문예물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을 찬양하는 내용과 한·미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속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6> 북한의 방송 국제등록 현황

시설장소	운용개시일	주파수(MHz)	비고
간 성	89. 7. 1.		출력은 20KW로 추정
개 성	89. 1. 1.	91.1	
원 산	"	92.5	
청 진	"	100.5	
강 계	"	101.2	
원 산	"	101.4	
평 성	"	101.6	
개 성	"	102.5	
평 성	"	102.7	
사리원	"	102.9	
남 포	"	103.0	출력은 20KW로 추정
해 주	"	103.2	출력은 20KW로 추정
함 흥	"	103.7	
사리원	"	103.9	
평 양	89. 7. 1.	104.0	출력은 20KW로 추정
평 양	89. 1. 1.	104.5	

시설장소	운용개시일	주파수(MHz)	비고
계 흥 원 주 포 강 진 양 주 강 함 상 신 남 평 청 평 해	" 89. 7. 1. 89. 1. 1. 89. 7. 1. 89. 1. 1. "	105.2 105.4 106.0 106.5 107.0 107.2 107.4 107.5 107.5	

*14개 지역, 24개 파, 25개국

4) 해외(국제)방송

한국에서 해외방송이 시작된 것은 1956년 수원 송신소에 단파 송신기 (50KW)2대와 해외방송용 지향성 안테나 시설을 완료하고 1956년 10월 1일부터 시험방송을 거쳐 1957년 9월 2일에 최초의 해외방송을 북미주 및 남미주지역과 우리나라 교포가 많았던 하와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이어서 유럽지역과 동남아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날로 증가되는 여러나라의 해외방송 전파로 인한 혼신으로 해외방송 효과는 감쇠하는 반면 해외방송의 강화는 더욱 절실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송신 출력과 지향성을 갖춘 새로운 해외방송 송신시설인 김제 송신소가건설되고 최근에는 노후된 수원송신소의 단파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여화성 송신소에 시설하게 되었다.

현재 남한의 해외방송은 김제송신소 (100KW x 4, 250KW x 3)와 화성송신소(10KW x 2, 100KW x 2)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12개 언어 23개 주파수로 일일 연 127시간 15분씩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리적 조건으로 수신상태가 좋지 않은 미주지역을 위해서

1990년 4월부터 캐나다와 해외방송 협력협정을 맺고 캐나다 단파시설을 이용하여 6,145KHz 와 9,650KHz 및 11,715KHz등 3개 주파수로 일일 2시간씩 방송함으로써 북미 동부지역과 남미지역의 방송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함으로써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위성을 이용하여 해외 기지를 거점으로 하는해외방송 시대에 한국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54년 11월29일 동구권이 주도하는 국제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기구(OIRT)에 가입한 이후 1957년 소련과의 방송협조에 관한 협정체결을 필두로 공산권 국가들과 방송자료, 방송경험의 상호교환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방송이 시작되었다. 그 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선전과 김일성 유일사상 홍보를 위해 해외방송 시설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는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등 9개 언어로 28개 주파수(중파 621KHz, 청진 500KW 대일방송 포함), 일일연 150시간 이상의 해외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영인 평양방송은 9개 언어로 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1일 합계약 57시간의 해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라디오 국제방송은 '구국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 프로그램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의 프로그램을 재편성해 9개 언어로 1일 18시간 정도 방송하고 있다. AM를 사용해 평양시내에도 재송신하고 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반제민족민주전선평양지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조선중앙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1일 12시간씩 방송하고 있다.

'구국의 소리'방송은 이른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대변 방송이다. 한민전은 지난 1969년 8월 한국내에서 자생, 조직된 것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통일혁명 당이 1985년 7월 27일 이름을 바꾼 것인데 그 직후인 1985년 8월 8일 이 방송도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당 통일선전부(대외연락부)의 지도 아래 한민전 산하의 칠보산 연락소(평양시 흉부동 소재)가 이 방송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 방송이 한국내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남한출신 입북자를 방송 요원으로 활용해 왔는데, 82년 독일유학 중 입북한 이창균이 고문, 68년 통혁 당 사건의 주범 김종태와 입북한 이진영이 소장, 부소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1969년 12월 강릉에서 납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인 성경희, 정경숙등과 프랑스 유학중 1985년경 입북한 허흥식 등 7~8명의 입북자들이 북한사람들과 함께 방송요원으로 일하며, 특히 허흥식은 영어방송을 담당해 왔다.

5) 유선방송

① 남한의 유선방송

한국에서 유선방송은 1950년대 말부터 전후 라디오방송을 조속히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라디오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에 6.25 동란의 부산물인 탄피를 모아 유선방송용 케이블을 재생시켜 확산해 나갔고 농어촌에 엠프와 스피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활성화 되었다.

1959년도부터는 남한에서 라디오 수신기 생산이 시작되고, 그 후 라디오 방송시설도 확충되어 유선방송은 점점 사양화 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0년에 등장한 TV방송망이 확산되면서 1970년에는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라디오 방송만을 위한 유선방송에 TV방송까지 포함시키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 대체법인 유선방송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1986년 12월 31일에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유선방송은 TV방송 위주가 되었다.

② 북한의 유선방송

북한의 유선방송은 북한 주민들만을 위한 특별 전용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 청취 수단은 일반적인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TV와 유선방송인데 TV는 보급률과 시청시간, 전력난, 프로그램의 제약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약 27배 성장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유선방송의 중요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1956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1959년에는 12배의 성장을 이룩하였고 1961년에는 16배, 1964년에는 27배까지 성장하게 되어 전체 리의 98%, 1965년에는 전체의 99.4%가 유선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선방송의 전국화가 이루어 졌다.

현재 북한의 TV보급율은 도시의 경우 70~80%, 농촌의 경우 40~50% 정도이다. TV의 경우 방송시간이 저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주민들, 특히 지방주민들의 경우 TV시청은 매우 어렵다.

전파 라디오는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 일반주민들이 청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FM방송의 경우 청취를 한다고 하여도 외국방송, 남한방송을 듣는다고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일반 북한주민들이 잘 듣지 않거니와 FM음악방송을 들을 문화적 여유도 없다.

남한 국민들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 가능성은 수십분의 1에 불과하고 1일 평균 정보 습득량은 남한 주민의 50~100분의 1에 불과하다. 지방의 농촌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하루에 접하는 '새로운 최신정보'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가장 많이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유선방송이다. 유선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0여시간 방송하고 있다. 라디오보다는 TV를 청취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많고, TV보다는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모든 가정에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유선방송을 듣기 위해 가정에 설치된 유선방송은 아주 간단하며 내부에 스피커와 볼륨, 변환기 이 세가지 부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의 조작 방법은 하나는 ON·OFF 기능, 볼륨 조절기능으로 2개의기능뿐이다.

북한은 유선방송을 1955년에 개시(1958.9 공표)하였으며, 1975년 10월 중앙 방송 개국 30주년 기념식에서 "온 나라의 유선방송화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70년대는 북한이 주체사상화를 강조하면서 이념통제를 강화하던 시기로 이때부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보유한 모든 라디오 다이얼을 강제로고정시켰다.

유선방송은 1960년대부터 평양을 비롯한 전 도시에 실시되어 왔는데 1970년대 이후 방송출력 강화와 아울러 공동작업장과 대중 집합장소들에 방송시설을 확장하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1977년에는 평양 유선방송국은 600kw의 출력을, 각 시.도 유선방송국은 100kw의 출력을 송출하였으며 "천리마"와 "평화"라는 수신기종이 전 가호의 약 65%에 보급됨으로써 총 175만대의 수신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처음에는 회선단위의 통계로 발표했으나나중에 총 출력으로만 발표하고 있다.

1984년 6월 28일 "체신절"에는 "온 나라의 유선방송화가 실현되었으며 지금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흔히 다이알 없는 라디오라 부르는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대외정보를 차단하고 자기정보를 가감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의 여러 집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수십 개의 마이크는 유선방송과 직접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방식은 PAL이지만 개성에는 N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국가 2방식은 아마도 북한이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중단파 AM방송과 초단파 FM방송은 한국을 능가할 만큼 막강한 출력을 보유한 바 있으나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동하면서 남북의 방송 인프라는 역전 상태가 되었다.

북한 텔레비전의 전국망 구성에 필요한 마이크웨이브 중개소는 고지대가 많은 북한지역의 특성 때문에 숫자가 많으나 전송장치는 구 소련의 낡은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부속품 조달의 어려움과 시설개체의 지연으로 방송망 구성이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며 북한도 굳이 실체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유선방송은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동시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체제수호를 위한 주민사상교양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권 붕괴가 가속화된 1990년대 이후 날로 비중이 커져 가고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10개의 지방방송국(각 도, 시 방송)과 200개의 군·구역 방송국, 4,300여개의 방송실이 있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방식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전력난으로 다른 언론매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 중요성과 청취률이 다른 어떤 언론매체보다 높은 편이다.

북한 인민군도 군 전용 3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여단급에 3방송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민군 당 선전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군대내의 3방송은 최고사령관의 명령 등 중대발표를 전군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군인들의 교양과 통제, 긴급 명령지휘체계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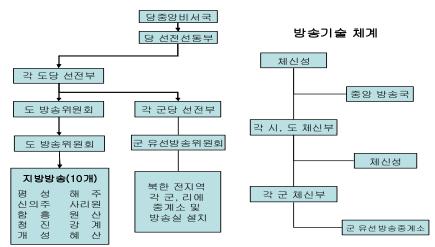
가. 제3방송의 구조와 조직체계23)

북한의 유선방송은 노동당의 지도·통제·감독하에 운영된다.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일체의 모든 방송은 총괄하는데 유선방송은 각 도당선전부 산하의 도방송위원회²⁴⁾에서 운영된다. 도 방송위원회 산하의 10개 지방방송국으로는 평성시, 신의주, 함흥, 청진시, 사리원, 해주, 원산, 강계, 혜산, 개성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각 군 노동당 선전부에 군 유선방송위원회가 있다.

²³⁾ 김승철, "북한의 제3방송의 기능과 역할", 한국방송통신학회 2008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8.11.29.

²⁴⁾ 도방송위원회도 중앙방송위원회처럼 행정기능은 지방 도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으나 모든 지시와 인사, 편집, 방송은 당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북한 방송체계(유선)



출처: "북한총람"(1993~2002), 북한연구소, 2003년 p. 756

<그림 1> 북한의 방송체계

유선 방송의 기술 관리체계는 체신성이며 체신성 산하에 시, 도 방송국이 있고 군에는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해마다 체신소(우체국)에서 유선방송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 점검을 한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리까지 연결돼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나오고 있다. 유선방송은 단순하게 28V의 전압만으로 볼륨과 변환기, 스피커를 통해 방송이 이루지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 지난 1980년대부터 북한의 유선방송도 전력난의 영향으로 정격 전압이 공급되지 않아 방송의 볼륨이나 음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25)

북한의 모든 방송이 내각 직속의 행정적으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속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 방송 내용 편성, 위원장 및 방송국 책임자 인사 등 핵심업무도 당선전선동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방송되는 모든 내용은 중앙방송위원회의 검열을 거친다. 단 뉴스보

²⁵⁾ 전력난이 아주 열악하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선에 꼬마 전구를 달아 불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도는 이미 검열을 끝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관영 인쇄매체의 기사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다.

나. 제 3 방송의 방송시간과 프로그램

북한의 유선방송은 조선중앙방송(제1방송으로 라디오 방송)과 지방 라디오 방송, 지방 유선방송, 제3방송의 혼합방송이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아침 5시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한다. 보도 시간에는 조선중앙방송의 중요보도를 하고 지방방송의 보도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론, 론평, 연재, 해설강좌 등 교양 프로그램은 중앙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때로는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의 주체사상 해설강좌 및 남조선 주민들의 반향(물론 왜곡된 것) 등도 유선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제3방송은 특정한 시간대로 편성되어 "제3방송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진행된다. 제3방송의 방송 시간대는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시간대로 편성되는데 주로 아침 새벽 식사준비 및 식사시간대에 편성된다. 방송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최대 1시간 30분 정도이며 시기와 계절 등에 따라 방송시간대와 시간의 변동이 있다.

<표 7> 제3방송 시간

방송 구분	ŀ	방송시간	프로그램	비고
도(시)	오전	5:30~6:00	-	
유선방송	오후	2:30~3:00	_	
군	오전	6:40~7:00	-	
유선방송	오후	3:00~4:00	_	

유선방송은 조선중앙방송과 도급 지방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방송한다. 유선방송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조선중앙방송(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이다. 뉴스와 음악, 교양강좌, 사상교육, 드라마 등

이 방송되며 노동신문의 사설 등을 방송한다.

이 외에 국가적 명절이나, 김일성, 김정일 생일 및 사망일 등 중요 기념일에는 중앙방송에서 특별히 제작한 '녹음강연' 등의 방송을 유선방송으로 내보낸다. 기타 중요 방송 프로그램은 도 라디오방송국과 유선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하며 시, 군에서도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기도 한다.

대개 아침 시간에는 '고매한 덕성' 등의 제목으로 김일성과 그의 처 김정숙등의 혁명 활동 역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이 많다. 뉴스와 보천보 전자악단 등이 연주하는 음악도 나오고 저녁에는 '불멸의 역사'와 같은 유명 소설을 성우 1명이 성대모사 방식으로 여러 사람 목소리를 내가며 낭독하는 프로가 인기를 끈다.

도, 시, 군에서 제작되는 유선방송은 보통 제3방송의 형태로 방송되는데 여기에는 기업과 개인, 간부들의 사회적 일탈에 대한 폭로와 처벌, 사례를 전제로하는 통제, 교양방송들이 대부분이다. 유선방송에서는 '제3방송' 또는 지방방송의 형식으로 공개 전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 충성심, 국제사회의 평가 등에 대한 교양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방송된다.

유선 방송 중에서 제3방송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고 또 그에 대한 처벌과 계도 등이 포함되는 관계로 청취율이 높다. 자신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 호기심과 재미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정부의 통제방침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ㅇ 교양

북한의 유선방송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많은 것은 국제사회와 남한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숭배한다는 내용의 왜곡 프로그램이다.

유선방송은 전파로 공개되는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외부에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를 의식하지 않은 대 주민용 교양방송을 할 수 있다. 유선방송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남한 주민들과 남한 대통령, 남한 체제 등에 대해 북

한 당국의 목적에 맞게 왜곡 가공하여 반복 주입한다.26) 또한 북핵문제나 6자회담, 미국의 대북한 인도적 식량지원,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분석, 세계적인 경제위기, 아프리카의 기아사태 등을 북한 현실에 맞게 왜곡, 가공하여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방송에서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간략하게 보도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미국이 김정일에게 항복하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조선을 방문했다"²⁷⁾는 식으로 방송하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가 무기력하게 미국에게 패배한 것은 이라크 군대의 고위장군들이 미국의 심리전에 유혹당해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당했다는 식이다.

이 외에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해 미국의 심리전과 경제원조 등에 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왜곡하거나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이나 아프리카의 식량위기 등을 부풀려 세계적인 식량위기인 것처럼 북한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막기 위해 북한당국은 유선방송(제3방송)을 통해 "남한인민들이 김일성을 흠모하고 있다", "남한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데모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남조선 소식'의 형태로 왜곡하여 중계방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실제로 남한이 반정부 시위가매일 같이 일어나고 정권은 위기에 처하였으며 남조선 국민들은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을 흠모하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3방송을 통해서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주민들을 교양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했지만 3방송을 통해서는 '혁명의 변절자'나 '돈 몇 푼에신념을 바꾸는 너절한 자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격렬히 비난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관련해서도 3방송을 통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북한은 국가적 명절이나 중요한 기념일,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는 유선방송

²⁶⁾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은 2007년 10월 12일 뉴스에서 북한의 유선방송이 핵시설 포기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9월 5일자 유선방송(제3방송)을 통해 "우리 공화국은 국제사회 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으며 핵시설을 포기한다. 핵시설 폐쇄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적들 의 압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27) 2000}년 10월 미 국무부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을 통해서 중대방송, 방송 정론 등의 형식으로 장시간의 기념방송을 한다. 이러한 방송은 일반적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집체로 방송을 청취하게 하는데 인민반의 경우 인민반 반장이 반원들에게 방송을 듣도록 지시하고 검열까지 하기도 한다.

북한당국은 3방송 청취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의 형태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유선방송의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북한주민들을 교양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편향되고 왜곡되며 신민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유선방송의 결과이다.

통제

북한의 유선방송, 특히 유선방송 중에서 주민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제3방송이다. 유선방송, 제3방송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과 재미를 갖고 청취하는 것이 바로 북한사회의 일탈에 대한 비판, 경고, 계도 방송이다. 제3방송의 사회적 일탈에 대한 방송은 중앙에서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도, 시, 군의 유선방송에서 자체 제작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어느 동에 사는 어느 동무가 아침청소에 열심히 참가했다느니혹은 어느 동무의 비리가 드러났다", "어느 직장의 아무개는 직장에 나오지않고 밀수를 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현실문제에 대한 공개, 지적, 비판, 경고의 형태로 진행된다.

제3방송의 통제기능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북한주민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들면 1989년의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유니버시아드)이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평양시민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데서 알 수 있다.

1989년 북한이 남한의 올림픽에 대응해서 유치했던 유니버시아드(세계청년 학생축전-북한표현 역자주) 개최 당시에 평양시민들을 교양하고 통제하고 지 시하는 모든 것을 유선방송, 제3방송으로 했다. 당시 북한당국은 평양시민들 에게 외국인을 만나는데서 지켜야 할 100문 100답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평양시민들에게 배포해 공부하게 했다.

제13차 청년학생축전 행사기간에 제3방송은 평양시민들이 외국인과의 접촉 요령, 모범 답변 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시시각각 통보해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양시민들이 북한당국의 의도에 맞게끔 일사불란하고 원만하게 외국 인들을 접촉할 수 있게 하였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당국은 유선방송과 제3방송을 통해서 평양시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이러한 통제기능은 반항공 훈련이나 전쟁 훈련시 주민들을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때에도 나타난다.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훈련에는 3방송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밤중에 불시에 실시하는 반항공 훈련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적기의 출현이다. 모든 가정집은 즉시 반항공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수 차례 방송한 뒤 검열위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빛 이 새는 집을 단속한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어느 구역, 어느 동의 몇 반 아파트 또는 가정집에 불빛이 보인다"는 식으로 반항공 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끔 한다. 훈련 다음날에는 3방송을 통해 훈련 결과를 평가하면서 잘 못이 발견된 집들을 공개하기도 한다.

O 재난 등의 정보 제공

유선방송은 북한 내부의 사건, 사고, 재난 등을 보도하지 않는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공개 언론이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정보제공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예하면 장마철에 큰물피해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면서 주민들에게행동요령과 지침을 설명하기도 한다.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에서 발간하는 '오늘의 북한소식' 제87호 (2007년 8월 29일자)는 황해도에서 장마철에 큰물피해로 예성강에 건설한 댐이 붕괴위기가 발생하자 제3방송으로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다급하게 통보한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이 전력난이나 전기줄 부족으로 방송

을 듣지 못해 피신하지 못하였고 또 제3방송의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듣고도 피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류한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다.

○ 제3방송의 기능과 역할

북한 유선방송, 제3방송의 기능은 북한 주민들을 체제유지의 목적에 맞게 교양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조종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유선방송에서는 공개되면 안되는 북한 주민용 선전, 선동, 교양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제작 방송한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양(高揚)을 위해 감화, 감동을 통한 우상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다.

또한 북한당국이 '황색바람'이라고 칭하는 외부의 정보유입과 그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의식적 동요를 막기 위한 흑색선전의 기능도 수행한다. 조선중앙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라크 전쟁과같은 국제적 이슈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북한당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외에 북한의 내부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서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의식과 행동, 사회적 일탈방지 등의 통제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유선방송, 제3방송의 기능이다. 사회적 일탈과 그에 대한 처벌등의 제3방송 프로그램들은 북한주민들의 저항감과 불만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적 기능도 하고 있다.

딱딱하고 선동적인 내용 외에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풍자극이나 소설, 경쾌한 음악 등을 담아내면서 제3방송은 북한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다고 할수 있다. 제3방송을 듣고 있으면 신문이나 TV 방송을 따로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3방송을 안 켜놓으면 왠지 집안이 썰렁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북한의 유선방송, 제3방송의 기능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다.

○ 제3방송의 역할

북한의 유선방송, 제3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주민들을 이념과 체제, 지도자 우상화의 우물에 가둬 넣는 우물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지도자의 우상화, 사회주의 형식에 세습군주제와 같은 정치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체제위협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혹시 접했을 경우에라도 그러한 정보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순화하는 역할을 제3방송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지도자와 체제, 현실 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수십년간의 정체적 북한사회의 현실과 출신성분, 계층과 직위에 의한 차별, 평양과 지방의 차별, 식량난과 전력난, 경제난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3방송을 통한 사회적 일탈의 공개와 처벌을 알려줌으로써 체제불만과 저항의식을 해소하는 역할을하는 것이다.

0 요약

북한체제는 정보화의 시대에서 고립되고 멀리 떨어진 외계와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정보의 철저한 차단과 그러한 차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정보와 호기심의 욕구를 해소시키고 그러한욕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유선방송, 제3방송의 기능이자 역할이고 목적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북한은 북한과 중국 국경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북한의 든든한 방패의 역할을 해왔으나 개혁·개방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중국은 '황색바람'이 들어오는 창구이다.

북-중 국경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정보유입의 통로로 이용되는 지금 북한의 유선방송의 목적과 기능과 역할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의 정보통제가 여전하고 북한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있으며 북한당국의 많은 정보를 왜곡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교양,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2007년부터 북한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변화의 과도기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북한체제는 잠재적으로 변화의 과도기에 확실하게 들어섰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해져 제3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김승철, 2008)

6) 위성방송과 방송권역

①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방송위성 업무에 관련된 주파수와 궤도위치 및 그에 수반되는 기술기준 등은 인류 공동의 자원으로서 국제 전기 통신조약 내의 무선통신 규칙에 의해규제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7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ARC-BS(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Broadcasting Satellite)에서 방송위성 주파수, 궤도위치, 편파방식 및 방송구역 등을 할당받았으며이는1979년부터 1993년까지 유효하고 위성궤도 위치는 보르네오 상공인 동경110도, 할당 채널은 2, 4, 6, 8, 10, 12 등 6개 채널이고 편파 방식은 좌선 원형편파이다. 그런데 1988년 WARC회의에서 1979년부터 1993년까지로 되어있던 유효기간을 2010년까지 17년간 더 연장키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위성방송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상에서 위성으로 발사되는 상향주파수(up-link)는 17.3 ~ 18.1GHz대이고 위성에서우리나라지상으로 발사되는 방송주파수(down-link)는11.74666 ~ 11.9384

GHz(2~ 12채널)의 주파수 대역이다.

위 회의에도 북한도 위성방송채널 14, 16, 18, 20, 22 등 5개 채널을 할당받 았으며 방송구역만 다르고 모두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술 수준이다. 한국과 북 한에 할당된 위성방송 채널은 <표 8>과 같다.

<표 8> 동경 110도에 할당된 위성방송 채널과 국가

채널	좌선 편파	우선편파	채널	좌선편파	우선편파
1		일본	13		일본
2	한국	파푸아뉴기니아	14	북한	파푸아뉴기니아
3		일본	15		일본
4	한국		16	북한	
5		일본	17		
6	한국	파푸아뉴기니아	18	북한	
7		일본	19		러시아
8	한국		20	북한	
9		일본	21		
10	한국	파푸아뉴기니아	22	북한	
11		일본	23		러시아
12	한국		24		

② 위성방송의 방송권역

우리나라의 방송구역, 즉 빔패턴은 남으로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마라도, 동으로는 독도, 서로는 백령도, 북으로는 휴전선일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 은 남으로 휴전선 일대, 서로는 신의주, 북으로는 두만강 하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7) 남북한 TV방송의 기술

TV의 방송 표준은 NTSC, PAL, SECAM으로 나누어진다. NTSC는 일본,

미국, 캐나다의 방송기술 표준이며, 그리고 PAL방식은 유럽을 중심으로 채용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PAL방식을, 남한의 경우는 NTSC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기술방식의 특징과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9> NTSC와 PAL 방식 비교

구 분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Phase	PAL Alternati	ng Line)
System	NTSC	PAL M (북한)	PAL N	PAL
Lines/Field	525/60		625	5/50
Horizontal Frequency	15,734 kHz	15,625 kHz		
Vertical Frequency	60 Hz	50	Hz	
Color Subcarrier Frequency	3.579545 MHz	3.575611 MHz	3.58205 6 MHz	4.433618 MHz
Video Bandwidth	4.2 MHz			5.0 MHz
Sound Carrier	4.5 MHz	Z		5.5 MHz

① 북한 방송의 기술적 특성

가. 중파 대출력국 운용

중파방송은 그 전파의 특성상 비교적 원거리까지 도달되며 특히 야간에는 공간파에 의해 제 2서비스 영역이 형성되어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인접국까 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념분쟁에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한반도 는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전파 침 투가 초래되고 있으며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전파전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중파방송의 전파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전파통과 경로를 보면 북한의 서남부인 황해도와 경기도 서부지역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서해바다와 남한의 광활한 평야지대인 서북부를 통해 전파의 손실이 거의 없이 남한의 3분의 1의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높은 서반부를 공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휴전선 근처에는 특별히 조직된 군대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도가 극히 희박하고 북한의 수뇌부인 평양은 황해도를 가로지른 멸악 산맥 으로 막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의 전파로부터 비교적 보호되고 있다. 이는 전파경로 상 감쇠가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ITU에 등록된 송신주파수는 140여개파이나 남북한을 주야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전파월경을 하는 100KW 이상의 송신출력을 가진 주파수는 14개파에 불과하다.[표 10참조]

<표 10> 한국의 출력 100kw 이상 중파방송 시설 내역(ITU등록)

지 역	주파수(KHz)	ITU(kw)	비고
포 항	558	250	
전 주	567	100	
남 양	603	500	
소 래	711	500	
대 구	738	100	
광 주	747	100	
수 원	756	100	
강 릉	864	100	
부 산	891	250	
당 진	972	1500/500	김제로등록
김 포	1134	100/50	시설용량 250kw
제 주	1143	100/50	시설용량 500kw
김 제	1170	500	당진으로 등록
제 주	1566	250	아세아 방송

*ITU에 등록된 100kw이상의 시설 용량을 가진 주파수 14개파,

시설용량은4,450kw

*100/50 :주간 100kw, 야간50kw의 표시임

그러나 북한이 ITU에 등록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파방송은 총 130여개파이며 이중에서 주야간에 걸쳐 강력한 전파로 남한에 광범위한 전파 월경을 주는 100KW이상의 송신 출력을 가진 주파수가 23개파나 되어, 100KW이상의 중파 송신 시설 용량은 남한의 약 2.5배 정도나 된다.[표 11참조]

<표 11> 북한의 출력 100kw이상 중파방송 시설 내역(ITU등록)

지 역	주파수(KHz)	등록출력(kw)	비고
평 촌	531	100	
사리원	621	1000/500	
청 진	639	500/250	
강 남	657	1500/750	
삼 고	684	250/125	개성으로 이전추진
위 원	720	500/250	
신 상	738	100	
평 양	783	1000/500	
화 대	801	500/250	
청 진	819	500/250	정주로 이전추진
상 원	855	500/250	해주로 이전추진
신의주	864	250/125	
원 산	882	250/125	
옹 진	954	100/50	
평 양	981	500/250	
함 흥	999	250/125	
재 령	1044	400/200	
철 원	1071	100	
옹 진	1080	1500/750	
정 주	1179	100	
김 화	1188	500/250	
송 화	1395	100/50	
남 포	1440	100	

*ITU에등록된 100KW 이상의주파수 23개파 시설용량은 10.600 KW

나. 단파 대출력국 운용

ITU의 IFRB에 등록된 북한의 1990년 5월 단파방송 주파수 일람표(통상 등록된 주파수의 60~70%가 실제 방송되고 있음)와 WRTH(1991년판)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평양, 강계 및 구장 등 3개 송신소에 100KW, 200KW, 및 400KW의 송신시설을 활용하여 해외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방송 외에도 북한내 지방 중계용과 대남용 단파방송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쿠바의 하바나와 불가리아의 소피아등 2개소의 해외 중계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북한은 해외방송에 있어서도 선전, 선동을 강화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방송시설 용량이한국보다 3배가 넘는 대출력 방송시설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표9참조]

<표 12> 남북한 국제 방송 현황 대비

구분	명칭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평양	비고
방송언어		12개 언어 한, 영, 일, 인니, 아랍, 불, 서, 독, 노 ,포, 이태리	9개 언어 한, 영, 일, 중, 노, 불, 독, 서, 아랍	
1일 송출시간		127시간 15분	153시간(추정)	
주파수(단파)		21개 색크밀 주파수 3개포함	28개	
송출시설		250KW x 3 100KW x 6 10KW x 2	400KW/200KW.100KW 14 ~ 17대 추정	
송신소		김제, 화성 2개소 해외 중계소 -캐나다색크빌 (Sackville) 1개소	평양,강계,구강 3개소 해외 중계소(추정) -쿠바 하바나 -불가리아 소피아 등 2개소	

다. FM대출력국 운용

한국에서의 FM방송의 최고 출력은 10KW인데 비해 북한은 남한으로의 전파 침투가 가장 효과적인 개성(92.5MHz)과 해주(103.7MHz)에 고출력의 시설을 하여 남한의 중부지방까지 방송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 FM방송도 다른 매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청소년층이 대부분 FM 방송을 즐겨 듣는 것을 감안하여 순수 음악 방송으로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간간히 북한 체제 찬양음악과 대남 비방성 프로그램을 끼워 방송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방송은 한국 내에서의 반체제, 반정부 투쟁을 고무, 충동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IFRB에 등록된 FM방송주파수가 평양을 비롯한 중요도시에는 복수로 되어 있음을 때 이는 또 다른 목적과 내용의 FM방송을 시도 내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아닌가 하는 추측도 갖게 한다.

<표 13> FM 방송시설 현황

운용 주체	운용국수	운용채널	총출력 규모	가청율	비고
한국 KBS1 KBS2 교육 기타 민방	26 1 57 25 54	25 1 32 25 43	86KW 10KW 91.8KW 60.8KW 134.5KW	94.8 33.7 97.5 -	표준, 군방송 포함 MBC,AFKN, 종교,교통방송
북한	112	87	(20KW x 3대 10KW x 10대 2KW x 12대 기타 소출력 200 KW		

8) 북한의 방송규제 기관 및 관련 법규

북한의 TV 방송은 조선중앙TV방송, 만수대 TV방송, 개성TV방송 등3개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방송의 특성상 통신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당에서 독점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체신성이 통신방송정책과 사업의 모두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체신성 이외에도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에 의해 방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파관리도 체신성의 전파관리국과 국가안전부위부와 인민보안성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한 규제 기관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등모든 방송을 총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조직으로 라디오 총국, TV 총국, 문예총국이 있다.

라디오 총국은 500명 규모, 편집국, 보도국, 기술국, 음악국이 있다. 텔레비전 총국은 1000명 규모, 편성국, 보도국, 주체사상선전국, 음악국, 연출촬영국, 중계록화처, 기술국, 방송진행국(조정부), 방송문예국, 방송연극단 등의 조직이 있다. 문예총국은 라디오와 TV로 나가는 일체의 문예물을 제작 방송을 수행한다.

지방방송위원회는 11개소의 지방방송국의 방송업무를 지도,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방유선방송위원회는 1970년 발족되어 시.도.군.리에 설치된 유선방송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체신법에 담고 있으며, 1997년 2월 5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2호로 채택되고,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다. 이 법에는 전기통신, 우편동신, 방송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 북한의 통신산업 현황

1) 통신부문

북한의 통신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고 극히 단편적인 자료만이 알려져 있어 체계적인 파악을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다. 단지 북한과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제 3국에 의하여 단편적이나마 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북한의 통신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다.

① 시내전화

2001년 ITU에서 발행한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북한의 주회선수는 2000년 현재 1,100,000회선으로 남한의 1/20수준으로 나타났다. 100인당 회선 수는 북한이 4.60, 남한이 46.40로 북한의 100인당 회선 수는 남한의 1/10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평양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내전화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의 통신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남북한의 가입자회선 비교

(2000년 기준)

항 목	단 위	북 한(A)	한 국(B)	비 교(B/A)
주회선수(Main telephone line)	천회선	1,100.0	21,931.7	20배
100인당 회선수	회선	4.60	46.40	10배

자료: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2001

국제통신연합(ITU)의 199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화 가입자는 108 만 9.0 0 0대, 회선은 130만 7.000회선이며, 1999년에는 110만 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 발간된 세계 컴퓨터 산업 연감에 따르면 1997년 북한의 전화 보급률을 주민 21명에 한대 꼴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를 북한 인구 2,200만으로 역산하면 105만대이다.

1990년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당시 조선 국제 관광공사 안내 팸플릿의 전화번호는 1자리 국번 체계였다. 이는 당시 평양 시내에서 전화가 최대 8만 대이하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전국적으로는 50만 대 미만임을 뜻하는 것이다. 1996년에는 국번이 두 자리, 2001년에 세 자리로 표시되어 있다. 번호체계로 보면 대체로 2003년을 기준하여 150만대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북한지역의 공중전화 이용광경 (중앙일보 사진자료 인용)

공중전화도 어느 도시나 설치되어 있지만 알려진 자료에는 1997년 나진선 봉에 공중전화 8 0대가 설치되어 목격자의 진술과 남녘의 정보통신기술협회 (TTA) 1995년 자료에는 2,270대로 나와 있다. 다른 자료가 없어 그대로 인용한다. 위 사진은 북한에서의 공중전화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하겠다.

② 시외전화

시외통신망의 경우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 간에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적인 통신망은 주로 여러 지역 관할구와 주요 산업기반들을 연결하여 산업목적과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주민들에게 당국의 정책을 전파시키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1970년 이후에 추진된 6개년 경제개혁 시기에 평양과 도 사이에 초단파 중계통신이 실시되고 도와 군 사이에 통신회선의 다중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소들은 중앙과 직통시키고 평양-각 도간의 초단파 통신과 도-군간의 다중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휘통신과 산업통신 및 봉사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부진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90년대 이전까지는 열악한 형편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7년 4월 8일 체신절을 기해 '국내통신분야에서 중앙과 지방, 시, 도 사이의 빛섬유 통신과 숫자식 통신방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가 실현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어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개 시, 군간의 교환기를 수동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금까지 100여개의 시·군의 통신망이 현대화된 것이다. 그러나 타 단위지역들과 평양간의 스위치는 아직도 500석 규모의 수동식 교환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3대 직할시와 9개도는 약 700대의 교환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시외전화 교환방식은 아직까지 상당한 부분이 수동교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환기는 기계식인 크로스바와 SxS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디지털화 비율은 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③ 공중전화

북한에서 공중전화는 평양과 함흥 등 대도시의 시내 주요거리와 백화점,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다. 시, 군 지역에는 체신소에 2~3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관공서나 기업체를 찾아가 용

건을 등록하고 사용한다.

북한의 공중전화에 대한 최근 자료는 ITU가 발행하는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1995년 발행된 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현재 북한의 공중전화는 2,720대로서 당시 남한의 1/105 수준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시설 수에 있어 남한은 6.47대인데 비해 북한은 0.13대로 남한의 약 1/50 로서 1960년대 후반의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5> 남북한의 공중전화 시설 수 비교

연도	구분	북한	남한	비교
1066	시설수		2,577	
1966	1000명당 시설수		0.1	
1071	시설수		7,802	
1971	1000명당 시설수		0.2	
1002	시설수	2,720	285,130	105배
1993	1000명당 시설수	0.13	6.47	50배
2000	시설수		538,983	
2000	1000명당 시설수		11.7	

자료: 체신부, 『1984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4. 9

TTA, 『세계의 정보통신 지표』, 1995. 12

4) 팩스

팩스는 개인이나 기관에 설치되기보다는 주로 공중용 팩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조선인 학자들의 경우, 소속 기관이 다른 곳인데도 모두 동일한 팩스번호를 표기하고 있었다. 확인한 결과우체국의 공중용 팩스 번호였다. 수신용 팩스도 요금을 주고 수취 한다고 했다.

⑤ 전송로와 광케이블

1990년대 이전까지는 투자부진으로 시설이 노후 되고 환경이 열악한 것으

로 추정되는데, 1994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등의 지원으로 광케이블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1998년에는 평양과 50여 개 시·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였는데, 이 중 평양-신의주, 평양-함흥, 평양-남포등3 6개시·도를 연결하는 400Km 구간에 대해 광섬유 케이블 공사와 전화 자동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외나 시내전화의 자동화 비율이 저조 한데다가 디지털 전송 장치와 광 다중화 전송 장치의 도입이 수반되지 않아 기간망의 광 전송로 설비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녘 체신성은 2001년 초 신의주-평양간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중국과 인터넷을 설치했다고 발표 했지만 실제 인터넷의 이용 속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1970년 이후에 추진된 6개년 경제개혁 시기에 평양과 도 사이에 초단파 중계통신이 실시되고 도와 군 사이에 통신회선의 다중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소들은 중앙과 직통시키고 평양-각 도간의 초단파 통신과 도-군간의 다중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휘통신과 산업통신 및 봉사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부진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90년대 이전까지는 열악한 형편으로 추정된다.

⑥ 이동전화

북한에서 이동전화서비스는 나진·선봉지역에서 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북아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가 2002년 8월 1일부터 평양지역에서 안테나 기지국을 설치하고 주위 4km로 전파를 발신해 통화시험을 하는 등 이동전화 시험운용을 거쳐 2002년 11월 11일부터 유럽의 GSM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은 당정 관계자, 평양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의 현지 주재원 등으로 제한되며 모토롤라 단말기 5000대가 반입되었다. 이동전화의 이용은 북한 내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제전화 까지 할 수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초기 가입비는 750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 이다.²⁸⁾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는 태국의 Loxley가 주축이 된 Loxpac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Korea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가 각각 70%와 30%의 지분투자를 통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북한정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역에서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1995년 9월 29일 태국의 Loxley와 27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Loxley는 해외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대만의 CTW, 유럽의 Teltech, 홍콩의 Savage와 함께 Loxley Pacific Company Limited(Loxpac)이란 회사를 설립하였다. Loxpac의 지분은 Loxley가 62.8%, CTW 28.2%, Teltech 6.0%, Savage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Loxpac이 조선체신회사와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진행이라는 이유 외에도 북한에서 외국인의 통신 분야 단독투자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총투자금액은 2,800만 달러이며 사업방식은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방식이다. 즉, NEAT&T는 나진·선봉지구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북한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7년이다. 수익배분은 투자금액을 회수한 이후 첫해부터 15년 동안 수익의 70%를 Loxpac이 취하며 16년째부터는 수익의 60%를 조선체신회사(KPTC)가 취하게 된다. NEAT&T의 이사회는 총 14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조선체신회사(KPTC)와 Loxpac에서 각각 7명을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은 Loxpac의 이사가 맡으며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는 이사회의 조선체신회사(KPTC) 이사로부터 선출한다. NEAT&T의 모든 의사결정은 최소한조선체신회사(KPTC)와 Loxpac의 1표를 필요로 한다.29)

그러나 최근에 휴대전화가 없는 북쪽에 이집트회사(오라스콤 텔레콤)가 이 동통신 운영권을 확보하여 올 연말이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소식이다.

^{28) 『}동아일보』, 2002. 11. 23

²⁹⁾ http://www.korea-np.co.jp/pk/032nd issue/98030406.htm 참조

⑦ 위성시스템과 국제전화

1984년 9월 인터스프트닉(구 쏘련 중심) 국제위성 기구에 가입하여 위성 국제통신을 시도했으나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실효가 없었다. 그해 중국 지원으로 평양에 기상 정지위성 수신소를 건설하여 1985년에 완공하였다. 1986년에는 프랑스의 기술로 사동구역(동남쪽)에 인도양 인텔셋 위성지구국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기상위성과 통신위성의 복합시스템이 되었으며 일본과 미국 등 태평양 인텔셋 국가를 제외한 서구 여러 나라와 위성 국제통신과 텔레비전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설과 규모는 10층, 5층, 3층의 복합 건물이며 기상위성 수신설비와 자동 분석, 처리용 대형 컴퓨터장치가 설치되었다.

국제 위성통신국에는 파라볼릭(포물경) 수신안테나와 TV, 전신, 전화, 사진, 텔렉스, 송·수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1987년에는 제13차 세계청소년체육 대회(1989년 개최)를 대비하여 보통강변(북서쪽)에 14층 연건평 1만 2,000평방 미터의 국제통신센터를 건설하였다. 각종행사들을 실황 중계하기 위해 안골체육촌을 비롯해, 능라도 경기장, 동평양 대극장, 청년극장 등의 통신망들이이곳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신, 전화, 사진 전송, 팩스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1990년 11월에는 북-일간 위성통신협약을 맺고 국제전화, 팩스, 텔렉스 통신을 상호교신 하게 되었다.

한반도 전역은 태평양과대서양의 위성수신자취(풋 프린트)가 중복되는 지역으로 인텔셋 위성을 한곳에 건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리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태평양과 인도양 위성 지구국은 한곳에 건설하여도 충분해, 우리나라의 보은과 금산위성지구국의 경우에도 양위성 지구국을 한자리에 건설하고있다. 그에 반해 북한은 대규모 국제통신빌딩을 사동지역과 보통강변 양쪽에건설하고 있는데, 이의 자세한 근거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120회선 용량에다 10층 이상의 대규모 국제통신 빌딩을 사동지역과 보통강변 양쪽에건설된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표 16> BSS down-link 제원 (AP 30)

16	Remarks	
15	Sta- tus	CL
14	Group	35.50
13	Designation Identity of Group Sta-Re the space code tus emission station	MODRES 35.50 CL
12	Designation Ideo of the contraction of the contract	
11	e.i.r.p.	44.00
10 11 12 13 14 15 16	Designation Polarization e.i.r.p. of emission	
6	Earth stationantenna	R13TSS
8	Space stationantenna gain	18.89
7	Shaped beam	0.68 18.89
9	Space station Shaped antenna beam code	1.63
5	Space station antenna characteristics	
4	Boresight	128.45 40.32
3	OrbitalPo sition	140.00
2	Beamidenti-fi OrbitalPo cation sition	KRE28600 140.00
1	Admin. Symbo I	KRE

<표 17> BSS feeder-link 제원 (AP 30A)

		<u>а</u>
		27M0G7W
17	Remarks	87.0
1516	Groupcode Status	
	Gr.	겁
	on of antity of tation	57.00 CL
1314	Designation of emission Identity of thespace station	MODTES
7	ower	
1112	e.i.rp.Power control	44.00
10	Polarization	
6	Spacestation antennacodeShaped Earth beamSpace stationantenna gain	MODRSS
	on haped onantenna	18.89
829	Spacestation antennacodeShaped amSpace stationantenr gain	89:0
	ntSpace ntenna rristics	40.32
45	BoresightSpace station antenna characteristics	128.45 40.32 1.63
3	Orbital position	140.00
2	Beam identifi- cation	KRE28600
1	Admin. symbol	KRE

Channel No.	Assigned feeder-link	Channel No. Assigned feeder-link
Chainlei No.	frequency (MHz)	frequency (MHz)
1	17327.48	2117
2	17	2217
3	17365.84	2317
4	17	2417
5	17404.20	2517
6	17	2617
7	17442.56	2717
8	17	2817
9	17480.92	2917
10	17	3017
11	17	3117
12	17	32172.06
13	17	3317
14	17	3417
15	17	3517

⑧ 국제전화

북한에서의 국제전화는 사회주의국가 체신협조기구에의 가입을 통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평양~북한~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유선망, 평양~싱가폴~홍콩 간의 단파무선망 및 중국 북경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을 구

축하였다.

현재 국제통신 루트는 위성과 케이블, 아날로그 마이크로웨이브 등이 있으나 주로 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성으로 직접 연결된 국가는 일본, 중국, 싱가포 르, 러시아, 홍콩, 프랑스, 독일, 이란, 루마니아 등이다. 국제전화 요금은 분당 3~6.5달러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위성을 이용한 통신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 고 또한 국제전화 연결국가와의 정산료가 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국제통신은 AT&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2월 미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북한과의 통신재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CC가 이요청을 받아들여 1995년 3월 미국과 북한간 통신서비스 제공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청 접수 결과 AT&T와 IDB가 국제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AT&T는 특별 잠정인가(Special Temporary Authority)를 취득하여 1995년 4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1년 5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체신성을 대신해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리대사가 운영협약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국제통신위성기구인 인텔셋 (INTELSAT)30)에 145번째 회원국(지분 0.05%)으로 가입하였다.31)

한편, 남북한간에는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용으로 직통전화 31회선이 있으며,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한 간접회선이 27회선 연결되어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국제전화는 대부분 통신센터의 교환원을 거쳐 수동으로 해외로 연결되지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호텔에서는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교환방식으로 직접 외국과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화 중 울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국제전화의 통화 품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³⁰⁾ 인텔셋은 전기통신용 인공위성 19개를 활용, 전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전화, 정보통신 등의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통신위성기구이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85년 평양에 기상정지위성수신국을 설치한 이래 '89년 국내통신과 위성통신을 총괄하는 국제통신센터를 완공했으며, 지난 95년 이후 인텔셋의 위성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연합뉴스』. 2001. 5. 29

⑨ 소프트웨어부문

소프트웨어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 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북한소프트웨어의 수입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망한 부문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부문의 교류협력은 아웃소 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나 북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은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기획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주)하나로통신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소프트웨어부문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금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삼성전자	조선컴퓨터 센터	남북 S/W 공동개발(북경)	72.7만불 →154.4만불 →226.7만불 →286.3만불 →311.3만불	'00. 3. 13 ('00. 3. 13→ '01. 6. 16→ '02. 8. 21→ '03. 10. 14→ '04. 5. 18변경)
(주)야미	범태평양조선 민족경제개발 촉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00. 11. 29
(주)하나 로 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6만불→ 107.666불	'01. 3. 23 ('01. 3. 23→ '01. 12. 26 변경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뽀로로	22만불	('02. 7. 26)
(주)하나 비즈 닷컴 (합영)	평양정보센터	남북프로그램 공동개발(단동)	200만불	'01. 4. 28 ('01. 7. 18)
*(주)훈넷	범태,조선장생 무역총회사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평양)	20만불	'01. 12. 29 ('01. 12. 29) ('04. 1. 19 취소)

(주)KT	조선컴퓨터센터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평양)	12.3만불	'04. 7. 23 ('04. 7. 23)
브이케이 (주)	삼천리기술회사	휴대폰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중국상해)	43.3만불	'04. 9. 23 ('04. 9. 23)
(주)북남 교역	삼천리총회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_	'05. 1. 10 ('05. 1. 10)

주: 위 기업들은 대부분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는 취소된 기업임 자료: 통일부(2005. 1)재구성

① 기타 협력사업

우리말 컴퓨터 처리, 컴퓨터 자판, 컴퓨터 용어 등의 기초분야에서는 정보처리학회, 한국국어정보학회 등 민간 차원에서의 학술교류가 199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 정보통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개발및 DB교류 등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교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홍현기, 2005)

<표 19> 기타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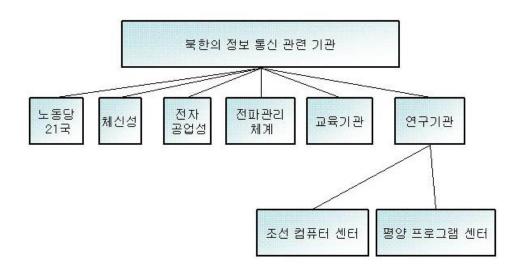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금액	사업자승인일
/ I H	71 8 6 9171		Г	(사업승인일)
▲연변과기대 후원회→동북 아교육문화협 력재단 ('99. 6. 29)	대외경제협 력추진위원 회·나진선봉 시행정경제 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 영 (나진·선봉)	500만불	'98. 1. 9 ('98. 6. 5)
▲한민족문화네 트워크연구소 (합영)	금강산 국제그룹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 만원	'98. 5. 11 ('98. 6. 20)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 민족경제개발 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경제·산 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싸 이트 개설 운영	60만불	'00. 9. 1 ('00. 9. 1)
▲(주)엔트랙 (합영)→IKD	광명성총회사	정보기술·공동제품개발 협력사 업을 위한 고려정보기술센터 건 립(평양)	400만불	'01. 4. 30 ('01. 8. 22→ '04. 8. 19)

▲ (사))동북아	7 O M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	400ന് റി	'01. 6. 5
교육문화협력재단	교육성	영	400억원	('01. 6. 5)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 술통보사	과학정보자료 교환 및 데이 터베이스 공동구축 및 활 용, 과학기술 이전사업, "향 토문화전자대전"발간	11.5만불	'03. 3. 14 ('03. 11. 5)
▲(주)KT	조선컴퓨터 센터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평 양)	12.3만불	'04. 7. 23 ('04. 7. 23)

주: ▲는 「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자료: 통일부(2005. 1) 재구성

2) 북한의 정보통신 관리쳬계



① 북한의 전파관리체계

- 북한의 전파관리는 체신성 전파감독국, 인민보안성, 노동당 등 3개 부처 에서 관장
- 체신성 전파감독국에서 북한 내 무선기 등록과 허가 업무를 관장
- 각종 무선통신사의 자격심사 및 자격 부여 업무 담당
- 모든 교신·전파를 통제·감시, 호착 가능한 국제발신 전파의 탐지

- 인민보안성 산하 사회 안전국과 국가정치보위부에서는 전파 보안 업무 수행
- 전파의 보안을 위해 불법 전파 발생의 방지, 전파 방해 업무와 사회 안전 부 자체 주파수의 배분 및 조절을 관장
- 노동당은 전파업무의 총괄지휘 관장
- 도와 군 당의 전파를 배분·조정

② 노동당 21국

노동당은 2001년 12월 21세기의 첫 글자를 따 산하에 21국'을 신설한 바 있다.(1995년 12월1일 김정일 지시한 날짜에 설립한 컴퓨터 연구소의 이름도 12월 1일 연구소이다. 1996년 이 연구소 연구원 6명이 연변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2002년 '정보기술 산업 총회사'를 추가로 만들었으며 평양 컴퓨터센터(PIC)가 직속기관으로 있다.

③ 체신성

정무원 산하기구이다. 정통부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산하에 조선체신총회가 인터넷의 설치와 운영을 간여한다. 지방에는 체신소와 분소가 있다. 우편과 방송기술도 관장한다. 산하에 정보통신(약전) 연구소가 있다.

④ 전자공업성

3) 교육 및 연구기관

북한의 IT 관련 교육기관은 1999년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컴퓨터 학부가 컴퓨터기술대학으로 확대 개편되고 정보과학과, 지능정조처리학과, 컴퓨터조종학과 등이 연구소, 박사원으로 되어 있다.

김책공업 종합대학의 컴퓨터 공학부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4개 학과가 있으며 1999년 평양 전산단과대학이 기술대학으로 개편되었고, 희천 등 4개 자동화대학, 평성이학원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건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교가 늦어지고 있다. 북한인력 양성의 특징은 자동화 대학이라는 명칭이다. 이름대로 제어보다는 전산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군·산·학 복합체로 운영되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① 조선컴퓨터센터 (KCC: Korea Computer Center)

조선컴퓨터센터는 1990년 10월, 경제 각 부문의 전산화를 실현하고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전문 인력의양성을 위해 과학연구부문과 여러 공장, 기업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기술보급을맡고 있다. 센터의 연구실은 1 0여 개로, 전자계산기 조종실, 중앙계산시실, 자동화 설계실, 사무처리실, 화상처리실, 지식공학실, 전자계산기통신실, 체계프로그람실, 통보실, 장치기술실 등이다. 기관, 기업들에서의 사무처리와 생산 공정의 자동조종, 보건, 예술(화상처리실)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전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② 평양프로그램센터(PIC: Program Information Center)

평양프로그람센터는 1991년 7월 조총련 상공인의 자금지원과 UNDP의 기술지원으로 기구와 설비를 확충하였다. 1990년 4월 '창덕'이라는 이름의 한글

문서편집기 소프트웨어를 발표한 바 있고, 자료기지 체계의 개발과 북한 내 전체적 규모의 전자계산기 망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산망 은 북한 국내에 국한된 것으로 인터넷 등 국제 통신망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인트라망 수준이다.

4) 기타 산업분야

① 컴퓨터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중국의 문화혁명을 피해 북한으로 온 중국조선인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컴퓨터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1969년 4월 최초의 디지털컴퓨터 전진-5500을 제작하였다. 4,096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초보적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만든 세종 1호가 1973년인 것에 비하면 빠른 셈이다. 1990년부터 조선컴퓨터센터에서 16비트 컴퓨터를 조립하기 시작하였는데, 1992년까지 2년간 1,000대를 생산하였다.

1998년에 중형 서버용 13대, 486 PC 2,500대, 노트북 225대와 구내전산망의수입이 있었고 1999년에는 58급 3,800대, 노트북 400여 대, 중형서버 200대 등총 200만 달러 어치가 도입되었다고 전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에서 펜티엄Ⅲ급 컴퓨터가 대량 유입되고 부품을 들여다가 자체 생산도 시도하였지만, 대형 컴퓨터는 코콤 이후 바세나르 협정으로 전략물자반입 제한 국가로묶여 있기 때문에 보유가 힘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형 컴퓨터를 클러스터링 초고속 컴퓨터로 구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2003년 3월 7일 재일조선신보는 팬티엄4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과 합작으로 새워지고 생산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용 상황은 조선 복권 합영회사 컴퓨터의 50% 이상은 북한에서 생산된 펜티엄 급 최신 기종 컴퓨터이다. 2003년 평양에 PC방이 세워졌다. 외국인과 같이 오는 북한 사람들도 인터넷을 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모 든 사람은 아래 한글과 한국표준 자판을 이용하고 웹 사이트도 아래아 한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 북한인들의 이용이 뜸하다.



동평양 제1중학교 학생들이 교내 실습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통일문화연구소] <그림 3> 북한 컴퓨터 교육 실습 현황

②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

북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하드웨어의 제약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꽤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하드웨어 뒷받침 없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발전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들의 자본주의 마인드의 부족으로 상품성에 적합한 수준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일례로 삼성-북한(KCC)합작 개발'통일워드'는한국인의마인드에소구력이부족 해당초기대와는달리거의보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북한의 게임 프로그람은 대체로 단순 아케이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김일성대학에서 개발한 군사 경기 유희 프로그람은 전략 시뮬에이션 방식으로 개발한 것도 있다.

2, 3차원 애니메이션 기법도 개발 가능한 수준이다. 조선콤쎈터가 개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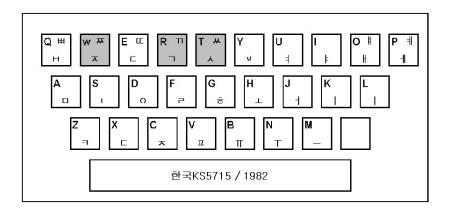
바둑 프로그램 '은별'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우는 3자와의 대국, 네트워크 대국, 보이스채팅 등의 별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바둑판 크기가 작게 설계 되었다거나 초반 정석 운영이 매우 단조롭고 엉뚱한 곳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는데, 이는 모두 하드웨어의 제약에서 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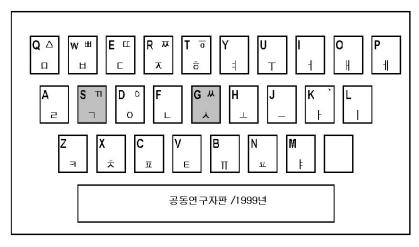
2000년 6월 정상회담에 동행 취재를 갔던 남녘기자는 평양에서는 컴퓨터에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걱정스런 투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일동포들이 제공해준 일본어 윈도우 운영체계를 탑재한 것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일본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재일동포들이 제공해준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처럼 북한에서도 리눅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남녘 사람들은 주체사상 때문에 미국을 배척하기위하여 윈도우보다 리눅스를 사용한다는 그럴듯해 보이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보컴퓨터 심양 공장장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윈도우 운영체계는 기본탑재에서 배제하고 리눅스만을 기본사양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로얄티 부담 때문이라 한다. 그런 이유로 원판본보다 복사본이 선호되고 있으며, 북녘 또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③ 컴퓨터 자판

1991년 북한은 26타건 치환방식을 국제 표준 규격 시안으로 제출하였다. 당시는 몰랐지만 학술대회에 참석한 북한학자들을 통해서 치환 타건법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쌍자음을 입력할 때 모음을 두 번 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까를 치는 경우 ㄱ을 한번 치고 "아"를 두 번 친다. 꺼인 경우에도 ㄱ을 한번 치는 것은 같지만 이번에는 모음 "어"를 두 번 친다. 이와같은 방법은 쌍자음 입력시 쉬픗 타건이나 공백 타건을 치지 않아서 속도가 빠르며 26타건으로 만으로도 모아쓰기 자동정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어문규정과는 괴리가 있어 전문 타자인에게는 매우 유용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보편성이 떨어진다.





<그림 4> 한국의 KS 5715(위)와 공동연구안(아래) 자판구성

④ 글편기(워드프로세서)

북한의 글편기에는 창덕 단군, 등이 있다. 이들은 평양 정보센터에서 개발된 것이다. 1999년 조선컴퓨터 센터에서 "내나라"라 부르는 입력 장치가 개발되었다. 특이한 점은 중국어의 경우 한글표기로 입력했을 때 중국어로 변환된다는 점이다. 이 입력기는 일본어 윈도상에서 실행된다. 조선은 지적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영문 윈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조총련등에서 제공되는 일본어 윈도나 리눅스를 선호한다. 북한의 글편기나 전자출판에서 제공되는 글꼴은 대략 100여종이 된다.

5) 인터넷과 인트라넷

① 인터넷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나라다. IANA(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는 세계 242개의 지역적독립지역과 국가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나라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를 계층적 도메인 약칭이라 부르는데 3세대 키워드 서비스에서는 이 약칭이 없어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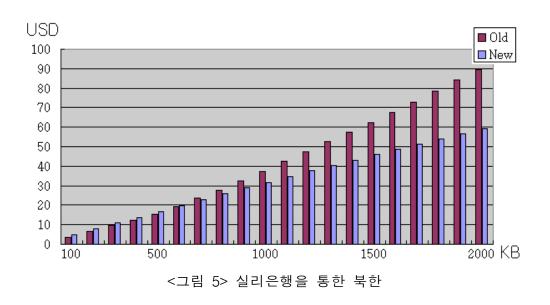
2000년 4월 현재 회원국은 188개국이며 북한의 도메인 약칭은 'kp'이다. 북한에는 이 도메인 약칭을 관장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위임기관이 없는 곳은 북한과, 서부 사하라뿐이다. 이 또한 북한 스스로 등록한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태평양인터넷정보쎈터(APNIC)에서 한 것이다.

국가별 위임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IANA에 등록할 때는 닷컴으로 끝나는 경우처럼 인터넷 주소에 국가 도메인이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kp'라는 도메인을사용하는 주소가 없다고 해서 북한 내에 아예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북한 내에서 제작·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위탁 경영 사이트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무역성은 북한 최초의 인터넷 회사인 조선 복권 합영회사 설립 및 영업허가를 했다. 이외는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이회사는 개발 직원 중 50%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며 누구의 통제도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한다. 2002년 3월 개통한 조선 복권 합영 회사의 '복권사이트'와 "바둑 사이트"도 설치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바둑사이트/mybaduk.com 복권 사이트/dkcasino.com 가 바로 그것이다.

바둑 사이트는 북한 아마추어 바둑 선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인과 대국을 하고 있다. 나이는 8살에서부터 30대까지 있으며 비실명 게시판도 운 영하고 있고 비실명 게시판의 대 부분 문의 답변 내용 은 무료로 북한이 개 발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내용이다. 복권 사이트는 평양 문수동 외교단지에 있다. 7대의 인터넷 서버가 있으며 시간당 10달러이다. 채팅 등이 자유롭다.

이들 두 사이트는 조선에서 유일한 외부연결 인터넷 사이트들이지만 또 하나의 인터넷 연결방식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실리은행을 통한 북한 인사와의 인터넷 직접 교신에는 이다. 그러나 2Mbps에 60불로 2001년보다 30%를 활인한 값이라 해도 매우 비싼 가격이다.



또한 회원가입 조건이 북한교신 상대방을 지정하고 그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북한교신의 상대방이 동의여부는 고사하고 이 요금을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가. 인터넷 인프라 현황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을 도입했으나,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구 개발과 같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보급을 시작했으나, 현

재에는 전국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대외적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의 연구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해 북한 내 주요 기관과 연구기관을 컴퓨터망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무역정보 등 보다 폭 넓은 정보 교환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2001년 말 체신성을 통해 평양-신의주-단둥-베이징-상하이까지광케이블을 연결하였다.

북한은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 인터넷, 즉 인트라넷(intranet)은 2002년 11월부터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시작,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최근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 인트라넷 홈페이지의 수도 크게 늘어 50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 및 서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남한의 (주)훈넷과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가 합영으로 인터넷 사이트(www.mybaduk.com, www.jupae.com)를 개설, 대외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실리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우편 봉사를 비롯, 해외에 서버를 두고 "천리마그룹", "우리민족끼리"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자위(2004.9.8)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현재 인터넷 상에 활동 중인 친북사이트는 43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북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이 가운데 일본에 서버를 둔 10개 사이트는 북한이 직영하는 사이트임. 2004년에만 하더라도 코리아 네트워크 등 12개의 친북사이트가 해외에서 새로 개설되었다.

북한의 인터넷 도입 역사는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터넷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국의 인식으로 연구 개발과 같은 매우 제 한된 범위에서 보급되고 있다. 초창기 북한은 과학원, 노동당 중앙위 청사, 김 일성 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조선콤퓨터쎈터 등을 중심으로 근거리 통신망 (LAN)을 구축하고 네트워크간 통신을 사용해 왔다.

인터넷의 경우,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의 연구기 관과 정보 교환을 위해 북한 내 주요 기관과 연구기관을 컴퓨터망으로 연결 시켜 놓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무역정보 등 보다 폭 넓은 정보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 그동안 해외에서 개설한 북한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운영 주체는 해외 동포나 또는 해외동포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²⁾

조선중앙통신(http://www.Kcna.co.jp/index2.htm), 조선신보(http://www.Korea-np.co.jp/Korea), People's Korea(http://www.Korea-np.co.jp/pk), 조선인포뱅크(http://www.dprkorea.com), 금강산국제그룹(http://210.118.120.201/kor), 조선영화시리즈(http://www.tangun.co.jp/moviekr)

북한 내에서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은 이와 같이 아직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부 인터넷, 즉 인트라넷(intranet) 접속은 전화모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통보사가 이미 수년 전에 구축한 사이트인 '광명'에서는 과학기술자료 검색체계를 이용하여 광역전산망을통한 과학기술자료 DB의 검색 및 e-mail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외무역회사,

³²⁾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주요 기사 및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노작과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운영하는 조선신보 사이트는 이 신문의 기사와 남북한 정세등 뉴스가 주로 올라오고 있으며 People's Korea는 조선신보의 영자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산국제그룹 사이트는 금강산관광 안내를 주로 소개하며 조선영화시리즈 사이트는 주로 북한영화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소개한다. 재중 동포들이 설립한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1999년 10월 노동당창건기념일에 맞춰 개설한 조선인포뱅크는 2003년 1월 사이트 개편으로 북한 관련 정보 제공이 중단될 때까지 중국 북경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서비스하였다.

대학, 도서관 등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북한 내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원격 주문과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 인터넷 홈페이지의 수도 크게 늘어 50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화모뎀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다. '광명'의 경우 가입자 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구축한 인트라넷은 각 사이트는 체신성에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이용자는 전화를 걸면 체신성에 설치한 전화모뎀박스를 통 하여 사이트의 서버로 접속된다. 평양과 각 도간에는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연 결되어 있어 지방에서도 평양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모뎀으로 사이트 접속 이 가능하다. 아직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인트라넷을 통 하여 외부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도 국제전화를 통하여 북한 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없다

한편, 북한에도 PC방이 개설되어 국제기구 주재원, 언론인, 외교관 등이 PC 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훈넷과 북한 장생무역총회사의 합작법인인 조선복권합영회사가 2002년 5월 18일에 개설한 평양 PC방은 20 여평 규모로 10대의 PC를 설치하여 국내의 여느 PC방처럼 아무 제약이 없이인터넷 상의 각종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고 e-mail 교환도 가능하다.

인터넷망은 2001년 말 북한 체신성이 평양-신의주-단둥-베이징-상하이까지 연결한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펜티엄4급이며 램 256메가바이 트, 하드디스크 40기가바이트가 장착된 최신기종으로서 이 컴퓨터들은 모두 북한 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대당 가격은 1,800달러(약 225만원)인 것으로 알 려졌다.33) 그러나 1시간당 이용요금이 10달러로 일반 북한 주민에게는 매우 높아서 실제로는 외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평양에 있는 유엔기 구나 외국 대사관은 국제 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우편을 송·수신하 고 있다.

^{33) 『}한국일보』, 「평양 PC방 외교클럽 역할」, 2002. 7. 2

② 인트라넷

200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조선족 동포 평양 방문기 - 현용운) 이는 1980년대 우리의 천리안과 하이텔 수준이다. 2002년 말에는 대도시간 광케이불이 설치되어 고속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방위원회 산하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노동당 통일전선부, 내각의외무성. 무역성 등이며, 체신성 주관으로 전국적인 컴퓨터망 구축사업이 진행되어. 2003년 현재 10여 개의 지역망과 100여개의 부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외접속이 불가능한 제한적이용자(CUG) 회선방식인 인트라망이다. 허가를 얻어 외부와 연결할 수 있으나 보통은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 북한컴퓨터망 체계도

일반 주민들도 물론 전화 모뎀을 통하여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과학기술 통보사가 운영중인 광명사이트 관리자는 일백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현지 합영회사의 한국측 훈넷에서 증언하고 있으나 아마도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할 전화회선 구성이 열악하고 접속서비스 제공자(ISP)가 없어 인터넷에 자유로운 접속 이용은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엔기구나외국 대사관 등에서 전송우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는 국제전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속도가 느려 9.6Kbps 미만이다. 북한에서 국제전화 사용료는 1분에 6달러인데 접속 상태가 나빠 여러 번 시도하기 때문에 60달러 내외가 드는 게 보통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의 외무성의 일부 관리나 특수신분은 국제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비싼 이용료 때문에 이용 빈도는 매우 낮다.

최근 남한에서는 "북한은 한국 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조선중앙통신, 조선 인포 뱅크, 금강산국제그룹, 조선 관광총국 등 직접 운용 중인 사이트나 다른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10, 20대 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조선 인포 뱅크는 조선족과 교포가 중국에서 운영했는데 이 기사 나오기 30일 전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조선 관광총국의 공식 홈페이지로 소개된 사이트는 일본 여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북한 조선 관광총국 간부도 모르는 사이트이며, 기타도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외국의 북한 관련 사이트인데 마치 북한사이트로 오인하고 있다. 정보 검색과 서비스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주관, 과학기술자료 검색서비스(광명)가 시작되었으며 전자우편, 번역봉사, 자료이송, 전송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극히 제한된 이용자에 한한다. 홈페이지는 국내망(인트라넷)에 의한 여러 기관이 연결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기관 상호간에 활발하지만 일반적 접속이 극히 제한적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화의 진전도 개방이나 자유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내부체제 때문에 인터넷을 개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완벽한 감청과 통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 초부터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IT공업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국과 인도의 IT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였다. <IT기술발전을 통한 기술강국에로의 단번도약> 논으로 일컫는 북한의 대표적인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대규모 집적회로 제작기지가 평양과 평성 등 대동강영역을 따라 들어섰다. 또한 프로그램기술 인력을 총망라하여 KCC와 PIC, UPC와 같은 프로그램 어드벤처를 조직하고 프로그램개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에 새로 부설된 전화용 광케이블을 이용해 국내의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명" 컴퓨터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표 20> 북한의 "광명"인트라넷의 기술적 특성

기술항목	특 성 값	비고
인트라넷 통신프로토콜	TCP/IP, IEEE822.3	국제적인 인터넷접속 활용이 기술적으로 가능
단말기 접속방식	모뎀접속, 전화선겸용	2004년 이후로 전용 광케이블과 랜카드방식으로 성능업
데이터전송속도	평양: 1MBPS (최고) 지방: 30KBPS (최소)	2004년 이후로 10MBPS로 업
도메인주소 지정방식	IP주소 실제주소만 사용	예:중앙과학기술통보사- "100.100.150.100"로 지정
네트워크구조	중심점을 가진 방사형망	평양을 중심으로 각 도,시,군 에 방사형 네트워크로 연결
이용자 수	5만 정도 그중 80%가 기관	전체 가입자의 60%가 평양에 있음
서비스 내용	과학기술자료 검색이 기본, 기타 전자신문, 잡지조록, 사이트링크, 메일, 채팅, 오락, 뉴스	<광명>의 기본 구축목적은 중앙에 있는 세계적인 과학기술통보DB를 타 기관, 타 지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함

가. 기존 인트라넷 "광명"의 기능적 한계

북한은 디지털전화망 목적으로 부설된 광케이블에 모뎀결합방식의 인트라 넷을 구축하다보니 전송속도가 느리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중앙의 "광명"서 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여기에 광케이블상태가 좋지 않고 신호증폭시설들이 불량해서 서버-클라이언트의 접속이 자주 끊기고, 부분적으로 정보가 유실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흔한 라우터, 네임서버와 같은 필요설비가 부족하여 IP주소로 직접 사이트를 지정해야 한다.

스타형 네트워크의 구성한계로 평양과 같은 중심부에서는 업·다운로드 속도는 그런대로 나오지만 지방에서는 대체로 수십 kbps밖에 나오지 않아 인트라넷에서 텍스트를 제외한 매체이용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백번으로부터 무질서하게 뻗어나간 연결케이블 상태가 불량해 정보전송품질이 떨어진다.

나. 새로 부설되는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현황

북한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독립된 새로운 광케이블로 백본망을 부설하고 그 위에 랜카드결합방식의 VDSL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초고속망부설공사는 2004년까지 평양시 권역을 끝냈으며, 2005년 7월경까지 함흥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청진권역을 포함하여 신의주까지의 확장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2007년까지로 계획된 이번공사는 종래의 전화선과는 완전히 별도로 백본망은 물론 간선망과 최종연결선까지 새로 부설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부설한 "광명"인트라넷의 데이터전송속도는 평양에서는 대체로 70~80 Mbps로 측정되고 있으며, 함흥 등 지방에서의 업·다운로드 속도도 10 Mbps까지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 중계기나 라우터와 같은 VDSL관련 설비들을 사오고 있으며, 완전한 도메인네임사용을 비롯해 인트라넷의 표준형식을 구축하고 있다.

6) 북한의 인터넷 개방을 위한 로드맵

① 인터넷개방 로드맵의 채택배경

북한이 인터넷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전 세계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화 문화공간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북한도 지도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정보 화의 흐름에 계속 역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 북한사회도 해외정보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지고 정보의 양과 질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내부 인트라넷의 한 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본 북한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인터넷의 궁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지도부에 개방을 제기하였고, 김정일 자신도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관심이 많아 그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분야의 박사급 인력을 측근에 두고 이들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관련기술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해외공관들 상당수가컴퓨터 관련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셋째,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북한지도부에게 인터넷은 경제개 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화는 정보의 획득비용(정보비용) 을 줄임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북한도 세계적인 정보화물결 속으 로 뛰어 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제부흥을 이뤄낼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넷째,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초기부터 인터넷을 개방하면서도 이에 대한 통제를 적절히 하여 큰 문제없이 국가발전, 경제발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

다섯째, 이제 북한이 세계적인 인터넷추세에 역행한다면 인터넷의 진화속도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장차 돌이킬 수없는 후 진국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류로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수밖에 없게 되었다.

② 인터넷개방을 위한 북한의 로드맵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인터넷에로의 접근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북한 내 여러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KCC, 그리고 6.26기술봉사센터에서 고안한 방안이었다.

우선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는 인터넷 원포인트 접속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 내 모든 기관과 단체(특수기관은 제외)는 중앙과학기술통 보사의 집중서비스서버 즉 원포인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인터넷접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원포인터에 대한 통제와 컨트롤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

반면에 원포인트 접속전략은 접속자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KCC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중국의 초기 인터넷개방정책을 참작하여 단일창구방식의 인터넷개방전략을 제출하였다. 이 때 이용자는 중앙집중적인 프록시서버가 아니라 월드와이드 웹에 직접 접속하되, 모든 데이터링크는 중앙의 규제를 받는 단일창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6.26 기술봉사센터에서는 인터넷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효과적인 접속규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웹브라우저 개발과 탑재를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인터넷개방전략을 총괄적으로 묶어 중앙당 과학교육부는 2002년 4월경 김정일에게 <광명>컴퓨터통신망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김정일은 "대단히 흥미있는 문제"라면서 "해당부분의 전문가와 체제수호기관들이 협력하여 가장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하고 지금부터 몇 년간 잘 준비하여 북한 내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하달하였다.

북한당국이 인터넷개방을 위해 채택한 로드맵의 기본적 윤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북한의 인터넷개방 로드맵

단계	내 용	추진기관	추진기간		
관련제도준비 단계	• 인터넷이용과 관련되 구체적인 통제, 감시방법과 제도 연구 • 내부자료의 유출, 해킹보안, 특 정외부자료의 유입 차단, 필터 방법 고안	중앙당 체신성	체신성	체신성	1년
기술·연구 단계	• 국산 운영체제 연구개발 • 국산 방화벽 보안솔루션 개발 • 국산 인터넷장비 개발생산	전자공업성 국가과학원 외무성 대외경제위	5년		
도입·설치 단계	초고속인터넷용 인프라공사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간선,장비 설치공사	KCC 중앙과학기 술통보사	동시시행		
시험·활성화 단계	 초기 회선특성 및 성능평가에 따르는 추가보완조치 local 인터넷도메인 등록 및 서비스 전문업체 발족 기업, 단체,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 개방 	고급 대학 - 제2경제위 국제위성통 신국	1년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개방을 위한 준비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하되 총 준비기간은 6~7년으로 정하였고, 2009년경부터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본격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개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인터넷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래와 같은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첫째. 북한은 정치 대학과 공산대학과 같은 간부양성대학에 IT기술과 인터넷에 대한 과목을 개 설함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있다. 또한 현직 간부들도 재직간부 학습반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둘째, 1997년부터 2002년 초까지는 모뎀을 이용한 PC통신망을 전국에 부설

하였으며, 2003년 5월까지는 군, 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의 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의 말단에 까지 광케이블을 부설하여 독자적인 대내인트라넷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초보적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에 5개의 백본망을 구축한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2002년부터 평양-함흥간의 광케이블을 부설을 시작으로 2007년 청진과 신의주방향의 확장공사가 끝나면 전화선을 이용한 낡은 네트워크구조를 일신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기본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넷째, KCC,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국가과학원 컴퓨터종합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20여개의 IT관련 연구소가협동하여 리눅스시스템을 개조하고 북한식 터미널과 서버용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5년에 리눅스의 커널과 디바이스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해석을 끝내고 2007년까지는 추가기능을 개발·합성하여 북한판 운영체제를 탑재하려고 한다.

다섯째, 북한은 해킹방지와 데이터보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안·방화벽인 <능라-88>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광명>망에서 충분한 시험과기술적 보완을 거쳤다. 이밖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체신성약전연구소가 공동으로 라우터와 스위치장비, 중계기를 개발하는 등 로드맵에 반영된 여러 가지 과제가 진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섯째, 북한은 해외에 서버를 둔 30여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 터넷공간에서 북한에 대한 선전과 찬양 등 다양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이 를 통해 웹사이트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인터넷브라우저의 기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험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북한은 96년 일본에 조선중앙통신과 범 태평양 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99년에는 중국에 조선인포뱅크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일본에 구축된 금강산국제그룹, 조선신보, 현해탄소식,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 등의 홈페이지가 그 실례이다.

③ 요약

북한은 매우 엄격하고 구속적인 규제정책을 마련한 후에 인터넷개방이라는 어려운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개방이 북한사회에 가져다 줄 위협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가 없다. 설사 인터넷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향유하는 인터넷의 세계를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누릴 날은 먼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늦게나마 인터넷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북한의 로드맵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난관과 애로가 많다. 무엇보다 서버와 터미널설비, 네임서버와 라우터, 스위 치, 중계기 그리고 추가적인 네트워크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야 한다. 앞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미국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으면 재정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인터넷 설비와 장비를 무상지원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으나, 이러한 설비가 바세나르협약이나 미국의 EAR규제에서 금수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의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밖에도 북한판 운영체제의 핵심은 개발되었지만 그것이 버그 없는 완성품이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의 전력사정으로는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북한이 자주 활용하는 외자유치의 경우 개발 사업권과 함께 평균 3년의 운영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 사례다. 따라서 인프라구축과 함께 운영권을 받고 B2B, B2G 차원의 전자상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KP'로 주어진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보급도 필요하다.

어찌되었던 당사자인 북한이 인터넷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1천만 이산가족이 온라인상으로 상봉하고 남북 간의 학술, 경제 및 문화교류를 실현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한다.(김흥광, 2008)

Ⅲ.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실태

1. 방송산업 협력 분야

1) 남북방송교류의 과정과 특징

민족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남북한 간에 상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및 체제의 상극성과 한반도문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방법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통일역량을 축적,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남북한 간에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와 협력, 그리고 개방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 볼 때, 우리는 지난 시절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991년 9월 17일 남북이 각기 UN회원국으로 가입하 였고, 199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총리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역사적인 서명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은 아직도 남북간에 교류문제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중요한 사실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2월 평양에서 있었던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1991년 서울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3개 문건을 발효시킴으로써 향후 남북한 간에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의 실현, 그리고 민족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계기와 한민족의 중흥을 위한 남북한 관계의 새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한 것과 1992년 2월 19일부터 '합의서'의 발효가 시작됨으로써 교류와 협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숙원이던 남북통일의 길에 또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로 기억하고 있다.

이중 특기할 것은 남북합의서 제3장 남북교륙, 협력부문의 제16조는 방송협력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합의서 제16조의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교류와 협력의 의미는 통일지향적 방송정책을 위한 이론적 접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결실이라고 하겠다.

그 후 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가 서명되어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방안들이 제시된다. 특히 언론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이부속합의서의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제9조에서는 상기 합의서 제16조를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는데 2)기술협력 3)기관과 단체 및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 4)공동행사 개최와 저작물 및 예술품의 교환전시회, 그리고 5)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시하였다.

이 부속합의서의 서명으로 남북 양 정부차원에서의 언론교류, 특히 방송교류의 총괄적 조건은 원칙적 합의를 본 셈이다. 그후 1997년 6월에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화해·협력단계에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전제조건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문화 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이를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비정치적분야인 사회분야에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하에서 남북 언론교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34)

지난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는 1백 70개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중 남북한 방송개방 문제를 포함시켰다.35) 또한 김대중정부의 출범 후 100대 중점과

³⁴⁾ 위의 책, p.21.

^{35) &#}x27;중앙일보', 1997. 12. 2.

제를 발표하면서 남북 방송개방과 남북 언론교류를 공표하였다. 즉, 1차로 라디오, 2차로 TV방송을 개방하고, 3차로 출판물을 포함한 매스미디어 전반의 개방문제를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997년부터 상황이 점차 변화하여, MBC의 '금강 산 자연다큐타리 제작' 등 사업성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표 22>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상호제의36)

일시	제의 주체	제의 내용		
1957. 5.15	북한 언론계(제2차 전국기자대회 준비위원회)	기자교류, 출판물의 전송사진 및 기록영화 필 름의 교환		
1960.11.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용건 위원장	기자교류		
1963.	북한 최고인민회의 조국전선중앙위,	언론인들의 왕래 실현 제안		
12.10	조국평화통일 합동회의	한국한들의 청대 불편 세한		
1964. 4.25	북한 기자동맹 부위원장 전영건 담 화	공동 출판기관 운영 및 남북기자단체 공동협 의기구 구성		
1971. 3.24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	기자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의 실시		
1972. 9.17	북한 김일성 마이니치신문 기자회 견	남북연방제가 실현되면 평양과 서울에 기자대 표부나 신문사 지국을 설치		
1972. 11. 3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평양회의	대남·대북방송을 통한 비난 중지 및 언론분 야 교류		
1973. 6.12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서울회의	기자교류 및 상대지역에서 상주 제안		
1982. 2. 1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모략방송 중지 및 상대방 정규방송 자유청취 허용, 쌍방기자 자유취재활동 보장 등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대북성명)		
1988. 9. 3	정한모 문공부장관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결정' 발표		
1989. 2. 1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교환 및 상호언론인 방문		
1989. 11.18	김대중 평민당 총재	남북한 라디오 · 텔레비전 상호 시청을 위한 개방		
1989. 11.21	KBS 노동조합	대북 비난방송 및 상호 전파방해 행위 중단		
1990. 8. 9	서기원 KBS 사장	KBS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공동으로 남북이 산가족찾기 방송 및 한반도 생태계 탐사 제의		
1991. 7.12	노태우 대통령	TV・라디오방송의 상호교류 및 개방		
1991. 12.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 의서'합의	남북한 기자 등 언론인의 교류방문과 프로그 램 등 방송교환		
1993. 3.15	김영삼 대통령	남북한 라디오, TV의 상호교류 및 개방		
1994 .11. 9	한국기자협회	조선기자동맹에 남북기자교류 제의		
1995. 7. 3	언론노동조합연맹, 기자협회, 프로 듀서연합회 등 3단체	조선기자동맹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남북언 론인 회담을 제의		
1998. 2.12	김대중 대통령	북한 라디오, TV, 출판물의 단계적 개방		

³⁶⁾ 박종수, 윤창빈, 남북한 언론교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99-06, 1999, p.19.

북한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시켜온 MBC가 1998 년 3월 13일 국내방송사 최초로 통일원에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MBC는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후 3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 금강산과 백두산 등 자연경관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다.37)

2) 북한영상물의 남한내 방영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로 탄생한 당시 '국민의 정부'가 북한방송 개방을 1 백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 북한영화에도 개방의 햇볕이 비치기 시작했 다. 방송사들은 방북취재에 이어 북한제작 영상물을 방영했다.

1998년 9월 1일 서울방송(SBS)이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방송사상 처음으로 방송한 이후에 KBS를 통해 1998년 11월 15일까지 10부작으로 방송된 '림꺽정'과 MBC를 통해 1999년 1월 3일 '온달전'을 방영했다. 이외에도 SBS는 98년 8월 평양 주변의 명소를 소개한 '김승규의 평앙리포트'를 방송했으며, 'MBC다큐스페셜-금강산 가는 길' 제작팀은 98년 11월 18일 첫 출항한 금강호에 승선해 실향민의 아픔을 그려냈다.

①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교류현황

남한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북한영상물의 국내 반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1999년에는 북한 위성TV의 시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같은 조치와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남한의 방송사들은 북한이 제작한 영상물을 중개업자 등을 통해 구매하여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SBS가 1998년 9월최초로『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방송했으며, KBS는 같은 해 10월『림꺽정』을, MBC는 1999년 1월『온달전』등을 방송했다.

³⁷⁾ MBC 종합뉴스 보도, 1998, 3, 13,

<표 23> 북한 영상물 및 관련 취재 프로그램 방영 현황³⁸⁾

방송사	방영제목	방영일자	제작
KBS	'북한에서 본 백두산' (일요스페셜)	97년 9월 14일	북한 용남녹화 편집사, 중국 국제TV전파공사
	'최초 답사보고-북녘산하, 북녘 유산'(2부작)	98년 3월 3일, 4일	중앙일보 방북취재단
	'끝나지 않은 유랑, 탈북 식량난 민 13인의 생존기'(일요스페셜)	98년 4월 5일	비디오저널리스트 조천현씨
	'솔런 호아스기자의 평양일기' (일요스페셜)	98년 8월 9일	솔런 호아스기자
	'북녘 산하 기행'(일요스페셜)	98년 9월 6일	중앙일보 방북취재단
	'림꺽정'	98년 10월 17일부터 10 부작으로 방영	조선예술영화제작소
	'1998년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일요스페셜)	98년 12월 20일	탈북자 잠입 르포
	'압록강에서 만나는 사람들'	97년 8월 28일	프로덕션 '다큐 서울'
	'상봉'(다큐스페셜)	98년 4월 9일	MBC 다큐스페셜
	'이제는 만나야 한다'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9시간 방영	MBC
	'압록강에서 만나는 사람들'	97년 8월 28일	프로덕션 '다큐 서울'
	'상봉'(다큐스페셜)	98년 4월 9일	MBC 다큐스페셜
MDC	'이제는 만나야 한다'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9시간 방영	MBC
MBC	'긴급보고-북한아이들이 죽어가 고 있다'(PD수첩)	98년 9월 1일	MBC PD수첩
	'탈북가족, 끝나지 않은 탈 출'(PD수첩)	98년 9월 29일	MBC PD수첩
	'금강산 가는 길'(다큐스페셜)	98년 11월 26일	MBC 다큐스페셜
	'온달전'	99년 1월 3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평양체류, 6박 7일'	99년 1월 7일	미국 의료진
	'평양 교예단'	99년 2월 15일	북한 조선목란비디오
SBS	'이용운 일가의 북한 탈출'	98년 1월 1일, 2일	SBS 취재팀
	'김승규의 평양리포트'	98년 8월 10~14일,5부작	프로덕션 '스포츠아트'
	'김혜자의 5일간의 북한체험'	98년 8월 24일	한국 선명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98년 9월 1일	북한 백두산창작단, 조선 예술영화촬영소, 피바다 가극단 공동제작
	'꽃제비들의 강타기-르포, 두만강'	99년 2월 20일	SBS 취재팀

³⁸⁾ 위의 책, p.38-39.

당시 방송사들은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비용문 제와 저작권 분쟁 우려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북한 관련 취재 프로그램도 방송되었다. MBC의 『압록강에서 만난 사람들』, KBS의 『북녘산하기행』, SBS의 『김승규의 평양리포트』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촬영 테잎을 구매해 편집・방송한 것으로 방송사의 방북을 통한 직접 취재·제작이 아니었다.

이 시기 중앙일보의 문화유산답사에 이어 세계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이 각종 사업을 명목으로 방북 취재활동을 벌였다.

②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교류현황

1972년 7·4 공동선언과 1992년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바탕을 둔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방송교류와 통합의 대원칙을 마련하였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가. 문화예술·체육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는 음악과 체육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0년 5월과 6월 북한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8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KBS), 2002년 9월 KBS교향악단의 평양공연, 같은 해 9월 MBC의 이미자 평양공연, 2003년 8월 KBS의평양노래자랑, 2005년 8월 SBS의 조용필 평양공연, 그리고 2002년 9월과 200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축구경기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2002년 9월 평양봉화극장에서 열린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 향악단의 합동연주회는 공연실황이 최초로 남북(북남) 전역에 동시 생중계됨 으로써 다시 한번 민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며칠 뒤 동평양예술극장에서 열린 MBC의 『오! 필승코리아』가 북한 전역에 생중계 된 것도 공연내용이 요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록밴드가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프로그램 제작 및 뉴스 생방송

방송현업의 기자, PD, 기술인들이 추진해온 북한 현지취재·제작 및 생방송도 시작되었다. KBS는 2000년 9월 추석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3원 생방송을 4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SBS는 2000년 10월 8시 뉴스 시간대에 서울과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 북한소식을 전달했다.

2002년 9월에는 MBC가 뉴스데스크 시간에 평양소식을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방송 3사가 이 시기에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은 당시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협력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방송 3사의 프로그램 및 뉴스 생방송 연결을 시작으로 2001년 KBS의 『백두고원을 가다』, 2004년 MBC의 『개마고원』등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주로 관광과 역사물, 경제협력현장, 개성공단 관련 프로그램제작이 계속되고 있다. 장르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취재대상이 확대되고 취재영역도 평양 일원과 개성, 백두산 부근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이 시작되면 이 지역에 대한 취재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의 취재·제작, 생방송에는 남한의 전문인력과 장비는 물론 북한의 전문인력과 장비도 상당수 투입되었다. 아직은 실질적 공동제작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나 일정 부분 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추진된 점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다. 남북 방송인 토론회 및 프로그램 시사회

2003년 10월 남한 방송위원회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

한 남북방송인 토론회 및 프로그램 전시회는 방송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끌 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회에서 약 200여명에 이르는 남북방송인들은 제작 편성분야, 방송언어 및 기술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제작한 프로그램(텔레비전 편집물)에 대한 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를 통해 남한은 북한 프로그램 66편을, 북한은 남한 프로그램 14편을 구매했다. 특히 EBS가 구매한 애니메이션 『령리한 너구리』는 정규편성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일부 방송사들도 방송계획을 갖고 있다.

남북 방송인들은 이 토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졌으며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라.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제작

그동안의 남북 방송교류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간략히 그간의 남북방송교류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남북축구경 기 등의 스포츠나 남북공동행사를 중계하는 등의 교류를 시작으로 전개되었 는데 점차 북한지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북한이 제작한 방송영 상물을 구매하여 남한방송에 편성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제작방식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올해는 KBS가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외주형식으로 제작한 드라마 <사육신>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흔히 <사육신>이 남북 방송 교류에 첫 물꼬(공동제작)를 텄다는 식으로 업적위주의 인식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남북 한 방송의 문화적 격차와 이질감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스타일'로 일관함으 로써 남북공동제작의 의의를 반감시킨 것은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결과적으 로 남한 시청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방송합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육신>의 시행착오가 오히려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대중에게는 남북한 문화의 정서적 괴리감만을 확인시키는 부작 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이 빈약하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상 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성격은 대부분 일회적이 고 감상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국내 방송사가 북한 공연물 위주의 단순소개 프로그램 편성이나 자연다큐 구매 편성 정도에 계속 머무르 고 있어 남북 상호간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남한시청자를 위해서라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그간의 남북간 방송교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제작 목록

연도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방송일
2000	MBC	〈현미·남보원이 본 평양〉	8.14
		<금강산을 달린다-금강산 랠리>	8.15
	MDC	〈북녘 땅, 고향은 지금〉(3부작)	8.15~17
	KBS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8.22
	KBS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9.12
	MBC	MBC 스페셜 〈춘향, 평양가다〉	2.16
	MBC	<여기자 북한방문기, 평양 10박 11일>	4.15
	MBC	노동절 행사 뉴스보도	5.1
	KBS	〈여기는 평양입니다〉	6.1~29(5회)
	KBS	일요스페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6.10
	KBS	보도특집 [1부]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빗장 연다	6.13
	NBS	보도특집 [2부] 대동강 밸리의 꿈	6.14
0001	KBS	자연 다큐멘터리 <백두고원을 가다>	8.14
2001		역사스페셜 〈북의 10대 민족문화유산〉	
		[1편] 고구려 평양성	10.06
		[2편] 묘향산 보현사	10.13
	KDC	[3편] 천년전 국제도시 개경	10.20
	KBS	[4편] 고인돌 왕국-고조선 [5편]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	10.27 12.08
		[5원] 고부터 시조 등정성등 [6편] 한반도 문명의 새벽, 검은 모루 구석기유적	12.06
		[7편] 7백년의 사랑, 공민왕릉	12.13
		[8편] 남북 역사학의 쟁점, 단군릉	12.29
	KBS	〈제국의 아침〉 백두산 현지제작 (2회분)	3.2~3
	MBC	2002 부산아시안게임 특집 〈북한이 온다〉	9.4
	KBS	〈남북 통일축구 경기〉	9.7
2002	IZDC	평양공연 특별취재 <9시뉴스> 생방송	9.17~21
	KBS	민족의 명절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합동 연주회>	9.21
	MBC	평양 특별공연 <이미자 공연>, <윤도현 공연>	9.27 / 10.4
	KBS	남북최초 공동답사 <세계문화유산 한반도의 고인돌>	11.9
	KBS	〈남북·해외학자 평양 통일회의〉	4.10
	IIDO	8.15특집 〈평양노래자랑〉	0.15
0000	KBS	보도특집 <남북경협현장을 가다-평양,남포 그리고 개성>	8.15
2003		정주영 체육관 개장기념 〈평화친선음악회〉, 〈통일농구〉	10.6~7
	SBS	〈평화친선음악회, 평양에서의 7일〉	10.0
		〈북한 농구단 서울체류기〉	10.6
	MBC	MBC스페셜 <북녘의 음식 기행> (2부작)	1.31 / 2.1
	MBC	특집 다큐멘터리 <살아오는 고구려>	6.24
2004		역사스페셜 〈고구려는 살아있다〉	
	KBS	[1편] 고구려 수도 평양	7.10~11
		[2편] 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	
	MBC	(MBC 뉴스데스크> 북한의 설 풍경	2.9
2005		PD수첩 <개성을 말하다>	2.15
	KBS	〈금강산 열린음악회〉	6.12
	MBC	(MBC 뉴스데스크> 미리 가 본 백두산 관광코스	8.15
	SBS	〈조용필 평양 단독 콘서트〉	8.23 공연

3)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

지난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방송사들이 효율적으로 방송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01년 6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또한 방송교류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북측 방송행정규제기구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2001년 12월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남북 방송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2002년 8월 협의 창구를 개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송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2002.8.26)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남북 방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방송법 개정(2005.4)을 통해 남북 방송교류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재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27조12호(방송위원회 직무)와 제35조의 2제1항(남북간 방송교류협력)에 근거하여 남북 방송교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제도적 차원의 남북방송교류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북방송인토론회

남북 방송인이 직접 만나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은 남북방송교류의 첫 번째 과제이다. 따라서 남북 방송인 사 이의 인적교류를 위한 남북 방송인토론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1차 방송인토론회는 2003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은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지상파방송사, 케이블, 위성 방송, 학계, 관계부처 등 13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북한은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약 100여명의 방송인들이 참여하였다. 1차 방송인토론회에서는 방송제작, 방송언어, 방송기술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해당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방송인토론회는 2005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은 성유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방송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 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북한은 양시운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약 4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다. 2차 방송인토론회에서는 편성제작과 방송기술 분과 2개 분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남한이 DMB 등 첨단 방송 기술을 소개하자 북한은통일시대를 맞아 기술표준화에 나서자고 제안하는 등 협력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②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에서는 서로의 방송영상물의 교차구매가 이루어졌으며, 남북의 방송사가 상대 방송영상물을 편성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관계자는 2003년 구입한 남한 방송영상물 중 8편을 23회에 걸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했다고 밝히기도했다.

1차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차 방송인토론회 기간 중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시내 한복판에 부스가 설치되었다. 이 행사에서 남한은249편, 북한은 101편의 방송영상물을 모든 장르에 걸쳐 출품하였으며, 남한은 66편, 북한은 14편의 상대 방송영상물을 각각 구입하였다. 또한특별관을 마련하여 장르별로 남북의 대표적인 방송영상물 4편을 각각 선정하여 양측의 방송관계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를 갖고 양측의 방송제작기법과 기획의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2차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은 표철수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여 4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북한은 김상순 교육

문화TV편집국장을 대표로 하여 방송관계자 20여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남한은 모든 장르에서 118편의 방송영상물을 출품하였고 북한은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총 123편을 출품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한은 114편, 북한은 22편의 상대 방송영상물을 각각 구입하였다. 2차 행사는 1차 행사에 비해 방송영상물 가격이 더욱 낮아졌으며 2배가량 매매가 늘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전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차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이 남북방송인토론회 기간 중 함께 진행된 데 반해 2차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은 단독행사로 진행되었다. 남한은 표철수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여 약 40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북한은 김상순 교육문화 TV편집국장을 대표로 하여 방송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하였다.

양측의 출품 방송영상물 수는 남한은 118편 북한은 총 123편이었으며 남한은 모든 장르에서 방송영상물을 출품하였고, 북한도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전장르의 방송영상물을 출품하였다. 당초 북한은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출품목록을 제시하였지만 애니메이션 제작기관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애니메이션을 출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행사직전까지 애니메이션 출품을 위해해당기관과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행사 말미에 2차 행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양측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총평 토론 결과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양 측의 방송물을 제대로 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출품된 방송 영상물 내용 이외에 방송기술 및 방송내용 등방송의 변화를 논의할 여유도 없었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특히 짧은 일정으로 북한 방송인들과 금강산을 참관할 수 없 었고, 한민족으로서 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남한 행사참 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제 3차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되새겨봄직하다.

2003년 평양에서 개최된 1차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에서 남한이 66편을 북한이 14편을 구입한데 반해 2차 행사에서는 남한이 114편을 북한이 22편을 구입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이번행사는 1차 행사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남북 방송 영상물 소개모임이 정례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남 북 방송교류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행사의 가장 큰 성 과이다.

다만 북한이 애니메이션을 출품치 않아 애니메이션 구입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방송사들이 참여치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우리 방송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방송 영상물 소개모임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애니메이션을 출품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③ 방송설비 및 기술 지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우리 방송사들이 북한 지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원활한 제작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한 방송설비를 북한에 지원해 왔다. 방송기술 분야는 비정치적 분야로서 방송교류 전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3년 디지털 방송편집·송출 장비를 지원하였다. 디지털 방송편집·송출 장비는 북한 조선중앙TV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로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약 한달여간 북한에 상주하며 방송장비를 설치해주고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또한 2005년에는 디지털 방송중계차량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KBS 소속 방송기술인들이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방문하여 기술이전을 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이전과 방송장비 제공은 향후 우리 방송사가 북한 지역에서 프로 그램을 제작할 경우 우리가 제공한 고품질의 방송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방송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방송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주요 국제경기의 위성중계 지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요 국제경기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방송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특히 남한 선수들의 경기를 편 성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참가한 주요 국제경기를 위성중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타이콤 위성을 통해 전송해주었다. 주 전송내용은 북한이 취재한 화면과 우리 방송사들이 제작한 경기, 그리고 국제 신호이며, 북한은 자국 선수와 남한 선수들의경기를 비롯하여 주요 경기를 녹화중계하였다. 특히 북한 방송인이 남한을 방문해 자체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KBS, MBC 등방송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방송인의 취재를 협조해 주었다.

2004년도에는 아테네올림픽 경기를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타이콤 위성을 통해 전송하였다. 주전송 내용은 아테네에서 국내로 전송된 KBS-1TV 라인의 경기내용을 재전송하였다. 북한에서 요청한 경기는 방송 3사 및 스카이라이프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전송하였다. 북한은 우리측이 전송해 준 경기중 자국 선수들의 경기와 남한 선수들의 주요 경기 그리고 외국의 진기한 경기 등을 선별하여 방송하였다.

2005년도에는 남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전 경기를 7월 31 일부터 8월 7일까지 AsiasatⅡ 위성을 통해 전송해 주었다. 북한은 자국 선수 들의 경기와 남한과 북한 선수들의 경기를 방송하였다.

⑤ 남북 제작협력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제도 실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 • 위성 방송, 독립 제작사 등 다원화된 방송주체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이 안정적 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남북 제작협력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법 제38조 제11호(기금의 용도)에 따라 남 북 방송교류 협력 및 남북 공동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 실적은 2005년 KBS스카이에서 제작한 세계여자권투선수권 대회 경기 1편뿐이었다. 제작비 지원사례가 1건에 불과한 것은 2004년 중반 이후 남북 관계가 갑자기 경색됨에 따라 남북 방송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우리 방송사들이 남북 방송교류에 지속적 인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방송사들이 안정적으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남북간 방송교류는 북한의 방송개방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특히 동서독 통일 이후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북한의 개방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북한개방과 연관된 방송교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한방송사의 업적위주의 방송교류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방송교류는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들을 상호간에 제공하고 또 쌍 방간의 소통을 추진하는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말해 영화 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이나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영역이 서로 결합하고 연계된 복합적인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방송이 담당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시장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공유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방송은 일반 문화상품과 다르 다. 방송의 공익성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남북이 서로 공유하면서 교 류를 추진해 나가는 문화적 통합의 접근방식이야말로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고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에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 을 가질 때만이 올바른 방송교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부수적인 조처로서 '영상물 아카이브 자료교환'에 대한 제도적 조치 마련도 필요하다. 남북이 영상물 아카이브 자료를 교환해 공

동으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바람직한 영상물 제작과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한 방송문화 발전은 물론이고 학술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상아카이브 자료교환은 일회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이나 개성 등의 특정 지역에 상설 자료관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언제나 필요한 때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방송영상관련 자료들은 방송영상프로그램은 물론 방송편성표나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유관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 그리고 관련 학술도서 등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이러한 자료들은 당연히 남북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남북 방송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열리지 않고 있는 3차 남북방송인토론회도 개최되어야만 한다. 남북이 동의한다면 굳이 방송인토론회가 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다. 더욱이 방송인토론회는 방송영상물소개모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 시 개최하여 남북한 방송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질적 문화극복을 위한 노력으 로 이어져야만 한다. 방송프로그램과 사람의 교류,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남북방송교류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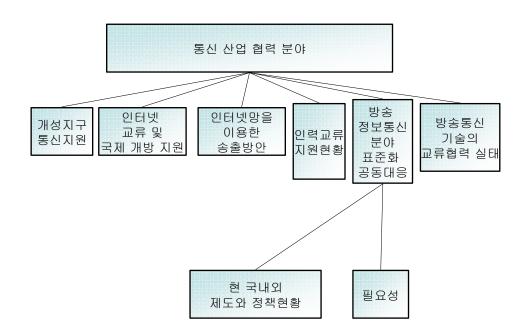
남북방송교류의 의미와 원칙, 그리고 방향까지도 이제는 거의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송교류가 정치적 환경에 지나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남북한은 예전 동서독의 경우처럼 보다 많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통해 점차 하나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상호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전개되는 방송교류는 또다시 한건주의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높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예전 분단시대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제시한 동방정책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독 관계는 각 방면에 걸쳐 많은 교류와 결실을 맺게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서독의 에곤 바르 정무장관과 동독의 미카엘 콜

정무장관 사이에 2년간 70회 이상의 실무접촉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내년 여름 개성을 지나 육로로 북경올림픽에 함께 참가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기회로 더욱 발전된 남북방송교류를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정상들간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여전한 남북간의 불신은 물론,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른 갈등으로 발전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게 하고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2. 정보통신 협력 분야



1) 개성 지구 통신 지원

제7차 장성급 회담을 열어 2008년부터 개성공단에서 무선통신전화를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분단 50여년 동안 막혔던 남북한 주파수 혈맥이 뚫릴지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 차원에서이뤄졌다. 다만 합의서 표기에 남한은 '이동전화', 북한은 '무선통신전화'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남북이 이 문제를 앞으로 실무자급 회담을 통해 풀어가기로 해 분단 50여년만의 남북간 이통서비스 개통에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대북사업 의지도 커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서인데, 그 커버리지는 북쪽으로 개성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개성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Km로, 주변 환경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통상 기지국 한 대의 이론적 커버리지인 30~40km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인근의 군부대에는 옛 신세기통신(SK텔레콤이 합병)이 추진했던 '스마일 프로젝트'로 인해 이동통신용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상당수 설치돼 있다. KTF의 경우 휴전선 인근에 약 40여개의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LG텔레콤도 이보다는 적지만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지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전파를 보내지 못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파의 월북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파 차단에도 불구하고 간간이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가 북쪽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다.

대북 사업차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휴대폰 반입 금지가 심하지 않던 남북교류 초기에는 개성 자남산 여관과 해금강 근처에서 가지고 간 휴대폰에 신호가 잡히고, 실제 전화통화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파 차단만 없으면 지금도 이통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용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성에 기지국, 중계기, 교환기 등의 설치가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성 시의 총 면적은 약1300km이지만 도시 중심 등 실제 서비스 지역은 40km성도로 본다. 개성시의 건물 구조나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설계기준으로 볼 때, 이정도 규모면 기지국 30여개와 중계기 70여개 정도면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다.

북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할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 양측 정부가 모두 승인을 해야하는 등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이통사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남북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온 KT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다.

KT는 이미 서울, 개성 서울, 평양간 45Mbps급 광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개성공단 내에 유선전화 650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케이블은 이동전화기지국에 연결되는 광선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KTF의 경우 PCS초창기 시절 통일에 대비해 대북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의 기지국 장비를 강원도 등 휴전선 인근에 구축하기도 했었다.

SK텔레콤의 의지도 강하다. 지난 8.15남북회담을 겨냥해 3G 영상전화 시연을 추진했으나 회담 일정 연기 등으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SK텔레콤은 이 달초 북한 통일전선부의 2인자인 최승철부부장(차관급)이 분당 액세스연구원을 방문해 영상전화 등 첨단 서비스를 둘러본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NEAT&T란 회사가 지난 2002년 11월부터 GSM 방식으로 이통서비스를 제공, 2003년말 기준으로 2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통신망은 1971년 남북적십자간 2회선 직접연결을 시작으로 2004년 말 현재 남북대화용 30회선, 항공기관제 3회선, 경수로건설 16회선, 금광산관광 13회선,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 2회선 등 총 64회선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운용중이다. 직접연결회선은 주로 남북회담 및 군사용 회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망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 25> 남북간 통신망 연결 현황

비고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서울~평양	2	'71. 9. 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 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72. 8. 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84. 12. 21	
	판문점공동경비	남북적십자회담	2	'71. 9. 22	
	구역내	연락사무소간			
	남북직통전화	남북한	2	'92. 5. 18	
-J -J		관제통신망			
직접	11. 브 쉬	대구-평양관제소	2	'97. 11. 19	
연결	남북한	(판문점경유)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	1	' 98. 2. 17	
		(위성통신) 경의선 철도·도로			
	남북군당국간		2	·00 0 04	
	직통전화 	연결공사		'02. 9. 24	
		상활실간 동해선 철도·도로			
	(철도, 도로	0 1, 2 2		(00.10.5	
	연결공사용)	연결공사	2	'03. 12. 5	
	합	<u> </u>	33		
	1	<i>/</i> 4	3	['] 97. 8. 4	
	KEDO 경수로 사업용	한국~일본KDD~ 인텔셋~평양~신포			
			1	'00. 7. 26	
	7 1 0		6	'01. 5. 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	6	'98. 11. 17	
		인텔셋~평양~원	2	. 699. 5. 18	
간접 연결		산~온정~장전	2	'03. 9. 19	
	평양실내종합체	한국~일본IDC~			
		인텔셋~VD양~원	3	'00. 11. 21	
	육관용	산~온정~장전			
	개성현대중기	한국~일본IDC~	2	4	
	관리사무소용	인텔셋~평양~개성		'03. 12. 15	
	합	<u> </u>	31		
	当 게		OI		

자료: 통일부(2004)

2005년 12월 28일은 우리나라 IT 역사에 새로운 의미가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1945년 8월, 구 소련이 서울과 해주간 통신망을 끊은 지 60년 만에 남과 북의 통신이 다시 연결됐기 때문이다.³⁹⁾ 이날 전화 개통을 위해 남북 관계 당국과 KT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만 3년 동안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남과 북의 전화는 이날 개통됐지만 남과 북의 의사소통은 이미 3년전부터 '개통'됐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지난 2002년 12월 당국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남북 전화개통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04년 4월엔 KT와 조선체신회사 가 개성공업지구 통신 공급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시작해 그해 12월 9차례의 협상 끝에 '개성공업지구 통신 공급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2005년 3월엔 기본합의서 체결 후 요금, 전화번호, 기술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4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을 위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 특히 KT와 조선체신회사는 협상 시작 때부터 사업방식, 통신망 연결 방법 등 많은 난제들이 있었으나양측은 개성공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그 결과 2005년 7월 시범단지내 통신 관로 및 케이블 구축을 완료했으며 (사진) 7월 18일 남북간 민간차원으로는 최초로 광케이블을 직접 접속했다. 사실상 이 날이 1945년 8월 구 소련에 의해 서울과 해주간 통신망이 인위적으로 단절된 지 60년 만에 다시 연결된 날인 것이다.

특히 이날 연결된 통신망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지난 8월 역사적인 8·15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성공리에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KT는 9월에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을 위한 임시 KT 개성지사 준공을 마치고 11월 16일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성공업지구 장비반출 문제를 해소했다.

12월 9일에는 KT 기술진과 북측 기술진이 함께 북측 개성전화국에 통신장비를 설치했으며 28일 역사적인 남북간 민간통신을 개통하게 된 것이다.

³⁹⁾ 파이낸셜뉴스, 2005.12.28.

① 통신부문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적십자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간에는 31회선의 직접 연결 전화와 27회선의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 연결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표 26> 남북간 연결 전화 현황

(2002. 9. 30 현재)

구 분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 9. 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 8. 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 12. 21
직접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 9. 22
연결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 5. 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 11. 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 2. 17
	남북한 군용통신망 (핫라인)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 9. 24
	합 계		31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1997. 8. 4
			2	2000. 7. 26
			6	2001. 5. 23
간접 연결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	6	1998. 11. 17
		정 [~] 장전	2	1999. 5. 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 정~장전	3	2000. 11. 21
		합 계	27	

자료: 통일부, 『2002 통일백서』, 2002. 2 「남북한 군 핫라인 첫 개통」, 『국민일보』, 2002. 9. 24

② 남북한간 직접연결 통신

가. 남북 대화용

남북한간의 통신망 연결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 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 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 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북측이 일방적인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과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게기로 직통전화가 재개통되었다.

<표 27> 남북간 판문점 경유 통신망 연결 추진 일지

일시	추진 내용
1970. 8.	남한 광복절 26주년 경축사「평화통일의 구상」발표
1971. 9.	판문점내 한국통신(당시 체신부)통신분실 설치
1971. 9.	자유의 집(남)-판문각(북)간 직통전화 2회선 개통
1971. 9.	1천만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1972. 4.	서울-평양간 남북조절위원회 직통전화 1회선 개통
1972. 7.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및「남북간 직통전화설치에 관한 합의서」체결
1972. 8.	서울-평양간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20회선 개통
1976. 8.	신진3호 납북사건 계기로 남북직통전화 북측 일방적 절단
	일부 전화회선 재개통 및 절단 반복
1984. 7.	북한 수해물자 인수 계기로 직통전화 전회선 재개통
1984.12.	남북 경제 단체용 직통전화 1회선 개통
1992. 5.	평화의 집-통일각간 남북연락사무소용 직통전화 2회선 개통

나.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용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에 판문점 경유 남북한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예비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 II)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결경로는 주회선의 경우, 대구관제소~대구신암전화국~혜화전화국~판문점~개성~평양~평양관제소로 연결되며, 예비회선은 대구관제소~국제통신국~금산지구국~ASIASAT II 위성~평양지구국~국제통신국~평양관제소로 연결된다.

남북 적십자간 직통선은 판문점에서만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인 신포와 한국전력 서울 본사간 통신도 인공위성을 통해 일본을 경유해 이뤄지는 반면 남북관제통신망은 판문점을 경유하는 직통전화로 연결되며, 비행기가 남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넘나들 때 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상시적으로 통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경의선 철도복원 지원을 위한 군사통신망 개설 및 운용

2002년 9월 17일 체결된「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02년 9월 24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군 당국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개통되었다.40)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쌍방은 공사 현장들 사이의 통신 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을 연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해지구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 간에 판문점을 경유하여 2회선(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이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사 실무자간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40) 『}문화일보』, 「남북 軍핫라인 오늘 첫 개통」, 2002.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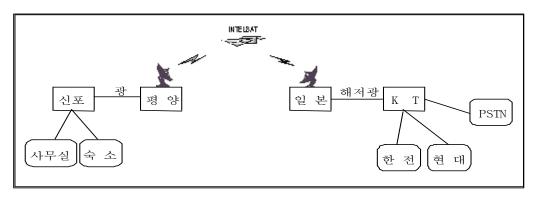
③ 남북한간 간접연결 통신

가. KEDO 경수로 사업용

KT(한국통신)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경수로사업에 통신을 지원키로 하고, 1997년 5월 KEDO와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T는 경수로가 착공되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교환기와 선로를 구축하여 동년 8월 남북간의 전화회선 8회선(공중용 4회선, 업무용 4회선)이 개통되었다.

통신선로는 한전본사~KT 광화문 국제관문국~부산 육양국~한일간 해저광케이블~일본 도쿄국제전신전화국(KDD)~인텔셋 통신위성~평양~신포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후 2000년 7월 2회선, 2001년 5월 6회선이 추가되어 경수로 통신지원을 위한 전화회선 수는 총 16회선으로 늘어났다.

경수로 건설 지역은 자동전화가 미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신망을 운용 중이며, 경수로사업 지역과 남한 전역 간 전화서비스를 위한 공중 통신용 4회선과 건설사업 참여회사의 업무용 4회선(한국전력 3회선, 합동시공단 1회선)이 개설되어 있다.



<그림 7> 한국 - KEDO 통신망 구성도

KEDO 경수로 사업용 통신망의 연결은 분단 이후 북한과의 상업용 전화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는 점과 KEDO라는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사업추진 및 통신망이 개설되었지만 남북한간에 민간인들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과의 통신의정서 및 양해각서 체결과정 협 상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남북경협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국내 경제협 력사업자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일관된 체계의 남북간 통신망 연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터넷 교류 및 국제 개방 지원

인터넷 을 이용한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시사월간지 "피플"과 몇 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교류 접속시에는 북한 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www.zuri.co.kr)을 벌리고 있으며 국 회 통일외교안보분과위 소속 조웅규 의원 발의로 북한주민 접촉 승인에 대하 여 제한적 완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남북교류가 현실적 인 문제로 다가왔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는 평화통일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시대적 요 청으로 다가온 현실적 문제이며 지금까지의 특정인, 특정 기업이나 관련기관 의 전유물에서 보편적인 교류협력단계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북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할 수는 없고 설사가능하다해도 비용문제가 가로놓여 있어 새로운 방식의 교류협력의 시도는 필연적이며 인터넷은 그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은 인터넷에서 세계 최강국임을 자타가공인하지만 교신의 상대방은 인터넷이 개방되지 않은 2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간에는 최고위 수준과 최하위 수준이라는 극한적 격차가 조성되었으며 역으로 말해서 그 격차가 바로 교류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월남이나 독일 통일과는 달리 지식정보사회의 가치관에 의하 여 합의 통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남북의 격차는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예상된다. 정도에 따라서는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하여 재앙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격차를 해소할만한 조치는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 제도적(교류 협력법), 정서적(레드 콤플렉스), 경제적 (퍼주기 공세)이유로 제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등과 꼴찌는 어떻게 원을 풀고 서로 사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박힌 돌을 빼내 징검다리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2001년 icckl 대표 폐막 연설) 그러나 박힌돌이란 응어리진 앙금(단장의미아리고개 참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2) 인터넷부문

인터넷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은 과거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북한 관련 정보, 특히 이산가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기업의 대북 협력사업을 위한 북한의 산업 및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정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중 동포들이 운영하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는 1999년 10월에 '조선인포뱅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현재 조선인포뱅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림판에 대폭적인 사이트개편 중이라는 안내만 나오고 있을 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사이트를 통한 북한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단된 것은 2003년 1월부터이며 사이트의 운영 주체인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의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까지 조선인포뱅크에서는 북한 산업에 대한 현황과 경제협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무역, 투자 및 협력사업에 외국기업으로부터의투자 유치를 위하여 특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경제, 법규, 문화, 서적, 관광, 의학, 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는 북한의 금융기구, 무역상사, 합영기업 등을 소개하는 주요업체 소개, 산업동향, 공업, 농업, 수산업, 상업 등에 관한 산업정보, 북한의 수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창구, 과학기

술 발명 및 분야별 연구 성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환경의 세부 목차로 나누어 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41)

정보제공서비스 이외에 북한지역 여행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도 등장하였는데, 호텔 온라인 예약서비스 업체인 호텔페이지닷컴은 2000년 7월부터 중국의한 여행사와 북한지역 호텔 예약 대행계약을 맺고 평양의 고려호텔(특급), 보통강려관(1급), 개성의 개성민속려관(2급)을 비롯해 신의주, 원산, 백두산 일대 20여 곳의 호텔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통일부로부터 입북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예약을 받으며,일본인 등 북한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예약이 가능하다.42)

또한 인터넷 여행사 리치투어는 북한 전문기업인 금강산국제그룹과 북한관 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약을 2000년 7월에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오라인은 투어드코리아에 북한전문사이트를 구축하여 금강산 국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전역의 관광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한글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국내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된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북한 현지 안내는 금강산국제그룹이 맡고 있다.43)

아직 남북한 기업 당사자간의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00년에는 인터넷에북한상품 전문쇼핑몰이 잇따라 등장하였고, 취급품목도 그 동안 인기를 끌어온 주류(酒類) 품목에서 벗어나 의류, 잡화를 비롯해 북한 브랜드로 출시된 전자제품까지 거래되었다.

북한마을은 초기에는 북한 조선화 공훈예술가와 인민예술가들이 그린 산수화, 풍경화 등 명화와 함께 주류, 건강식품을 취급하였지만, 이후 농·축·수

⁴¹⁾ 과거 조선인포뱅크가 운영되고 있을 때나 또는 향후 다시 재개된다면, 남한의 일반주민이 사이트 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전자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로부터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조선일보』, 「북한호텔 예약사이트 등장」, 2000. 7. 7

^{43) 『}디지털타임즈』, 「지오라인, 외국인 대상 북한 전문 사이트 구축」, 2000. 7. 28 http://www.tourdekorea.com

산물, 수공예품 등으로 상품 품목을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북한 요리 관련 서적과 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북한우표가 쇼핑몰의 추천상품에 포함되어 있다.⁴⁴⁾

북측기업과 남측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추진하였던 고려샵은 묘향산 선풍기와 삼일포 컬러TV 등 20여종의 전자제품과 식품, 공예품, 의류잡화 등 북한 공산품들을 판매하였다. 아울러 남측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접수해 북측 해당 기업과 연결하는 무역 통로의 제공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유니온 커뮤니티는 북한 요리강좌, 북한법 소개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북한 제품 쇼핑몰도 운영하였다.

한편, 외국에서도 북한의 각종 제품과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트가 개설되었다. 2003년 2월 25일에 개설된 '천리마 그룹 (www.chollima-group.com)' 사이트는 영국인이 북한 상품을 구해서 판매하기위하여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 예술가가 그린 유화와 평양자수학원에서 만든 자수품을 비롯하여 도자기, 문집, 포스터, 옷, 멀티미디어 매체, 북한음악CD, 우표, 인삼화장품, 장식용 핀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모든 물품의 가격은 유로로 표시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고배달기간은 3~4주가 걸린다. 또한 외국의 개인 및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북한의 관광명소와 문화・예술유적지, 태권도행사 등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선전하고 있다.45)

국내의 기업이 북한과 합작투자하여 북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주)훈넷은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와 합작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2002년 3월 초에 설립하고 3월 25일에 인터넷복권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후 2002년 8월에는 북한의 바둑기사들과 직접 채팅을 하며 인터넷 대국을 할수 있는 '고려바둑(www.mybaduk.com)'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 '주패닷컴(jupae.com)'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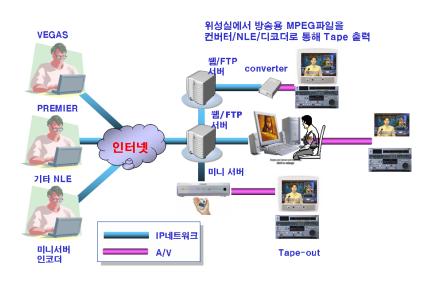
⁴⁴⁾ http://www.snkorea.co.kr

^{45) 『}전자신문』, 「북, EC웹사이트 개설」, 2003.3. 13

운영 중에 있다.

① 인터넷망을 이용한 송출방안

여러 가지 제약과 기간망 구축비용이 많으므로 현실화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중계자료 전송에 대해 소개해본다. 현재 북한은 광섬유케이블화 공사를 통해 전화통신망이 정비됨에 따라 컴퓨터망도 정비되어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주관으로 컴퓨터망 정보 봉사(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과 인민대학습당, 발명총국, 조선 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현재 이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 컴퓨터망(TCP/IP Intranet)은 부문별 컴퓨터망 체계와 지역별 컴퓨터망 체계로 구축되었으며, 여기에 개별적 컴퓨터들이나 각 기관 단위의 컴퓨터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인 통합정보처리체계로 발전,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인터넷망을 통한 자료전송

특히 각 도별 컴퓨터센터를 설립해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서 노트북, 소프트웨어, 카메라 등으

로 구성된 IT기반 디지털 취재, 편집, 전송을 할 수 있다. 인터넷망의 속도에따라 시간이 많이 걸려 사용의 불편함도 따르지만 보도 자료를 인터넷망을통해 전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면 중계차나 전송시설이필요치 않고 웹/FPT 서버 등은 기존에 통신사에 구축된 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

② 인력 교류 지원

방송통신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제작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교육이 요구되며 그 외에도 방송장비 및 방송 네트워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동방송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상호교류가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의 기술교류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추었을 경우에 가능지만 현실적으로 방송제작기술과 송출기술 및 방송설비 등이 동등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시스템 및 인력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제작시설 분야로 스튜디오 설비, 제작시스템 및 송출시스템 등을 들 수 있고 송출을 위해서는 송신시스템, 송신소 부지 및 송신 안테나, 전원시스템 및 운영 기술자가 공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동제작과 수중 및 항공제작에 필요한특수장비와 설비 등의 교류 또한 시급히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수상기 분야는 기술과 생산에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남한에서 생산되는 수상기의 성능은 벽걸이용 고선명의 PDP TV 및 TFT-LCD TV 등 가격과 화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므로 남북 디지털 수상기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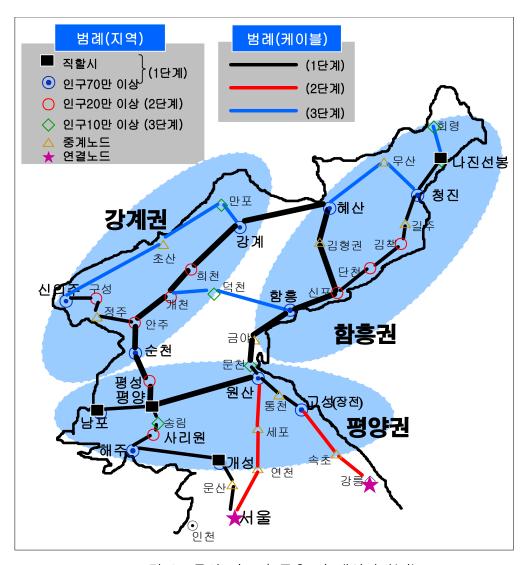
또한, 디지털 방송시대에는 디지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에는 디지털 방송장비와 디지털 네트워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통일 이후를 대비 하여 북한의 방송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방안 또한 시급히 논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③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공동 대응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대되었다. 개성공단의 본단지 1,753,000m² 조성완료 및 분양 실시를 시작하였고,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확대로, 6월부터 내금강 관광 실시하기로 하였다. 통신 인프라는 10배이상 확대와 다양한 통신수단 제공이 필요하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운영관리규정",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쌀, 비료를 포함하여 7,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05년 미 시라큐스와 포항공대에서 주관하는 북한 IT과학자 영어교습을 중국에서 실시 (\$20만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IT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중국 단둥 하나비즈 교육센터를 이용하여 '05년을 시작으로 매년 30명이상 교육(18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06년 60명 년 100% 신장하고 있다.

남북간 통신은 1971년 남북적십자를 위한 2회선 개통을 시작으로 비약적으로 발전, 민간통신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개성공단을 위하여 남북간 광통신회선이 연결되어, 가입자 300회선 사용 중이며, 전화국 건립을 위하여 300억원을 지원 한다. 데이터 통신, 이동통신, 무선통신 서비스까지 서비스 예정이며 포항공과대학 박찬모 총장 "북한의 정보화사회 구현방안" 논문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과학진흥협회 연차회의에서 발표 하였다. 북한의 IT 현황과교류협력 방안", "평양과학기술대학 공동연구", 평양 "민족과학학술대회 성과" 말컴 길리스 라이스 전총장은 박찬모총장과 협력하여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공동위원장으로 국제대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림 9> 통신 인프라 구축 및 대상지역(안)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한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이 필요한시점이다. 또한 북한의 통신 인프라 지원에 대한 소요 예산 산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북한의 지역 정보의 부재로 정확한 구축 예산 수립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현재 통신망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다. 각통신방식별(유선통신, 무선통신, 인트라넷) 등 구축 사례로써 베트남, 중국 등탈공산화를 통해 개방한 통신정책과 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과 인도,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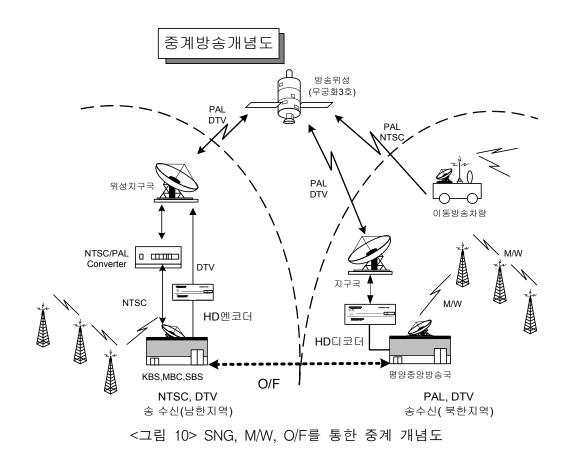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을 조사 연구하였다. 한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최적의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과 현대화를 위 한 방안 수립하고 통신 인프라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단계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통신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북한지역 최적의 통신 인프라 구성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각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방식과 구축방식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범위와 기본설계를 완성하였다. 위성지리정보(GIS)를 이용하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여 검증을 실시해서 도출된 결과는 북한의 통신 인프라 제공 방법과 기금예산 책정을 위한 기본 증빙 자료로 활용되었다개발 형태별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이 반영된다..

④ 방송통신 기술의 교류 협력

북한의 현재 통신망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다. 각통신방식별(유선통신, 무선통신, 인트라넷) 등 구축 사례로써 베트남, 중국 등탈공산화를 통해 개방한 통신정책과 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과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을 조사 연구하였다. 한의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최적의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과 현대화를 위한 방안 수립하고 통신 인프라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단계별 마스터 플랜을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통신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북한지역 최적의 통신 인프라 구성에 대한 방안을 도출 하였으며 각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방식과 구축방식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범위와 기본 설계를 완성하였다. 위성지리정보(GIS)를 이용하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여 검증을 실시해서 도출된 결과는 북한의통신 인프라 제공 방법과 기금예산 책정을 위한 기본 증빙 자료로 활용되었다. 개발 형태별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이 반영된다.



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SNG 전송 방안

지상파나 케이블과 달리 한반도 전체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무궁화 위성방송은 앞으로의 남북(북남) 방송교류 그리고 향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남북(북남)측을 방송 공동체로 통합시킬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상파 중계망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반면에위성방송은 수신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위성체를 중계기로 활용한다면 위성방송은 남북(북남)측 통합 방송망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사용 중인 방식으로 제일 용이한 방식이다. 무궁화 2호와 3호 중 계기를 임차하고 있는 남한 방송사에서 필요한 이동형 중계 전송기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전송하는 형태이며 고정비용과 시설비용이 적게 들며 외화낭비가 적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안이다. 향후 추가로 쏘아 올리는 무궁화 5호 위성의 방송 점유 신호 대역을 늘려 HD 자료 전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일방향이 아닌 북한의 필요에 의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중계전송 - 예를 들어 남녀 국가 대표 축구 중계 등 - 이 가능토록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는 북한에 6.3미터 정도의 무궁화 위성 수신용 지구국을 설치하여 상향과 하향 전송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지방 방송사가 채택하고 있는 3.8미터 수신전용 안테나를 사용한 방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지구국 송신기도 처음에는 1.2~1.8m 정도의 이동형 안테나와 HD/SD Encoder, Modulator, Up-Down Converter, TWTA(Traveling Wave Transmitter Amplifier-진공관형 고증폭기), 송수신 전화기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간이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비용 절감이 되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 방송 신호 방식이 남한은 NTSC이고 북한은 PAL-M방식이므로 북한의지구국은 PAL-M을 중심으로 2가지 방송 형태의 신호변환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리라 본다.

남한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호변환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고화질(HD) TV로 전환하려면 신호 대역을 5 Mbps에서 25Mbps로 늘려 사용하고 지구국에서 HD엔코더, HD디코더와 주파수 변환기(Modulator, Demodulator)만 교체하면 된다. HD신호를 사용하다가 SD 여러 채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지상파의 HD TV 방송은 8-VSB(8-level trellis coded Vestigial SideBand modulation)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미국의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방식, COFDM(Code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유럽에서 개발된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방식과 일본이독자적으로 개발한 COFDM 방식과 유사한 ISDB-T(Inter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종합디지털방송)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서 제안된 ATSC 방송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들 방식간의 장점만을 선택한 새로운 방식인 TDS-OFDM(Time Domain Synchronous-OFDM)을 개발하여 ITU-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에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만약에 북한이 다른 방송 방식인 COFDM이나 TDS-OFDM을 표준으로 채택할 경우, 지상파TV 방송에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방송 방식을 사용하게된다. 이 경우에 영상 신호 압축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압축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문제가 없지만, 음성 신호 압축에 있어서는 ATSC 방식은 AC-3를 DVB-T 방식에 있어서는 MPEG-2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상호 호환을 시켜줘야 한다. 또한 COFDM은 PAL 방식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8MHz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ATSC 방식과 대역폭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 양쪽의 방송망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이 낭비될 것은 자명하고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고화질 신호의 중계의 경우 ATSC나 DVB-T또는 다른 전송방식이 채택 되더라도 별도로 변동 신호 폭을 가지고 고화질을 전송할 수 있는 비동기 신호 국제규격인 DVB ASI(Asynchronous Serial Interface)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남과 북이 고화질 신호를 중계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Audio 신호를 MPEG2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5.1채널 입체음향 오디오의 전송도 가능하며 HD의 신호규격 중 범용신호인 수직신호 1080i의 비월주사방식과 720P의 순차주사 방식을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다.

나. 위성 전송 방안

현재 북한은 태국 타이콤 위성의 채널을 임차하여 신호를 전송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주관으로 타이콤 위성을 사용하여 중계망을 구축하여 대구 유니 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북한에 중계한 예가 있다. 또한 Intelsat 60° 위 성을 이용하여 중계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남과 북의 울타리 밖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SNG와 더불어 현재 자주 사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비용이 30분당 2000유로정도되므로 비용이 매우 비싸다. 아날로그 또는 HD신호등 중계 신호의 형식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다. Optical Fiber(광전송로) 전송방안

기반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남한에서도 사용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남과 북사이에도 서울-평양간 광선로를 설치하여 2005년 8월 15일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가능케 하였다. 기간망의 용량은 문산과 개성사이 155Mbps급 광회선이 4회선 구축되어 있고 개성과 평양사이 2.5Gbps급, 문산과 서울사이 2.5Gbps급 광회선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남과 북 양측의 광 단말기의 규격을 맞추는 노력과 양쪽에 방송 신호를 기존신호(아날로그)는 PAL-M 방식으로 전송하게 하고, 신호 변환기(Standard Converter)를 남북(북남) 양측에 설치하고 양방향으로 방송신호를 광신호로 바꾸는 장치(Encoder, Decoder)를 남북(북남) 양측에 설치하면 방송 중계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고화질 방송중계신호도 기존신호를 주고받는 기간망에서 광 신호를 고화질의 기본신호로전환하는 광 신호 변환기(Network Interface)와 고화질용 신호 전환 장치(HD Encoder, Decoder)로 바꾸면 고화질 신호도 기존 기간망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남한에서도 NTSC용으로 사용하던 45Mbps급 DS-3 통신신호를 HD Encoder와 Decoder, Network Interface(ASI를 DS-3로 전환하거나 DS-3를 ASI로 전환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고화질 및 5.1채널 입체음향 방송 중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고화질로 사용되는 HD신호는 수평 라인 당 1920 픽셀, 프레임 당 1080라인, 초당 30프레임, 4:2:0 샘플링레이트, 1.485Gbps 총비트율을 갖는 신호이며 이 고화질 신호를 전송하려면 현재의 기간망 용량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의 기간망 시스템 구조상 사용하기 힘들어지므로 압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45Mbps정도의 압축은 ATSC 전송방식의 19.39Mbps 압축보다는 화질이 좋아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화상과 음향의 지연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라. M/W망

마이크로 웨이브망의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별도의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안정적으로 송출 할 수 있으며 남과 북 사이의 개성과 문산 사이를 공동 주파수를 사용하는 양방향 Microwave망을 설치하여 신호를 주고받고 문산과 서울 사이는 남한에서 개성과 평양사이는 북한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망을 설치하여 기존의 M/W망에 연결하면 신호가 한반도 전체를 통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도 개성과 문산 구간은 PAL-M 신호로 연결되면 신호전환은 남한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전송 시 아날로그 방송에서 고화질 방송으로 전환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이 사용되어 져야 한다.

Ⅳ. 남북한 정보격차

1.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동향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성대국 전략과 과학기술중시정치를 천명하면서 대대적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과학원 순시와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2006년 1월의 김책공업종합대학전자도서관 현지도,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는 지시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연이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학 기술발전 5개년계획은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처한 경제현실과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2) 인민생활 개선, 3) 기초, 첨단기술 개발의 3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번째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3번째, 기초,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주력 연구과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 국 가들이 가전과 이동통신 등의 소비자 수요에 입각한 정보통신사업 발전에 치 중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계획경제 국가들은 기존 기계, 통신산업의 자동화 와 이를 통한 전자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경제의 정보화"도 소비자보다는 국가적 수요를 우선시하고 국가계획을 통해 이를 촉진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제정된 북한의 "쏘프트웨어산업법" 제12조에는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에 맞물린 소프트웨어, 협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3조, 8조, 9조에서는 "이를위한 국가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제와 지도체제 정비

인민경제를 지원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를 수립하고 지도체제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먼저 북한은 1988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채택된 "과학기술법"을 1999년 5월과 2004년 12월, 2005년 12월 3번에 걸쳐 수정 보충하였다.

특히 2004년 12월에 수정한 내용은 인민경제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고 이의 체계적인 현대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체제, 인력양성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2003년 6월 11일에 "콤퓨터 쏘프트웨어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에는 "쏘프트웨어 산업법"을 제정한 것이다.

법제와 함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지도체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 우선 1998년에, 이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한 과학원을 2005년 11월부로 "국가과학원"으로 승격시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 수립과 지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제3산업총국을 설립하여 S/W 분야에서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통신인프라 분야는 체신성에서 관리한다.

3.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및 인력 양성

인민경제의 정보화 추진과 함께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전국을 연계하는 인트라넷 망을 고속도화 하기 위한 "광섬유케이블"구축 작업을 더욱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을 관장하는 체신성 조직에서 "빛섬유까벨운영국"이 중앙조직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도 조직에도 설립되고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중아과학기술통보사에서는 국가적 수요와 개별 기업소 수요를 골 고루 반영한 정보 수집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정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초에 출범한 김책 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DB화해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고,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화상강의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격화상강의는 북한 최고 수준 교수들의 강의를 전국 어디에서나 직, 간접적으로 수강할 수 있고,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점도 취득할 수 있다는점에서 도시-지방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력양성은 재력과 물력이 부족한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각 도에 설치된 "제 1고등중학교"를 통한 수재의 조기 발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의 컴퓨터, 정보 관련단과대학 설립,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정보센터(PIC) 등에서의 인력양성강화,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육성 등이 포함된다.

4. 남북한 정보격차 현황

북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쇄된 사회에서 오는 한계는 거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초일류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는 현 저히 낙후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의 컴퓨터 보급률은 200명당 1대(전체 약 13만대), 인트라넷 이용인구는 3만명 수준에 불과해 남한에 비해 현저히 낙후한 실정이다. 여타 분야의 정보격차 현황을 <표 28>에 정리하였다. 정보격차가 인구와 소득에서의 차이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남북한 주요 부문별 정보격차 현황

구 분	남 한	북 한	비 교
인구	48,082천명('04)	22,709천명('04)	2.12배
국민총소득(GNI)('04)	6,810억달러('04)	208억달러('04)	32.8배
1인당 국민총소득	14,162달러('04)	914달러('04)	15.5배
인터넷 이용자 수	32,570천명('05)	소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12,190천명('05)	인트라넷 3만명	
국제 통신량	10억분('02)	300분	
유선전화 회선 수	22,920천명('05)	110만회선('04)	
이동전화 가입자 수	38,342천명('05)	20천명('00)	
IT산업 인력	1,217천명('04)	5천명('00)	
통신시설의 디지털화	96%('04)	5%('04)	-

자료: 통계청, KAIT,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2004)에서 일부 수정

이러한 차이는 바세나르협약과 미국 상무성의 EAR 등에 의해 컴퓨터를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북한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전국적인 경제난으로 자체적인 개발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UN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는 더욱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북한의 정보화 전략

북한의 정보산업 역사는 결코 짧지 않지만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왔다.¹⁾ 2000년 이후 이루어진 북한지도부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은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에서 정보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을 발전시키고자하는 노력의 반영이다.

북한이 정보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중심 발전전략을 채택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 인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부문의 사업은 북한의 현재 경제 여건 속에서 단기적으로 쉽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하 드웨어 부문의 경우 북한의 기술수준도 문제이지만,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부문이므로 단기간의 노력으로 쉽게 성과를 거두어들일 수 없는 분양이다. 반면 소프트웨어 부문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쉽게 외화획득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으로 피폐해진 북한 경제에 있어서 여전히 자산으로서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존재이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교육의기초과학 중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우수한 과학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

의 컴퓨터 학과와, 과학원, 평양프로그람쎈터, 조선컴퓨터쎈터 등 각종 IT기 관의 연구진 및 학생들을 종합할 때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은 상당수에 이 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보산업이 극도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북한 경제전 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해준다는 점과, 정보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에너지 절 약형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차원에 서 각 기업소와 공장에 자동화도 컴퓨터 관리체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넷째, 소프트웨어 개발과 수출 위주의 정보산업발전 전략의 경우 북한 지도 층의 예측가능한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즉, 북한의 소프트웨어 치중 전략은 북한 주민을 직접적인 수요자로 삼고 있지는 않기에 비교적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길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 정보기기의 사용을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은 정보산업의 육성과 정보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해 북한경제가 처한 대내적위기에서 탈피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정보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언론에 나타나는 교시뿐 아니라, 그의 행보에서도 잘드러난다.

2000년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 최대 PC업체인 롄샹그룹을 방문한 것을 필두로 중국의 주요 정보산업단지를 방문한 후 정보산업 육성 및 정보기술 인력양성을 강조한데, 이어 2004년 중국과 합작으로 평양에 펜티엄급 컴퓨터 공장을 세운 바 있다. 2006년 1월의 중국 방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의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1월 14일 선전 남산구 과기원본부와 첨단 IT업체들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은 북한의 정보산업 발전 의지를 잘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화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정책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군 및 국가행정 그리고 경제부문의 적극적 정보화

와 일반주민 및 사회부문의 배제이며, 둘째는 정보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정비 그리고 셋째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회협력 기반의 강화이다.

최근 북한의 정보화 노력들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브라운 대학이 조사한 "Global E-Government 2006"에 따르면 한국은 198개국 중 1위이고 북한은 17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비록 인트라넷 기반이지만, 북한의 정보화가 공공부문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특정 공공부문과 정보기술 엘리트 양성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정보화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북한 내부의 정보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반주민이 정보화로 인한 변화의 기회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절대적 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북한은 소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체계를 확보하고 정보기술 교육의 목표를 조기교육 및 영재교육에 맞추고 있다. 2000년부터 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대 등에 컴퓨터 수재반을 운영하고 김일성종합대에 정보기술 전용 교육단지((일명 '3호 교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³⁾ 2001년 금성학원 내 컴퓨터 수재반을 신설하고 평양 및 각도 제1중학교에 수학수재반을 신설한 것 등은 북한이 컴퓨터 교육 목표가 영재교육에 두어져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중학교 4학년 이상에게는 컴퓨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학교는 물론 인민학교에까지 컴퓨터 관련 과목의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를 확대하거나 새로이 개설하는 등전 사회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의 재편을 단행하고 있다. 내각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프로그램교육센터를 두어컴퓨터 교육에 대한 연구사업을 담당⁴⁾ 하게한데 이어 2005년 2월에는 교육성에 정보기술국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정보기술 교육체계의 마련을 위한 행정차원의 대응이다.

북한의 정보화 교육은 경제난과 대외적 제재에 따른 관련 시설의 부족과

교육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약 속에서도 정보기술 인력 교육 및 정보교류를 위해 외국과의 정보기술 관련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서방국가와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을 위원장이 정보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북한은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유럽국가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정보기술 영재 중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인도로 유학을 보내는 등 아시아국가로의 연수도 확대하고 있어 정보화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대회협력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5)

6. 북한의 정보화 교육 현황

오랜 경제난과 폐쇄적 체제운영,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아직 국제적 인터넷망에 연결되지 않은 국가인 북한에도 정보화 교육의 열풍은 전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정보기술 교육은 주요 관심사이다. 이는 정보산업과 정보기술교육에 대한 대대적 지원의결과 정보 기술 관련 인재들은 수재학교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졸업이후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정보화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정보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다. 북한은 21세기가 첨단과학과 정보기술로 사회경제적 진보를 이룩해 나가는 '새로운 정보 산업의 시대'라면서 경제와 교육, 사회문화 생활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보산업을 오랜 경제난에서 벗어날 돌파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족한 자원, 잦은 자연재해, 대외적 고립 등으로 인해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지식집약적인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처리 그리고 프로그램산업의 발전에는 인재양성과 교육수준의 제고가 필수적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⁶⁾

일반적으로 정보화 교육은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 정규교육과정의 밖에 존재하는 일반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화 교육이 PC보급 및 네트워크 연결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내용면에서는 소양교육과 활용교육으로 나누어 컴퓨터기초, S/W, 컴퓨터 통신 등에 대한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진다(한국전산원, 2005 국가정보화백서). 또한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시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 정보화 교육의 특징은 엘리트 양성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소프트웨어 중심발전전략을 채택하면서 정보기술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사회주의 체신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통신과 방송을 당의 지도를 위한 수단이자 선전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용해온 북한으로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의 언론들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일반주민들에게도 강력히 역설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2000년 1월 21일자에 소개된 인터넷 관련 기사를 보면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세계의 컴퓨터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 망으로, 많은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자료 교환・일대일 대화・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자면 가기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뎀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7)

민주조선의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라고 할 때 이 기사가의미하는 것은 2000년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등 정보화 관련 홍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⁸⁾ 는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 주로 정보화는 경제적 부문의 필요성에 부응하기위한 것으로 그 목표도 북한 경제의 효율성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일반주민의 인터넷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드러나듯 주요언론의 일반주민에 대한 정보화 보도는 단순한 홍보차원에머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터넷이 북한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외무역과 연구개발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한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서버도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등 제3국에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보기술 전문인력을 키워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일반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7. 북한 정보화교육의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최근 중등교육 목표(교육과정 편성의 구체 지침)를 보면 ①정 치사상교육의 강화 ②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강조 ③예능교육과 체육 교육의 중시 ④기초기술교육의 충실한 이행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중 기초 과학교육과 기초기술교육에 있어서 정보기술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교육이 영잭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8년 2월 김정일 위원장이 컴퓨터교육 강화를 지시하고 또한 최고인민위 원회 10기 4차 회의 개막에서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면서 정보기술 교육의 강화는 북한교육계의 중심 화제로 떠올랐다. 이후 교육성은 각급 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를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의 확대를 위한 방안 이 준비되었다. 나아가 2000년 이후에는 교육성 산하에 프로그람교육지도국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대학에서의 컴퓨터교육시스템을 확보하고, 더불어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육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체계적 정보기술 교육체계 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정보교육은 크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전공교육'과 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정보교육'으로 구분된다.⁹⁾ 일반정보교육은 또 고등교육단계와 보통교육단계로 구분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보교육은 주로 컴퓨터의 이용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컴퓨터 소양중심 교육", 대학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정보화 교육, 이외에 일반정보교육의 경우 아직 컴퓨터에 대한 소양을 가르치는 이론적 교육단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정보기술교육은 내용과 목적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정보기 초교육, 정보기술 활용교육, 경제정보교육, 전공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재교육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기초교육은 '정보가 노는 역할과 컴퓨터 기술의 원리를 습득시키며 기성 정보기술수단과 응용쏘프트웨어를 도구로 리용하는 일반사용자준위의 교육형태'를 이르며 전문인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일반인들도 능숙하게 정보기기를 다룰 줄 아는 기초자질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대학의 거의 모든 정공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보소양교육이 이에 해당되며, 현재 중학교의 경우 정보기초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재반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론교육, 기본프로그램 교육에 그치고 있다.

둘째, 정보기술 활용교육은 '일반사용자보다 더 깊은 정보기술지식을 가지고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형태'로서 주로 대학의비정보 기술 관련 학과 학생에 해당된다. 이들 학생들은 정보기술을 유용하게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2~4개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정보교육은 '개별적인 대상분야들에서 컴퓨터를 주되는 기술수단 으로 리용하면서 해당분야의 응용프로그람과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 종사하는 정보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교육형태'를 이른다. 관련 분야에서 컴퓨터를 기술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응용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는 데 종사할 경제정보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보기술교육은 대상 분야별로 8~12과목의 정보기술 교과목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전공교육은 '정보기술을 전문하는 정보기술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형태'를 이르며 정보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기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정보과학의 핵심 과학 인력양성, 정보산업의 핵심기술역량양성을 목표로 하며, 후자는 소프트웨어개발자교육, 장치기술자교육, 운영기술자양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수재 교육은 북한의 정보기술 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다. 이 교육은 세계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소수의 인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형태의 교육대상과 목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보기술교육체계는 성립되어 있다.

위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정보화 교육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 등 일부 엘리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교육단계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현재 기초정보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보통교육단계에서부터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당세포비서가 1주일에 1회 '생활총화' 시간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한 '정보산업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산업 강연회는 아직 북한 일반주민 수준의 컴퓨터에 대한 홍보용 형화를 방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¹⁰⁾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활용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산업발전이나 군사적으로 활용가능한 전문 IT엘리트 양성이 정보화 교육의 주된 목적이기에 주로 주요 IT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제1중학교를 중심으로 실제적 정보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체제유지에 전념한 결과 북한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반주민의 정보화 교육은 배제한 소수엘리트 위주의 정보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8. 북한의 정보기술교육 현황

1) 조기영재 교육

북한의 컴퓨터관련 교육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들이 대부분 우리와 같이 정보화소양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정보기술 전문인력의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보기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주로 컴퓨터영재들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수단의 경향이 강하며, 주된 교육의 중심을 조기 엘리트 교육에 두고 있다.¹¹⁾

북한은 1980년대 이래 영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1984년 9월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필두로 현재 전국 시, 군 지역에까지 설치되어 현재약 200여 개의 수재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수재학교들은 이전까지는 주로 어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영재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수재학교들을 정보기술 교육을 위한 체계로 바꾸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 영재교육을 위해서 2001년부터 일종의 정보기술 영재교육 시범학교인 '컴퓨터 수재양성기지'가 신설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부설 금성제1고등중학교와 평양학생소년궁전 부설 금성제2고등중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컴퓨터 수재반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²⁾

이들 수재반의 학생들은 각도 제1고등중학교 재학 중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 혹은 전국 수학경연, 알아맞히기 경연의 입상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컴퓨터 교육의 원활화를 위해 컴퓨터수재반을 전담하는 부교장 직제를 따로 두고 있으며, 교사진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조선콤퓨터쎈터 교수 및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또한 이들 학교의 컴퓨터들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 주요 학술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각도의 엘리트교육기관인 "제1고등중학교"에서도 일종의 컴퓨터 수재교육반인 프로그램반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도의 제1고등중학교의 경우 아직 컴퓨터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콤퓨터 교육실"을 꾸미고 수학 및 컴퓨터에 재능있는 학생들로 "콤퓨터 소조"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 담당 교사의 부족 등의 한계를 감안할 때, 현재 북한에서 컴퓨터 영재 교육은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학생 대상교육

북한에서 컴퓨터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0년경이며, 컴퓨터 수업은 크게 수학과목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학생 대상의 컴퓨터 교육은 컴퓨팅의 이론과 실제 등을 망라하여 전부 가르치지는 않으며 컴퓨터 관련기호와 부호를 가르쳐주고,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심내용을 이룬다.

컴퓨터 교육의 내용은 고등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 진법 체계, 논리연산 기초, 컴퓨터 기호와 표기, 키보드와 마우스 활용버, 영 문 타자 숙달 등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램 기초를 배우며, 고학년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컴퓨터 지식, 컴퓨터 언어, 컴퓨터 기본 구성체계를 배운다. 일반 학교의 경우 컴퓨터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교육을 실시해 야 하기에 종이에 모조 키보드를 만들어 손으로 짚는 것을 먼저 배우고, 이후 숙달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잇도록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중등교육단계의 교육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인 MS-DOS, WINDOWS95, WINDOWS98 등에 대한 일반지식과 원리를 기능별로 체계화하고 MS-DOS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며, 사무처리 데이터 베이스의 일반원리, 홈페이지, 브라우저와 같은 컴퓨터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⁴⁾

북한의 중등학교 컴퓨터 교육의 특징은 이처럼 컴퓨터의 기본원리와 더불어 프로그램밍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북한의 경우 대부분 중등학교에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하고 있다. 15)

컴퓨터 과목은 고등중학교 4학년부터 1주에 2시간씩 강의한다. 1990년대까지 인민학교에는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없고 중학교에 1990년 대부터 한 대씩 보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6학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루 1학년부터 먼저 시키라는 조치가 나오면서 1학년부터 컴퓨터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과정의 특징은 수학, 과학 교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중 수학교과는 1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학교과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전반적인 컴퓨터 교육시간은 매우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조 차도 컴퓨터에 접촉이 용이하지 않아 보통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즉 영재교육기관이 아닌 보통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초보적 컴퓨터 사용과 이해 교육에 국 한 되어 있다.

3) 대학에서의 정보기술 교육

북한의 대학에서 정보기술 분야 교육은 김책공대 전자공학부와 김일성대학수학학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의 대학에서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 시기 각 대학에서 전자고악 부문의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고, 대학 내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1985년에는 평양과 함홍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설립하였다. 이후 정보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컴퓨터교육도 단과대학 형태로 발전, 1985년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이 설립됐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교육성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 컴퓨터교육을

포함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이전까지 대학의 정보기술 관련 교육이 주로 하 드웨어 분야 인력양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전 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왔다. 정보 통신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 하 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교육기관에서도 정보기술 관련 학과와 연구센 터도 설치되는 등 최근 각급 대학들에서 정보기술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기술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주요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수재 교육을 통한 최고의 정 보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기술대학과 일반대학 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정보기술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김 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한덕수평 양경공업대학, 평양·함흥 컴퓨터기술대학, 자동화대학 등이 주요 인력의 공 급창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 학부가 컴퓨터기술과학대학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평양·함흥전자계산기단과대학이 평양·함흥컴퓨터기술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컴퓨터공학부가 전문 단과대학인 정보과학기술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리과대학에 컴퓨터 과학부가 신설되었으며, 그리고 과학원 직속으로 정보기술학교를 신설하였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은 정보과학과, 지능정보처리학과, 컴퓨터조종학과의 3개 학과와 컴퓨터 연구소, 박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요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들은 대부분 금성제1고등중학교의 수재반 출신들로서 이들이 주요 대학의 수재반으로 진학하여 우수한 정보기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는다.¹⁶⁾

이들 대학에서는 주로 정보기술 관련 학문발전, 고등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컴퓨터산업 인력은 이들 대학의 컴퓨터공학부와 각종 관련 단과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이러한 몇 개 대학의 정비와 재편을 넘어서 서 대학 정보기술 관련 교육체제 전반을 재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들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양상은 평양의 일부 유명대학들 이외에 지방의 대학들에까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공학강좌가 개설되어 컴퓨터 교육 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계공업대학을 비록 2003년 화천체신대학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대학들도 정보기술 교육중심의 학부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일반 지방대학들의 경우, 컴퓨터학과의 개설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보급이 충분하지 못하기에 컴퓨터 이론 교육과 실습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⁷⁾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주요 연구단위를 잇는 컴퓨터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자강도 강계공업대학, 강원도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등지방의 주요 대학들까지 내부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고 전국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¹⁸⁾

2000년대 초반 대학들의 대대적 정보기술 교육 강화 결과 최근 김책공업대학종합대학 내에 설치된 정보기술 전문 단과대학인 정보과학기술대학이 2006년 9월 18일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이루어진 대대적 정보기술 교육 강화 정책이 구체적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4) 일반인 대상의 정보화 교육

정보기술 교육열풍과 더불어 북한은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교육은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 지식 획득과 경제 각 부문의 정보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두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대상의 정보기술 소양 증대를 위한 노력은 노동당 기관지에 매주 일요일 컴퓨터 상식 난을 마련하여 시리즈 게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이 일반국민 수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변화의 징후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직종의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화 재교육은 '정보기술보급사업'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에 의한 강연회, 강습, 의견교환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다양한 부문과 직종의 일반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19)

9. 정보화 교육 지원체계

1) 정보기술 교육인력의 양성

북한이 정보기술 교육을 확대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정보기술교육을 담당할 교육인력의 재교육 및 확보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교사 대상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정보기술 교육담당 교사와 교사일반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주로 전자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정보화 교육환경이 아직 학생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인력의 교육을 위해 북한은 최근 정치·사상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재교육을 정보화 교육 또는 정보기술 활용 교육 부문 쪽으로 강화하고 있다. 20)

컴퓨터 교육담당 교사에 대한 정보화 연수의 경우 인민대학습당 등 관련기관들이 최근 광범위하게 교사들에 대한 컴퓨터 강습 등, 정보기술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²¹⁾

2) 컴퓨터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정보기술 교육의 대대적 실시와 더불어 컴퓨터교육용 교재 및 서적의 개발과 보급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 관련 서적이 인민대학습당대출 순위 2위라는 신문의 보도²²⁾에서 나타나듯이 컴퓨터 열풍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적이 부족하여 교육 및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교육성은 정보기술 교육을 위한 교재 출판과 보급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성에 따르면 2001년 약 1000종의 새 교과서를 출간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부문 교과서들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맞게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과학발전 추세를 따르는 방

향에서 집필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수학교과서들이 별도로 집필·발행되고 있으며, 교과서 출판에서 수재반전용 교과서와 정보교육 교과서를 우선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²³⁾

북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01년 3월, "수십종의 컴퓨터 교재"가 출판되어 "콤퓨터 수재반 교원,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고 한다. 이들 교재의 개발은 교육성 내의 "프로그람 지도국, 프로그람교육쎈터, 출판국, 교육기자재공급관리국,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여러 교육, 과학연구기관의 유능한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로 이루어진 "교재집필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집필팀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교재개발은 2개월만에 끝났다"는 것으로 보아 정보기술 교육의 강조에 비해 절대적으로교재의 부족에 시달려온 것을 잘 알 수 있다.²⁴⁾

3) 정보기술 경연대회

정보기술 교육을 장려하고 정보기술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북한은 다양한 정보기술 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이들 인력들의 개발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는 1990년 이래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북한의 가장 대표적 소프트웨어 경연대회이며, 그 외에 "전국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전국고등중학교 학생 프로그램 경연 및 타자경연대회" 그리고 교육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는 "전국 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이었다. 특히 중학생 대상의 경연대회의 경우 정보기술 수재를 조기 발굴하기위한 것으로 전국의 1중학교(영재학교) 및 일반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하고 있다.²⁵⁾

10.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1) 통일비용 감소와 남북협력 촉진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사회적 통합과 통일비용 감소 및 통일 가속화에 더 없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정보격차는 향후 막대한 통일비용 및 양극화 문제를 가져올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 내에서 1,000만명의 국민정보화 교육시 약 1,466억원(1,000만명 정보화교육 성과 및 향후과제, KADO, 2002)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90년부터 1997년의 8년간 통일 독일의 DT(Deutsche Telekom) 중심으로 'Telekom 2000'을 추진하면서 600억 마르크(환율 500원 기준시 30조)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따라서 조기에 추진되는 북한 주민 정보화와 이에 대한 경험 누적으로 통일 시의 정보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 근성 강화와 활용 촉진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남북간의 동질성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적극적인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대형 사업이다.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하여, 이미 2차에 걸쳐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2006-2010)"에 통일대비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련 부처에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2)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현황

① 남북 IT 협력: 정보격차 해소 분야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및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용어사전을 2005년 10월에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총 2,491단어에 600가지의 용어풀이를 수록하여, 북한 이해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에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북한 이탈주민 전용 정보화 교육과정 및 교재를 2005년 10월에 발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과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교육 경험은 향후 본격적인 북한 주민 정보화 교육에서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하나원에서 시작된다. 남한 내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안성 본원 및 분당 분원)에 합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기초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워드 기초, 인터넷 기초

- 교육기간 : 매 기수별 3개월(30시간 내외)

- 교육대상 :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강사파견, 교재지원, 실습용 중고PC 지원

이들에 대한 교육은 수강 인원들의 소양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성인반 (본원, 분원)과 노인반, 청소년반 등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여기서 형성된 교사와 수강생들의 친분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원만한 남한 내 적응에 큰 활력소가 된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에는 하나원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출소 후에 민간기관을 통해 하는 실용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 8개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 중급수준의 실용교육, 자격증 교육

- 교육기간 : 120시간(2개월 과정)

- 지원내용: 교재, 교통비, 교육비 지원

<표 29> 교육실적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계	비고
기초교육	58	1,103	1,919	1,616	4,696	하나원
실용교육	1	63	138	536	737	민간기관
계	58	1,166	2,057	2,152	5,433	

③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동안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들이 남한의 정보화 사회에 통합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 후 최초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기간에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남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사회적 통합능력을 배양한 것이다.

2005년도 새터민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화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비수혜자 및 일반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특성과 국내사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 육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것들은 대부분 중국 등의 제 3국을 매개로한 간접교육이었다.

북한에 대한 정보통신장비 반출이 거의 불가능해 현지에서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수 없었고, 북한측 설비를 이용한 교육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3국에서의 교육도 북한측 사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고, 교육대상도 일부 전문가들에 국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 때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입국자 수의 감소로 이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통일부의 정착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관련 교육열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훈련을 수료해야 정착금 중의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여타 교육에 비해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정보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 핵 등의 제반 정세를 주시하면 서, 북한 전문가 및 북한거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접근 기회 부여와 이를 통한 남북한 IT협력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세부 항목들과 연동되면서, 이 계획의 주요 항목인 H/W와 S/W, 컨텐츠 활용, 추진체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확대와 협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추 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④ 북한 정보화 교육 지원방안

북한이 정보화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유망한 남북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있어 특징은 엘리트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전국적 차원에서 정보기술 교육체계를 정비하였지만 이 역시 컴퓨터 수재양성이라는 엘리트 양성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 전에 그 지원목적과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왜 북한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와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남북교류 협력의 의의로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정보화의 영역에서 제한해서 생각해볼 때 그 목적은 남북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남북한 정보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만큼 정보화 교육 지원은 현재 북한의 정보기술 수재양성에 대한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일반주민의 정보리터러시를 향상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정보화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첫째, 북한의 정보엘리트 양성교육을 지원해서 북한이 정보산업을 자력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갖도록 하고둘째, 북한 일반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정보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Digital Inclusion)하도록 도와주는 양방향의정책목표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정보화 교육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협력형태는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 교육지원, 민간기업의 정보기술인력양성, 민간단체의 정보화 교육 지원 그리고 정부에 의한 정보화 교육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갖도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지원은 단순히 북한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이 정보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즉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화교육은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적 사례는 북한의 정보기술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 원이다. 가령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IT인력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수준에서 진행되는 교육지원 관련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남한 대학 교수에 의한 북한대학의 정보기술 전공자 대상의 강의나, 단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정보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들 사업들은 보다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일반주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은 그 의미에 비해 현실적으로 구체적 지원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일반주민의 정보화가 체제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실질적 지원방안은 부족한 형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주민의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현 단계 북한 일반주민에 대한 직접적 정보화 교육 지원이 어렵다면 보통학교의 컴퓨터교육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지원과 보통교육 수준의 정보기술교육 교재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등이 가능한 방안들이다.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정보 활용에 따른 남북한 주민 간 정보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 통합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 즉 남한의 주민들이 정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기회를 잘활용하는데 반에 북한주민들은 그러지 못함에 따라 이는 남북한 통합과정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 또한 정보사회에 포함 (Digital Inclusion)될 수 있도록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²⁶⁾

일반적으로 정보기회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정보이용능력 제고 △정보활용 생산성 제고라는 3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단계 정보접근이 국제적 제약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이 있는 상태이기에바로 다음단계인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 가장 우선적 목표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만으로는 정보화의 의미있는 진전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북한측의 경우 첫째, 북한 지도부의 정보화에 인식이 여전히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정보화의 수용도 매우 제한적이며, 정보시대 사회발전의기본 토대가 될 일반주민의 정보화는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정보화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행정 및 경제부문의 정보화 노력이 일정부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정보화 기반시설은지역적으로는 평양에, 그리고 부문별로는 주요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주요행정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일반주민 대상의 보편적 정보화 교육을 매우어럽게 하는 물리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남한 측의 경우 첫째, 북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체계적, 장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장기적 정책이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목적과 대상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따라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보다 북한 측의 지원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과성이고 성과이주의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정보화 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그 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이다. 현재 북한이 정보화 교육에 매우열성적이라는 것 이외에 북한의 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일반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비롯한 정보리터러시의 수준, 구체적인 컴퓨터교육 운영 현황(그 대상, 목적), 그리고 컴퓨터교육 시설 및 장비현황(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 자유 실습실 마련 여부), 그리고 컴퓨터교육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주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보화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진 북한 정보화 교육 지원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협력 그 이상이므로 단순히 비즈니스논리에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많다. 즉 앞으로 남북한 통합의 장기적 진행과정에서 남북한의 이질화와 남북 주민들의 의식의 격차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물결에 북한이 소외되면 정보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남한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는 통합과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향후 남북한 통합의 지향성과 정책지향성이 분명히 포함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단순기술지원 내지교육지원에서 벗어난 정책협조가 필요로 된다. 이러한 정책협조를 통해 북한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북한실정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방식을 선별할 수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에게 필요로 되면서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보화 교육 지원이 북한의 정보화에 도 움을 주고 남북한의 신뢰와 협조를 낳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기 반 하여 정보화 교육 지원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제도적 영역 속에서의 교육을 인정하고, 그 시스템을 지원하는방향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엘리트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기업소나 공장 등 노동자들의 정보화 재교육을 위한 지원, 정규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 등 북한이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 북한의 정보화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존에 북한의 정보화 교육제도, 시스템을 활용하되, 그 콘텐츠와 장비, 교육의 기본 프로그램들을 협조하며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북한측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연령별, 지역별, 집단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²⁷⁾ 이 과정 필요로 되는 콘텐츠와 장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있는 일반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전제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체제의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의 교육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들이 필요하다. 먼저, 일반 기초소양교육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측이위협을 느끼지 않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교육이라도 북한주민의 동기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정보기술 교육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 지역에 정보접근시설을 마련하거나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같은 기 존의 공공시설 특히 북한 전역에 있는 도서관을 정보화 센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기관은 일반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이자 또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정보화 교육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지원 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 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북한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은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여 향후 통합과정의 비용을 축소시켜 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에게는 북한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줄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와줌과 동시에 남한에는 남북한의 상호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협조의 모델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11. 정보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국내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과의 유기적 연동

기존의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과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과 정보활용 등의 종합계획 세부항목과 추진체계를 기본계획에 적용한다.

2) 부처간 공조 및 정부/민간 연합의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

정보통신부, 통일부, 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처간 공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정부와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의 효율적인 연계와 업무 분담이 가능한계획을 수립한다.

<표 30> 협력과제의 유형 및 단계별 추진전략

	H/W (정보접근)	S/W (활용여건)	컨텐츠 (활용교육)	추진체제 및 여건 정비
통합 심화 (중장기)	• 광대역통신망 • 차세대통신기기 • 전지역 IT 서비스	• 고급망 운영 S/W	• 방송·문화 컨텐츠 • 남한내 연수 수행	중장기 공동계획 수립,시행법제(통합법)
거점 구축 (단기)	• 초고속통신망 • 이동통신기기 • 공용인터넷	 임베디드 S/W 센터구축(북한) 통합 S/W 공동 개발/지원 통합 교과과정/ 교재개발 	 인터넷/모바일 컨텐츠 주민교육(학생, 일반) e-learning 도입 중장기 연수 지원 	 위원회 설립 (남북공동) 법제(교류협력법) 조사연구 (공동연구) 예산확충
자원 교류 및 기반 구축 (당면)	• 기반네트워크 • PC • 특정지역 서비스 • IT 기자재 지원	 상용 S/W 센터구축 (중국, 개성) 개별 S/W 공동 개발/지원 과목별 교육프로 그램/교재개발 	 배포용 컨텐츠 (저작물) 엘리트 교육 (교사, 전문가) 원격교육 새터민 교육(하나원) 기초/실용, 출원후 해외연수지원 (장학,학회) 	 위원회(단독) 법제(각 부문법) 조사연구 (계획수립) 예산계획 수립

각 추진과제들은 적합한 협력 발전단계별로 분산시켜, 전체 협력사업과 개 별과제 모두를 단계별로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협력 내용도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구분과 유사하게 정보접근과 활용여건 개선, 교 육, 여건정비의 4부류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첨단설비 반출이 어려운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내용 중에서 추진체제 정비와 교육을 선행시키고, 단계적으로 S/W와 H/W 분야로 확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2.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과제

1) 남북정보격차해소위원회 구성 및 중장기협력 추진

먼저, 남북의 정부, 학계, 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들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남한 단독으로 설립하고, 북한의 대응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남북 공동위원회로 확대한다.

참여 위원은 남북 각 5인 내외로 구성하고,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남한의 정보문화진흥원과 북한의 대응기관에 사무국 또는 정보격차해소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연락과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협력위원회 차원의 남북공동 학술세미나와 중장기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해외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고, 이를관련예산 확보와도 연계한다.

아울러 첨단 IT설비 반출 가능성과 기반기설 구축상황을 고려하면서 북한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에 전문적인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한다. 이때, 초기의제3국 설립에서 점진적으로 북한 현지 교육센터 설립으로 전환하고, 우수요원들의 경우 여건이 허락되면 환경이 잘 구축된 남한 센터에서의 교육도 추진한다.

① 전문가

전문가는 대학의 IT 관련학과 졸업생으로서, 2005년까지 30,000명을 배출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먼저, 1972년경부터 컴퓨터학과를 설립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평양컴퓨터과학기술대학, 함흥컴퓨터과학기술대 학의 5개 대학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800명씩 30회, 총 24,000명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1993년경부터 컴퓨터 관련 인접학과(경제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한 기계대학, 수리대학 등 10여개 대학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600명씩 10회, 총 6,000명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앞의 것과 합하면 30,000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남한이 정보격차 해소계획에서 1,000만명(전 국민의 20% 수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북한의 전문가 총 30,000명 중 남한의 50%수준인 전체의 10%, 3,000명을 본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대상으로 하였다.

② 일반인

일반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중교육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을 고려하고, 이후에 중·고등학교와 대도시, 농어촌 지역 주민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 였다. 개성공단 등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

먼저, 북한의 286개 대학 재학생 31만 명에서 공장대학과 어장대학 등의 현장 교육기관을 제외한 100여개 일반대학 재학생 15만 명 중 1%인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북한 인구 2,200만명 중 0.0023%인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교재 및 S/W 개발 지원

북한의 정보화 지원과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남북 공동으로 북한 지역에 적용가능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남북한 간의 공동합의를 모색하고, 종이와 인쇄설비가극히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여 관련 교재도 공동개발, 인쇄할 수 있다.

교과과정/교재는 남북한 관계기관간의 협력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초기의 과

목별 교과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통합 교과과정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기기 활용여건 개선을 통해 남북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S/W 개발을 지원한다. 이 때, 북한의 개발 능력과 남북협력 진전도를 고려하여, 초기의 개별 S/W 공동개발에서 점진적으로 통합 S/W 공동개발로 전환한다.

북한의 관련 인프라 구축 진전을 고려하면서, 우수 교육이수자들에게 상용 S/W. 임베디드 S/W. 고급망 운영 S/W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3) IT 기자재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IT 기자재의 경우, 북한핵문제 해결동향과 국내 정보인프라 구축경험, 발전방향 및 북한의 현실을 거려하여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자재 수요를 기반 네트워크 구축과 PC 구입, 초고속통신망 및 이동통신 망 구축, 광대역통신망 및 차세대 통신의 3단계로 구분하고, 국내외 동향과 정보격차 해소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단, 바세나르협약과 EAR 등으로 관련 설비의 대북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핵문제 등으로 제한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중국 등의제3국에 설립된 교육센터에 지원한다. 장비의 소유권과 용도가 명확한 개성공단 등에 교육센터를 설립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4) 요약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최근 들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우리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비용 감소, 안정적 공동반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주변 정세가어둡고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큰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비전으로 "통일 U-Korea 건설"을 선정하고 부제로 "IT로 남과 북이 통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선정하였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이 통일을 실현하고 이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며, 이중용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이 대치보다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한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주요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출소 후 교육 확대와 북한의 차기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12년 직전까지 북한 IT 관련자들의 정보화 수준을 남한의 50%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에는 추진체제정비 및 여건 정비, IT 교육 및 교육센터 설립, 국제회의 참가 및 IT 연수 지원, 교과과정/교재 개발 및 S/W 개발 지원, IT 기자재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 2007-2012년의 5년간 13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계되는 관련 예산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 특별회계와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기금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남북관계 변화와 연동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주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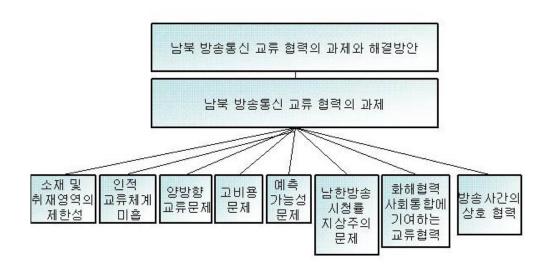
북한 정보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정보통신부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부처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남북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통일부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V.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과제와 해결 방안

1. 방송교류협력의 과제

1) 소재 및 취재영역의 제한성

방송교류 초기의 주요 협력대상은 자연다큐멘터리와 관광, 역사물, 예술공 연과 체육분야 등이었다. 이러한 교류대상은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지 5년 여가 지난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보다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북한 현지제작 프로그램의 품질유지와 남한 시청자 확보 차원에서 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2) 인적교류체계 미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뉴스를 취재하는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끼리의 만남 - 인적교류는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과 북의 일꾼들이 "우리가 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었는가?" 등 기획에서 평가까지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쌍방향 교류문제

남북(북남)방송교류는 내용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예

술공연의 경우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진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양방향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체육분야와 프로그램 제작, 뉴스취재, 그리고 뉴스 생방송 등은 어느 일방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서 프로그램 제작 등의 차원에서 제작진을 남한에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되는 민족통일축전을 통해 하나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나 지방에서열리는 $3\cdot 1$ 절과 $6\cdot 15$, $8\cdot 15$ 등 민족통일축전 때 북한이 행사 중심으로 생중계를 하거나 녹화중계를 하는 방법이다. 미니중계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2002년 9월 부산아시안 게임과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3년 10월 제주통일 축전에 선수단과 함께 방송단을 파견한 경험이 있다. 당시 중계방송은 이뤄지지 않았으나(크린 피쳐를 송수신 한 사례는 있음), 앞으로 이들 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방송단이 어떤 형식으로든 중계방송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간에 인력과 장비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독도와 한라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다큐멘 터리 공동제작이나 이 지역에서의 남북(북남) 동시생방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남북(북남)공동으로 자연다큐멘터리를 제작, 공동 방송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평양과 개성이 고구려와 고려의 중심 무대인데 비해 서울이 조선 시대의 수도였던 점을 고려해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등 남한의 역사현장을 세트로 활용하여 역사물을 공동 제작하는 것도 유력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최정길, 2005)

4) 고비용 문제

외국의 경우에서도 프로그램 교환 및 제작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 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외국에서도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등을 취재할 때 대 가를 지불하는 것은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취재대상은 해당 국가의 자 존심이자 유산이며 재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 한의 제작진이 일정액의 현지제작비를 지불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사전준비 및 현지안내, 전문가 동행 취재(학자 해설, 인터 뷰), 보충촬영 지원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현지 제작비 문제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 언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현재 남북(북남)방송교류에서 비용문제는 방송교류를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제작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결국 비용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최정길, 2005)

5) 예측가능성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북남)관계의 경색국면 여하에 따라 진전과 지체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아직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방송교류는 이제 정기적인 북한 현지취재 및 제작, 서울과 평양에서의 정례적인 행사개최 및 중계, 계기성 프로그램의 상시 제작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방향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시청률 지상주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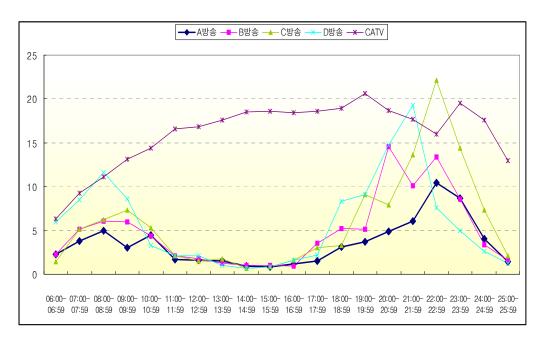
가장 최근의 남북(북남)방송교류는 지난 8월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콘서트인 '조용필 평양 2005'였다. 서울에서 음향·조명 장비를 가져가 설치한 화려한 무대에서 조용필은 "친구여" 등의 열창으로 처음에는 차분했던 7천여 평양시민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신문보도도 중요하지만 남한에서 중시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았느냐 하는 시청률이다.(최상률, 2005)

'조용필 평양 2005' 콘서트의 경우 부산지역에서는 14.2%의 시청률에 20%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AGB 닐슨 미디어 러시치). 이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시간에 100명 기준으로 14.2명이 시청을 했고 TV를 켜고 있던사람들 가운데는 20명이 평양공연을 보았다는 의미이다.

시청률이 중요한 이유는 방송사의 경영과 직접적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 등 특수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유치하는 형식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 따라서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일수록 광고 요금을 비싸게 받고 광고 판매가손쉬운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남한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청률에 따라 바로 광고요금이 100% 연동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점차 시청률에 따라 광고판매가 달라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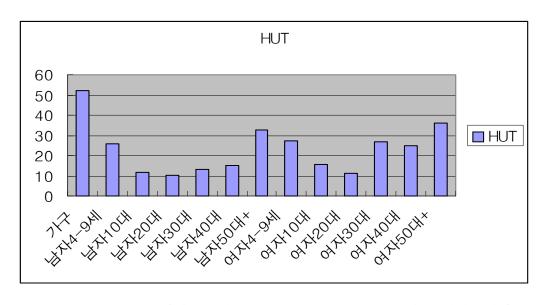
<그림 11> 부산지역 시간대별 시청률 ,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지역방송은 KBS 등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방송'이면서 동시에 '기업'이라는 3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의미는 적정한 수익을 올려야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김석환, 2005)

이러한 수익은 시청률과 무관하지 않고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구사되고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미하바드대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저널리즘의 9개 원칙 가운데하나로 "저널리즘은 중요한 것을 흥미롭고 적절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로 꼽고 있다. 그만큼 보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산방송의 경우 크게 2가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첫 째는 매일 시청률 조사기관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실태를 파 악하고 있다.

<그림 11>은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부산지역에서 KBS 1, KBS 2, 부산 MBC, PSB 부산방송 등 4개 방송사와 케이블TV 채널 전체의 시청률을 방송시간대별로 분석한 것이다. 낮 시간대 CATV의 시청률이 높은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이 낮 시간대 방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 금요일 저녁 7~8시 연령별 시청자 구성,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그러나 이 같은 시간대별 시청률 조사나 프로그램별 시청률 조사로는 충분 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프로그램별로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간대별로 시청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지 만든 프로그램이 목표한 시청자(target audience)와 일치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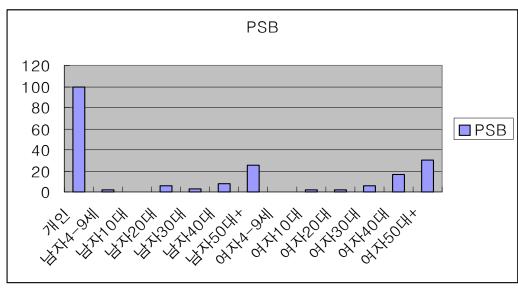
PSB 부산방송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편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쇼 TV 유랑극단』이 있다. 이는 부산과 경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전 악극단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중·장년층 시청자를 겨냥하고 있다.

<그림 12>는 『쇼 TV 유랑극단』을 이 시간대에 편성하기 위해 검토한 이시간대의 시청자 연령별 구성이다. 남녀 모두 40대 이후 연령층이 이 시간대에 TV를 보고 있는 주시청자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4~9세사이의 시청자 층이 있긴 하지만 이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같이 따라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3>은 금요일 저녁 7시에서 8시에 편성된 『쇼 TV 유랑극단』의 연령대별 시청자 구성비를 나타난 것이다.

<그림 10>에 비해 낮긴 하지만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장년층 계층의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타켓 설정과 목표 달 성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면접 조사를 실시해 시청률 조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형식이다.(김석환, 2005)



<그림 13> 쇼 TV 유랑극단의 연령별 시청자 구성.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전문여론조사기관이나 대학의 전공교수들에게 의뢰하는 설문조사의 경우는 대략 1천명 전후, 심층 면접조사의 경우는 100명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이 편성과정에 반영되어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를 결정하는 자료로 쓰이고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도 좀 더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작 포맷의 변경이나 내용 강화 등이 이뤄진다.

중요한 것은 국가 기관이나 방송사 사장의 지시보다는 시청자들의 시청자의 필요(need)와 욕구(want)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데 더 큰 현실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외면을 받고 이로 인해 시청률이 저하되고 수익이 감소해 경영상 위험이 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도록누구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 방송법은 제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 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제작사들의 취재 영상물 구입, 북한의 영상물 구입 및 방영, 남북 공 동제작 등을 통해 그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적잖은 방송교류가 있었고 시청 자 입장에서는 새로움이나 호기심도 상당히 희석이 된 상태이다.

그간의 남북방송교류는 중앙 방송사들 주도로 이루어져 왔지만 PSB 부산 방송의 경우도 지역방송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방영한 실적이 몇 차례 있다. 97년 7월 중국 측 루트가 아니라 혜산진을 통해 천지로 가는 백두산 등정 프로그램 『북녁 땅으로 가는 백두산』 2부작을 최초로 방송한 바 있고, 2002년 9월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북한 선수들의 훈련모습과 각오를 다룬 『평양에서 부산까지』와 귀향 이후를 다룬 『환희와 감동, 그 이후』를 영상취재물 구입을 통해 방송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도 그간의 남북방송교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감성적이고 이벤트적인 프로그램들이었다. 북한의 취재허용이 있어야 취재가 가능한 현실속에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문화적인 이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한 시기로 가 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1일 남북 해운합의서가 2002년 10월 남북 장관급 회담이래 약 3년 만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남북의 바닷길이 열렸다. 북한의 모래와 개마고원 지역의 마그네사이트 등이 대량으로 해상 운송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처럼 남북의 바닷길이 열림으로써 부산항은 명실상부하게 유라시아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고 부산 지역 기업과 대학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부산지역 신발 제조업체인 삼덕통상은 부산 동서 대와 경남정보대학 등 2개 대학과 개성공장 내 130평의 부지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신발연구소를 설립키로 했고 부산 YMCA 그린 닥터스도 공단내 병원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방송의 공식적인 취재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민족공동체적 정서에만 의지하는 이벤트성 남북방송교류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남북방송교류와 프로그램 제작이라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상호간의 창구 단일화 및 실질적인 원칙 마련 등 남북방송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구 방송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경우 방송사의 참여 특히 지역방송사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상호 이해를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초석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 보도는 방송사의 몫이기도 하고 남한 지역과 북한지역간의 교류 및 공동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2003년 8월 26일 남한 방송위원회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공동합의문을 통해 기본적 방송교류의 원칙을 마련한 이후 여전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로 가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1) 상호 체제 인정, 2) 내부 불간섭, 3) 비방과 중상금지에서 아직 한발도 더 나아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합리적 취재 비용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방송은 공영 방송을 제외하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계속 내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시청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그것 이 시청률 상승을 통해 경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방송교류의 문제도 민족공동체라는 정서적 접근만이 아닌 합리적인 취재비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역방송의 경우 남한의 특수한 사정이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한의 경우 중앙 3사가전체 광고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십 개의 지역방송사들이 나머지를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방송교류가 중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면 지역방송의 경우 더욱 더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2. 남북한 방송교류의 원칙

첫째, 방송교류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큰 틀에서의 당국간 회담과 각종 협의회가 운영되는 현 시점에서 방송교류는 이러한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류가 아닌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교류는 남북(북남)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분단된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하나 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차별성을 드러내거나 우열을 비교하는 것, 어색한 장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질감과 혼란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한 주민이 바라보는 북한의 현실과 북한 주민이 인식하는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의 통일관련 프로그램도 화해협력시대의 방송교류 추세에 부응하여 북한을 바로 알리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 가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나 자연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송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소재의 중복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취재 및 제작, 공연, 남한에서의 공연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대부분 내용과 추진시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방송사마다 "1월 1일원단기획",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8·15 광복절기념행사", "추석특집", "연말특집", 이밖에 개성공단 준공이나 개성관광 출범, 백두산관광 출범 등의일정에 맞춰 추진하게 됨으로써 내용과 시기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한 방송사간 또는 남북(북남)간에 미묘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

남한 방송사의 소재 중복문제는 자칫 교류협력의 정신을 훼손하고 분위기

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부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음악공연의 경우 남한 KBS와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합동연주회를 개최하고 KBS가 금강산에서 열린음악회를 개 최한 경험, MBC가 평양에서 이미자 공연을, 그리고 SBS가 평양에서 조용필 공연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향악단과 열 린음악회 등과 같은 클래식 분야, 전통 음악을 테마로 한 국악공연 등을 하나 의 범주로 정하고 대중음악을 다른 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는 방송사별로 소재와 기획의도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원단기획, 3·1절, 6·15기념, 8·15광복절, 추석절, 송년기획 등 계기성 프로그램 제작과 뉴스 생방송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방송사가 독점한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양측의 협의과정, 비용문제 등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방송사마다 1~2회씩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방송교류 정신에 비취남한과 북한 모두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대규모 행사, 예컨대 장관(상)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의, 이산 가족 상봉, 개성공단 준공식, 체육행사, 백두산관광 등의 경우 풀(P00L) 취재 단을 구성하면 해결될 것이다.

3. 남북 방송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1) 프로그램측면의 교류 확대

① 프로그램 측면에서 취재대상은 이제 사람과 재화와 용역 속으로 심화돼야 하며 취재영역도 중앙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서로가 이해와 협력,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양시민의 생활, 평양사람들의 숨결이 고동치는 시장, 도약을 꿈꾸는 공장과 기업소, 기계화 농장 등 사람과 작업이 어우러지는 현장을 시범적으로 선정, 이를 프로그램화 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 게 될 것이다.

- ② 자연, 문화, 역사, 어린이, 단막극, 애니메이션 등 각종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공동 방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③ 한반도(조선반도)를 포함하여 중국대륙, 중앙아시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로 취재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 일대의 인문·사회지리에서 역사, 물류이동까지를 아우르는 한민족네트워크 차원의 공동 기획, 공동 제작, 공동 방송이 요청된다.

2)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공동제작

북한의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뉴스 영화, 드라마, 문화예술, 생활정보, 스포츠, 코미디, 버라이어티, 만화, 방송야회, 대담, 선전용 막간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TV프로그램을 남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분류유목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총 15개의 프로그램 장르중 뉴스, 다큐멘터리, 대담, 드라마, 만화, 문화예술, 버라이어티, 생활정보, 스포츠, 영화, 코미디 등 11개는 남한의 구방송위원회 분류방식에 맞출 수 있다. 그 밖에 방송야회46), (중간)노래, 시낭독, 캠페인이 있는데, 노래, 시낭독, 캠페인은 '선전용 막간 프로그램'으로 묶을 수 있다47).

1998년 3월의 조선중앙TV방송 1주일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편성빈도는 노래가 108회로 가장 높지만, 시간비중으로는 12.3%를 차지하였다. 뉴스가 43회 편성에 시간비중 17%, 다큐멘터리가 26회 편성에 시간 비중 19.7%, 생활정보가 14회 편성에 시간 비중 5%를 차지하였다(이우승, 북한방송프로그램 분석, 한국방송개발원, 1998). 다큐멘터리와 뉴스를 합쳐 3분의 1이상이나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언론이 오락적 기능보다 시사적 기능을 중시하고

⁴⁶⁾ 일종의 기념식 중계이며 중간에 노래 등의 오락적 요소가 삽입된다.

⁴⁷⁾ http://office.kbs.co.kr/tongil/701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TV드라마는 8시 뉴스를 마친 후 8시 30분~40분 정도에 시작되어 약 50분간 방송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에 1회분이 방영되지만, 2회분 연속 편성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북한의 드라마는 주로 일일 드라마의 형태로 방영되며 대체로 남한의 드라마보다 방영횟수가 짧다. 드라마는 전체 방송시간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⁴⁸).

뉴스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⁴⁹⁾에 따르면 대체로 평일 오후 5 시대, 8시대, 10시대 3번에 걸쳐 뉴스를 내보고 있다. 일일 평균 16건의 뉴스 아이템을 다루고 있으며 건당보도시간은 1분 46초 정도로 나타났다⁵⁰⁾.

<표 31>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편성표

2003년 6월 23일 월요일			2003년 6월 24일 화요일		
17시	10분	보도	17시10분	· 보도	
17시	20분	오늘호 중앙신문 개관		오늘 호 중앙신문 개관	
17시	32분	아동방송시간 아동영화 : 다람 이와 고슴도치 12부 위험한 적 수 아동화면 음악집(3)		아동방송시간 아동영화 : 다 분 람이와 고슴도치 제 13부 비 밀문건	
18시	18분	소개편집물: 탄부들이 자랑하는 세 남매	18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계서 조선인민국 제763 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	
18시	38분	참관기 주체사상탑(10)	18시 11년	분 참관기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7)	
18시	47분	시 신천의 침묵	18시 19년	분시 그에게는 손이 있다	
18시	52분	좌담회 : '우리민족끼리'의 리념 을 구현하도록 이끄시어			
19시	20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계서 조선인민군 제567 군 부대에서 건설한 발전소들과 군 부대직속중대들을 시찰하시었다		조선기록영화 : 빛나는삶의 품 19	
19시	32분	혁명전통교양의 만년재보를 마련한 위대한 령도 련속좌담회 :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기 념비들 주체사상탑(2)	19시32분	기행 : 인민의 기쁨 넘치는 장수산을 찾아서 제 2회	
20시		보도	20시	보도	

⁴⁸⁾ http://office.kbs.co.kr/tongil/701

⁴⁹⁾ 출처: 이기현(2003),남북한 텔레비전 뉴스보도 비교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84쪽

⁵⁰⁾ KBS는 약 79초

2	0시	32분	텔레비죤 련속극 : 붉은 흙 제3부	20시	33분	록화실황 : 제 14차 아시아 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중에 서 (조선 : 중국)
2	1시	37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63군 부대를 시찰하시였다	21시	31분	시사해설
2	1시	48분	조선기록영화 : 빛나는 삶의 흙 19 강성대국건설과 숨은 영웅들	21시	39분	텔레비죤 련속극 : 붉은 흙 제 3부
2	2시	27분	오늘의 보도중에서	22시	43분	오늘의 보도중에서

출처: 이기현(2003), 남북한 텔레비전 뉴스보도 비교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84쪽

북한에서의 방송은 선전 선동이 주목적이다. 주제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제작계획을 세워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 보고한다. 중앙방송위원회는 명목상으로 내각 산하로 되어있지만, 당직속기관이다. 당중앙 선전부에 보고된 내용을 당이 검토해서 결재가 나면, 프로그램에 들어갈수 있다. 특히 TV 방송은 초기부터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선중앙TV의 보도와 드라마는 김정일 위원장과 조선노동당의 당지침이나 정책을 긴밀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1).

3) 남북한 방송 제작협력 사례

남북방송교류는 초창기 취재에 이어 남측 영상물의 북한영상물 방송, 북측 영상물의 국내 방영, 그리고 상대방 제작에 대한 협력 또는 지원, 나아가 공동제작의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주로 북한의 영상물 구입 위주의 교류가 보도와 제작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북한 현지에서 취재, 제작방식이 늘어난 것이다(박종수, 2005).

이하는 남북한 제작협력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제작협력이라고 하더라도 부 분적인 제작협력이나 지원부터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공동제작 형태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가령 남한 단독 제작으로 촬영이 이루어

⁵¹⁾ http://office.kbs.co.kr/tongil/701

졌더라도 북측의 인력으로부터 상당히 지원을 받은 경우라든가 북측 카메라 맨이 보충 촬영을 해준다거나, 장비반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북측의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부분적인 제작협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남북한 제작협력의 실태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적인 제작협력이나 공동제작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남북방송제작 협력 사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방송교류는 본격적인 제작협력이나 공동제작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남한의 인력이 북한을 방문해 촬영하고 취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초창기 북한에서의 취재는 수많은 제한과 곤란이뒤따랐다. MBC의 경우 북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총 6번이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방문이 성사된 것은 단 한번 뿐이었다고 한다.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로 매번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나마 단 한번 이루어진 1997년의 방북에서도 취재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촬영된 필름도 북한 측이검열하고 나서 인수받을 수 있었으며 그나마 전량이 아닌 일부만이 전달받았다.

KBS의 경우, 남북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방북하고 돌아온 중앙일보 부설 통일문화연구소로부터 자료테이프를 건네받아 1998년 3월에 창사특집프로그램으로 '북녘산하 북녘유산'(2부작)을 방송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2차 방문결과의 자료 테이프를 편집하여 1998년 9월에 '북녘산하기행'(2부작)을 방송했다 (이우승, 2000). 이는 우리 손으로 직접 찍은 최초의 북한 모습이다.

SBS의 경우 독립프로덕션인 '스포츠 아트'가 1998년 5월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및 묘향산을 취재했으나 한 때 북한당국에 테이프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어쨌든 북한측으로부터 나중에 테이프를 돌려받아 SBS에서 그 해 8월에 총 5회에 걸쳐 '김승규의 평양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이우승, 2000).

대중공연 부문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1999년 12월에 MBC는 '남북대중음

악제'를 SBS는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를 평양에서 개최했고 이를 각각 방송했다. 민간차원으로 이뤄낸 첫 남북대중문화 공연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52).

1990년대는 사례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뚜렷한 제작협력이나 공동제작이라고 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대체로 우리의 제작요청에 의해방북이 허가되고 제작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일방적인 형태여서 쌍방향적인교류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②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제작협력 사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남북해빙무드의 영향을 받아 남북방송 제작협력분야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영보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남북합작사례로는 먼저 KBS의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 '북녘땅, 고향은 지금'을 들 수있다. KBS는 2000년 8월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북녘 땅, 고향은 지금'을 방송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북한 지역을 북한 아나운서들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방 풍물과 이름난 음식,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진일보한 교류 및 협력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KBS가 기획하고 조선중앙TV와 중국의 요녕TV가 일종의 외주제작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요녕 TV와 조선중앙TV가 지역을 나눠 촬영을 담당했고, KBS는 촬영 대가로 편당 3천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53). 이어 2000년 9월에는 남북한의 방송인력이 공동으로 기획과 제작에 참여해 백두산과 한라산을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백두에서한라까지'라는 4시간짜리 프로그램도 방송되었다. 참고로 KBS는 백두산 생방송을 위해 PD 5명과 기자 2명, 사회자 2명, TV중계요원 7명, 카메라맨 1명등총 20여명의 제작진으로 구성해 북한에 파견했다.

⁵²⁾ 세계일보 1999년 11월 30일자

⁵³⁾ 조선일보 2000년 8월 15일

'북녘땅 고향은 지금'이나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사례는 그 동안 이미 북한에서 제작된 내용을 편집해 방송하던 소극적 패턴에서 벗어나 남측의 기획을통해 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의 협력수준을 뛰어넘어 남북 방송교류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에외주제작 형태의 협력의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남북방송교류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이우승, 2001).

③ 최근의 방송제작협력 사례

가. 드라마

남북한 공동제작은 주로 다큐멘터리 부문 등에서 곧잘 시도된다. 이는 다큐멘터리 영역이 물량이나 규모 면, 수용자의 니즈 등에서 공동제작을 끌어내기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경향 때문에 드라마 영역에서 공동제작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남북이 공동제작한 사극 '사육신'이준비 5년 만에 2007년에 남과 북에서 방송되었다.

사육신의 기획은 2002년 9월에 조선시대 사극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의상과 소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북한측의 요청을 계기로 KBS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출발했다. 이듬해인 2003년에 '사육신 공동제작 및 의상지원'에 관한 의제를 협의했고 KBS대표단은 평양 야외촬영거리와 방송시설을 답사하며 세부 사항을 점검하 고 연출과 대본, 출연배우, 시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2005년 3월 개성에서의 합의서 교환과 4월 베이징에서의 최종대본 완성에 이르기까 지 2년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북한 제작진과의 회의를 거듭했다.

드라마 대본은 북한 작가들이 집필했으나 사상성 배제와 작품성 등을 고려해 남북공동으로 최종 대본을 완성했다. 두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에 이어 2005년 4월 베이징에서 남북 작가들이 직접 만나 9일 동안 수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조선중앙TV TV극창작단은 2005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2007년 5월 완성본을 KBS에 납품했다. 사육신은 한 회당 70분씩 총 24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2007년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KBS수목드라마로 방영되었다. 최초논의에서 합의서 교환, 제작, 편집, 그리고 납품에 이르기까지 실로 5년이라는 긴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⁵⁴). KBS는 그 동안 방송장비, 방전차, 수송버스, 카메라, 편집기 등의 방송장비와 분장과 의상, 기술 등 총 210만 달러(약 20억원)를 지원했다. 반면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극본, 출연배우, 스태프, 해외로케이션시의 음악등 제작 전반을 담당했다. 배우는 북한 최고의 인기 배우들이출연했다.

사육신 사례는 기본적으로 남북간 교류가 짧은 기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방송분야에서 장기간 교류로 추진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남북드라마 공동제작, 공동연기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⁵⁵⁾고 평가할 수있다. 또한 사육신은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남과 북이 합작해서 만든 드라마인 동시에 북한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SD급 디지털 촬영, 동시녹음이 성사된뜻 깊은 드라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KBS기술팀, 디지털 카메라맨, 소품, 분장, 동시녹음 등의 인력이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기술교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저작권은 KBS가 가지며 북한 국내 방영권만 조선중앙TV가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방송시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 과제를 남겼다. 이 작품이 고전한 이유는 웅장한 스케일과 정교한 CG까지 동원하는 국내 사극과 다르며 대사처리도 시청자들에게 익숙치 않고 조명애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모두 낯설은 배우라는 점이다.

사육신 연출을 맡은 KBS 나상엽 PD는 "사육신은 사회주의적 연극연출방식에 정직하고 담담한 연출이 이어진다. 어떤 장면은 1분 이상씩 잡을 때도 있었다"며 "분단된 이후 남한은 헐리우드식 연출 연기에 익숙해졌다. 화면 구성에서도 빠른 템포, 클로즈업, 과도한 오버 연기 등이 시청자들에게서는 자

⁵⁴⁾ KBS열린마당, 2007년 7월 26일 no 402

⁵⁵⁾ 통일백서 2008, 186쪽

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식 중앙대 교수는 "다소 템포가 쳐지고 굼뜬 것 같은 어투와 동작들이 오히려 그 시대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며 "또한 멋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풀어내는 연기가 친근감과 호감을 줬다"고 평가했다56).

나. 애니메이션

SBS의 상상아 놀자는 10분짜리 26편으로 구성된 유아용 풀 3D애니메이션이다. (주)라비린스가 기획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제작지원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2007년 7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함께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주관으로 평양의 설송제작소와 공동제작으로 추진했다. 북한 제작인력활용을 통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강화, 남북 민간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확대 및 남북한 공동문화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있다.

EBS, 하나로텔레콤, 아이코닉스, 오콘과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가 함께 합작으로 제작한 유아용 3D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뽀로로와 동물친구들이 얼음나라에서 겪는 모험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는 전체 52개 에피소드 가운데 22개 에피소드의 공동제작에 참여했다. 국내 제작사에서 각 에피소드의 콘티와 타임시트, 그리고 에피소드별 디자인을 제작해 하나로 통신에 전달하면 이것을 중국의 북경에 위치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 사무소로 보내진다. 그리고 민경련은 이것을 다시 비행기에 실어 평양에 있는 삼천리총회사로 보내게 된다.

인터넷으로는 단 몇 분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빠르면 5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리게 된다. 물론 북한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내 제작사로 보내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콘티 및 에피소드 디자인 단계, 두 번에 걸친 리테이크 단계, 그리고 최종 렌더링을 마친 마지막 완성품 단계등 평균 4번 이상 되풀이하게 된다. 메인 프로

⁵⁶⁾ PD저널 07.10.31일자

덕션에 소요되는 시간을 국내제작과 비교하자면 3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⁵⁷⁾. 참고로 뽀로로는 EBS창사 이래 최고인 5.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에서 TV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의 호응도 크다.

다. 다큐멘터리

금강산의 여름은 2005년 7월과 8월 두 달간에 걸쳐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 삼일포 등 금강산의 명승지와 구룡폭포, 박연 폭포 등의 절경을 담은 다큐멘 터리이다.

금강산의 여름은 2003년 10월에 북한 측에 촬영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촬영허가가 떨어진 것은 2년 뒤인 2005년이었다. MBC측에서 기획과 콘티를 담당했고 북측이 촬영을 맡았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측의 의견이서로 달라 콘티를 수정하는데 1년 반이 소요되었다. 촬영을 북한에서 담당하다보니, 제작기법이나 촬영기법이 북측과 상이해 남측에서 원하는 의도를 충분히 표현해 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05년 3월에 방송된 남북 최초의 공동제작 자연 다큐멘터리이다.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 촬영소가 촬영을 담당했고 MBC가 구성과 편집을 맡았다. 그 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개마고원의 자연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2007년 2월에 방송된 자라의 생존법칙은 두 번째 남북공동제작 다큐멘터리이다. '개마고원을 가다'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촬영했고 MBC가 구성과 편집을 담당했다. '자라의 생존법칙'은 남한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만,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서식하고 있는 토종자라에 대한 생태보고서이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자라의 생태보고지로 지정된 강원도 통천군 시중호, 금야강, 광포호수, 통천앞바다 등을 60분짜리 테이프 40개에 담았다.

⁵⁷⁾ 남한길, 세계를 향해 날라라 꼬마펭귄 뽀로로, 신문과 방송, 2004년 2월호

그러나 남북공동제작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구석도 지적되었다. 촬영은 북한에서 담당하고 구성과 편집은 남한에서 진행된 것과 관련 최삼규 PD는 촬영과 연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며 남한의 제작진이 직접 북한에 방문해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2007년 4월 29일에 방송된 세 번째 남북공동제작 다큐멘터리이다. 앞의 두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촬영했고 MBC가 구성 및 편집을 담당했다. 개마고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개미의 생태를 조사한 프로그램이다.

라. 교양프로그램

MBC 스페셜 '북녘 전통음식 기행'은 2004년 1월에 평양, 개성, 원산, 함흥 등 음식으로 유명한 북한 도시 네 곳을 남과 북의 리포터가 찾아가 음식과 대표 명승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MBC와 북한의 조선중앙 TV가 공동으로 진행과 촬영을 담당했다.

마. 기타

'!느낌표'의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대회'는 조선중앙TV의 퀴즈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연출했다. 이 코너가 성사된 배경은 북한 방송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면서 기획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북한과 남한에 동시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평양편'은음악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해당된다.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은 KBS와 조선중앙TV의 공동연출로 진행됐던 공연을 녹화, 편집한 내용이다.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은 TNS미디어 코리아에 따르면, 29.1%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평양 공연에는 KBS의 스태프는 물론 북한측 악단과 방송인 기술진 등이 대거 참가했고 북측의 중계차 등 방송장비가 동원되었다.

2002년부터 준비되어온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은 1년 여간의 물밑 협상 끝에

이뤄졌다. 본격적으로 실무자 협의가 있은 7월초부터 녹화가 성사되기까지 대본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세트장 준비하나까지 북측과 꼼꼼한 협의가 있었고 때로는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까지 벌이기도 했다. 관계자는 출연자의 재담과 향토제품 소개 그리고 땡 출연자까지 전국노래자랑의 묘미를 그대로 살리고 싶었지만, 분단의 장벽은 아직까지 높았다고 술회했다. 한편 평양편은 KBS역사상 처음으로 예능국 차원에서 성사된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58).

이외에도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공연 현장 중계를 MBC와 북한의 방송인력이 힘을 합쳐 성사시켰다. MBC는 중계팀과 취재진 등 80명이 대규모 방송장비를 실은 대형 트럭 20여대와 함께 육로로 평양으로 향했다. 남북동시생중계, 실황 세계 송출을 위해 남북이 힘을 합쳤다고 할 수 있다.

4) 방송제작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구 방송위원회는 2003년 처음으로 남북 방송기술 협력 사업으로 디지털 방송편집, 송출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디지털 방송중계 차량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도 실시했다.

⁵⁸⁾ PD저널 2003년 8월 20일

<표 32> KBS의 2000년 이후 남북방송 교류 현황

연도	프로그램 (행사명)	방송일 (행사기간)	장소	비고
2000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	2000. 8. 18 ~ 24	예술의 전당, KBS 홀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한민족 특별기획 3원 생방송 '백두에서 한라까지'	2000.9. 10~ 9. 12	서울	남북 공동제작 ※ 2000년, 조선중앙TV에 촬영을 의뢰하는 외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북녘땅, 고향은 지금', '북한 리포트'에서 방송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TH AL	2001 KBS 5대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 : 6시 내고향 뉴스
0001	보도특집	0001 5 10 7 10		
2001	여기는 평양입니다	$2001.5. 19 \sim 7. 10$	평양	: 6시 내고향, 뉴스, 특집방송 등으로 6월부터
	백두대간을 가다			12월까지 취재물, 제작물 등을 방영
	10대 민족문화유산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백두산 현지제작	2002. 1. 22 -1. 29	백두산	2002. 3. 2(토) - 3(일) 현지제작분 2회 방영
	남북통일축구경기	2002. 9. 7(토)	서울	KBS1TV 생방송
2002	민족의 명절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2002. 9. 20(금) 16:00 KBS교향악단 단독공연 2002. 9. 21(토) 16:00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평양	단독공연(KBS위성방송, 남측중계) 합동공연(KBS, 조선중앙TV 한반도 공동중계)
	'세계문화유산 한반도의 고인돌'	2002. 11. 9	한반도 전역	남북최초 공동답사
	2003년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2003. 3. 25-27	평양	9시 뉴스, 4. 10. 녹화방송
2003	'평양노래자랑'방송물 제작 및 취재·생방송	2003. 8. 10-11	평양	2003년 8월 10-11일 9시 뉴스, 8. 15 녹화방송
	KBS 특별기획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	2003. 10. 18	평양, 남포, 개성	
2004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	2004. 7. 10-11	평양	취재·제작
2007	방송 80년 특별기획드라마 '사육신'	2007. 8. 8.~11. 1	평양	공동제작

출처: www.kbs.co.kr

<표 33> MBC의 2000년 이후 남북방송 교류 현황

연도	프로그램 (행사명)	방송일 (행사기간)	장소	비고
	평양교예단 초청공연	2000. 6. 11 (6.4-11)	서울	민족화해협의회 (한겨례신문 공동주관)
2000	<통일탁구대회> 중계 삼성생명-모란봉	2000. 7. 28 (7.28)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2000	현미 남보원이 본 평양 남보원의 누나 상봉기	2000. 8 14 2001. 4. 15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금강산을 달린다 - 금강산 랠리	2000. 8. 15 2000. 11. 30(재)	금강 산	민족화해협의회
	MBC 스페셜 - 춘향 평양가다	2001. 2. 16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2001	김현경 북한현지 리포트 <평양 10박11일>	2001. 3. 10-19 (3.10-20)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노동절 관련 행사뉴스 보도	2001. 5. 1	서울	민족화해협의회
	뉴스 데스크 <서울-평양 2원 방송>	2002. 9. 11-13(9.9-14)	평양	
2002	<이미자 평양 공연>	2002. 9. 27 (9.27)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2002	<오 통일 코리아> 평양 공연	2002. 9. 29 (9.29)	평양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통일염소의 대장정>	2002. 12. 3 (연중 제작)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와 협력사업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북녘의 음식>	2004. 1. 31-2. 1 (1.16-27)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뉴스 데스크 <노동절 평양행사>	2004. 5. 1 (5.1-3)	평양	_
	녹화 방송<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예술공연>	2004. 6. 23 (6.14)	인천	남측 민화협 지원
2004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살아오는 고구려>	2004. 6. 23 (5.24-6.5)	평양	남측 민화협 지원
	남북 학술회의 <남과 북의 전통민요>	2004. (7.19-20)	심양	중국연변대학 민족연구원 지원
	고구려고분 세계문화유산 <남북학술토론회> 취재	2004. 9. 9 ~ 12	금강 산	남북학술교류협회 지원
	금강산 새해맞이행사 취재	2004. 12.30~1.1	금강 산	우리민족서로돕기 지원

2005	다큐멘터리 <개성의 오늘>	2005. 2. 7-11(2.7-11)	개성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 5주년행사 취재 및 제작	6. 14-17, 20-22 (6.14-17)	평양	가극금강 공연 지원
	남북 작가대회 취재 및 제작	2005. 8. 22-23 (7.20-25)	평양 백두 산	민족문학작가회의 지원
	8.15민족대축전<통일축구 대희>	2005. 8. 14-17 (8.14-17)	서울	대한축구협회 지원
	<제1회 평양-남포 통일마라톤>	11. 24-30,12. 1 (11.24-28)	평양	오마이뉴스 지원
	<평양에서 온 국보들 -북녘의 문화유산>	2006 (6.13-8.16)	서울 지방	국립중앙박물관 지원
2006	남북종단 왕복비행 <평화의 새>	2006. 5. 16		한국항공스포츠협회 지원
2000	특집 다큐멘터리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2006. 9. 4	금강 산	공동기획·제작
	<상해임시정부 유가족 성묘사업>	2006. 10. 1-4 (9.30-4)	평양	임정기념사업회 지원
2007	<북한의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2부작	2007. 2. 4 2007. 4. 29	개마 고원	중국 요령성TV 지원
	<주몽,평양에서 고구려를 만나다>	2007. 3. 24	평양	민족화해협의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2007. 5 - 2007. 7)	개성	남북역사학자협회 지원 및 특집다큐 제작
	<주몽 모자의 평양 자전거대희>	2007. 6. 4	평양	

<표 34> SBS의 2000년 이후 남북방송 교류 현황

연도	프로그램 (행사명)	방송일 (행사기간)	장소	비고
2000	2000년 평화 친선 음악회	2000. 12. 10	평양	북한의 방송시설 협조 녹화방송
	창사 10주년 기념 SBS8시 뉴스 - 평양 특별생방송	2000. 10. 9-10	평양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평양에서 생방송 실시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	2000. 6. 12-15	평양	지상파 방송 3사에서 공동 중계
2003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음악회	2003. 10	류경	공연 및 경기를 북한에서 직접 제작 및 생방송
2003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농구	2003. 10		
2005	광복 60년 SBS 특별기획 조용필 평양 2005	2005. 8. 23	평양	공연방송, 뉴스보도
2007	SBS코리안투어 금강산 '아난티 NH농협 오픈	2007. 10. 25~28	금강 산	1R~4R 전라운드 HD 생중계
	SBS 스페셜 '신영복 교수의 금 강산 사색'	2007. 7. 1	금강 산	녹화방송
	2007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	2007. 8. 18~9. 9		SBS경기 중계 북한방송에 전송

출처: www.sbs.co.kr 과 박종수(2005)를 토대로 재구성

구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방송, 독립제작사 등 다원화된 방송주체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남북제작협력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 남북방송 제작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남북방송 제작협력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에서 유추될 수 있는 방향은 크

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시스템이란 단어에 착목해 조직적인 틀을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인 제작협력이 기능하도록 지향한 점이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는 제작협력의 토대가 보다체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가령 제작협력에 대한 전략, 기획단계, 제작단계, 유통단계, 제도 및 기술인프라 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각 요소마다의 구체적인 제작협력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① 상업적 남북제작협력 모델의 도입 시도

남북방송교류의 목적은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남북방송교류사를 살펴본다면, 방송교류를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의명분과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통일지향적대의명분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교류추진의 동력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남북의 방송제작협력이나 공동제작모델이 우리의 의도를제대로 살리고 국내에서의 높은 반향도 끌어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례는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그다지 역점을 두지 않았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업적 접근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명분과의 균형 속에서 적절한 상업적 접근이야말로 남북방송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동력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거나 각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접근, 적절한 분업제작 등은 적극 고려될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나 TV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뽀롱뽀롱 뽀로로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사례는 결과론적인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남북합작의 성공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공동제작 사극 '사육신'역시 시행착오의 학습효과, 기공동제작기반의 재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다면, 수익모델 구축도 시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고구려를 다룬 사극, 북한을 배경으로 해야 하는 현대극 등의 북한 로케이션과 세트촬영 등은 충분히 현실성이 높아 보이며 남측이 제작이나 캐스팅을 주도 하고 부분적인 제작이나 캐스팅 협력을 받는 형태라면, 사육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을 압박당하고 있는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코스트 다운 차원에서 북한 배우나 제작인 력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역에서 예측가능한 수익모델이 제시된다면, 방송제작협력기반은 더욱더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시스템적으로 공고해질 것 이며 나아가 자율메커니즘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업적 제 작모델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환경도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계약이나 권 리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정비, 세금이나 금융지원 등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소재 개발과 제작협력 기회 확대

소재와 취재영역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주로 자연다큐멘터리, 관광, 역사물, 예술공연, 체육분야 등과 같은 비정치적이고 공익적인 것이나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제한된 관계자들에 의해 남북방송제작물이 기획되고 제작되었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시청자들이 정작 원하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신선한 장르의기획과 소재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령 남북방송제작물 소재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장르와 소재 발굴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획을 이전의 방송관계자에서 대외적으로 개방해 많은 사람들이 기획공모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니즈에 보다 다가서는 동시에 다양하고 신선한 기획을 발굴하는 것이다. 공모전에서 발굴된 소재는 적절하게 프로그 램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으로 남북공동제작사업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남북방송제작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지상파방송사 그 중에서도 KBS, MBC, SBS의 중앙에 있는 방송사중심으로 공동제작이나 제작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틀에 박힌소재를 답습하거나, 명분 중시의 제작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그 동안 남북공동제작이나 협력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지방방송사, PP, 독립제작사에게도 제작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제작주체가 남북공동제작에 뛰어들어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남북방송제작물의 안정적 유통망 확립

어렵게 정성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사장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보다 아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련 제작물이 안정적 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적기관에 의한 한민족 채널 설립과 같은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채널차원의 접근은 앞으로 PP, 독립제작사와 같은 중소규모의 프로덕션이 남북 관련 영상물 제작에 뛰어들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의 제작물을 구입해 안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도 기능할 가 능성이 높다. 나아가 남북방송영상물 전문채널의 존재는 제작자에게는 상당한 수익원으로서도 기대되며 결국 남북방송제작협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유통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국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쿼터 제와 외주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편성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영상물이나 남북 공동제작물의 경우, 국산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거나 외주제작물로 간주해 방송사업자의 편성동기를 유발시켜 유통망 확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남북방송디지털제작센터 설립과 공동이용 확대

남측은 한창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은 방송매체의 디지털 전환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방송매체의 디지털 전환은 피할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은 남북한 공히 인식하고 있다. 한편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기회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공동제작이나 제작협력과 같은 일감 등이 증가하면, 남과 북의 스태프가 한 장소에서 서로 토의 및 의견교환하고 작업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제작스태프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남북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가 다루고 있는 방송제작 장비나 기기 등이 상이하다면 작품의 질은 떨어질 수 있고 작업속도도 더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가칭 디지털 방송제작센터를 설립하고 남북 제작진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커뮤니케이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남북의 DMZ 내에 남북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이의 내부에 남북방송디지털 제작센터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제작센터의 기능은 프로그램 제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북방송관계자간의 회의, 토론회와 같은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센터의 설립이 실현된다면 활발한 정보 및 아이디어의 교환, 제작진간의 상호이해 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방송제작기술의 이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남북한 방송제작기술의 격차도 일정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제작인력의 교류 정례화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인적인 요소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프로그램 제작이 연출이든, 촬영이든 편집이든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지는 작업 이라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만큼,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남북방송제작협력의 질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의 개최 등을 통해 남북제작인력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 친선도모 등과 같은 교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교류과정을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의 기반이 쌓이고 이것이 제작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⑥ 방송기술교류를 통한 제작협력 강화

남북한 제작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환경의 조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간에는 오랫동안 상이한 제작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만큼, 공동제작이나 제작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수준의 차이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상의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이런 제반과제들이해결된다면, 보다 원활한 공동제작과 제작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방송기술인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정례화하고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방송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최신 방송기술 동향을 체크하기도하고 새로운 방송기술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방송기술인 워크숍이나 기술인 연수과정의 개설, 남북 방송기술용어 사전 발행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방송제작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에 우리의 방송설비를 설치⁵⁹⁾하고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측의 방송제작인프라 구축에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⁵⁹⁾ 방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방송기술 및 장비를 제공한 바 있다.

⑦ 공동제작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남북 제작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건은 컨트리 리스크를 최소화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방송제작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적 변수 등과 같은 컨트리 리스크가 존재해 사업이 예측불허하고 불투명하다. 교류초창기보다 리스크는 다소 완화된 흔적은 보이지만, 여전히 예측가능한수준에 와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류의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방송제작이라 평소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비용을 들이지않으면 사업이 대다수이다.

그런 불투명한 사업환경과 명분중시의 교류성격상 민간의 동력을 끌어들이 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들여 남북방송제작협력의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들의 제작의욕을 높이고 불투명성을 보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작비 지원사업60), 국제경기 중계지원, 방송설비지원 외에는 남북 방송제작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남북방송교류의 요체는 프로그램 제작과 이의 방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런 만큼, 민간의 활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의 모색은 물론 직접적으로 남북 방송제작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제작비 지원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⑧ 인적측면의 교류확대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개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적교류의 경우 개별 방송사보다는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남북(북남)방송교류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8월 남한 언론사 사장 방북단의 공동단장인 최학래 한국신문협회장과 북한의 최칠남 로동신문 책임주필이 서명한 합의문, 2002년 8

^{60) 2007}년도 8편에 4억 3천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월 남한 방송위원회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들 합의문에 이은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 방송위원회와 북한 조 선중앙방송위원회가 두 번째 마련한 남북(북남)방송인 토론회의 의미와 역할 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남북(북남)간의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모든 일은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방송인토론회가 평양에 이어 금강산에서 열린 것은 그 자체로서 인 적교류가 정례화된다는 의미와 함께 다음에는 남한의 어느 도시에서 지속적 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6·15 평양축전에서 남북(북남)언론인들이 만나 논의했던 인적교류에 관한 합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역할과 참가범위, 추 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8월 북한의 련속극(드라마) 제작진 3명이 남한을 방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KBS로부터 드라마 사육신의 주문제작을 맡은 조선중앙텔레비젼측이 장영복 연출가와 촬영가 등 3명을 서울에 파견한 것이다. 북한 제작진은 사육신 제작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복궁과 경주일원을 둘러보고, 각종 자료수집과 함께 필요한 부분을 촬영하였다. 북한 방송제작진은 8·15민족통일축전 참가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한 것이지만,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최초 방문으로서 인적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⑨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교류 관련 인력들이 자유자재로 접촉할수는 없는 일이다. 제한된 인력을 중심으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기획에서 취재·촬영, 제작, 편집, 편성 등 방송 메커니즘에 관해 생소한 인력들이 교류 전면에 나올 경우 교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간혹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방송교류는 무엇보다도 남북(북남)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 전문적 소양,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참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북남)방송교류는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합목적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되 균형적인시각을 갖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남북(북남)방송교류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북남)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서는 주변 상황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남북(북남)방송교류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차원 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남한 방송위원회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방송 인토론회를 정례화 하는 것도 하나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남북방송교류는 '남한 제작진의 북한 방문제작' 형식에서 벗어나 양 방향적인 교류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 일회성 대규모 행사, 이벤트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방송교류는 남북공동제작, 공동방송 형태를 지 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제작진은 체류기간 중 절제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 북한은 남한 제작진에게 가능한 범위에서의 접근(취재·촬영)을 허용하는 등 보다 폭 넓은 지원이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방송교류의 활성화에 있어서의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구조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학력노동에 편향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요증가와 더불어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이 증가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고학력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는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 하락에 의한 요소 대체와 저학력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효과가 적은 기

술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학력 노동에 편향된 수요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대체효과, 생산변화효과, 기술발전효과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요소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고학력노동 수요 증가의 50% 이상을 설명하여 기능편향적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적용은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북한의 방송인과 개별적 교류에 관한 제의는 1957년 제 2차 전국기자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남북기자의 의견을 상화 교환하고 왕래 방도를 상론하자는 제안을 시작으로 한 북한의 방송인력 교류에 관한 제의는 1964년 전영건 기자 동맹 부위원장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교류 단계가 설정되었다.

첫째, 개별적 기자교류

둘째, 언론인의 창작품, 전송사진, 기록필름 영화의 교류 셋째, 기자, 언론인의 관광단 교환, 공동 출판기관 운영 넷째, 국제 사회 공동진출

그러나 1972년 정준기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교류를 제의한 이후로 북한 정부차원이나 언론계를 통해서나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로 학계에서 기자교류나 ABU 등을 통한 교류 등이 제기되고 있다. 1989년에는 방송프로듀서 연합회에서 상호 언론인 교류를 제의했고, 1990년에는 남북언론교류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는 남한이 무반응으로 대응했고 이제는 남한의 제의에 북한이 무시하고 있는 현실은 방송 인력 교류의 전망을 흐리게 하지만 급속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정치세력의 변동 등은 변화와개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여타의 방송교류 제의나 개방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자, 언론인 등의 교류에 대해서는 제의를 했으므로 인력 교류의 부분을 남북한 방송 교류에 있어서 접합지점으로 삼아 방송교류를 추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6) 케이블방송을 통한 활성화 방안

남한 케이블방송의 역사는 1995년 3월 21개 채널을 9만7천가구에 보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0여개의 채널에 1300만 시청가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시청점율은 40% 가까이에 이르러 지상파TV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콘텐츠 경쟁력 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남한 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는 현재 42개사 56개 채널(Program Provider)이 가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뉴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전문으로 하는 주요 채널들이 있다. 이는 지상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방송교류를 확대·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케이블방송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남북방송교류 형태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 남한 그리고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케이블채널과의 교류 실천방안 위주로 살펴본다.

① 북한에서 접근 가능한 실천 방안

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판권 분리

남한은 소재의 제한과 체제의 특성상 항상 경쟁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해소하고 북한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남한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체별로 판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공중파에서도 방송하고 케이블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뉴미디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북한의 제한된 프로그램을 다단계로 남한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는 많은 남한 시청자들에게 북한프로그램에의 시청권이 확보될 것이다.

나. 북한 스타들의 선전화

2000년 북한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남녁 동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 좋은 단상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특히 북한 무용수 조명애양은 현재에도 남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남한의 제품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런 인기 많은 예술인을 남한에서는 스타라고 한다. 아마도 남한에서 인기 있는 북한의 첫 스타가 아닌가 한다. 남한 시청자들은 이들의 공연장면뿐 아니라 그들의 개인생활, 연습장면 등 실제 사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한다. 이들스타와 스타단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제작하든 남한에서 제작하든 이들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높은 시청률을 담보로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런 스타들에 대한 밀착취재는 다큐나 오락채널 같은 케이블채널이 가진 강점이기 때문이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남한스타들이 국가의 이미지를 얼마 나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었나를 살펴보심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하다.

② 남한에서 접근 가능한 실천 방안

가. 북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편성

케이블방송은 대부분 24시간 채널이므로 지상파 방송보다 편성시간에 있어서 훨씬 더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즉, 좋은 시간대에 여러 번 순환편성도 가능하다.

케이블이 갖는 전문채널의 특성상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실로 크고 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강세를 띄는 만화영화도 애니메이션채널에 공급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어렵게 교류한 프로그램들이 사장되지 않고 케이블에서 방송이 된다면 시청자들이 북한의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는 앞서말씀드린 판권의 분리로 가능하며, 영상물교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문 제작물의 정규 편성

남한에서 기획하고 북한에서 제작한 이른바 주문제작은 특집기획으로는 단 발성에 그칠 경향이 크다. 장기 시리즈를 기획하고 정규적인 편성을 해야지만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주문제작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정규편성이 가능한 케이블채널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다. 해외방송물의 북한구매 대행

케이블의 수많은 채널에서는 많은 시간의 콘텐츠가 해외방송사, 배급사 등과의 교류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해외프로그램 마켓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많으므로,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가격으로 해외프로그램에 대한 대행업무를 케이블에서 할 수 있다.

해외프로그램 마켓에선 가끔 남·북한의 사회나 사람들의 생각 등을 같이 비교하면서 다룬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남한에 서 구매하고 북한이 재구매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영상물교류가 될 것이 다.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해외에서 보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아닌 제 3자의 눈으로 본 우리 의 모습들이어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③ 남북에서 공동으로 접근 가능한 실천 방안

가. 남북프로그램 전시회 정례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남북교류는 관계자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다. 남·북한의 의견은 당연히 다를 터이고 다름을 좁히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 는 것은 만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남·북한 방송 관계자들이 만나고 교류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정례화가 되지 않는다면 체계적이지 못한 산발적인 교류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매년 교차로 개최하는 것도 좋으며, 남한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프로그램 견본시 BCWW나 케이블협회가 주최하고 제주에서 열리는 KCTA Exhibition & Conference 같은 전시회와 같이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나. 프로그램 스크리닝 사이트 개설

양측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체제나 제도상으로 신속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자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남북(북남)프로그램 교류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이는 섣부른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남북 양측 방송실무 관계 자들이 교류에 대한 판단과 기획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도서관을 뜻한다.

실질적으로 전시회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서로의 프로그램들을 동영상을 통해 미리 보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전시회가 아닌 기간에도 물밑교류가 활발할 것이며, 그런 바탕 위에 전시회가 열리면 전시회는 더욱 알차 질 것이다.

남북방송물 교류가 통일국가로 향하기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대의명 분의 첨병이라는 데에는 남·북한에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 명분 이라는 싹을 틔우고 키우기 위해서는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현실적일 것 이다.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자양분은 케이블이라는 북한에는 없는 매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이벤트적 교류 방식을 전면적인 교류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북 양측 방송관계자 모든 분들이 케이블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 인 교류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남북 모두 제도가 정비되어 매년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서로의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전시회가 정례화 되어야 한다.

④ 남북한 방송제도 통합 운영 방안

남북한 각각의 방송제도가 통일 이후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합의 형태로서

단계적 통일방송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일한 통일 방송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서로 분리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단일한 통일방송을 지향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단계적 통일방송 방식과 3원 또는 4원의 해외 방송까지혼합해 내는 통일 방식으로 혼합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들이다.

방송교류의 궁극적 지향점은 남북방송의 통합이다. 그러므로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방송교류와 관련된 기본 원칙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교류의 범위가 지상파 방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기술지향적 통일 지향적으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통합방송의 모델과 관련된 원칙으로는 통합의 모델이 지배모델이 아닌 상호 의존형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 남북한을 막론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 전체 방송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통합모델은 남북관계에만 염두를 두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대처할 폭넓은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분할을 통한채널 운영방안은 남북한 통합방송의 채널운영과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서 전국을 지역단위로 나누어 권역화 하는 실현방안을 말한다. 권역화 방안은 지역이 다른 경우 각 지역방송의 제도적 분권화와 운영상의 연립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통일이 될 경우 상이한 방송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 분권화와 행정단위별 자치지와 함께 필수 조건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남과 북의 신뢰회복 및 관계개선이 없이는 단 한번의 교류도 실행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독일의 공식적 방송 교류에 대한 합의(동독 TV와 ARD간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정서)는 통일이 되기 불과 몇 년 전인 1987년에야 이루어졌음을 볼 때 분단국 간의 방송교류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측할 수 있다.

통일지향적인 남북방송 교류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이란 남북한 통일의 과제와 방송영역의 통합 과제가 모두 그러하듯 정부뿐만 아니라 제반 교류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통일과 통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말한다. 정부와 민간차원, 방송계, 학계 가 함께 모여 통합과 교류의 외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과의 교류를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하되 방송 영역에서는 방송시설 및 기기산업의 투자나 정보 통신산업에서의 공동육성과 같이 첨단 기술영역의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7) 남북 방송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

남북 방송시스템의 기술적인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디지털방송매체 발전에 맞추어 상호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방송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방송기술인의 상호교류 및 위성의 공동운영 등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방송 전문기술자는 단시일 내 양성할 수 없으므로 전문 분야별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를 현안문제로 상정할 수 있다.

① 구체적 실천방안을 위한 제안

현재 남북이 방송중인 아날로그방송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국제표준이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으며 텔레비전 경우에는 남한은 NTSC 방식, 북한은 PAL-M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예전부터 프로그램의 직접 시청은 불가능하지만 텔레비전 송신기의 변조기 모듈을 바꾸거나, 신호변환기(NTSC-PAL Converter)를 거치면 문제가 전혀 없다. 또하나 최근 들어 텔레비전수상기에서 NTSC와 PAL을 함께 수신할 수 있는 겸용 수상기가 제작되어 일부 지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별도의 변환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수상기 내부에 두 방식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 디지털위성방송의 경우 방송 방식이 다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테나와 수신시스템을 설치하여야 디지털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한 후 각 가정마다 별 도의 셋톱박스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상파의 경우에도 디지털 텔레비전을 새롭게 구입하거나 필요하면 디지털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가. 텔레비전 링크시설 점검

북한지형은 산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텔레비전 송·중계시설이 높은 산악 위에 위치해 있다. 프로그램의 전송은 유선방식보다는 무선방식인 마이크로웨이브(M/W)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 방송사와 송·중계소간 왕복 회선 방식(Both Way)으로 하고 주·예비 방식(Hot Stand-by)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송망의 구축에 절대적인 링크시설의 상태를 철저히 정비하고, 시설보완 및 교체를 위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M/W에 이용되는 철탑은 표면의 도금상태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데 용융아연도금(입방센티미터 당50mg)으로 했을 경우에 4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라디오방송의 점검

라디오방송 중에도 중파방송의 경우 북한의 송신시설이 남한의 2배 규모에이르며 대부분의 송신시설이 대출력으로 설계되어 원거리까지 서비스 영역이넓다. 예상 서비스 구역지도로 작성해 보면 전파의 중복지역이 많이 발생하고이로 인해 혼신이 발생될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혼신을 유발시켜 청취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출력의 송신시설은 많은 전력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가져와 중복시설이나 필요 이상의 대출력 송신소시설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정절차를 위해 남북한이 상호 방문하여 전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등을 점검해야한다. 기타 FM방송과 단파방송에 대한 시스템도 남북의 방송기술인이 상호

방문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남북 방송기술용어 정리 및 통일

방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울러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하여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북한지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무궁화위성 등을 이용한 전국적인 디지털 방송서비스는 물론 기존 케이블망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은 방송방식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방송기술의 운영방식 및 기술 용어가 달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된 방송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용어의 차이점 등을 남북한 방송사의 송출 및 제작기술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방송기술 분야에 있어서 비약적인 매체발전과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전문용어가 날로 다양화되고 새로운 기술용어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작업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

③ 남북 방송위성의 공동 사용

현재 남북은 방송을 위해 서로 다른 위성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무궁화 2호>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1999년 <무궁화 3호>위성을 발사하여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만약 남북이 공동으로 위성을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외화낭비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공동송출이 가능하게 되는 좋은 점이 있다.

나아가 위성의 공동 사용은 방송 산업의 발전과 통일을 앞당기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현재 남한에서 사용 중인 <무궁화 3호> 위성의 경우 고정빔과 가변빔 모두가 가능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만주지역 그 리고 오세아니아까지 방송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차기 위성은 기능상에서는 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전송하기위한 다양한 기능 등을 갖출 것이다. 방송위성은 위성전파가 미치는 장소 어디라도 항상 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방송망을 통한 방송운영이매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시급히 공동으로 위성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성, 위성기지국 및 관련 시스템의 공동사용에 따라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다양한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제공

미래의 방송환경에서 남북(북남)이 동일한 방송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방송 서비스, 유료방송 서비스, TV 상거래방송 및 디지털 케이블방송 서비스 등이 함께 실현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및 송출분야의 상호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디지털방송 및 데이터방송 등의 첨단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송계획의 수립, 기술적인 협조방안 모색 및 방송정책에 대한 공동 결정 등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가. 지상파 방송에서의 디지털방송 서비스

현재 방송중인 디지털방송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인프라구축에 있어서도 디지털 방송망은 고도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방송 서비스는 정보화를 촉진하는 종합정보매체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TV방송은 선명한 고화질 (HDTV)과 다양한 부가방송서비스도 가능해 졌다. 따라서 북한에도 디지털방송망의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의 디지털 TV방송서비스의 경우 남한의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단계별로 추진함이 타당하며 1단계에는 디지털방송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 고, 2단계에서 도시 이상에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방송하고, 지방의경우에는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방송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된다. 최종적인 3단계에서는 지상파방송망과 위성방송망을 이용한방송서비스가 북한 전역에서 모두 디지털로 방송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송출 및 제작, 스튜디오 건설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보급과 3D(입체)TV를 포함한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이처럼 균형 있는 멀티미디어방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센터 및 북한의 고급 방송 인력의 연수를 위한 방송기술 인력센터의 공동 운영 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위성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로는 디지털 TV방송과 디지털 라디오방송 등을 들수 있다. 위성의 경우 국경이 없기 때문에 만주나 일본 및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국이나일본 등 주변 국가간의 원활한 방송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위성은 난시청 해소는 물론 비상방송이나 재해방송 등에 아주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등과의 연결에도 매우 효과적이므로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위한 계층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더욱 효과적인 방송서비스는 물론 그동안 이질적인 문화의 장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매체로 판단되어 남북이 위성매체 공동운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방송기술인이 먼저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⑤ 남북방송 기술 인력 정보교류 협력 방안

남북방송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들이 실질적인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고 일부 진행된 내용들 또한 파편적이고 일방적인 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 교류 사업들 가운데 경제, 산업, 통일, 농업, 의료 및 식량 부분 등 많은 분야에서 지난 수년 동안 남북 당국 또는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남북 방송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당국이나 인력들의 접촉 또는 토의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송 교류에서도 남북 방송 프로그램 교환, 공동 행사 또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제작 같은 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 협력 사업들이 진행 되어 온 데 비해 유독 방송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사업이나 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토의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방송기술 분야에서 디지털방송 기술이 도입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방송환경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인대응이 요망됨에도 방송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이 지체되고 활발하지 못한 것은 남북 방송분야에서의 장래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는 현재 디지털방송 기술 변화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방송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남쪽의 방송기술 또는 방송환경의급변 현실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북쪽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송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때 남북 방송기술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토의가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 2003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방송인 교류행사 토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 실무 당사자들이나 발제자들이

적극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단계의 토의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남북 고위 당국자들의 방송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남북 방송기술 실무 인력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나 협의가 부족한 열 악한 조건들이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방송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적기술이 전체 대중들에게 보다 성숙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매력적인서비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무한하게 남아있으며, 디지털방송기술을 시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선 또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의 디지털방송기술이 우리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들에 비추어본다면,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남북 디지털방송기술 능력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적 내용들이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남북이 통일하는 데 필요한 고비용 구조의 방송 환경 구축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 사업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고, 보다 폭넓은 토론을 통해 점진적이고 확고한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 요한 검토 사항들이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해,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협력 사 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단계

현재 남북 방송기술 교류 협력 사업의 그동안 성과가 매우 미흡했던 점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 지금부터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남북 고위 실무 당국자 회의나 토론을 통해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나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을 분야별로 정하는 것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디지털방송기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방송기술 교류 인력에 대한 교류협

력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 토의하는 단계로 설정해볼 수 있겠다. 동시에 양측의 방송기술 현황을 파악, 공유하면서 양측의 방송기술 인력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토의를 거치는 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방안들이 남북 양측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력 약속을 문서로 교환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우선적으로 남북 방송기술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이나, 실무급 고위 회의를 통해 이미 언급된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나 내용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상호 협력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한반도에서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방송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인 것이다.

방송장비나 하드웨어적 기술 지식 향상의 핵심 고리는 수준 높은 인력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현 재의 상황은 남북의 아날로그 방송방식이 상이하고, 남북 방송기술 용어들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 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담보하려면 남북 방송기술 관계당국이나, 방송기술 담당 인사들의 치밀하고 섬세한 인적 교류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본다면,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의 인사와 남한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기술 관련 당국의 인사들이 포함된 방송기술 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칭)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면의 방송기술 전문 실무 인력들이 방송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발전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방송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도출해 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방송기술 연구인력, 방송기술 제작인력, 방송기술 정책인력, 방송기술 산업인력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 인력들의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안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가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추인 하에 민간 부분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 방송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와 남북 상호간에 인력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1단계에서 완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방송기술 인력의 상호 교환, 방문 등을 통해 북한 방송기술 인력과 남한 방송기술 인력들이 방송기술이 민족 통합이나 한반도에서의 디지털 방송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송기술 인력들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를 갖도록하는 것이다.

- 2 단계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목표의 공감대가 남북 당국 사이에 형성된 이후 보다 활발한 교류 협력 사업들의 틀을 짜는 것을 2단계에서 추진해야 한다.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교육이나 연수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1단계 에서 입안되고 확정된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용 문제 등 제반 사항들을 점검한다. 남북이 방송기술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방송기술 등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 있는 과제들에 대해 방송기술 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내야 할 것이다.

디지털방송 표준에 관한 사항, 제작기술의 디지털화 방안, 송·수신 분야, 디지털방송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등 다각적 측면에서 분야별로 인력들 의 교류와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심화·촉진 시킨다. 디지털방송기술 분야에 서 상호 인력들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정책적 수단들 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도 확보되어야 한다. 디지 털방송기술의 표준화 문제 등은 세계적으로 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디지털방송기술 표준화 문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 차원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디지털방송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상이한 바, 발전 단계나 방송기술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각 분야별 대 응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직 디지털방송 기술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고, 남한은 디지털방송 표준이 미국방식(8-VSB) 으로 확정된 이후 많은 사회적 비용의 대가를 지불한 이후 디지털화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한은 방송기술의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디지털방송환경 구축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남북 관계 문제나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 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디지털방송 구축 계 획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함께 검토해본다면,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협력 사업의 심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더욱 이 남북의 방송기술 시스템이 상이하게 디지털 환경에서도 진행될 경우 남북 통합 또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의 방송기술 인력들은 한반도에서 민족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디지털방송기술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결국 디지털방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남북 방송기술인들의 전문적 능력 향상과 남북 통합에 필요한 기술적조건들을 민족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정신적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송시스템에 필요한 것들은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의 활발한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일치된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 훈련 사업, 연구 개발 사업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산업 적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방송기술 인력들의 능력 향상은 현재 북한의 경제 적 현실을 바꾸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방송기술 인력들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상태에서 방송기술과 관련된 가전 사업, 방송콘텐츠 산업, 전자부품 산업 등 전방위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남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방송기술로의 전환 경험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디지털방송 기술로의 전환이나,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시행착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남북 방송기술인 토론회에서 북한은 남북 방송기술 표준의 통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디지털방송기술 표준화 결정에서 과거와 같이 서로 상이한 표준이 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비선형(NLE) 편집 시스템 등 디지털 방송제작 장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의 사용으로 인원과 비용 등 제작 과정에서 낭비 요인들이 줄어들고 방송제작 편집 과정이 효율화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지상파디지털 전송표준, IT기반의 제작기술 시스템 등 많은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통일된 표준화 작업도 제안된 바 있다.

남한 또한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고 디지털방송기술 표준 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화답으로 토론회를 이끈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북 방송기술 인력의 교류협력 방안들에 대한 실무적 입장의 통일성은 확보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양측의 실무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이 약 2년 동안 방송기술 분야에서 인력 뿐 아니라, 장비 등 하드웨어나 정보 공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남북 방송기술 협력 사업에 진전이 없었다.

1단계에서 남북 측의 책임 있는 방송기술 당국자들과 전문가 집단들이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2단계에서 남북 양측의 방송기술 현장 인력들이 1단계에서 마련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인 것이다.

지난 남북 방송기술인 토론회에서 양측이 방송기술 인력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단계 논의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단계에서 디지털전송표준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제작기술장비나 인력들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남북 공동 방송기술 연구 개발등 가능한 분야에서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해내고 현실화시키는 모든 사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남과 북에서 남북 공동으로 디지털방송기술과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정책적 정보와 기술적 지식 등을 함께 나누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남과 북의 방송기술 인력들이 공동으로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 사 업을 추진해 남과 북의 방송기술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 방송기술 전람회 개 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 추진에는 남과 북의 유능한 전문가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그들의 지식과 기능들을 적 극 수용하는 개방적 프로그램도 도입해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방송기술과 관련된 해외 동포까지 함께 참여해 한민족의 방송기술 진흥 사업을 보다 확 장, 심화시키는 사업 또한 필요하리라고 본다.

- 3단계

남과 북의 방송기술 인력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방송기술과 관련된 개별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협력 사업을 남북통합과 비슷한 단계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방송기술 분야는 이미 언급했듯이, 방송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효과까지 파급효과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인력 교류 협력 사업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방송기술 인력들이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남북 방송기술 인력에 대한 공동 연수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육 훈련 시스템을 남북 방송기술인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교육 과제, 목표, 일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남북 방송기술인들에게 공히 유력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 필요한 비용과 장비 등을 산출할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적 문제나 장소, 강사, 커리큘럼 등은 남북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의디지털방송기술 표준화 작업들이 구체화되고 적용 가능한 현실적 기술 대안들은 바로 수용하되, 그 외 부분은 연구과제로 남겨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남북 방송기술 인력들의 적극적 의지가 표명된 바, 남북 방송기술인들이 남과 북 사이에 필요한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함께 연구 개발 사업을 점진적으로 심화시킨다. 디지털방송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화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트렌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첨단 방송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해내는 구심점 역할은 민족의 통일을위한 방송기술의 역할을 보다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디지털전송표준에 대해서도 미국방식, 유럽방식, 일본방식 등 다양한 국제적 표준을 연구 조사하고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남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국방식의 디지털 전송표준에 대한 북한의 의미 있는 연구 검토 사업도 함께 추진해볼 수 있다. 제작기술 분야에서의 장비의 개발 및 송·수신 시스템의 공동 개발도 남북 방송기술 연구소 또는 ETRI 등 남한 국책연구소와 합동으로 북한의 방송기술 연구개발 전문 인력들과 공동 연구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디지털방송기술이 가진 무한한가능성은 방송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 영역이 보다 넓어지고대중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술 개발 분야 등에서 방송위원회와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남북방송기술 연구개발 인력들과 결합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수준높은 연구 개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 양측의 방송기술 인력의 연수, 교육, 연구·개발, 정보공유 협력에 관한 내용들을 표피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남한은 디지털방송을 개 시한 이래 당초의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디 지털방송기술이 갖는 다양한 강점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기 술이 개발 적용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디지털방송 선진국들이 다채널서비스, 이동방송서비스, 수신환경 개선, 다양한 부가 서비스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디지털지상파 서비스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이는 대중들에게 공적 구조의 지상파디지털 방송서비스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외국의 사례 검토 등 대중들에게 어필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무관심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남한의 시행착오를 북한에서 디지털방송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북한 방송기술 인력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아이디어 제공이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과정에서 결합된다면, 우리들의 방송기술 분야에서의 남북의 민족적 통일성과 전체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방송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 협력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민족 통합을 촉진시키고, 민족 공동의 이익이 방송기술 분야에서 확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남북 방송기술 인력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는 국제 방송기술 표준화기구 등에서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전돼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는 방송기술 분야에서의, 특히 디지털방송기술의 표준화에 국가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 상태로 표현될 만큼 복잡하고 치열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본의 아날로그 고화질방송(HDTV) 표준이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로 국제 표준시장에서 도태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북방송기술 인력들의 교류 협력 사업이 폭넓고 수준 높은 차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3단계 교류 협력 사업의 전개는 일차적인 교류 협력 사업의 완성을 위해 제안한 것이며, 궁극적 목표를 위한 방안은 아닌 것이다. 보다 궁극적인 목표인 민족의 통합과 동질성 회복, 통일에 대비한 준비, 첨단 디지털방송기술 분양에서 민족적 공동 이익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방송기술 인력의 교류 협력 사업이 전체 방송, 전체 산업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이다.

⑥ 정보통신 및 방송 단말기의 보급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 및 신뢰의 회복 문제는 남북간의 불균형적 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양측의 입장을 상호 조정하고 각 주체가 참여하는 남북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 방송수신상의 상이점 해소 및 관련 방송기기의 보급, 방송교류의 기본원칙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방송수신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은 북한 주민의 채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서 안에 규정되어야 한다. 실제 이용가능성의 문제는 TV 방식 변환장치(TV standard converter)를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교환 센타 및 방송사를 공동구역 안에서 설립 운영하여 남북 양측의 방송 교류가 균형적이고 형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NTSC-PAL 공동수신이 가능한 TV수상기를 가전사들이 제작하여 북한 주민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안과 북한의 TV수신기를 회수하고 NYSC식인 우리 방식을 공급하는 안을 경제성과 실현성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성의 직접방송 서비스인 DBS를 이용하거나 북한의 전국 유선망을 광대역 하여 위성을 이용한 SCN,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경우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방송계의 실행방안과 다른 주체들의 교류원칙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발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시된 안들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남 북방송체계의 재구축과 통일적인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 북한 방통망 구축지원 및 남북 공동위성망 구축

우리나라는 향후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추진방향과 함께 단계별 기술개 발분야 및 전략에 대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중에 있다.

위성이용 및 우주 과학 분야는 예측된 국내수요위성개발과 연계된 통신, 방송, 지구관측(기상 및 해양 포함) 및 우주 과학 분야로 세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통신방송분야는 위성방송기술의 자립과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지구관측분야는 주요 이용분야의 도출과 이용기반구축 그리고 위성 탑 재체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가. 아리랑 (KOMPSAT)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의 지구관측센서 EOC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지구관측

- 국가 정밀지도(1/25,000급) 제작 및 GIS분야 활용
- 국토관리 분야(도시계획, 국토관리 등) 활용
- 재해예방 분야(기상예측, 환경오염, 수해, 산불 감시, 조난구조 등) 활용
- 식생 및 산림분야 활용

○ 해양관측

- 해양관측 분야(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오염 등)
- 기타 분야(황사 및 대기오염 등 환경관측)
- 재해예방 분야(기상예측, 환경오염, 수해, 산불 감시, 조난구조 등) 활용
- 식생 및 산림분야 활용
- 과학실험 및 우주데이타 수집 분야
- 이온층의 전자밀도 및 온도 측정, 전리층 측정, 통신주파수대 예측,
- 우주방사선이 전자부품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신소재 및 전자부품 개발 등

나. 무궁화 1.2.3호

무궁화위성은 1995년 8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우주기지에서 Delta Ⅱ 로켓에 실려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통신위성이다. 무궁화위성

은 적도상공 3만6천km의 정지궤도에서 직접위성방송과 통신전파를 쏘아보냄 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시대를 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무궁화 1호는 발사시 주 엔진에 부착된 보조 로켓중 하나가 분리시스템의 도화선 손상으로 인하여 적시에 분리되지 않으므로써 목표 제도에 6,351km나 못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정보다 10년에서 4.5년으로 수명이 단축되었다.

무궁화 1호 위성의 예비위성으로 계획된 무궁화2호위성은 1996년 7월부터 1호위성과 함께 운용되고 있다. 무궁화 3호 위성은 무궁화 1호 위성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서비스를 중단을 보완하고자 남미에 위치한 가이아나 크루기지에서 1999년 9월5일 발사를 성공하여 정지 궤도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호 위성은 1, 2호 위성 서비스의 연계 뿐 아니라, 신규 서비스 및 수요 증가에 대처 할 수 있도록 1,2호 위성보다 대용량, 고출력의 제원을 갖도록 설계 되었다.

다. 우리별 1,2,3호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실험위성으로 영국 서리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인공 위성연구소의 공동개발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영국에서 제작 하였으며 1992년 8월 11일에 남아메리카 기아나에 있는 쿠루기지에서 발사되 었다.

우리별 2호는 1993년 9월 26일 대전엑스포 기간에 발사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개발한 둘째 번 위성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첫째 번 위성이었다. 우리별 3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위성모델로서 1999년 5월 26일 인도의 발사체인 PSLV를 이용하여 약 730 km의 태양동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무게 110 kg의 초소형위성인 우리별 3호는 단순히 과학위성이나 기술시험 위성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보여주었고 있으며, 자체 보유 기술과 경험으로 설 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그리고 운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독자위성 개발능력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개발의 가능성과 향후 위성기술 수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1992년 남한이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인공위성의 발전을 지속해온 반면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분야는 남쪽보다 10년이나 앞서있다.

로켓 중에서 인공위성, 달 탐사선 등 우주비행체를 쏘아 올리는 로켓을 우주발사체라고 한다. 발사체라는 단어는 지상에서 우주궤도 또는 아주 먼 우주 공간까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사용되는데 로켓에 핵탄두 등무기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 인공위성 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 즉 우주발사체가 필요하다.

남한은 인공위성 분야에서 20여년의 기술축적이 돼 있는 반면 북한은 발사체에 독보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십여개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 보냈다. 그러나 지금가지 쏘아 올린인공위성들과 최초의 한국우주인까지도 프랑스나 러시아 등 외국 발사체에실어 우주로 보내야만 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로켓 기술 분야가 앞서 있다. 1998년에 인공위성을 자체 발사대에서 발사시도를 하였고 발사를 거의 자력에 의해 시도했다는 것은 발 사체 분야에서 북한이 남한을 10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당연시 하게도 북한의 우주과학기술개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꾸준히 진행시켜왔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우주발사체는 그 기원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두고 있다.

북한은 우주발사체의 기원이 되는 미사일개발을 앞서서 시도했다. 1970년대후반부터 미사일 및 그 제조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러시아로부터 전술용 핵미사일을 공급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중국과의 공동개발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스커드미사일 도면을 확보한 이집트와 공동개발을 추진했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은 1984년에 설계를 거꾸로 파악해 가는 기법을 통해 자체 스커드-B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 등 우주강국의 기술지원 없이 이같은 미사일 자체개발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사정거리 2500Km까지 달하는 노동2호 미사일을 비롯해 사정거리 6700Km의 대포동2호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성사시키게 되었다.

이를 꾸준히 진행하던 북한은 1998년 놀라운 발표를 하였다.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한 후 대포동1호에 북이 개발한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탑재했다고 밝힌 것인데 당시 북은 광명성 1호가 165분에 지구를 한바퀴 도는 타원궤도 를 돌며 방송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국가도 그러한 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주 변국들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고 비난했으나 얼마 후 북이 우주 발 사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정하였다.

그러나 북이 밝힌 정보를 보더라도 광명성 1호의 기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상촬영이나 중계 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을 송출하는 기능만 가진인공위성은 북한이 이를 군사적으로나 민간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주 발사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쉽게 구분이 안된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자체 우주발사장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미항공우주국은 북한이 비록 인공위성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주발사체 개발능력을 충분히 보유할 만한 수준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우주발 사체와 6700km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포동 발사체가 우주발사체라는 주장의 진위에 상관없이 일본과 미국이 큰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유이다. 우주 발사체가 유사시에는 대기권을 지나 6700km에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타

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들이 북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것인데 만일 남과 북이 우주개발 협력체제가 형성된다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유례 가 없는 독자적인 우주공학 기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강대국들도 인정하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기술 이면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제조국가라는 군사적 의미도 들어있어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 할 수 밖에 없다.

북핵 폐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돼 북한의 우주공학이 주변국가들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남북의 방송 통신망과 공동위성망을 구축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을 위한 기술로 사용 될 것이다.

⑧ 남북공동방송채널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것은 향후 「한민족 공동체 채널」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단계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지금과 같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 원하는 남북이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려면 문화적 통합없이는 불가능 하 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방송을 통한 남북문화공동체를 준비해야 하고 이 를 위해「한민족 공동체 채널」운영을 검토해야 한다.「한민족 공동체 채널」 은 남북이, 그리고 중국 조선족 방송국, 사할린 동포, 일본 한인방송국을 연결 하여 한민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뜻한다.

운영방식은 참여하는 방송사 대표로 구성되는 채널편성중앙협의체를 두고이 협의체에서 참여방송사의 책임편성시간량을 결정하는 등 편성업무를 담당하면 될 것이고 다자간 협의체형식이라 할지라도 효율적인 채널운영을 위해서 주도적인 방송사가 필요할 것이다.

한민족 채널은 가능하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채널'로 지정을 받아 각 SO 등에 의무적으로 재전송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남북한 전문채널로서의 포지셔닝에도 유리한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에게도 보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반대로 남한의 영상 물이나 남북공동제작물 등도 북측의 방송국 등을 통해 최대한 유통될 수 있 도록 제도적 담보를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민족공동체 채널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따라서 그 첫단계로 남북이 공동참여하는 단일방송채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일채 널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교 류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잇기 때문이다. 남북한 단일채널의 형식은 우선적으 로 유럽의 아르테(ARTE)TV와 유사한 형태로 생각하면 좋겠다.

유럽의 아르떼(ARTE)TV는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노력에 의해 탄생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채널이다. 두 국가는 전통적인 앙숙이면서도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 아르테 채널은 양국 방송 협력의본보기 이다. 독일은 채널 자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목적은 유럽시민들을 서로 접근 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의 협의와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들을 다루는 데에 있었다.

독일은 환경문제처럼 국내 차원을 넘어 유럽적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들을 위해 이러한 방송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프랑스의 생각은 다른데 테마의 유럽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유럽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통일 후의 독불 관계에 지니는 상징성이나 프랑스의 노력이 없었다면 실현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성사 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이것이 독일 통일로부터 시작된 독일 프랑스의 관계전환기 동안 계속 진행되 었기 때문이다.

양국의 계획은 전 유럽 차원의 매스미디어 정책을 실현시키고 그동안 방치 상태였던 TV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고 독일 프랑스간 상호 접근을 시도하 고 처녀지나 다름없는 분야까지 공조를 확산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프랑스의 조약은 국가의 감독과 프로그램 자율권을 국제 방송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들어 놓았다. 1989년 10월 3일에 제정된 유럽연합 TV법이나 1989년 5월 5일 유럽의회 합의사항 같은 유럽 방송법들은 무엇보다도 광고 수익과 유럽 인권 협약에 의거한 정보와 의견의 자유에 따른 위성방송들의 자유화 등을 다루고 있다.

La SEPT와 아르테 독일 지사간에 맺어진 ARTE-GEIE 조약은 유럽문화채널의 핵이다. 또한 두나라간의 의무와 권리, 내부조직, 프로그램 제작 원칙, 행정과 감독기관, 법행정, 방영률 및 방송사 확장, 재정과 그 분배 등을 명시하고 있다. ARTE-GEIE의 조약의 중요한 특징은 공동본사가 국내 지사들의지사 성격을 가지고 양쪽의 협력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프로그램만 공동방영 하는 TV나 3sat 모델에 유사해 졌다.

유럽 문화채널과 관련 프랑스 정부는 직간접 전략을 모두 동원했다. 직접적 전략은 미국과 일본에 대항해 유럽문화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TV기술과 영 화 산업 분야의 유럽차원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르떼(Association Relative a la Television Europeenne: Arte)라는 용어자체는 '유럽 TV 연합'이라는 뜻이다. 아르떼(Arte)는 프랑스의 제안으로 독일과 합작하여 '유럽 문화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두 국가의 헤게모니 싸움 등의 영향으로 현재 유럽의회가 있는 지방도시 '스트라스브르그'(Strasburg)에 본부를 두고, 1992년 5월 31일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자체 프로그램의 제작은 없고 외주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 방침은 유럽공동체 지향,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프로그램 공동제작, 공동운영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지분과 재원을 50대 50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동의 '공영 TV 방송 채널'을 만들어 유럽통합의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아르떼는 프로그램의 3분지 1은 아르떼 프랑스에서 그리고 3분지 1은 아르떼 독일 그리고 나머지 3분지 1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화, 음악, 문학, 춤, 역사, 다큐 등 생활 문화 관련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프랑스 아르떼는 1992년 프랑스 제5채널(La 5)의 도산으로 생긴 지상파 방송 채널을 공영 채널인 France 5(La cinqueme)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아르떼는 주간(오후2시-7시)에는 케이블과 위성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야간방송 시간대(오후7시-오전 2시)에만 지상파 채널을 통해 일반 방송채널로 방송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초기부터 케이블과 위성으로 방송을하고 있다.

가. 아르떼(Arte)의 설립목적 및 정체성

아르떼(Arte)의 설립목적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TV방송을 통해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통합과정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방송 오락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복잡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유럽 통합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동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여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다. 특히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TV방송이 유럽문화의 아이텐티티(Identity)를 확립하고, 프랑스와 독일간의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성사되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50%씩 주식을 보유하는 'Arte GEIE'라는 공영방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아르떼는 프랑스에서 85%의지역 커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약 70%의 커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르떼의 시청률은 프랑스에서 3-4%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0.7%를 점유하고 있다(유승호, 2006). 그리고 아르떼 방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성은 Astra 10, DFS 3, Kopernikus, Eutelsat II 등이다.

아르떼의 평균 시청 점유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프랑스의인기 유료 채널인 카날플리스(Canal+)의 시청점유율도 3%대라는 점에서 결코낮다고는 할 수는 없다. 아르떼는 2003년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순위에서 프랑스 지역 공영방송인 FR3에 이어 2위 차지하고 있다. 아르떼의평균 시청 점유율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2004년 현재 아르떼의시청 점유율은 평균 3.7%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지상파 방송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France 5와 합하면 전체의 7%대의 시청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

다(한국방송광고공사, 2004).

1992년에 설립된 아르떼는 지난 15년 동안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 채널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벨기에가 재정 및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등에 참여를 계속 요청하는 등 유럽 문화 채널로서 영향력에 대한 효과가점차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벨기에는 재정 및 운영에는 참여치 않고 있으며, 2003년부터 벨기에의 공영방송채널인 RTBF를 통해 연간 50시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르떼는 최근 40여개 국의 방송국들이 참여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르떼가유럽문화채널로서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한국방송광고공사, 2004)

나. 공동채널로 사용가능한 주파수 확보방안 마련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공동 방송국을 설립을 위한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또한 필요한 조처는 다름아닌 공동 사용 가능한 전파의 확보이다. 2008년 2월 22일 입법화된 디지털 특별법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배치 또는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추진 협의회 내에 DTV채널 배치를 위한 실무 연구반이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 기간국을 중심으로 보조국까지 포함하여 집중 논의 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DTV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 활용 계획을 살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이익 최대화를 고려한 주파수 용도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회수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 할당지역단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용도별 주파수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여타 주파수 대역의 활용 및 재배치방안과 연계한 종합 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할당방식은 주파수 관리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사용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디지털 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 대역 활용에 가장 중요한 논의 지점으로 저대역 주파수 활용계획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주파수의 주인이 국민임을 감안하여 공공성을 최대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완전한 DTV시대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지상파 D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방송사를 비롯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인한 지형적인 요인과 인구 과밀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고층건물이 밀집하여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DTV난시청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TV용 주파수의 고갈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종료 이전에는 DTV용 주파수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아날로그방송의 주파수 변경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많은 주파수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망 구축으론 첫째 기존 송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송신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당장의 비용과 측면에선 유리하나 아날로그 TV보다 유효수신전계강도가 훨씬 낮고 완벽한 화면의 수신이 가능하다는 DTV의 장점들과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화로 인한 시청자 분포 가변화 등으로 인한 DTV방송수신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두번째 방안은 기존 아날로그 TV시설만이 수용된 송신시설의 경우는 활용을 최소화 하면서 변화된 DTV방송 수신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적의 송신시설을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방송 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투자와비용절감을 위해서 지상파 방송사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원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관계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디지털 기술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부분의 방송 선진국에서도 유료방송중심의 미래방송 시장에서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지상파 방송의 책무를 강화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방송용 주파수 할당은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파수에 대한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조차 주파수에 대한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된다. 미국의 통신법309조에 나타나있는 경매방식의 도입목적에서도 나타나지만, 공공의 이익보호, 광범위한 지역의 공공복리 증진, 주파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공공에게 환원하는 목적은 모두 주파수가 공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은 일반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방송에서는 기술적 내지 효율성과 함께 방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송용 주파수가 방송 서비스의 필수 불가견한 요소이며 주파수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등 방송정책과 방송용 주파수 정책을 따로 구분할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기술이나 경제적 효율성만큼이나 방송을 통해구현되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통신 서비스와는 달리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우리나라의 문화전승 및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최우선 적으로 주파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과 디지털 전환의 해당 사업자인 방송사보다는 통신 사에 포획된 주파수 정책이 입안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과 공익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논리가 중요하지만 지상 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파수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공익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공익적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지상파 방송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송용 주파수의 할당을 위한 방송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채널 배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위해 각 방송사는 물론 국민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마련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4. 북한의 방송망 정비 및 보강 방안

1) 방송망 정비의 필요성

북한은 1963년 SECAM방식으로 흑백TV시험방송을 시작하였고 1974년 개시한 칼라방송에는 PAL-D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럼으로써 남과 북은 각기 상이한 텔레비전 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TV방식이 결정되었다기보다는 남북한에 각기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라 생각된다.

분단의 부산물로 남북이 각기 다른 TV방식을 가진 채로 통일이 되어 국내에서 서로 다른 TV방송이 송출된다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수상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줌은 물론 큰 불편을 주게 되고 ,방송제작·송출에 제작비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설비가 증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남북방송 통합시에 첫 번째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TV방송방식의 통일작업이다. 물론 통일직후 곧바로 단일TV방식에 의한 TV시청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방식변환장치(NTSC-PAL)를 사용하여 KBS-1의 프로그램이 PAL-D송출장치를 통해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가까운 기간동안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속

에서 생활해온 국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는 TV방송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은 중파 라디오방송에 대해 방해전파 시설을 운용해오고 있고, 또 전파전(電波戰)의 부산물로 필요 이상의 대출력 송신시설을 운용함으로써 과밀하고 중복된 전파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파자원의 낭비는 물론 방송 전파의 혼신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희소한 전파자원과 전력 의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직후 중파 대출력송신시설의 통폐합 조 정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지역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식 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탈피하여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지역방송국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방송망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① 통일 독일의 방송통합이 주는 교훈

독일통일은 소련의 개방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예상보다 앞당겨져, 통일이후의 방송망 정비에 사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서독이 동독방송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를린에 있는 DLF라디오와 30개의 송신소중 5개가 동독 국경지역에 배치된 ZDF에 의해 동독인들은 서독의 ARD방송을 87% 이상, 그리고 ZDF방송을 81%이상 시청할 수 있는 매체기술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PAL-D와 SECAM방식으로 방식은 달랐어도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양립성 TV수상기를 사용하여 시청이 가능하였다. 동독당국이 시청 허용쪽으로 방송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동독국민들은 방송을 통해 서독사회를 간접체험하게 되어 민족의 동질성이 차츰 회복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통일이후 동서독의 방송통합은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1990년 8월 31일 조인된 통일조약에서 방송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9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동독방송체제를 유지한다.
- -동독의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을 통합하여 독립방송기관 설립한다.
- -운영재원은 수신료로 하고 최고책임자는 동독의회에서 선임하는 것

그런데 짧은 기간내 새로운 방송구조가 정착하지 못하자 새로 통일독일의 방송에 주간 협정을 만들어 아래와 같이 동독방송을 서독방송에 흡수 통합시 켰다.

- -동독의 DEF1은 서독의 ARD에 통합.
- -동독의 DEF2는 서독의 ZDF에 통합.

통일직후 동독의 일부 라디오방송들이 서독의 상업방송과 개별적 통합을 시행하기도 있어 다소 방송정책의 혼란이 있었으나, 동독방송의 통합정책의 골간은 공영체제 우선하에 민영방송이 경쟁하는 이원적, 다양화 정책으로 볼수 있다. 서독방송에 흡수통합된 동독 방송시설의 상태는 극히 노후되어,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작·송신시설의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므로, 투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시설도 통계상으로는 남한의 약 절반에 다다르고 있지만, 동독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시설의 노후 정도나 기기의 품질수준 등이 그대로 사용해도 좋은 상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② TV방송망의 통합

가. 통일후 방송의 기본구조

독일 통일후 방송통합에서 보았듯이, 남·북한의 방송통합은 어떤 체제로 할 것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정해 보 고자 한다.

- -북한의 방송체제는 공민영 구조로 한다.
- -통일 초기에 북한에는 공영방송(KBS1, KBS2)을 우선하며, 사회적 안정기를 거쳐 민영화를 도입한다.
- -교육방송은 위성방송으로 서비스한다.
- -TV방식은 남·북한이 디지털화에 의해 통합될 때까지 기존방식을 존속시 킨다.

③ TV방식 통일 방향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식변경을 위한 방송시설의 대체에 따르는 직접비용은 현재의 방송송신 시설수 즉 대체시설수가 적은 쪽이 많은 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남한의 TV방송은 지역방송을 위해 지방도시에 많은 지역국을 갖고 있으나, 북한은 평양방송을 중계하고 있어 지역방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은 남·북한의 송중계소 시설수를 비교한 것으로 남한시설이 북한시설에 비해 약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 35>남·북한 TV송·중계 시설수 비교

구 분	방송국	TV송중계소	중계국	기준년도
남 한	44	127개소	980개소	1995년기준
북 한	2	53개소	477개소	1995년기준

출처: 송재극 외,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연구, 방송개발원, 2001, p.30.

다음으로 각 가정에 보급된 TV수상기수가 적은 쪽이 많은 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4년을 기준으로 남한에는 약 1,000만대, 북한에는 약 200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단순히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시설의 노후도이다. 노후되어 교체해야 할 시설이 많은 쪽이 통합시설로 대체 될 때 국가적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PAL-D방식을 NTSC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2000년 이전에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0년경까지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망 송신시설을 폐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에는 텔레비전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송신시설을 NTSC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예방하면서 남한방식과 통일을 꾀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TV방송망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1개의 송신 채널로 3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어 송신장치도 1/3으로 감소된다.

동독의 방송통합으로 1,000여명의 동독방송인들이 서독의 방송국에 분산 배치되었고, 동독의 TV제작시설이 PAL-D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송신시설은 단계적으로 대체계획을 갖고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방송통합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소요되는 재원과 상황여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합은 독일과 같이 통일이후 단일국가하에서 가능하나 그전이라도 상호합의에 의한 시행을 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후자는 현재 남북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토에서 제외한다. 단계적정비방안은 통일이후 매체의 특성과 뉴미디어의 발전상황을 고려 하여 시기별로 단계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압축기술과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전송할 수 있는 TV프로그램의 수량이 크게 증가되었다. 미국은 디지털 방식의 ATV규격을 1966년 확정하고 1997년 시험방송과 2001년에 본격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기존 NTSC.방식의 아날로그 송신망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영국도 1997년 BBC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시 2010년에 기존 아

날로그 지상망을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KBS도 무궁화위성에 의한 디지털 TV방송을 1997년부터 시험방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유럽각국은 지상파에 의한 TV방송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2000년 전까지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실시국가가 늘어나고 2005년까지는 상당수의 국가가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KBS를 비롯한 국내방송사도 디지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00년 초에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2012년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남한의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추진 예상 일정이다.

1997년 디지털 위성방송 개시2002년 지상파 디지털TV 시험방송 개시2005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개시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폐지

이와 같이 남한의 방송시설이 기존NTSC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송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에 북한의 PAL-D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남북이 통일된 방식을 보유하게 된다. 물론 디지털수상기가 확보될 때까지 남·북한이 공히 PAL-D나 NTSC방식의 방송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TV방송망은 통일 직후에는 PAL-D방송을 유지하면서 KBS-1TV와 2TV 프로그램 송출을 계속하고,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남한의 위성TV방송을 북한내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상파 TV디지털방송시설을 전국에 시설함으로써 남북이 단일방식으로 통일되도록 하는정비방안이 가장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TV송신시설을 디지털 방식으로 시설할 경우 아날로그방식에 비해 약 1/3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36> 참조).

<표 36> 북한 TV시설대체시 방식별 소요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시설분류	아날로그형	디지털형
도청지 기간국	77,800	20,680
시·군지역기간국	94,300	26,400
TVR 시설	141,280	68,120

출처: 송재극 외,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연구, 방송개발원, 2001, p33.

④ 단계별 추진방안

가. 통일전 준비단계(개방유도단계)

남한의 통일정책을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대화-남북연합-통일 국가로 나아가는 단계적 방안으로서, 남·북한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 어야 신뢰가 쌓이고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군사적 관계개선과 긴장 완화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 나,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설립방안은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노선인 한 반도에 사회주의 통일 혁명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남· 북한방송교류 문제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교류 그자체의 문제점보다도 남·북한간 통일정책과 연계해서 생 각해야 하므로,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나 개방정책으로의 전환 없이는 실현 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일 통일에서 방송매체의 역할이 알려 진 후 방송교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방송교류는 남북문제의 현실적 틀속에서 그 해결책과 실마리를 찾아야 하므로 당장 교류와 개방의 실현이 어려워도 꾸준히 개방과 교류를 위한 유도정책을 펴야할 거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PAL-D방식의 TV송신소를 휴전선부근(<표 37>참조) 대북한 지역서비스를 위한 적정지역에 시설하여 KBS-1TV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반발이

있겠지만 북한이 NTSC방식의 대남방송 시설을 갖고 있어 논리적으로 취약성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표 37> 대북한 TV송신소 시설방안

지역	장소	출력	서비스 대상지역
중부지역	화악산	ch3/50KW	개성, 해주, 세포, 남천, 신계, 이천

나. 통일직후 단계

통일 직후 초기에는 민족의 염원이 성취되었으므로 환희와 희망에 찬 들뜬 분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북한의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김일성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숭배하는 종교에 근접하는 집단 공동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설사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게릴라가 되어 항전할 가능성이 높다.

들뜬 사회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혼란스런 상태에서 동요하는 세력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방송이 담당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한민족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여 한핏줄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이 단기간 내에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겠다.

- 비상사태시를 대비해 비축한 PAL-D방식 TV이동송신차를 평양에 이동 배치
- ㅇ 이동지구국과 SNG를 사용하여 서울과 평양간 방송회선 긴급구성
- o TV방송은 방식변환장치를 사용하여 PAL-D방식으로 KBS-1TV프로그램 송출
- ○방송통합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다. 통일후 본격정비 단계

통일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고 방송과 상호방문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방송망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 한꺼번에 전부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을 2단계로 추진하되, 1단계는 평양과 도청소재지의 TV송신시설을, 2단계는 기타 전국시설을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원조달과 방송기술의 발전 추이 및 주민의 생활정도를 고려한 정책이 될 것이다.

□ 1단계 정비(통일후 2년~5년)

- 평양에 디지털 TV송신기 설치(2개 채널로 남한내 6개 방송프로그램중계)
- 1997년 디지털 위성방송 개시로 2000년초에는 디지털 수상기 값이 기존 수상기 값과 비슷해 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디지털방식으로 방송
- PAL-D방식 송신시설은 디지털수상기 보급이 확대될 때까지 존속시킴
- 북한내 도청소재지에 지역방송국 건립 및 디지털 TV송신시설 설치 착 수(6개소)
- 북한내 평양-지역간 TV회선망 구성

□ 2단계 정비(통일후 5년~10년)

- 전국의 모든 시설에 지상파 TV송신시설을 완료하여 남한과 동일한 방송 시설 완성
- o PAL-D방식 폐기

⑤ 북한 중파 라디오 방송망의 정비

가. 정비방안

(가) 정비에 따른 기술적 고려사항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음성신호의 대역은 보통 50Hz~15,000Hz로 한다. 제작장비에 따라 30Hz~20,000Hz에 이르는 성능을 가진 것도 있으나 보통 인간의최고 가청주파수는 15,000Hz가 한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전파를발사하는 송신기의 주파수대역 특성을 9,000Hz로 제한하므로 필요이상으로대역을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

전송신호의 크기는 프로그램 링크상에서는 0dBm~10dBm을 사용하며, 송신 기 입력신호 크기는 과정에 시설된 장비는 10dBm이고, 근래 장비는 0dBm을 사용한다. 송신기에서 변조의 크기에 따라 수신기의 음량이 같이 변화 한다. 따라서 변조를 깊게 넣으면 넣을수록 가청범위는 넓어진다. 진공관형 송신기에서는 100% 이상 변조를 넣을 수 없었으나, 최근 제작되는 psm변조 반도체 송신기는 130% 변조를 넣을 수 있어 이러한 송신기로 대체될 경우 동일 출력에서 서비스 면적을 넓히거나, 같은 서비스 면적에서 출력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중파방송은 안테나로부터 발사된 전파가 근거리에서는 지표를 따라 전파된 지표파로 청취권역이 형성되며, 이 권역을 실제 서비스권역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안테나로부터 공중으로 고각도로 발사된 전파 일부가 지상 100Km 높이에 있는 E전리층에 반사되어 원거리에 전달되기도 하여 타전파에 혼신장애를 주기도 한다.

실제 야간에 일본,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 발사된 방송전파가 무수히 수 신되는 것이 이 공간파에 의한 것이다. 이 공간파는 기술적으로 안테나의 높 이를 적절히 설계하면 줄일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의도적으로 남한을 향해 고이득의 지향성안테나를 세우고 공간파 복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 후의 시설정비에는 이러한 복사패턴의 조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나) 남·북한 송신시설의 조정

북한이 ITU에 등록한 송신시설 현황을 보면 출력규모면에서 남한의 2배규모인 10,600KW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송신시설을 대출력으로 시설하여 필요이상으로 원거리까지 서비스 권역을 넓힘으로써 예상 서비스구역도를 작성해 보면 전파의 중복지역이 많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인접국가에 혼신을 유발시켜 청취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출력 송신시설은 많은 전력소모가 필요하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파의 중복시설이나 필요이상의 대출력 시설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시설폐소 등의 조정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표 38>참조).

가. 1단계

- -북한의 대출력 시설중 전파의 중복시설 폐소
- -남·북한 전파저지 시설의 폐소

<표 38> 통일후 폐소 대상인 북한의 중파송신소 시설

시설명	주파수	출력
평 촌	531 kHz	100KW
천 마	612 kHz	100KW
강 남	657 kHz	1,500KW
신 상	738 kHz	100KW
화 대	801 kHz	500KW
상 원	855 kHz	500KW

나. 2단계

-남·북한 대출력 송신시설의 재조정

남·북한 대출력 송신시설을 국내방송과 해외방송으로 구분하여 해외방송은

1000KW 이상 대출력으로 국내방송은 500KW 이하 출력으로 조정

-해외방송서비스를 위해 대상지역에 근접한 위치에 송신시설이 배치되여 3 개 지역으로 분산 조정

북쪽: 러시아지역 동포방송

연사송신소(함경북도): 1,053kHz /1,500KW

동쪽: 일본지역 동포방송

학흥(함경남도): 999kHz /250KW

서쪽 : 중국지역 동포방송

웅진(황해남도): 1,080kHz /1,500KW

-국내방송용으로는 북한의 대출력 송신시설을 KBS-1R로 전환하여 국가 기간방송망으로 해야 하며 송신출력은 평양에는 500KW이하로 하여 단계 적으로 출력을 하양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화성송신소 시설은 남양송신소와 통합하고 김포송신소 시설은 폐소하고 당진과 제주 송신소 시설은 각기 중국과 일본 동포들을 위한 대외용 방송으로 활용하다.

2) 북한 해외단파 방송시설의 정비

영국 BBC는 위성을 이용하여 TV월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위성방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채널수가 증가되면 더욱 증가되리라는 전망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해외의 소식을 단파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전세계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CNN이 생겨나고, 또한 TV를 통해 각국 방송사의 특파원에 의한 세계주요를 시청할 수 있으므로, 청취상태가 나쁜 단파방송을 듣는 청취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로 이름난 영국의 BBC는 단파방송에 의한 월

드서비스를 향후 15년 정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그들은 해외 청취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단파기지를 임대하거나 외국방송사와 교환송출을 통해 보다 근접된 지역에서 깨끗한 상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단파방송기지는 3개소에 분산,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총출력 규모는 대략 4,000KW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쿠바 및 불가리아와 교환송출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규모면에서는 남한보다 많은 시설을보유하고 있으며 1일 31채널로 153시간을 9개 국어로 송출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해외방송서비스를 동일프로그램으로 중복 서비스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남한의 한곳과 북한의 한곳 이외의 시설은 단계적으로 철거할 필요가 있다. 존속시설로는 김제송신소와 북한의 평양송신소를 고려할 수 있음 이렇게 축소시켜도 남·북한통합채널이 늘어나므로 해외방송사들과 교환 송출 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FM 방송망의 정비

북한사회의 개방유도를 위해 우리의 실상을 알릴 대북한 라디오 방송 송신 시설이 필요하다. 1995년 8월 17일 KBS 광복 보도특집 대담에서 서독의 전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통일전 동독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 것이 TV방 송이 아닌 라디오 방송이었다고 술회했다.

북한은 남한의 라디오 방송 접근을 막기 위해 유선방송망을 가지고 있다. 또 라디오로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등 철저히 남한방송의 청취를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평축을 계기로 개시된 FM방송은 중파방송만큼 철저하게 차단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M방송 송신시설을 북한내 전파가 양호한 지역에 시설 송출하는 것이 대북방송서비스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M방송망의 정비는 통일전 유도단계와 통일직후 북한 전역에 FM기본채널 확장을 위한 1단계 정비와 남한 수준의 FM망 확장을 위한 2단계 정비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① 개방 유도단계

o 대북 FM송신소 시설방안

-대북 FM방송을 북한지역에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휴전선에 근접한 기존 송신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적절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서 송신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시설비와 운용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송신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설로는 해발 1480m이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KBS의 화악산 송신소가 적합한지역이라고 판단된다.

- 대북향 FM송신소 시설방안

설치장소 : 화악산

출 력:50KW

안 테 나 : 다이폴 8P/1면, (주빔방향 300도)

철탑높이 : 60M

서비스지역: 평양(43dBu), 남포(45dBu), 사리원(43dBu)

해주(54dBu), 신천(43dBu), 개성(80dBu)

평강(72dBu), 신계(47dBu), 남천(54dBu)

프로그램 : KBS-1R

② 통일후 1단계 정비

북한은 FM 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기가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는 5KW 이상의 FM송신 시설수가 21개소 29개파로서 아직까지는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송신시설을 증설시켜 서비스권역을 확대한다면, 중파방송에 비해 음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청취자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FM송신시설은 TV전파와 파장이 비슷한 VHF를 사용하므로 원거리 서비

스를 위해, 지형, 지물에 장해를 받지 않는 높은 고지에 TV송신소와 동일하게 시설하고 있다. 북한의 TV기간국수는 대략 53개소로 추정되므로 현재 14개소의 FM송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중 16개소에 FM송신시설을 증설할 경우 산악이 많은 북한지형을 고려하더라도 90%이상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신설시설, <표 39>참조).

방송프로그램은 우선 KBS-1R FM과 KBS-2FM을 중계가능하도록 2개 채널의 송신시설을 신설토록 한다. 송신기는 Hot Standby로 시설하며 2채널을설치한다. 안테나는 CP형 4단으로 하고 건물은 20평 규모로 증축하고 링크장비는 900MHz S시FMF 설치하며 전원은 추가되는 용량을 보강하는 것으로한다.

<표 39> 북한지역 FM송신시설 후보지

시설명	출 력	위 치	TV출력
구 성	1KW	E125.07/N40.04	1KW
백 암	1KW	129.00/ 41.18	1KW
세 포	5KW	127.25/ 38.44	10KW
소백산	5KW	128.12/ 41.52	5KW
송진산	3KW	130.17/ 42.24	3KW
수룡산	3KW	126.45/ 38.14	5KW
신 양	3KW	126.33/ 39.15	5KW
왕제산	5KW	130.01/ 42.51	5KW
운주봉	5KW	128.12/ 41.18	10KW
인 풍	1KW	125.21/ 40.28	1KW
자유봉	5KW	129.30/ 42.10	5KW
재덕산	5KW	129.26/ 41.07	5KW
전 천	3KW	126.21/ 40.26	1KW
차지령	3KW	127.35/ 41.23	5KW
학성산	3KW	126.49/ 41.23	3KW
향 산	3KW	126.03/ 40.08	1KW

출처: 송재극 외, 통일을 대비한 방송체계 연구, 방송개발원, 2001, p.43.

③ 2단계 정비

ㅇ송신시설의 정비

주요 선진국의 대부분은 20세기 말에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이하 DAB)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이미 1995년 9월 27일부터 DAB시험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1997년에 DAB방송을 실시하며 2005년에는 기존방식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 송신설비를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전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에 DAB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이전에 기존방식의 송신시설이 DAB시스템으로 완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의 FM망을 남한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은 DAB망으로 교체할때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이중투자를 방지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DAB 방식은 1대의 송신기에 5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신할 수 있으므로 시설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또한 같은 출력이라할지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어 송중계소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제작시설의 정비

송신시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시설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초기에는 아날로그장비에 A/D콘버터를 사용하여 운용하다가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도청소재지 소재 방송국에만 우선 시행한다. 대상지역은 평양, 해주, 사리원, 평성, 신의주, 강계, 해산, 청진, 함홍, 원산 등 10개국으로 한다.

④ 요약

독일 통일에서 방송의 역할과 통일이후 방송의 통합과정을 보면서, 통일전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방송 송신시설의 운용을 제안하였다. 통일이후에 북한방송망의 정비는 1단계로 북한에 통합된 방송을 시청취할 수 있도록 TV 및 FM송신시설을 교체·정비하고 2단계로 TVR시설과 지역방송 국 건물 및 제작시설을 보강·정비하는 것으로 했다.

또 전파의 중복지역이 발생되는 대출력 중파 송신시설은 6개소를 폐소시키고 8개소의 송신출력을 50KW로 조정하여 원거리 혼신을 제거하고 지역서비스에 적합토록 조정했으며, 북한내에 3개소의 단파송신소 중 2개소를 폐소 조치하여 시설의 중복유영이 없도록 했다.

5.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남북통신망의 직접 연결

현재 남북한 정부간의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용 통신을 제외한 모든 남북통신의 소통루트는 최단거리인 판문점루트가 배제되고 국제기구의 통신위성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의 통신망을 경유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통신회선이 제3국을 경유하게 됨에 따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중계료를 외국의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국제구간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매우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는 등 비경제적으로 통신회선이 구성, 운용 중에 있다. 또한 통신망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게 됨에 따라 접속점이 과다하게 늘어남에 따라 통화품질이 불량한 상태이며, 일단 고장이 나면 고장지점의 파악이 어렵고 복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통신망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신용도, 2003).

그리고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은 국토분단과 더불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한반도의 통신망을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거나 국제기구의 통신위성을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간 철도, 도로, 전력선 연결 복원과 함께 중계망을 직접 연결하여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남북통신망 구축 확대

남북 통신교류의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지역의 빈약한 통신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남북 통신교류가 현재의 제한적인 상태에서 한층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통신망을 확대하고 낡은 통신설비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식량의 확보에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아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경제상황이 단시일 내에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북한이 자체적으로 통신시설의 확대와현대화에 투자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 통신교류의 진전은 먼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북한 통신시설 구축 및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통신망 구축과 현대화 작업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북한경제와 통신사업의 특성상상당기간 동안 북한지역 통신망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인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통신교류는 기본적으로 통신수요가 있는 경제협력사업 및 관광지역에 한정된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경제협력의 확대에 연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지역내 통신망구축은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부문 또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지역의 통신망 확장 및 고도화와 개성공단지역에 대한통신망 구축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개성공단지역에 국내 업체의 진출 및 향후 전개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신부문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직접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구축되는 통신망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는 대로 남한지역의 통신망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이를 기점으로 기존의 간접연결을 직접연결로 전환하고 향후 남북간의 통신망 연결을 직접연결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사업을 통신부문의 직접연결을 추진하는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부부처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지원을 위한 직접통신망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 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데이터통신의 이용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음성통신서비스와 함께 데이터통신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점과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이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유선통신망 위주로 구축하기보다는 유·무선 통신망을 보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남북통신협정의 체결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차원의 통신협정 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신협정은 독일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남북한 통신망의 연결과 상호 서비스제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취지가 있다. 예로 통신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확장, 장거리통신의통과, 주파수 조정, 통신요금의 부과와 정산방식, 남북한 주민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및 통신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그 내용으로포함될 수 있다.

통신교류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법적 근거는 가능한 한 국제조약이나 관행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하여 양 지역을 매개로하는 장거리 통신이나 통신교류의 대상 등도 미래지향적으로 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에 있어서도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양측 당국간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 협정에 있어서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는 통신요금의 부과 및 정산방식에 관한 결정이다. 독일의 경우 상세하게 명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남북한에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국내통신과 국제통신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남북통신 교류 사례를 살펴 본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남북한 정부 간 직접연락을 위한 통신을 제외한 남북통신은 국제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국제통신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 북간 거래를 민족 내 거래로 간주하여 왔고, 또 1945년 남북분단 이후 줄곧 통 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고려할 때 국내통신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서 우편 및 전기 통신 교류를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 간의 교류로 간주하여 제3국을 경 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한다고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것은 앞으로 남북한 간 통신을 국내통신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 통신이 국내의 시외통신으로 간주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역번호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한 지역번호의 통합 및 정비는 남북통신통합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회선은 남북당국간의 연락이나 또는 경수로지 원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북한측과 남한측의 통신 을 위한 목적보다는 경제협력사업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파견, 근무하는 남한 의 인력들이 본사 또는 가족들과의 통신을 위하여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남북한간의 통신교류는 남북 경제교류에 수반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남북한 기업 또는 주민간의 실질적인 남북통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북한 사회가 아직까지 통제 하에 있고 대외교류에 폐쇄적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통신교류가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한 주민사이의 통신소통으로 확대,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 야에서 교류 및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확대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 과제

1)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및 법적 규율 현황

- ㅇ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많은 네티즌들이 북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 인터넷 교류 관련,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한 사례는 (주)두 산 백과사전 편찬, 한국기계공업사의 북한 정보 및 교역사업 추진, 박원 홍 의원의 대북한 회신 목적의 접촉 승인 등이 있음.
- 인터넷상에서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속하여 의사를 전달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북한 주민 접촉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아야 함.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간 교역(물자반출입) 또는 협력사업(전자상거래)도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남북교역에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 관련 쟁점

- 현재 북한 사이트에 회원가입, 전자우편교환, 대화방 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구매 등은 적극적 의사교환이 있는 것으로 인정, 모두 사전 승 인 대상이나 주로 제3국에서 운용중인 북한 사이트의 자료 열람은 현행 법상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2003년 국회의원(조응규 의원 외) 114명이 「인터넷 대북 접촉 자유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 아 있다. 이것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북한 개방을 유 도하기 반드시 처리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동조
- 국회에서 발의된(2004.7.15 임종석 의원 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남북 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 승인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은 존재함.
- 그러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국한하 여 사전 승인제 폐지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북한이 개설한 사이트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통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그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인터넷 접촉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나 인터넷
 의 기술결정론 내지 근대화론은 여타 저개발 국가의 경우, 반드시 증명되는 것은 아님.
- 특히, 북한의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 당국의 통제와 고비용으로 일반기업 들이나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인터넷이 북한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남북 주민간의 정서통합 효과제고도 미미할 것임.
-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 강화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접촉 자체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

3) 인터넷 접촉 사전 숭인제 폐지시 파급효과

- 인터넷을 통한 전화·팩스·이메일 교환을 일반 전화통화, 서신, 팩스 교환 등과 달리 취급하여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허용할 경우, 기존 매체 와의 차별적 시행에 따른 모순이 발생하며, 현행 법규의 규제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인터넷 접촉승인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남북간 교류협력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목적의 충족여부(즉, 정치적 목적과의 엄격한 구별 곤란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며, 자의적인 처리의 위험 상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 넷에 의한 대북 접촉을 합법화할 경우, 건전한 대북 교류 확대보다는 북 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

4) 현행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의 한계

- 현행 인터넷을 통한 북한 사전 접촉 승인제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현행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할 가능 성이 큼.

가.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숭인제의 절차상 문제

-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승인제에 있어 절차적 문제는 북한 주민 접촉과 같은 초보적인 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북한 주민과의 의사교환(이를 통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 기재사항의 지득)마저 북한주민접촉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접촉승인제의 실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을 크게 함.

나.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법 수용상의 한계

- 인터넷 교류가 활성화할 경우, 법 수용상의 한계와 인터넷 검열상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음.
- ㅇ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는 한, 운영주체의 국적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분해 내기어려움.

- 이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남한 주민은 운영주체의 북한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그 의무를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한 과실이입증될 경우,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승인제를 위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사전 승인제로 규제하게 되는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본 제도가 인터넷의 속성인 개방성(어떤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님)과 평등성(인종, 성별, 학력, 빈부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무제한적으로 접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이 큼.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방안이 요구됨.

다. 대북 접촉 상 '단순열람'과 '사이트 가입'이 갖는 의미의 구분 문제

- 대북 접촉상 '단순열람'과 '사이트 가입'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리 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단순열람은 '전 면허용 및 합법화'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회원가입 및 게시판 글쓰기 등은 '불법'이라는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차별적 처리)이 법적 타당성을 갖는 것 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친북 인터넷 단순열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 주민 접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의 단순열람'과 '사이트가입 및 게시판 글쓰기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북한 찬양 서적, 동영상 등을 보고 배우는 것은 합법(무조건 허용)이고, 친북사이트에 가입하여 반박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정 부의 승인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라. 상거래행위의 현실 관계 반영 미흡

-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변화된 남북 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현행 남북교류협법 체제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고려되고있지 못한 관계로 현실을 반영한 법체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만일, 현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북한 주민의 접촉 승인제를 유지할 경우, 이는 단순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북간 물적교류, 특히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화·인도적 사업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마. 정치적 내용 여부 확인을 위한 검열 채택의 어려움

- 북한 사이트로 판명될 경우에도 회원가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하나, 북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와 같은 협조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함.
- 사전 메일 검열, 사후 메일리스트 교환 등 안전장치를 할 경우, Privacy
 권(헌법 제17조) 침해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좌익사상 전파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한 삭 제 또는 폐쇄조치 가능
- 정치적 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메일 검열방안 등은 채택되기 어려움.

5) 요약

- 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다음과 같이 구분·정리할 수 있음.
- 첫째,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인터넷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입법목적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직접 방북에 따른 비용과 시간, 수속 및 정보교환의 어려움 존재
-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대남 선전책동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없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관 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둘째, 현 단계 법개정 불가론으로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대북 접촉의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규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불법적 대북접촉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임.
- 통신수단의 하나인 인터넷 접촉만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기존 접촉수단과의 형평성, 정치적 목적 여부 판단 등 현실적인 문제가 수반 될 우려가 있는 바.
- '남북간 우편·통신합의서'등 남북 당국 간에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먼 저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 ㅇ 이상의 주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종합평가가 가능함.
-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오늘날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특히 인터넷 교류의 증가 등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남북교류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연락, 약속 등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접촉승인을 신청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 ㅇ 또한 인터넷상 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를 폐지하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

정안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남북교류에 활용하고, 국민의 편 의성을 제고하자는 의도에서 발현된 것으로 인식될 부문도 있음.

-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의 초당적 협력차원에서 국회논의 및 시민단체에 서의 문제제기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반면, 승인제 폐지의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 접촉방법과 형평성 문제, 남 북간 인터넷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 미지수, 문제가 있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한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 따라서 현 단계에서 남북 인터넷 교류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타당한 대북 인터넷 교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됨.

7. 인터넷 교류·협력 및 개방 전망

- 북한 당국이 체제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님.
- 인터넷에 관한 북한의 관심은 아주 높으며, 인터넷 개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에는 인터넷이 사회주의 체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제거하면서도 인 터넷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의 인터넷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다음의 두 가지임.
- 첫째, 대내적 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 둘째, 대외적인 군사안보 환경으로 북한의 인터넷 개방은 군사·안보적인 이슈와 관련된 국제환경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음.
- 북한의 인터넷 개방은 대외관계, 특히 북미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망을 하나의 거대한 인트라넷으로 구축한 채, 외부의 인터넷과 제한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는 체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을 통해 대북한 체제위협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면, 북한은 우선 자격과 신분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인터넷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며, 웹 메일 개발과 전자상거래구현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을 개방할 경우에는 초기 개방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이 개방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북한의 국내 망을 하나의 거대한 인트라넷으로 구축한 채, 외부의인터넷과 제한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는 체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동시에 북한은 인터넷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기업들과 합
 작사업을 강화할 것임.

8.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방안

1) 인터넷 접촉 승인제 관련 문제

사전 접촉 승인제의 문제는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보수적 대응과 혁신적 변경으로 그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 인터넷에 대해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할 경우, 북한 개방의 효과보다는 북한측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연합회(범태)」와 「조선장생무역총회사」가 「훈 넷」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도박 및 복권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한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인터넷 접촉 승인제의 유지나 단순한 절차간소화는 향후 인터넷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현실공간(우편, 전화, 팩스 등)에서 접촉의 경우와는 별도로, 가상공간에서의 접촉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이 규정을 위배하여 접촉할 경우 반국가적 행위(국가보안법 적용)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개인과 단

체를 분리하여 접촉 승인제와 신고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북한주민 사전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접촉 승인제가 변경 또는 폐지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2)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① 북한 상황과 연계한 인터넷 개방 지향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인터넷망에 연결할 것을 전제로 남북간의 인터넷 교 류협력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개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일부의 전략기관을 제외하고는 외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인트라넷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기술상의 문제는 북한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선발 인터넷 개방 국가들과의 대외 기술협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방화벽(firewall)에 관한 연구를 완성한 단계이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과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봉사도 시작했음. 현재 국내망에 연결된 웹사이트 수와 국내망의 이용자 수가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러한 추세와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인터넷의 외부 연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2003년 기 허가한 전자결제나 전자상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 내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전문 기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따라서 북한이 인터넷을 개통할 것을 전제로 대북 인터넷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이 망설이고 있을지라도 유인동기를 부여하여 인터넷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촉 승인제 폐지는 승인제 유지에 따른 문제점 및 승인제의 폐지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개방은 통행·통신 등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남북한간 정보 통신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단계적 추진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의 효율성, 성공 가능성, 지속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자의 인 터넷 교류협력 회담을 추진하고, 인터넷 교류·협력 환경 조성과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오프라인 교류협력의 매개수단으로 먼저 활용하게 한 후, 온라인 교류협력의 매개수단 또는 인터넷 그 자체를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먼저 인터넷 교류를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교류협력 관련, '정치'의 최소화와 '상업'의 극대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서 채택을 추진한다.

인터넷 교류협력 관련 모든 법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터넷 교류협력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적극적 자세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③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은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인터넷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남북경협 사업자, 시민단체, IT 관련 전문가 등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 관련부서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방안을 마련하는 항

시 체제가 필요하다.

가. 제 1단계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현실, 국가보안법 등 우리 법체계,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 활용가능성 등의 감안할 때, 현 인터넷 접촉 승인제 폐지는 시기상조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상 어느 것이 북한 사이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점과 북한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수많은 국민이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제1단계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전 상태로 상정하고 현재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되, 인터넷상으로 접촉 신청 및 승 인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교류협력접촉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률이 97.7%이고, 불승인률이 0.8%에 불과하다는 점, 인터넷에 있어서는 상당수가 실제 승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접촉이 상당할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할 때, 사후 승인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제 2단계

○인터넷 접촉 승인제 폐지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넷 접속의 심리적 특성, 시민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감안,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승인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목적(비정치·군사적 목적)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사후 신고제로 전환하다.

다. 제 3단계

남북교류협력상 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전 전환하되, 인터넷 접촉의 완전 자유화를 구현한다. 핵문제 해결 이후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인터넷이 상당 부분 개방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대폭 진전될 경우, 가칭 '남북사이의인터넷교류에관한합의서' 채택과 연동하여,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우편·전화·팩스 등에 의한 접촉의 경우, 현행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며, 인터넷을 통한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하여는 완전 자유화를 구현한다.

3) 분야별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 방안

상기 제시한 단계별 인터넷 교류협력 승인제 개선과 연결하여 부분별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제 1단계: 남북 공동 인터넷 사이트 개설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찾기, 대북인 도적 지원 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안티역사왜곡 등의 공동 인터넷 사 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시범 인터넷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의 협조를 요청한다.

② 제 2단계: 북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교류 활성화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정 수요가 있는 바,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농업, 임가공 분야의 교역 등을 비롯하여, 남북한 전자도서관 구축과 같 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③ 제 3단계: 인터넷 교류·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

인터넷을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IT산업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4) 인터넷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① 승인제 운영의 유연성 확보

인터넷을 통한 북한 주민 접촉 관련 승인제를 승인대상 및 기간 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필요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 목적 범위 내에서의 장기간 승인 허용한다.

해외에서 개설·운용되는 북한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내용 확인 후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승인 및 신고내용을 간소화하고 양식을 정형화하여 승인신청 및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신고 관련 법규정 정비, 회합·통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정비대상 법제 및 조치사항

사후신고 관련 법규정 정비

- 사후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위임 규정 없이 동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는 바, 법에 사후신고사항에 대한 근거를 먼저 둔 후, 동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후신고 사유를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o 회합·통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과 국가보안법 제8조의 '회합·통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함.
- ㅇ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 개정

- 북한 인터넷 사이트나 컨텐츠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등) 또는 규제기관 및 절차의 일원화 등에 대한 방향 제시가 요구됨.

③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 정부의 인터넷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 정부의 공식 입장을 수립하고, 통일부가 대북 주 무부처로서 인터넷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5) 정책적 고려사항

① 북한의 인터넷 미개방 요인

북한은 한편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유해 한 콘텐츠를 적극 통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한이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에 개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거시적인 국가전략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재건 사이에서의 우선 순위가 체제의 안전보장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전략이 물질적 혜택의 제공을 체제유지와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와 선전을 기반으로 북한 주민을 정신적으로 설득하는 통치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인터넷 개방을 제약하는 요인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넷 개방에 따른 편익이 정치적 역기능에 의해 상쇄되고 체제안정을 훼손하는 독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성과 시공을 초월한 빠른 정보 전파력, 그리고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체제상의 혼란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터넷의 정치·경제적 딜레마 때문에 인터넷이 상업적 가치를 넘어 잠재적인 경제이익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② 인터넷 개방과 북한의 선택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인터넷을 개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북한이 체제에 유해한 정보를 검열 및 차단할 수 있고 해킹 방지 등의 정보보안 및 정보검열시스템, 인터넷 통제와 이를 이용한 사회통제제도가 마련될 경우, 인터넷 개방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 개방은 전면 개방보다는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즉 중앙 통제에 기초한 단계적인 개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인터넷 전략을 조망하면, 인터넷 개방은 적어도 북미간의 체제보장과 핵 폐기를 둘러싼 공방이일단락된 이후 구체적인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6) 인터넷 교류협력 합의서 도출방안

남북한은 2002년 12월 8일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서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하도록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남한은 먼저 북한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지구에 한해 인터넷을 개방하도록 촉구하여 긍정적인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점차 북한지도부가 인터넷교류에 대하여 신축적 자세를 갖도록 해야한다.

또한 남한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시간 및 비용 절약, 불량품의 반품이나 교환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통신연락이 긴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북교역을 점차 온라인 거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무엇보다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개성 공업지구에서의 인터넷 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 주하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하며, 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6)

북한의 개혁·개방이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이미 이루어진 북한 측의 제한된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가칭 '남북사이의 인터넷개방을 위한 합의서' 채택을 추진한다.

- ㅇ '남북사이의 인터넷개방을 위한 합의서'에는
- ①남북간 인터넷교류의 민족내부 교류성,
- ②남북간 인터넷통신망의 연결 및 운용,
- ③인터넷 통신망 장애제거 노력 및 통신망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협조,
- ④비상통신보장체계 수립.
- ⑤상대방 법률제도 및 국제관례의 존중,
- ⑥인터넷교류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 ⑦인터넷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 상호제공,
- ⑧남북정보통신기술의 제공 및 협력 등을 규정 함.

7) 대남 심리전 수단 활용에 대한 대처방안

'반국가적'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속과 심의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북 인터넷 역공세를 강화하고 네티즌들이 북한측 혹은 친북세력의 대남 심리전 공세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종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인터넷 안보를 위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

8) 접촉 승인제 폐지에 따른 대국민 설득논리

남북교류협력법이 촉진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현실과 지나친 괴리가 없어야 하며, 특히 교류제한 및 통제적 측면을 불식·최소화하고 교류촉진 법적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인터넷에 의한 대북접촉시 사전승인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모색한다.

정부 스스로 인터넷에 의한 북한주민 접촉승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서 이를 계속 규제하려 할 경우 국민과의 불화를 야기할 것이며, 법치허무주의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홍보한다.

남북한간의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에 정보화 사회의 조기정 착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IT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이 활발 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북한주민 접촉에 대하여 는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Ⅵ. 기타

1. 돌발 사태를 대비한 방송 운영

돌발 사태에 대비한 위성 DMB와 대류권 산란파 방송의 기술을 시행하여 야 한다. 우리나라 지상파 및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의 콘텐츠 관리 및 유통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DMB-AF'는 지상파, 위성 DMB를 비롯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등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 저장,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표준 파일 형식이다.

DMB-AF를 이용하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슬라이드쇼, 방송웹사이트 등 다양한 DMB 콘텐츠를 DMB 수신단말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유통이 가능해져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 형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시장 규모가 유료 서비스 가격을 최소수준인 월 3천원 정액형으로 가정해도 2010년에는 연 2400억원, 2013년에는 연 4800억원 시장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진우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장은 "이번 'DMB-AF'의 국제표준 발간으로 DMB 기술의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통해 DMB 서비스를 발전시켜 신시장 창출 및 DMB 산업의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대류권 산란파 방송은 한국 울산의 무룡산과 일본 빈전을 잇는 스캐터(대류권 산란파)통신 60회선(음성급)이 개통돼 우리나라의 국제통신 환경이 광대역통신 시대로 진입하고 경제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했다.

이 회선의 개통으로 전송품질, 회선의 안정성·신뢰성·신속성 등 국제통신 서비스의 종합적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정보산업시대가 요청하는 다 양한 국제통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송로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전화서비스의 경우 종래의 단파회선에 비해 명료도나 안정도가 모두

향상됐으며 통화 소통률은 개통전의 약 3배로 급증했고 이후 매년 1.5배씩 증가해 곧 용량 확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텔렉스 업무도 개통 후 통신 중단사고가 격감하고 소통량은 매년 약 1.5배로 급격히 신장했다.

2. 조난 방재와 방송통신

□ 조난 방재 시스템의 필요성

자연재해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언제나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산악 지대나 해상에서의 조난, 지진·태풍·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는 방송과 통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지난 9.11 테러 이후 조난방재 통신망 구축 등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남한방송에서는 재난방송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초적으로는 아마추어무선국(HAM)의 역할에서부터 위성통신과 이동통신을 활용한 조난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부문에서의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 방송과 통신의 조난방재 시스템과 남북협력

대풍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진원지로부터 지속적으로 대풍을 추적하여 대풍의 진로와 피해지역을 예상하여 해당 지역이 대풍에 대 비하도록 통신망과 방송망을 통하여 전달함. 특히 유선망 시설이 기능을 잃은 경우, 위성통신망이나 무선통신망을 활용한다.

재해시에는 SCPC(single channel per carrier), SNG(satelite news gathering) 등으로 기존의 통신·방송망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⁶¹⁾ 특히 재해 발생지역의 지상통신망이 단절된 산간도서벽지의 경우 신속하게 정보 전달이

⁶¹⁾ SCPC 위성 지구국 장비는 쉽게 헬리콥터로 공중 수송이 되어 별도의 유선 연결이 없이 설치할 수 있음. SNG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지구국 시스템의 일종으로 주로 차량에 탑재하여 현장취재 와 최신 뉴스용으로 주로 사용함

가능하다. 또 이동위성통신으로 인구 희소지역이나 산간지역 등과 같이 지상 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통신을 구축할 수도 있다.

□ 남북한 방송과 통신의 조난 방재 시스템

○ 방송

남한의 경우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상황이 되면,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처요령 등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방송을 실시한다. 재난 방송은 TV·라디오·인터넷·DMB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한다.

최근의 북한 TV방송에서는 재난방송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홍수나 태풍의 경우에 실시간 재난방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라디오나 유선방송(제3방송)이 재난방송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TV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방송을 거의 하지 않는 북한방송의 특성과 사회의 어두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특성이 겹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북한TV방송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자연 재해에 대응하는 방송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남한방송이 북한방송에 재난방송을 대비한 장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송협약을 하고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통신

남한은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자연 재해 등의 위험 예보를 한다. 현재 이동 전화 중계기가 전국의 등대에 확대·설치되면서 휴대전화 통화거리가 연안에 서 20km 미만에서 50km로 확장되었다..62) 이로써 거의 전국토와 주변 해상 이 이동통신에 의해 연결망이 구축됨

북한은 이동전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⁶²⁾ YTN 2008sus 11월 23일 보도

상황에서 조난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하여 조난 방재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의 이동통신과 연결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남한의 이동통신 사업체가 북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 남북한의 합의 하에 재난에 대비한 방송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플랜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나설 필요가 있다

3. 돌발 급변사태의 방통시스템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전망

2008년 9월 북한정부 수립 60주년 행사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가능성이 높다. 유관 언론정보기관에 확보된 정보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체제를 유일적으로 지배하던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된다면 북한체제는 상당한 변화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자유로운 활동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수준의 건강 이상일 경우에는 당분간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1월이 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활동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고, 활동이 가능한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적어도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국정장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보좌하는 후계구도가 구축되어 이후 북한정치권력을 공동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일정한 시점에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것이 급변사태로 발전하기 보다는 후계권력의 안정적 계승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북한 정치체제는 취약점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남한의 대북정책 전망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은 평화적 관계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측면의 위험성 때문에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노태우정부 시기에 마련된 '한민족공동체통 일방안'을 기본 형태로 하며, 이는 평화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현재 남한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합리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명박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내지 내부의 변동에 상관없이 그 여파가 남한과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 없게끔 대비하고, 남북관계의 화해협력기조를 유지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 정부는 북측의 현재 정권이든 차기 정권이든 상관없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정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원칙으로 할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북한지지 지속,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지속이 필요하다. 중국은 자국의 필요상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높음. 남한의 경우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갖게 되는 경우부담이 크므로, 향후 화해협력적 대북정책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방송의 대응 방향

- 대북 홍보를 효율화하여 북한주민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내외 사정을 정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공포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메시

지를 전달해야 한다.

- 북한과 주변 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남한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급변사태시 남한방송의 구체적 대응 방안

휴전선과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취재 활동을 진행하고, 북한 내부에 대한 취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청취가 확인되고 있는 대북 라디오방송을 통해 사태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북한 주민의 가치관 혼란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급변사태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남북한 주민 상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라디오를 통한 대북방송만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디오의 경우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대북방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북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 발생시에는 북한의 통신, 방송중계망, 유선라디오 중계망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주민에 제공할 라디오 수신기를 남한이 준비하고, 남한의 TV방송을 북한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PAL방식의 TV제작기술, 방송중계차, 송신기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의 방송망이나중계망 정비를 위한 계획, 방송위성을 이용한 광역방송망들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 급변사태시 남북한 방송의 협력이 가능한 경우 대응 방안

북측의 협력이 가능한 경우는 평양의 중앙방송 기능을 살려 네트워크에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는 비상방송체제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방송망은 지역 방송의 기능이 없으므로, AM/FM 방송 및 중계, TV 방송 및 중계, 위성통신 및 방송의 송수신이 가능한 비상방송차를 북한 각 도에 배치할 수 있는 준비

를 해야 한다.

□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한 방송통신 협력

화해협력단계 후기에 긴급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방송에 대한 접근은 이미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일 것이다. 후기단계에는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통해 남한 방송에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한 대북방송의 안정된 통로가 화해협력단계 중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TV방송의 경우는 이 시기까지도 방송방식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급변사태로 인해 통일이 되는 경우와 보다합리적인 북한정권이 성립하는 두 개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보다 합리적인 정권이 등장하게 된다면, 남북한 방송통합을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남북관계 변화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북한은 통일 단계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방송과 출판의 상호 허용이 이루어지기 전인 연합단계 초기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지역에서 PAL 방식에 의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NTSC 방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송망과 수신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디지털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방식도 모색해야 함). 남북연합단계에는 남북한의 방송방식을 통일하거나 신기술에 의해 남북한주민이 상대방의 TV수신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방송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방송통신 시스템의 일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북한정권이 불안해 하는 체제불안 요소를 해결해주고, 통일적인 방송통신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통일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남북 통합을 위한 방송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주철, 2008).

VII. 분단국 벙송통신 교류 실태

1. 동서독 방송교류의 특징

1948년 2월까지 동독과 서독은 상호간에 신문과 기타 정기 간행물이 소련과 연합국 지역간에 부정기적으로 나마 교환되어 읽히고 있었다. 이러한 인쇄매체의 보급과 교환은 나치정권 이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측은 소련의 '평화공세'(공산주의 선전)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소련점령지역(동베를린 및 동독지역)으로부터 이들 인쇄물의반입을 금지시켜 버리고 말았다.63)

한편 서독 정부가 취한 초기의 반사회주의, 또는 반공주의 정책도 그후 빌리 브란트의 등장과 함께 소위 '동방정책'의 실천으로 동·서독은 새로운 관계에 돌입케 된다. 동독과 서독의 언론정책, 특히 방송관련 정책의 변화과정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기의 아데나워 정부의 엄격한 반공주의정책은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의 실천과 함께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1985년도의 헬싱키조약이 체결되자 더욱더 완화국면으로 발전한다.64)

이러한 동·서독 언론정책의 변화는 특히 인쇄·출판물에 대한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아데나우어 수상이래 지속되어 오던 할슈타인 원칙은 1960년대 중반까지 철저히 지켜져 왔다. 그러나 에르하르트 수상의 뒤를 이은 키징어를 수반으로 하는 기민-사회당의 대연정이 시작되자 대 동독 정책의 변화가 나 타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정치적 범죄처벌법의 수정안으로 불리어지는 제8차 형법개정법률안이 1968년 5월 9일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법률안을 통해 대동독 언론정책

⁶³⁾ H. Pross, "On German Identity", Media, Culture & Society, Vol.13, 1991, p.341.

⁶⁴⁾ 동서독의 방송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박종수,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앞의책, p.312ff, Norbert Linke, "Die Rezeption der Programme von ARD und ZDF in der DDR als Gegenstand der SED-Kommunikationspolitik", *Publizistik*, 1987 /1, pp.45-68.

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서독의 경제장관은 양 지역 간의 교역을 위한 일반허가 제1호(1968년 7월 22일자)65)에 의해서 동독으로 부터의 신문 및 잡지에 관한 지역간 교역의 법적 허가를 하게 된다.

1972년 12월 21일에 기본조약과 함께 교환된 '기본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는 기본조약 제3조(양국간의 국경선 문제와 에너지공급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구성에 관하여)에서 밝힌 문제와, 제 7조에서 밝힌 각종 교류사업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중에서 동·서독간의 언론교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제II부(제7조에 대하여)중 제10항(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서적,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물의 상호간구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인데, 이를 기초로 향후 동·서독간의 언론교류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기본조약 체결후 텔레비전분야에서는 보도와 취재활동을 계속 수행하면서 매건별로 방송용 프로그램을 상호 입수하기 위한 접촉이 진행되었다. 특히 매년 서독의 만하임에서 개최되는 단편영화 감상회, 그리고 오버하우젠에서 개최되는 단편 및 기록영화감상 주간행사, 그리고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국제단편 기록영화제 주간행사 등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영화제작자, 배급회사, 영화기자, 평론가들의 접촉과 의견교환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국립영화자료실, 서독의 비스바덴시에 있는 독일영화기술연구소, 서베를린에 있는 영화기술재단 그리고 동·서독 영화기자협회 등은 국제적 전문단체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기도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기본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72년 11월 8일 『기본조약』의 합의 결과로서 서신교환을 통해 추진되었던 서독 기자들의 동독 내에서의 인준, 취재가능범위 및 취재조건과, 무엇보다도 법적 지위가 타결됨에 따라 1974년 10월 1일자로 서독 제2 텔레비전방송(ZDF: Zweites Deutsches Fernsehen)은 동베를린에 특파원 사무소를 설치, 가동하기에 이른다.66)

⁶⁵⁾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 138, 1968. 7. 27.

⁶⁶⁾ Herbert Heinrich, Deutsche Medienpolitik, p.112.

그러나 동서독간에 실질적인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방송협력은 보다 발전하게 된다. 1971년 9월 30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우정성대표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우정성대표단 간의 협상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서베를린 지역과 동독, 특히 동베를린 지역과의통신교류가 다소 개선되게 된다. 또한 같은날 우정성 대표들은 동·서독간에「표준 컬러텔레비전 방송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동·서독 언론분야의 교류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1980년대 후반의 동·서독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은 결국 1986년 5월 6일 동·서독간의 「문화협력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사이의 협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67) 1972년 12월 21일에 맺어진 동·서독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이후 '상호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문화협약」이 맺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협약」의 배경에는, 당시 유럽의 통합 움직임(EC)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동·서독간의 관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던 것이다.68)

유럽내 '문화장벽'의 제거가 비단 유럽국가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독 간에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은 1985년 체결한 「문화협약」에 따라 예술 및 방송, 텔레비전 분야 등 거의 모든 문화관련 분야에서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문화협약」제9조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분야에 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독간에 방송교류협력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문화협약이 맺어진지 2년여 후인 1987년 5월 6일 서독의 ARD와 동독 TV위원회간에는 방송부분에 관한 협약이 또다시 체결되었는데 상호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과 저작권 인정문제등을 다루었다.

⁶⁷⁾ cf: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 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 ratischen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1989.

⁶⁸⁾ R. Picht, "Die Kulturmauer durchbrechen. Kulturelle Dimension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Zusammenarbeit in Europa", Europa-Archiv, Folge 10/1987, pp.279-286.

동서독간에 체결된 「문화협정」 또한 보도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협정 제9조69)에 따라 서독의 제1, 제2 TV 인 ARD 및 ZDF와 동독의 텔레비전방송(DLF: Deutschland Fernsehen)간에 부분적인 프로그램교류와 프로그램 공동제작이 시작되게 되어 상호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독의 급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70)

드디어 1987년 5월 6일 서독 공영방송연합과(ARD)과 동독 국무원 텔레비전위원회(Staatliches Kommitee für Fernsehen) 사이에 『동서독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구체적인 방송교류의 길을 열게 된다.71) 이 합의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무제한 매입, 연중 1-2회의 프로그램 시사회, 저작권보호, 구입된 프로그램의 제3자 양도를 제외한 자유로운 사용, 방영일자에 관한 상호 정보제공, 상주특파원과 일시방문 특파원, 취재기자와 카메라팀의 지원, 유러비전(Eurovision)과 인터비전(Intervision)간의 기존 교류 서비스 활용및 기타 중계비 등 취재비 지불,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편집권, 독일어로 된 제3국의 프로그램 구입권, 상호 중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관한 간행물 제공, 상호 정보여행, 박람회나 전시회와 기타 행사에 대표자파견, 제작기술경험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12장으로 쓰여있는 동 합의서는 상호 TV프로그램의 구매와 합작 및 프로그램정보의 교류를 위한 것이며, 특히 상주특파원들이나 임시특파원, 그리고 취재기자와 카메라맨들의 상호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독간에 제기되던 전파월경의 문제가 이제는 상호간에 프로그램의 공동제작과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완전개방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⁶⁹⁾ 문화협정 제 9조에 따르면 "협정당사국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부분에서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 사국들은 해당기관들에 대해 이러한 목적의 협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고 되어있다. 통일 원, 동서독관계자료 III. 『내독관계 발전사』, 1990, p.849.

⁷⁰⁾ 위의 책, p.468.

⁷¹⁾ 통일원, 『독일통일 실태 자료집. - 비경제분야 -』, 1992, pp.534-538.

2. 중국과 대만 언론교류의 특징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지도방침을 확정하고 중국은 이에 따라 개혁과 개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잠시후 대만관련 정책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1979년 1월1일에 대만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제안하는 건의가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본격적인 대만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표명은 1984년 10월에 당시 등소평(鄧小平)이 홍콩문제해결원칙에의거해 대만정책을 평화통일, 1국가2체제로 천명하면서 전개된다.

새롭게 바뀐 언론정책은 대만상황을 소개하는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점차 대만소식과 각종뉴스의 양을 늘려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도부터 중국의 TV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약간씩 대만의 TV뉴스를 인용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6년도에는 처음으로 대만의 영화를 방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6년 1월이 되면서 대만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보수요와 욕구를 감안하여 중국에서 발행되는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 그리고 중앙통신사(中央通信社) 등 68개의 중국정부측, 또는 민간기구의 중국신문의 수입을 허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해 7월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풍물과 문물이 담긴 비디오 테잎을 출시허가를 하게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올바른역사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들여온 것이다. 이 테잎은 그후대만방송에서 방영되기도 하였다.

그후 1987년 7월15일 대만당국은 38년간 지속되어온 계엄령 및 타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가 있은 지 두달 후 대만 의 신문사인 자립만보(自立晚報)의 두명의 기자가 베이징에 도착하여 취재활 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측 기자가 여행비자를 발급받고 일방적 으로 중국을 방문, 취재했던 행위였다. 여하튼 이로인해 공식적인 중국취재가 이루어진 셈이다.

1987년 11월 1일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이하 중국기협(中國記協)으로 칭함)의 책임자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만기자의 중국

취재 사무를 처리, 협조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대만기자가 중국취재를 원할 경우 본 사무처에 위탁서와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기협의 동의를 얻어 취재 증을 발급하고 중국취재시 중국으로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당시 대만정부가 취하고 있던 중국에 대한 보도금지는 1988년 1월1일부터 모두 해제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중국보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급기야 1992년 3월과 7월 사이에 양국 언론이 공동주최하는 어린이 글짓기와 사생대회가 공동으로 개최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활발한 중국의 대만포용정책 결과 92년도 한해만에도 중국에서 대만의 TV드라마 19편이 550회나 방영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72)

한편 1992년 7월 대만의 입법원(立法院)은 형법 제100조 반란죄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16일에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인민관계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다. 여기에는 통신, 투자, 무역, 혼인, 상속 등 제반문제를 포함한 양국 민간단체의 각종 교류와 왕래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이 조례의 제77조에는 '소위 내란죄 등에 대해 소추와 처벌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제부터는 중국공산당원의 대만방문시 문제가 되었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있자 1992년 7월23일에는 드디어 중국 푸지엔(福建)방송국의 드라마 제작진 일행 17명이 대만땅을 밟게 된다. 이들 일행이 중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중국측 언론인으로 기록된다. 이어서 대만에서는 정식으로 제4방송 채널(중국채널)을 개방하였고 파라볼라안테나로 대만 이외의 위성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그후 1992년 9월5일 정식으로 대만을 취재하는 중국기자단 일행이 대만에 착륙한다. 이것은 중국기자로서는 정식으로 대만땅을 밟은 최초의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로부터 50여년간 대치되었던 쌍방간의 관계는 새로이 언론교류를 통한 협력관계로 출발한다.

물론 언론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실로 알 수 없는 엄청난 역경이 있었

⁷²⁾ 위의 책, p.181.

을 것이다. 수많은 장애와 시련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자유로운 취재와 협력이 가능하기까지의 중국측과 대만측의 역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혹자는 그들의 교류사례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강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다른 것 자체가 좋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언론교류 정책을 주도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름 아닌 개방을 주도하는 쪽이 교류의 주도권도 더 많이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단 교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도 자신감을 지닌측이 자연 개방을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분단 이래로 인식의 단절과 갈등적 관계로 점철된 남북관계는 상대방체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상호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이 따라 야만 하는데 남북간 방송통신교류사업의 추진이 그 핵심적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방송통신교류의 추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남북교류의 선결과제라 한다면, 그러한 문제로서 우선적으로 남북 한 정부는 방송통신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

교류의 환경조성 없이 어떠한 교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적 선전에 다름 아니다. 50년대 말에 이미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언론인교류에 관한 제의를 제기하면서 60년대에 들어와 계속적으로 언론인 교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시 분위기로 볼 때 동의할 성질의 것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이었다. 특히 남북간에 확고한 언론교류의 의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인기를 목적으로 감상적 언론교류의 제의가 난무(?)한 것은 오히려 진정한 남북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표 40> 분단국 언론교류 기본정책 및 교류 형태 비교73)

해당 국가 분야	남북한	동서독	중국·대만
신 문 사	-1988년 7·7선언발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교환, 1992년 발효	-1972년도부터 양국간 기 본 협약에 의거해 처리	-1987년 대만정부 계엄령 해제 -1990년 중국정부 대만기자 취 재활동에 대한 지침발표 -1992년 대만정부 내란죄 관련 부문 폐지로 중국기자 대만방 문, 취재 가능해짐
	-1991, 2년 남북고위급 회담 상호취재	-양지역에 각기 상주특파 원, 신문사지국 설치, 취 재, 보도	-1986년부터 대만정부 중국 신 문수입 허가 -1987년 대만기자 중국여행 방 문, 취재 -1989년 대만정부 공식적으로 중국취재 신청 허가 -1992년 중국기자 처음으로 대 만 방문, 취재
방송국	-1988년 7·7선언발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교환, 1992년 발효	-1972년도부터 양국간 기 본협약에 의거해 처리	-1990년 중국정부 대만기자 취 재활동에 대한 지침발표
	-7·7선언후 남한 TV에서 북한프로그램 제한적 방영 -1990년 남북통일축구남북한 동시 생중계 -1991년 세계청소년 축구 남북 공동중계 -1998년 남한TV에서북한 영화 공식방영	-1974년 서독 ARD 동베를린 사무실 개소, 취재 보도개시 -EBU와 OIRT를 통한 프로그램 교류 -1986년 문화협약과 1987년 동서독 방송사간 방송협력합의서 체결에 따라 프로그램 직접교류 및 공동제작 가능	-1984년부터 중국방송에서 대 만소식 소개 -1986년부터 중국방송에서 대 만 영화 방영 -1992년 대만정부 중국TV채널 개방/위성안테나 허용
기 타	-1993년 김대중정부 100대 중점과제 발표 -1998년부터 북한측 남 한측에 금강산 관광 허 용	-1968년 8월 1일 부터 현법에 대해 적대적인 선전자료의 도입과 배포에 관한 금지조항을 동독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정. 따라서 동독으로부터 신문및 잡지에 관한 지역간교역의 법적 허가를 받고서독내 동독신문판매TV는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상호 시청가능 -1971년말부터 우편,통신(전화/전보 등)교류 확대실시	-1986년부터 대만정부 중국 비디오 수입을 허가, 나중에 대만 TV에서 방영됨. -1987년 대만정부 게엄령 해제

⁷³⁾ 박종수, 윤창빈, 앞의 책, p.91-92.

3. 통독전 동ㆍ서독간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시사점

독일통일은 동서분단 이후 40여 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양독간 교류와 협력의 결과물로서 교류, 협력, 통합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전 동서독간 정보통신 교류는 기타분야의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독일의 통일에 가장 큰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통일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과정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최근 남북한간 교류협력이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은 국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독일통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분단이후 통일이 되기까지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후 동서독의 교류 및 협력과정은 양국의 독일(통일)정책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은 서독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과 전략에 따라 다음 4단계로 구분된다.

- ▶ 1단계: 1949년부터 1963년까지 아데나워(Adenauer) 시대로 동서독간의 관계는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공식적으로 양독간 접촉과 교류가 거의 없던 단계
- ▶ 2단계: 1963년부터 1969년까지 국제적으로 미·소간 긴장완화 정책이 추진된 시기로 동서독 관계 또한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방향전환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던 과도기로 제한적인 무역거래가 시작된 단계
- ▶ 3단계: 1969년부터 1982년까지는 사회민주당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정립된 단계로 양독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특히 동서독간 통신 및 경제교류가 활성화된 단계
- ▶ 4단계: 1982년부터 1989년까지는 기민/기사당이 집권한 시기로 당시 수 상이었던 콜은 민족적 관점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통일정책을 강조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

이 시기에는 동서독간 교류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특히 문화교류 및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활성화 된 단계임.

이와 같이 점진적 단계를 밟으며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간 서독의 대 동독정책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동독과 상호 융합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 은 아니었다. 양독 정부는 분단 초기는 물론 70년대 이후 양독간 교류와 협력 이 활성화된 시기에도 독일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달리하였다. 특히 국가승 인 문제, 단일국적 문제, 민족 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표방 하였다. 독일문제에 대한 상이한 기본입장은 1973년 양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 약에 대한 양측의 서로 다른 평가에서 잘 나타난다.

동독 측은 기본조약을 서독이 동독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승인한 분단조약으로 해석하면서 동독은 서독과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독 측에서 볼 때 기본조약은 1민족 2체제의 특수관계라는 개념으로 동독을 하나의 독일이라는 틀 안에 고정시키고,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케 하는 기본장치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서독은 양독간의 접촉과 교류를 시종일관 내독간의 문제로 접근한 반면, 동독은 국제적 관계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독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교류업무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기로 한 반면, 동독은 가능한 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정책관련 기관을 내세움으로써 동독의 국가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교류협력에 대한 양독의 기본입장이 다르고, 또 그 추진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쌍방간의 접촉과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제한적이었지만 공식적 접촉을 기피하던 분단 초기부터 양독간의 접촉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 주요 원인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① 동독경제는 서독과의 교역에 의존되어 있었다. 분단 초기부터 동독경제는 서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분단 이전부터 동독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었으며, 또한 분단이후 소련이 전쟁보상 및 독일 약화정책의 일환으로 동독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을 철거해 갔기 때문에 경제재건에 어

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편 동독의 무역상대국은 주로 동구권에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독입장에서 서독과의 경제교류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특히 동서독간의 교역은 서독에서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어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타 국가와의 교역에 비하여 그 이익이 컸던 것이다.

- ② 서독정부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였다. 특히 서독정부 는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교류의 확대는 분단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장려하였다. 그리하 여 서독은 동독이 내독 교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에 대응하여 동서독 주민들의 자유로운 상호방문과 동서독간 우편 및 통신 보장을 위한 직접통신망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독 측에 요구하였다.
- ③ 동독의 중심부에 있는 서베를린의 위치이다. 동서분단 직후 동독과 소련은 서베를린 장악을 여러 번 시도하였고,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교통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서독입장에서 서베를린으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확보하는 것은 독일문제에서 핵심과제였다.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접촉을 단절할 수 없었으며, 특히 동서독간 교역을 서베를린으로의 통행 및 통신보장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동서독간의 접촉은 접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측 모두에게 최소한의 이익이 있었다. 특히 동독은 경제적 이득이외에 서독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와 서독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서독으로서는 동독의 경제적 욕구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반대급부로 동서독 주민의 자유로운왕래를 보장받고 양독 간을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확대, 구축하는 등 통일을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서분단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양독 간에 이루어진 정보 통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과정은 분단과 통신단절, 통신교류의 시작, 통신 교류의 확대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1단계: 분단과 통신단절(1945~1969)

2차 대전 이후 동서독간 통신회선은 소련의 동독지역 고립정책에 따라 1949년 서베를린과 동독지역으로 연결된 직통 전화회선이 단절된다. 이어 동독은 서독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1952년 5월에 사전예고 없이 3,910개에 이르는 동서독간 전화회선을 단절한다. 특히 이 조치로 서베를린은 통신측면에서 하나의 섬으로 변화되고 마는데, 서베를린에서 동독으로의전화통신은 당시 동서독간을 연결하고 있던 일부회선을 이용하여 서독의 교환국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2년에서 1971년 사이 동서독간의 전화회선은 동독의 라이프찌히와 포츠담 교환국,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교환국을 연결하는 34개의 회선만이 남게 되었으며, 이시기 동서독간 전화통화는 가능했지만 공식적으로 동독과 서독 국민간의 자유로운 통신은 단절된 상태였다.

○ 2단계: 통신교류의 시작(1970~1975)

통신교류와 관련한 동서독간 일반협정이 체결된 1974년까지 양독은 공식접촉을 피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하부 행정조직 단위에서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빈번한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졌다.

동서독간 공식적인 통신교류의 첫걸음은 동독 측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다. 1966년 당시 동독 우전성 장관인 슐제가 서독의 국영통신사인 도이체분데스포스트(DBT) 및 서베를린 동시에 동서독간 우편·전신·전화교류에 국제요금 정산방법을 적용할 것과 1946년부터 1968년까지 서독과의 우편 및 통신교류에 따른 동독 측의 업무부담에 대「한 대가로 18억 마르크를 지급하도록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동서독간의 우편·통신교류는 국내교류이므로 국제요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제요금 적용 건

을 전면 거부하였다.

반면 업무부담금에 대한 동독의 요구에 있어서 실제로 당시의 양독간 우편 및 통신교류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통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독입장에서는 동독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었기때문에 국제계약 관계를 체결해야 하는 상호접속 및 우편교류에 따른 요금지급 건은 서독의 입장에서 볼 때 동독을 독립국가로 승인해야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9년 말 서독 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브란트 수상이 주도한 사회당 정부의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1969년 9월 동독과 서독 우전성 간에 동서독간 우편·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1970년 4월 분단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협정이었던 "우편과 통신교류에 따른 동독측 업무부담에 대한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① 서독은 1967년부터 양독간 우편 및 통신교류에 따른 동독의 추가업무 부담에 대한 비용(Postpauschale)으로 년 3,000만 마르크를 동독에 지불하며(협약기간 1976까지), ② 동서독간 전화와 텔렉스회선 증설 및 장거리 자동전화 방식을 도입하고, ③ 동독은 동서 베를린간의 전화통화를 다시 허용하며 1971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1952년 이후 단절된 동서베를린간의 통신회선을 복구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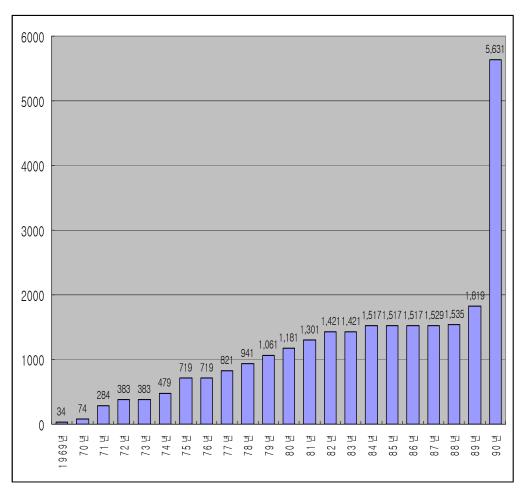
이 협정은 단기적으로는 양독간 통신회선의 증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독간 통신량 증가 및 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양독간 장거리 자동통화 도입에 대한 합의사항은 동서독 국민간의 자유로운 통신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화통신의 자동교환시스템은 수동교환에 비하여 동일한 통신량에서 보다 많은 회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동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회선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을 통해 분단이후 단절되었던 동서독간 통신교류는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3단계: 통신교류의 확대(1976~1989)

1976년 말, 1970년에 체결된 요금에 대한 협정사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양독 우전성 간 신규협상이 시작되었다. 서독은 1976년까지 지급해 오던 3,000만 마르크의 요금을 8,000만 마르크로 조정해 주고(1982년까지 유효), 이에 대한 대가로 동독 측으로부터 추가회선 증설을 받아낸다. 물론 이와 같은회선증설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회선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회선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2년 동독정부는 1976년에 체결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날 무렵, 동서독간 통신량 폭주에 따른 동독 측의 업무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존의 8,000만 마르크의 업무부담금을 4억 마르크 규모로 증액해 줄 것을 서독 측에 요구한다. 그 결과 1983년 11월 서독은 2억 마르크로 요금을 증액하는 것을 동독과 합의하게 된다. 아울러 서독은 동독 측으로부터 자동전화 통화지역의 확대와 추가회선 증설을 약속 받지만, 이 시기 동독의 통신망은 이미 상당부분 노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년대와 같은 큰 규모의 회선 증설은 80년대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80년대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서독간 회선의 증설로 양독간 전화망 접속이 확대되어 1987년에는 서독의 전지역에서 동독의 전체 전화권 역 84%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다이얼식 직접중계 방식을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 이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정보통신분야에서 교류협력 의 대상과 결과물은 양독간에 구축된 통신회선이었다. 특히 점진적으로 확충 된 동서독간 직접통신망은 양독 정부간에 체결된 일련의 우편 및 통신협정과 합의사항들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다음은 70년대 이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협정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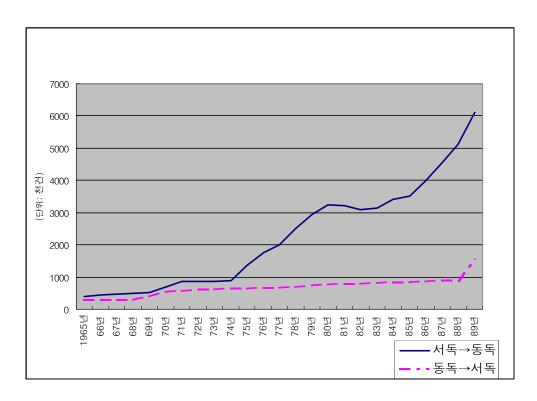
자료: T. Robischon, 1999, 44쪽

<그림 14> 동서독간 전화회선 (1969~1990)

<표 41> 동서독간 주요 통신협정과 합의내용 및 결과

시기	협정	주요 합의내용 및 결과
1970.04.	른 동독측 업무부담에	·서독은 동독의 추가업무 부담에 대한 비용(Postpauschale)으로 연간 3,000만 마르 크(150억원)를 동독에 지불 ·분단이후 처음으로 양독간 통신회선 구축 (40회선)
1971.09.	상기 지불안에 대한 재협정	·1971~1975 사이 총 436회선 증설 ·1974까지 자동전화 통화 도입 합의
1976.10.	동독의 업무부담금 규모 조정 협정	·동독의 업무부담금을 8,000만 마르크 (400억원)로 증액 ·1977.10. 719회선이었던 동서독간 통신회선은 매년 102~120씩 증설 1982 까지 총 702회선 추가 개통
1983.11.	우편, 통신교류 개선 및 동독측 업무부담금 증액 을 위한 협정	·동독의 업무부담금을 2억 마르크 (1천억원)로 증액 ·1984에 84회선 증설
1987.09.	서독 우전성 장관 실링 의 동독방문	·1987에 120 회선 증설 ·직접중계 통화지역 확대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설된 동서독간 통신회선은 특히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통화량 증가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음에서처럼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통화량은 제한적 범위에 머무른다. 양독간 통신교류가 활성화되기시작한 1970년에서 1972년 사이 통화량이 일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80년대 후반까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통화량은 거의 제자리에 머문다.



자료: DBP, DP 내부자료, 재인용 T. Robischon, 1999, 48쪽 <그림 15> 동서독간 통화량 증가 추이 (1965~1989)

한편, 1988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통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통신에 대하여 일부지역에서 확대 적용된 전자교환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결과였다. 1970년 1차 통신관련 협정체결 이후, 20여년 간에 걸친 동서독간 교류과정에서 서독 측의 동독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의 통신 회선은 양독간통화량 증가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으로 증설되지는 못했다.

특히 동독정부는 장거리 자동통화 지역의 확대 및 통신회선의 현대화 등 주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실천이 늦어지는 이유로서 기술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의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이 크게 작용하였다. 먼저 동독 경제는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동독은 외화수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서독이 지급하는 동서

독간 우편 및 통신교류에 따른 동독의 업무부담금을 더 많이 지급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통신을 제한하였다.

즉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통화량이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통화량보다 많을수록 동독은 보다 많은 업무부담금(외화)을 서독 측에 요구할 수 있었다. 동서독간 통신망 현대화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노후화 된 동독의 통신망시설과동독우편(DP)의 기술 및 재정능력에 기인한다. 동독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게 이루어졌고, 신규시설은 물론 기존 장비및 시설들의 보수,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동독 중앙당(SED)의 소극적 태도는 의도된 정치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광범위한 공중통신 하부구조는 감시체제 국가인 동독정부 이익에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중통신망 개발 및 시설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동독정부는 주민의 사적통신 욕구를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신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를 억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독의 통신망 시설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낙후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가입자 회선은 절대적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분단이후 수십 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동서독간 통신교류의 핵심대상은 전화회선의 증설이었고, 이 과정은 한마디로 동서독간 정치적 관계즉 양독 정부의 「독일정책(Deutschland Politik)」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통일독일의 통신교류과정을 통해 본고는 몇 가지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동서독간 통신회선의 증설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서독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동서독간의 정치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간의 통신유지는 통일을 지향하는 서독정부의 기본사업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민족간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증설된 통신회선 하나하나는 양독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밑바탕에 두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협상과 교류의 대상이며 결과물이었다. 서 독측은 동서독간의 통신교류에 따른 동독의 초과업무 부담에 따른 비용 (Postpauschale)을 지급하는 대가로 회선증설 및 자동통화 지역확대를 얻었으 며, 동독에 있어서 서독과의 통신교류는 중요한 외화벌이의 수단인 동시에 서독과의 경제협력 및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 마지막으로 통신분야의 교류를 통한 양독 간의 통신인프라의 구축은 여타 민간분야의 교류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

통일 전 통신회선 증설로 대변되는 동서독간의 통신교류의 진전 정도는 여타 부분의 교류협력의 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였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협상과정을 통해 확충된 동서독간 통신회선은 결과적으로 80년대 활성화 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동서독 주민간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되었다. 다시 말해서 동서독간의 교류와 협력은 상대방을 보다 잘 인식할 수있는 기회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동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체제의 단일화로 연결되는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남북한간 정보통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은 특정 정보통신 제품의 임가공 및 무역교류 등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이후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통신기반(통신망)이거의 갖추어 있지 않다.

앞에서 살펴 본 독일통일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남북한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은 경제협력과 여타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민족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는 기간설비인프라(SOC)중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남북한간 정보통신 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정보사회의 기간사업으로서 막대한 선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총체적인 통일 정책의 기본원칙 아래 남북 양측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Ⅷ. 결론: 정책적 제언

다음과 같이 방송부분은 프로그램과 기술의 상호교류와 격차해소, 그리고 돌발 사태를 대비한 방송통신 결합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평상시 방송기술의 상호교류 부문에서는 격차해소와 방통융합의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 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디지털방식 전환과 남북의 동일 표준채택
- 2) 접전지역의 남북 주파수 배치와 혼신 재거에 대한 상호 협력
- 3) 영상상봉을 위한 광케이블망 구성과 ST 방송 중계선 활용
- 4) 북녘위성 괘도의 남북 공동 사용
- 5)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위성 영상을 이용한 전계강도 관측 등) 등이다.
- 6) 한반도 관통 국제 광케이블망 구성 협력
- 7) 인터넷 개방 지원(건의사항 참조)
- 8) 체신과 방정통 관련 인력 대량 양성과 재훈련 (신천 체신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5년간 5만명 인력 양성)
- 9) 방정통 관련 분야의 정레적 학술교류

하지만 돌발 사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 1) 대류권 산란파를 이용한 방송망 구축 방안
- 2) 위성DMB 의 북녘지역 방송 이용
- 3) 성층권 수직 전파통신 시스템
- 4) 디지탈 수신 단말기와 수시기와 수상기 보급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평상시나 돌발사태시 상호교류를 막론하고 모두 우리의 부담이라 는 것이다. 북녘은 유선방송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실크로드 구성(2000년 진용옥)에서 방송의 종요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실크로드는 북녘의 정보통신토대기반(인프라)의 구축을 도우는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정보인프라의 다양한 구성에서 경제적 실리와 회선의 안전성과 생존성을 확보할수가 있어 좋으며, 북녘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적 필요성에 대한 배려에서 고려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북공용 위성방식은 북한의 괘도 자원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서 그리고 주민 전체보다는 개방지역의 제한된 기업통신용으로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볼 영순위 작업일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외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리적 관통 대가나 궤도자원의 사용권과 무형적 자산의 제공으로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초기 남북간 방송교류는 북한의 방송개방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특히 동서독 통일 이후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북한의 개방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그러한 북한개방과 연관된 방송교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한방송사의 업적위주의 방송교류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방송교류는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들을 상호간에 제공하고 또 쌍방간의 소통을 추진하는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말해 영화나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이나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영역이 서로 결합하고 연계된 복합적인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방송이 담당해야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시장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방송은 일반 문화상품과 다르다. 방송의 공익성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남북이 서로 공유하면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문화적 통합의 접근방식이야말로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고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에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만이 올바른 방송교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부수적인 조처로서 '영상물 아카이브 자료교환'에 대한 제도적 조치 마련도 필요하다. 남북이 영상물 아카이브 자료를 교환해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바람직한 영상물 제작과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한 방송문화 발전은 물론이고 학술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상아카이브 자료교환은 일회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이나 개성 등의 특정 지역에 상설 자료관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언제나 필요한 때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방송영상관련 자료들은 방송영상프로그램은 물론 방송편성표나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유관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 그리고 관련 학술도서 등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이러한 자료들은 당연히 남북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남북 방송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는 3차 남북방송인토론회도 개최되어야만 한다. 남북이 동의한다면 굳이 방송인토론회가 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판 단이다. 더욱이 방송인토론회는 방송영상물소개모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최하여 남북한 방송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질적 문화극복을 위한 노 력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방송프로그램과 사람의 교류,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 람직한 남북방송교류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남북방송교류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서는 주변 상황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남북방송교류협의체활성화 등 제도적 차원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남측 방송통신위원회와 북측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방송인토론회를 정례화 하는 것도 하나의 틀을 만드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방송교류의 의미와 원칙, 그리고 방향까지도 이제는 거의 명확하게 정

립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송교류가 정 치적 환경에 지나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남북한은 예전 동서독의 경우처럼 보다 많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점차 하나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존재를 인정하 는 것부터 시작하자. 상호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전개되는 방송교 류는 또다시 한건주의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높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예전 분단시대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제시한 동방정책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독 관계는 각 방면에 걸쳐 많은 교류와 결실을 맺게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서독의 에곤 바르 정무장관과 동독의 미카엘 콜정무장관 사이에 2년간 70회 이상의 실무접촉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과연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상충되는 것은 상보적이다.(Contraria sunt Complementa)"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이유가 없다. 그래야 방송통신교류는 물론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리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건의 사항

2008년 12월 5~6일 사이 중국 연길에서 열린 남북 3개국 지역식별자 회의에는 북한은 인터넷 국제개방에 있어 중대한 제안을 하여왔다. 문자 언어 부호체계에서 북한 국규(완성형 코드)가 반영되지 않아 인터넷 국제개방에서 중대한 걸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m/s나 인터넷 포탈 사업자 네이버 등에서 지원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2008년 12월7일 남북중 지역식별자모임 합의서) 우리 대표단은 적극 찬동하며 현실을 파악한 후 구체적 상황을 중국을 통하여 1월 15일 까지 통지해 주기로 하였다.

이 이외 감청관찰 모니터 장비, 방화벽, 지역서버, 광케이블 망구축, 단말기 250만대(전 인구의 10%)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해 왔다. 우리는 비핵개 방 3000 프로젝트 (본 연구서1장 2절 참조)가 성안 중인데 이 중에서 인터넷이나 방송통신 관련 비용이 포함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북한의 인터넷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체재 붕괴를 우려한다는 분석과는 정반대의 견해 표명에 다소 당황했으나. 그들의 열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의 열망을 우리가 화답하고 성사된다면 갱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새로운 투자처를 개척함으로써 침체 국면을 돌파할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회담이나 총리회담 의제로 격상시켜 심층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MBC 종합뉴스 보도, 1998.3.13.

국어정보학회(2001), ICCKL 2001보고서 ,2001.3

- 김석환(2005), "시청률과 남북(북남)방송교류협력 그리고 지역방송", 남북방송 인 금강산 세미나 발표논문, 2005.9.4. 언어와 정보화
- 강현두(2000). 남북방송 개방과 교류: 현실과 과제, 경영인세미나 2000 발제문.
- 김상진(2002). 남북한 보도 방송 언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승철,(2008) "북한의 제3방송의 기능과 역할", 한국방송통신학회 2008가을철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김유향(2006), "북한의 정보화교육 지원방안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최, 제3회 남북간 정보격차해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6.12.1.
- 김용호(2000). 남북한 방송체제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연합과 지역연립 방송모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논총』, 1권.
- 김영윤(2005), 남북한 정보·통신분야 교류협력방안: 인터넷 교류협력 중심, 2005.
- 김주희(2002). 활발해진 남북방송교류. 『방송문화』, 2002년 10월호.
- 김현경(2001). 남북 방송교류의 과제: 북한 현지 취재경험을 중심으로. 2001 통일방송 세미나 발제문(2001. 5. 31).
- 유재천(2000). KBS 통일방송 국제심포지엄,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방송 의 역할" 발제문(2000. 9. 27).
- 문병훈(1992). 북한방송의 이윤과 체제에 관한 연구: 남북방송교류의 관점에 서. 『동북아연구』. 10권.
- 문종환(1998). 남북방송교류협력 현안과 방송정책 방향. 『방송공학회지』, 3 권 3호.
- 문흥호(1994),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종수(1991),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MBC 『방송과 문화』,

1991.

- 박종수(2008), "남북한 방송통신교류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방송 통신학회 2008 가을철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8.11.29.
- 박종수(2007), 동서독언론교류, 서울, 고려사, 2007.
- 박종수(2005). 남북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방송학회세미나 발제문(2005. 6. 30).
- 박종수, 윤창빈(1999), 「남북한 언론교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99-06, 1999.
- 방정배(1999). 대북 정책 변화와 남북 방송 교류 방송 패러다임: 전략매체에서 커뮤니케이션 대체로.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찬모(2000), 북한의 소픗웨어기술현황과 남북교류방안 .텔레컴 리뷰.
- 송재극(2001): 남북방송기술의 현황과 전망 / ICCKL 5차 학술대회, 2001. 2 송재극 외(2001),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1.
- 신용도(2006),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과제"
- ----(2003), '남북한간 인터넷 개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공청회' 주제발표문
- 안축옥(1989). 북한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방송문화연구』제 1권
- 이용주 외(2000), 음성정보기술 산업의 현황과 전망, 2000. 1.29 산자부 주최 공청회
- 이기현(2003). 남북한 텔레비전 뉴스보도 비교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원
- 이기현(2003).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우승(2000). 남북방송교류현황과 추진방향. 방송학회 세미나 발제문 (2000.6.7).
- 이우승(2001).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재학(2002), 권기남, 이종석. 매스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신학사
- 이주철(2008), "조난방재와 돌발급변사태의 방통시스템", 한국방송통신학회 2008 가을철 정기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 정윤경(2000). 남북최초의 드라마 교류작품: 방송 80년 특별기획 KBS '사육신'.

전락희(1993),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만", 『통일』, 1993/3. 『통일한국』, 2007년 9월호.

조수선(1999). 통일과 방송: 북한 방송의 개방 절차와 효과적인 대안모색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진용옥(1999), 남북 방송기술의 통합 방안 1999년 한국 방송공사

진용옥(2000) 한손만국자판과 통일자판의 미래, 2000.10.9, 국어정보학회 한글 날 강연록

진용옥 외(2002), 남북 공동자판 평가: 1997, 국어정보학회, 품질보증원 연구보 고서(2002)

진용옥, 안정근(!997) 무궁화 위성 연변지역 수신시스템의 결과 보고

진용옥 외(1996), 정보통신 번호자원관리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1996, 정보통 신부공모과제

체신부(1986), 우정국(1986), 우편번호 개편안(3차 시안)

최상률(2005), 남측 케이블방송의 이해 및 교류방안, 남북방송인 금강산 세미 나 발표논문, 2005.9.4.

최진봉(1998). 북한방송 개방과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제언. 『북한』, 통권 316호.

최정길(2005,), "남북방송교류의 현황과 과제", 남북방송인 금강산 세미나 발표논문, 2005.9.4.

통일부, "통일백서", 2005, 2004

통일원(1990), 동서독관계자료 III. 「내독관계 발전사」, p..849.

통일원(1992), 「독일통일 실태 자료집. - 비경제분야 -」, 1992, pp.534-538.

한국방송광고공사(2004), 주요국 방송제도 연구(프랑스편), 2004.

황보한(1992), 한국통신 무궁화 위성 3호 백서, 1999.12

홍승원(2008), 비핵 개방 3000전략과 남북방송 통신 연계방안, 2008년 한국방 송통신학회 세미나발표논문, 2008.8.22.

홍현기(2005),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 현황", 2005. 전파진흥원

진용옥외 2인 : 남북중 지역식별자 모임 합의서 (2008년 12월7일 중국 연길)

Peter Hayes(2002), "DPRK Information Strategy-Does it Exist?" presented at Asia pacific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2002. 10. 8.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Republik u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1989.

Computer Industry Almanac 1997.

Heinrich, Herbert, Deutsche Medienpolitik.

Linke, Norbert, "Die Rezeption der Programme von ARD und ZDF in der DDR als Gegenstand der SED-Kommunikationspolitik", *Publizistik*, 1987/1, pp.45-68.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2001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1999

NHK(2008). NHK 데이터북 세계의 방송 2008

Picht, R. "Die Kulturmauer durchbrechen. Kulturelle Dimension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Zusammenarbeit in Europa", Europa-Archiv, Folge 10/1987, pp.279–286.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 138, 1968.7.27.

Pross, H., "On German Identity", *Media, Culture & Society*, Vol.13, 1991, p.341.

NK 조선(http://nkchosun.com)

교원신문, 2001. 6. 14., 2001. 6. 7., 2001. 8. 7.

노동신문, 2001. 5. 30.

디지틀조선, 1999.8.19, 1999.10.24.

동아일보, 1995.2.3.

미디어 오늘, 1988.9.9.

민주조선, 2000.1.21. 2001.10.22.

연합뉴스, 2001. 5. 25., 2001. 5. 7., 2001. 5. 16., 2001. 7. 27.,2001. 5. 25., 2001. 7. 27., 2001. 6. 9., 2001. 6. 14.,

조선신보, 2006. 7. 3., 2001. 5. 9., 2006. 7. 3., 2006.9.8., 2001. 4. 19.

조선중앙방송, 2001. 3월3월

조선일보, 1999.10.23, 1999.11.6, 2008.10.11..

조선중앙TV 2001. 5. 7.; 1999

중앙일보, 1997.12.2, 1999.11.6.

한겨레신문 1999.9.2, 1999.10,13.

http://office.kbs.co.kr/tongil/701

www.imbc.com

www.kbs.co.kr

www.s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지정2008-02

남북 방송통신 산업 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발 행 일 2008년 12월(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or.kr

인 쇄 처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